

발 간 등 록 번 호

75-6470000-000524-01

2014-2018

경상북도 광역 건축기본계획

2014. 2.



경 상 북 도
GYEONGSANGBUK-DO

제 출 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경상북도에서 의뢰한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4년 2월

경북대학교

과제수행기관 경북대학교

연구진

연구총괄	이승우(경북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권제중(대구대학교 교수)
	김소희(영남대학교 교수)
	류성룡(계명대학교 교수)
	박선경(건축사사무소 준)
	백승만(영남대학교 교수)
	백진욱((주)애드건축사사무소)
	신규철(계명대학교 교수)
	윤철재(경북대학교 교수)
	이동렬(경일대학교 겸임교수)
	하기주(경일대학교 교수)
	하재훈(건설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	김소영(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세준(경북대학교 대학원)
	정태권(영남대학교 대학원)
	여연진(영남대학교 대학원)
	이유리(영남대학교)
	한주연(계명대학교)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자문위원

자문위원	김광현(서울대학교 교수)
	김덕기(김천 YMCA 사무총장)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김철규(영남대학교 교수)
	박종석(대구건축가회 회장)
	이정호(경북대학교 교수)
	임송용(경상북도 건축사회 회장)
	조영태(LH 토지주택연구원)
	조준배(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하헌정(금오공과대학교 교수)
	현택수(경일대학교 교수)

차 례

I. 계획의 개요	1
① 배경 및 목적	3
② 계획의 범위	5
③ 계획의 위상 및 성격	8
④ 계획의 수립절차 및 구조	11
⑤ 주요 용어정리	14
II. 경상북도 변천과정 및 현황분석	17
① 일반현황	19
② 시대별 변천과정	27
③ 지역별 건축 관련 현황	36
④ 지역별 건축 관련 정책 사업 분석	62
⑤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의식 조사 분석	70
⑥ 경상북도 건축환경의 당면과제	83
III. 국내외 사례분석	85
① 국내 건축기본계획의 특징	87
② 해외 건축정책 사례	95
③ 시사점	119
IV.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방향 및 세부사업	121
①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123
② 목표 및 전략	126
③ 세부과제 및 사업	127
④ 추진계획	132

V.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12전략별 정책과제 **135**

- ①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 137
 - 1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형 건축산업 발굴 139
 - 2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업 개발 147
 - 3 경쟁력 있는 지역 건축산업의 특성화 154
 - 4 한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161
- ②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 167
 - 5 건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169
 - 6 민간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방안 마련 178
 - 7 건축문화 관련 자료구축 및 보관 188
 - 8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 200
- ③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 211
 - 9 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디자인 관리방안 213
 - 10 민·관협력사업의 관리 및 지원방안 223
 - 11 주민참여기구의 설립 및 운영 지원방안 230
 - 12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238

VI.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핵심전략사업 **245**

- ① 도민친화적 생활건축사업 247
- ②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257
- ③ 건축문화유산 거리조성사업 266
- ④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마련 276
- ⑤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283
- ⑥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조직 운영 294

VII.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추진방안 **305**

- ①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운용 307
- ②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활용 310
- ③ 사업별 특성 및 소요예산 315

표 차례

[표 1.1]	건축기본법상의 공간적 범위	5
[표 1.2]	계획수립의 추진경과	13
[표 2.1]	경상북도의 지리적 위치	19
[표 2.2]	경상북도 행정구역 현황	20
[표 2.3]	경상북도 기상현황	21
[표 2.4]	경상북도 인구추이-1	21
[표 2.5]	경상북도 인구추이-2	22
[표 2.6]	경상북도 1~2인 가구추이	23
[표 2.7]	경상북도 노인인구 비율	24
[표 2.8]	경상북도 외국인 인구추이	24
[표 2.9]	경상북도 인구분포도에 따른 도시화율	25
[표 2.10]	경상북도 연령별 농업인구 추이	26
[표 2.11]	경상북도 연령별 어업인구 추이	26
[표 2.12]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28
[표 2.13]	경상북도 내 주요 철도시설	29
[표 2.14]	일제시대 경상북도의 인구증감	30
[표 2.15]	경상북도의 4대 생활권	34
[표 2.16]	2014 경북도정의 분야별 추진전략	35
[표 2.17]	경상북도 면적별 건축물 현황	36
[표 2.18]	경상북도 용도별 건축물 현황	36
[표 2.19]	경상북도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37
[표 2.20]	경상북도 층수별 건축물 현황	37
[표 2.21]	경상북도 시군 용도별 토지이용	38
[표 2.22]	경상북도 건축허가 현황	39
[표 2.23]	경상북도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40
[표 2.24]	경상북도 구조별 건축허가 현황	41
[표 2.25]	경상북도 시군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2011년도)	42
[표 2.26]	경상북도 연도별 용도별 주택 현황	43
[표 2.27]	경상북도 주택 보급률 현황	43
[표 2.28]	경상북도 시군별 주택보급률 현황	44
[표 2.29]	경상북도 문화공간 현황	45
[표 2.30]	경상북도 교육시설 현황	46
[표 2.31]	경상북도 체육시설 현황	47
[표 2.32]	경상북도 도로 현황	48

[표 2.33]	경상북도 공원 현황	49
[표 2.34]	경상북도 하천 현황	50
[표 2.35]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황 - 1	51
[표 2.36]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황 - 2	52
[표 2.37]	경상북도 건축문화재 현황	53
[표 2.38]	경상북도 전통가옥 문화재 지정현황	54
[표 2.39]	민속마을 방문객 현황	54
[표 2.40]	건축문화재 -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현황	55
[표 2.41]	경상북도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현황	55
[표 2.42]	경상북도 지역 등록문화재 현황	56
[표 2.43]	경상북도 건축관련 산업체 현황	58
[표 2.44]	경상북도 경제활동인구대비 건축산업종사자 현황	58
[표 2.45]	경상북도 경제활동인구대비 건축설계종사자 현황	58
[표 2.46]	경상북도 건축설계산업 규모 현황	59
[표 2.47]	경상북도 건축관련 산업체, 종사자 및 매출액 현황	59
[표 2.48]	경상북도 에너지 관리대상 현황	60
[표 2.49]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현황	61
[표 2.50]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현황	65
[표 2.51]	각 시·군의 대표적 건축관련 사업	66
[표 3.1]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88
[표 3.2]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89
[표 3.3]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90
[표 3.4]	부산시 건축기본계획	91
[표 3.5]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92
[표 3.6]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93
[표 3.7]	대구시 건축기본계획	94
[표 3.8]	영국의 건축·건조환경위원회 조직구성	95
[표 3.9]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97
[표 3.10]	도시·농촌 환경에서의 건축의 품격·품질에 관한 결의안 전문	99
[표 3.11]	PAN 설계공모전	102
[표 3.12]	EUROPAN 설계공모전	103
[표 4.1]	목표1 :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의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127
[표 4.2]	목표2 :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의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128
[표 4.3]	목표3 :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의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129
[표 4.4]	핵심전략의 실행사업 및 기대효과	130
[표 5.1]	시범도시 지정 현황	141
[표 5.2]	프랑스 '새로운 건축프로그램' PAN 설계경기	150
[표 5.3]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비교표	152

[표 5.4]	경북 건축사회 등록현황 : 454명/ 443개소(개인409 법인45) / 2013년 기준	170
[표 5.5]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181
[표 5.6]	해외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체계 비교	184
[표 5.7]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유형별, 행정구역별 분포 현황	192
[표 5.8]	경상북도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연대별·행정구역별 분포현황	194
[표 5.9]	기존 도시 내 공공공간 관련 계획 업무 및 제도와 심의위원회간의 관계	220
[표 5.10]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지침 현황	221
[표 5.11]	국가별 민관협력 사례 특성 비교	226
[표 5.12]	국내 기존 민관협력 사업방식별 구분	229
[표 5.13]	전담부서의 역할	239
[표 5.14]	경상북도 건축관련 심의위원회	240
[표 6.1]	일본의 PFI 사업의 공공·민간의 역할분담	248
[표 6.2]	PFI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개발형태	248
[표 6.3]	경상북도 주요 시의 건축 관련 주요사업 현황	283
[표 6.4]	경상북도와 산하 지자체의 건축직 전문인력 구성현황	295
[표 6.5]	유형간 특성비교	300
[표 7.1]	3대 목표의 12개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	309

그림 차례

[그림 1.1] 건축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5
[그림 1.2] 위계별 관련 계획간의 관계를 통해 본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위상	8
[그림 1.3] 건축기본계획과 관련계획과의 연계	9
[그림 1.4]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10
[그림 1.5] 계획수립의 기본절차	12
[그림 1.6] 계획수립의 연구절차	13
[그림 2.1] 경상북도의 위치	19
[그림 2.2] 경상북도 인구추이-2	22
[그림 2.3] 경상북도 연도별 성별인구	23
[그림 2.4] 경상북도 외국인 현황	25
[그림 2.5] 경상북도 지역별 인구 현황	25
[그림 2.6] 조선시대 대동여지도의 경상북도 지형과 주요도시	27
[그림 2.7] 일제시대의 철도노선도	29
[그림 2.8]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31
[그림 2.9] 경상북도의 고속도로 및 산업 현황	31
[그림 2.10] 2020 경상북도 종합발전구도	32
[그림 2.11] 2020 경상북도 종합발전계획의 3대 초광역축(좌)과 4대 지역발전축(우)	33
[그림 2.12] 경상북도의 4대 생활권	34
[그림 2.13] 경상북도 건축허가 현황(동수, 연면적별)	39
[그림 2.14] 경상북도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40
[그림 2.15] 경상북도 구조별 건축허가 현황	41
[그림 2.16] 시군별 건축 관련 사업 분포도	65
[그림 2.17] 설문지 표지 사례	71
[그림 2.18] 경상북도 건축의 대내외 경쟁력	72
[그림 2.19] 경상북도 건축의 전망	72
[그림 2.20] 경상북도 건축의 쇠퇴에 영향 미칠 요소	73
[그림 2.21] 경상북도 건축발전을 위해 가장 개선할 점	73
[그림 2.22] 경상북도 건축발전을 위해 육성 및 개선할 점	74
[그림 2.23] 경상북도 건축의 우선 고려사항	74
[그림 2.24] 경상북도 건축의 잠재력	75
[그림 2.25]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75
[그림 2.26] 「건축기본법」을 통해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건축의 진흥 여부	76
[그림 2.27]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5년 단위 건축기본계획의 영향력	76

[그림 2.28]	건축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조건	77
[그림 2.29]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참조할 만한 선진도시	77
[그림 2.30]	선진도시사례를 통해 건축기본계획에서 고려할 점	78
[그림 2.31]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	78
[그림 2.32]	미래지향적 건축산업 육성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79
[그림 2.33]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를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79
[그림 2.34]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80
[그림 2.35]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사업의 선정기준	80
[그림 2.36]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핵심전략사업 우선적 실행지역	81
[그림 2.37]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핵심전략사업 우선순위	81
[그림 2.38]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 방법	82
[그림 2.39]	개별 시군의 기초건축기본계획의 필요성	82
[그림 3.1]	파리건축박물관	96
[그림 3.2]	유럽건축정책포럼	99
[그림 3.3]	가우디 프로젝트	100
[그림 3.4]	EUROPAN 10	102
[그림 3.5]	미국(에너지부, 환경청, 건축가협회) 에너지 관련 홈페이지 기술제공 사례	105
[그림 3.6]	그린 빌딩과 에너지 모델링을 위한 가이드 사례	105
[그림 3.7]	폐고가철도인 하이라인 재활용 사례	106
[그림 3.8]	하이라인 주변의 개발 개념도 사례	106
[그림 3.9]	뉴욕건축가협회 전시장	109
[그림 3.10]	초고층 박물관, 뉴욕	110
[그림 3.11]	국립건축박물관, 워싱턴	110
[그림 3.12]	MOMA	111
[그림 3.13]	시카고 건축박물관	111
[그림 3.14]	MIT 박물관 - 건축부문	111
[그림 3.15]	워싱턴 옥타곤 박물관	111
[그림 3.16]	일본 환경미래도시 홈페이지	113
[그림 3.17]	환경모델도시 요코하마의 환경미래도시계획	113
[그림 3.18]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구성원	115
[그림 3.19]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최근작품	116
[그림 3.20]	일본건축센터의 건축확인업무 흐름도	117
[그림 4.1]	건축기본법의 위계	124
[그림 4.2]	건축기본법과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과의 연관관계	125
[그림 4.3]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3목표 12전략	126
[그림 5.1]	에너지·기후변화의 국제동향	139
[그림 5.2]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144
[그림 5.3]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리모델링 사례-영주문수면사무소	144

[그림 5.4] U-CITY도시통합관리	146
[그림 5.5] 제1회 PAN 설계경기 당선을 계기로 건축된	149
[그림 5.6]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구상도	150
[그림 5.7]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관련 주요사업	152
[그림 5.8] 쇠퇴도시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156
[그림 5.9] 근린기반형 활성화계획, 수원마을만들기	160
[그림 5.10]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함부르크하펜시티	160
[그림 5.11] 경주교촌한옥마을(좌), 경북봉화분천역 문화디자인프로젝트(우)	162
[그림 5.12] 농암종택 전경 및 관광지도	163
[그림 5.13] 국토부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당선작	173
[그림 5.14] 2010 젊은 건축가상 수상작, 안중근 의사 기념관	174
[그림 5.15] 영주시 공공건축가의 건축 수상작	179
[그림 5.16] 경상북도 문화유산 현황	190
[그림 5.17] 행정구역별 근대문화유산 조사 수량(658건)	193
[그림 5.18] 국내 건축 정보지도 제작 공모사례	197
[그림 5.19] 서울 건축정보 사례	198
[그림 5.20] 한국문화 테마 파크	205
[그림 5.21] 국내 시민대상 프로그램 사례	211
[그림 5.22] 소관기관과 부서가 각기 다른 가로시설물 현황	213
[그림 5.23] 부처별 개별적 사업추진에 따른 시너지효과 미흡 사례	214
[그림 5.24] 포항시 행정조직도와 테라노바담당관의 위계	215
[그림 5.25] 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 공공디자인 조례사례	221
[그림 5.26]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방식의 한계상황의 대두	223
[그림 5.27] 영국 PUK의 홈페이지	224
[그림 5.28] 프랑스 ANRU의 홈페이지	224
[그림 5.29] 프랑스 민관협력 전문기구 ANRU의 업무연계도	225
[그림 5.30] 일본 MINTO의 홈페이지	225
[그림 5.31] 해외 민관협력 개발사업 사례 -1	226
[그림 5.32] 해외 민관협력 개발사업 사례 -2	227
[그림 5.33] 포항 살고싶은 농촌마을만들기사업	230
[그림 5.34] 영주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	230
[그림 5.35] 김천남산동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232
[그림 5.36] 영양 마을만들기사업	232
[그림 5.37] 영주 참사랑주민복지센터	233
[그림 5.38]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의 소통	233
[그림 5.39] 청소년 대상 마을RPG 프로그램	235
[그림 5.40] 도시만들기지원센터 거버넌스 사례(대구 남구)	236
[그림 5.41] 통합심의위원회 구상도	240

[그림 5.42] 경상북도 신청사 계획안	243
[그림 5.43] 영국 DQI 홈페이지	243
[그림 5.44] PDAT 시범적용 중요도 설정 질문지	243
[그림 6.1] 미나미야오야마 단지 재건축	248
[그림 6.2] Greenwich Millennium Village (1997-)	249
[그림 6.3] ZAC Massena (1999-)	250
[그림 6.4] 행복주택의 개요 및 1차 사업 선정지구	251
[그림 6.5] 보금자리 주택의 계획 및 특성	251
[그림 6.6] 우면동(좌)와 강남 세곡 2지구(우) 보금자리 주택	252
[그림 6.7] 지분형 주택의 개념 및 특성	252
[그림 6.8]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통한 복지 및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	254
[그림 6.9] 쇠퇴하는 도시들	258
[그림 6.10] 나가사키 경사지(좌), 영국 셰필드 구도심(우)	260
[그림 6.11] 전주 한옥마을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61
[그림 6.12] 영주 두산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263
[그림 6.13]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266
[그림 6.14] 시군별 대표적 문화와 도시기반 특성	267
[그림 6.15] 이치반가이 전통문화거리 전경	268
[그림 6.16] 가나자와 전통지구 경관	269
[그림 6.17]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경관	270
[그림 6.18] 군산 근대산업문화거리	271
[그림 6.19] 경주 교촌한옥마을	272
[그림 6.20]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 내부 전경	277
[그림 6.21] 수장 및 전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네덜란드 건축진흥원(NAi)	278
[그림 6.22]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영주시 조직운영	285
[그림 6.23] 위원회 조직구성도	287
[그림 6.24] 공공건축물 외관디자인 자문	287
[그림 6.25] 디자인위원회 운영절차	287
[그림 6.26]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288
[그림 6.27] 대구광역시 행정조직도	298
[그림 6.28]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행정조직 예시도	299
[그림 6.29]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도~지자체간 협의체계 조직구성 예시도	300

I. 계획의 개요

- ① 배경 및 목적
 - ② 계획의 범위
 - ③ 계획의 위상 및 성격
 - ④ 계획의 수립절차 및 구조
 - ⑤ 주요 용어정리
-

1 배경 및 목적

1.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 1) 「건축기본법」령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 규제위주의 건축정책을 탈피하여 우리 건축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기본법」(’07.12. 공포 및 ’08.6. 시행)에 따라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필요
 - 「건축기본법」에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

2)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공공성 실현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향상

-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 공간이며, 장차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님
-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패러다임이 개인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사회적 의미가 전환되고, 공공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건축물의 미적 요소와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주요 국가경쟁력 및 지방경쟁력 지표로 작용한다는 인식의 확산
- 선진국에서는 건축물과 주변공간의 조화, 도시경관에 대한 고려를 공익으로 규정하고 환경과 문화에 있어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3) 품질확보에서 품격추구로의 정책전환 요구

- 건축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공급위주 건축도시정책에서 새로운 건축의 이념과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의 도래
- 문화의 세기와 디자인 경쟁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활동과 건축생산의 기본철학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에 주목한 것에서 더 나아가 품질 확보를 전제로 품격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

2.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 건축의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 확보 등 건축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 「건축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별 “기초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근간 마련
- 건축·도시환경이 지닌 문제점과 미래 사회의 새로운 요구 등을 종합하여 건축·도시 분야의 중장기 정책방향 및 단계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도출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제시
-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건축디자인 방향 제시
- 공공의 이익 증진과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정에 대한 기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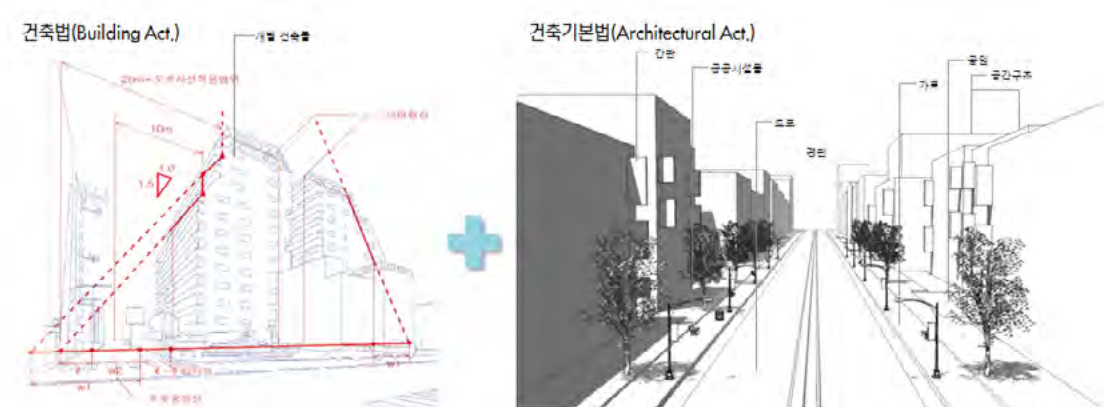
2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전역의 건축물 및 도시 공간환경
-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근거가 되는 「건축기본법」의 물리적 적용범위가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건축기본계획의 적용대상도 개별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구조 및 경관까지로 그 범위를 확장

[표 1.1] 「건축기본법」상의 공간적 범위

구 분	공간적 범위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건축기본법」 제3조 제1항)
공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 - 공간구조 : 공간을 이루는 방식(배치, 구성 등) - 공공공간 : 공공이 소유한 공간, 시설물(가로, 공원, 광장, 고가도로 등) - 경 관 : 공간전반의 모습, 이미지(자연, 인공요소, 주민의 생활상 등) (「건축기본법」 제3조 제2항)



자료 : 김상호 외 3인(2008), 질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그림 1.1] 건축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 제1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기간은 2014-2018년으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
- 계획수립을 위한 모든 조사의 배경이 되는 기준년도는 2012-2013년으로 설정
-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5년마다 광역건축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단기(5년), 중기(10년), 장기(20년)으로 구분

3. 내용적 범위

1) 「건축기본법」 상의 내용(제11조)

- 건축의 현황 및 여건 변화·전망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 지역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건축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

2) 건축기본법 시행령상의 내용(제3조)

-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 상의 내용(제5조)

-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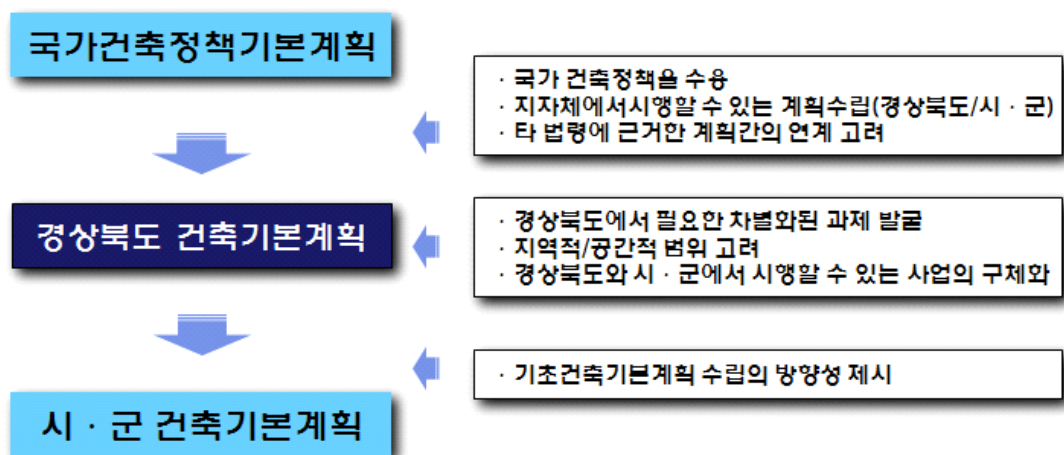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 및 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계획의 위상 및 성격

1.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위상

1) 건축기본법령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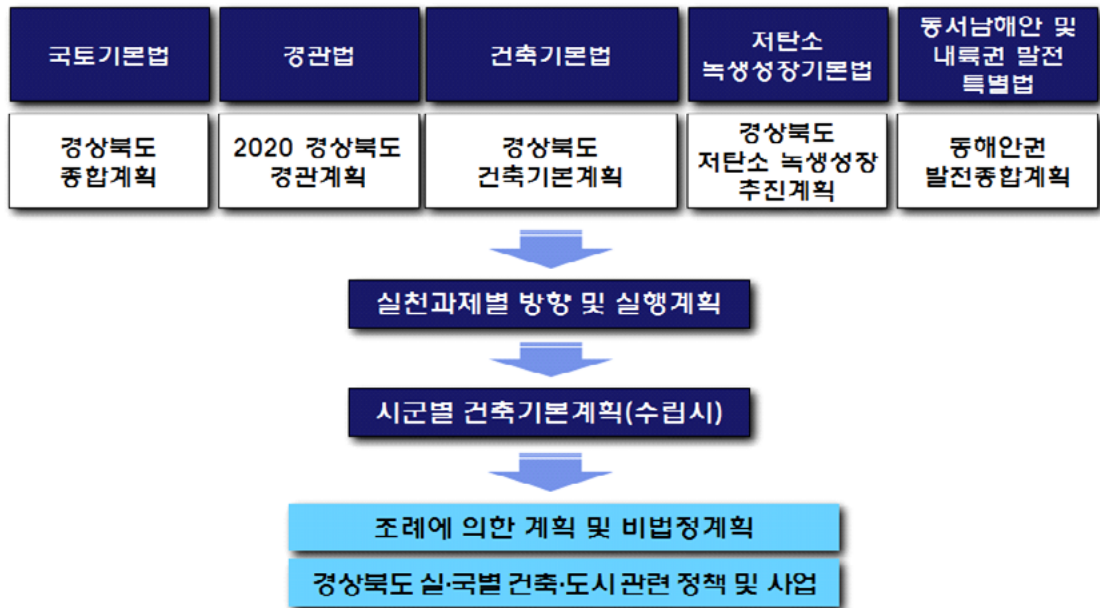
-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건축정책계획으로서 경상북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적용범위에 따라 상위에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하위에 '(기초)기본계획'을 두는 광역기본계획에 해당
- 2010년에 제정된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별 기초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근간 구축



[그림 1.2] 위계별 관련 계획간의 관계를 통해 본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위상

2) 경상북도 내 건축·도시 관련계획과의 통합 및 보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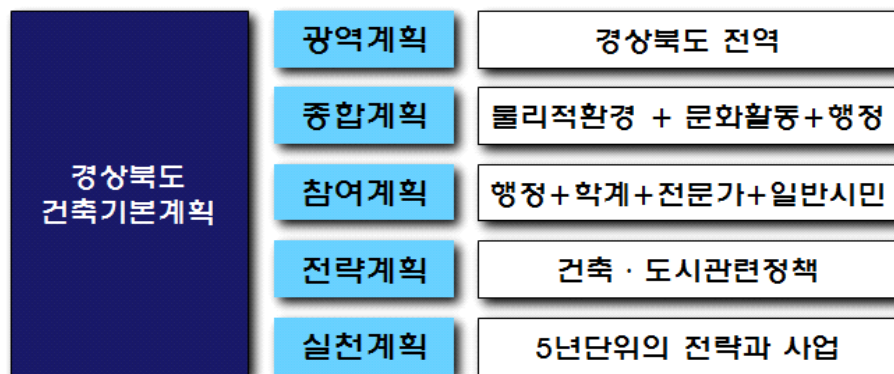
- 경상북도 내 기존 수립된 건축·도시 관련 계획들과의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
- 경상북도종합계획,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시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정책방향을 제안
- 시·군별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의 기본방향제시
- 경상북도 내 실·국별 건축·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그림 1.3] 건축기본계획과 관련계획과의 연계

2.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도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의 건축·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계획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경상북도의 지역별 건축·도시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건축 및 도시분야의 물리적 환경 및 문화활동, 행정시스템 등의 다양한 시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 경상북도 및 기초지자체와 건축·도시 전문가를 비롯한 연구기관 등 학계 및 일반시민이 함께 구현시켜 가는 참여계획
- 공간계획이 아닌 공공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전략계획
- 경상북도 지역의 건축·도시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5년 단위의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



[그림 1.4]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4 계획의 수립절차 및 구조

1. 계획수립의 방법

1) 연구의 범위설정

- 「건축기본법」 및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 분석
- 도 종합계획·경관계획 분석
-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유사 건축기본계획 분석

2) 경상북도 전역에 대한 건축·공간환경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분석

- 건축물·공공공간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각종 통계 조사·분석
- 건축·공간환경 관련제도·기준·사업 등에 대한 각종 자료 조사·분석

3) 해외 건축정책 사례조사

- 국가주도로 체계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의 조사
- 각 국의 건축정책 프로세스, 계획의 목표 및 세부내용, 추진방향 등을 분석하여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실천방향 설정에 활용

4) 기초지자체 시·군의 행정, 전문가 및 시민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

- 경상북도 산하 기초지자체별로 행정공무원, 교수, 지역건축사, 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고 전담연구팀의 방문협의를 통해 건축·도시 관련현황이나 현안에 대한 의식을 수집, 반영
- 건축·도시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 및 워크숍을 통한 경상북도 건축정책과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 건축·도시환경 및 건축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계획으로 반영
- 시·군의 행정담당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핵심전략사업의 선정에 반영

2. 계획수립의 추진체계

- 경상북도 : 관계부서 협의, 경상북도 의회, 경북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시행
-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건축기본계획의 심의·조정 기능 수행
- 기초지자체별 실무 TFT : 경상북도 산하 23개 기초지자체별로 행정공무원, 교수, 지역건축사, 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각 지역현황 등에 대한 정보 및 의식개선 및 핵심전략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담연구팀(연구주관 : 경북대학교) : 기초지자체의 실무 TFT 방문을 통한 지역의 건축·도시 관련 현황 조사, 건축기본계획의 구체적 진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과의 자문회의, 도민대상 공청회 등으로부터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기본계획 수립

3. 계획수립의 기본절차

1) 계획수립의 기본절차

내 용	주 체
계획 수립 전담연구팀 결정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건축관련 조례 개정 (기본계획내용,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등)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실무TFT구성	경상북도지사/전담연구팀
시·군 실무TFT 방문 현황조사 및 의견 청취	경상북도지사/전담연구팀
자문단과의 자문회의 및 워크숍	전담연구팀
경상북도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경상북도지사/전담연구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청취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경상북도건축정책위원회
경상북도 광역 건축기본계획 확정 및 시행공고	경상북도지사

[그림 1.5] 계획수립의 기본절차

2) 계획수립의 연구절차

내 용	주 체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전담연구팀
경상북도 건축·도시현황 및 여건조사	실무TFT/전담연구팀
계획의 비전 및 미션 설정	전문가자문단/전담연구팀
단계별 추진전략 설정	전문가자문단/전담연구팀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핵심전략사업 도출	전문가자문단/전담연구팀
세부사업 추진계획 작성 및 보완	전문가자문단/전담연구팀
핵심전략사업별 실행계획 설정	전담연구팀
예산계획	경상북도지사/전담연구팀

[그림 1.6] 계획수립의 연구절차

4. 계획수립의 추진경과

[표 1.2] 계획수립의 추진경과

구 분	내 용	기 간
계획수립과정	경상북도 착수 보고회	2013.1.9
	제1차 연구팀 워크숍	2013.2.14
	제2차 연구팀 워크숍	2013.3.29
	전문가 자문단 회의 (4명)	2013.4.23
	제3차 연구팀 워크숍	2013.4.30
	제4차 연구팀 워크숍	2013.6.2
	제5차 연구팀 워크숍	2013.6.28
	중간보고회 개최	2013.7.11
	제6차 연구팀 워크숍	2013.7.30
	제7차 연구팀 워크숍	2013.8.22
	제8차 연구팀 워크숍	2013.9.29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도민 공청회	2013.12.3
	제9차 연구팀 워크숍	2013.12.6
	경상북도의회 의견청취	2014.2.7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2014.2.19
시·군 협의 및 의견 수렴	광역건축기본계획 확정 및 시행공고	2014.2.25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2013.12.6.~2014.1.
	시단위 지자체 실무TFT 회의 (도내 8개 시)	2013.1.17.~ 2.15
	군단위 지자체 실무TFT 회의 (도내 12개 군)	2013.8.13.~8.14.
	핵심전략사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관련 행정공무원 선호도 조사	2014.1.16.~2.10

5 주요 용어정리

1. 건축기본법상의 용어 정리

- 건축 :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공간환경 :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
- 공공공간 :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 건축디자인 :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
- 건축의 공공성 :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 등으로 구성

2.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상의 용어 정리

- 실무TFT : 경상북도 내 23개 기초지자체(시·군)내 산·관·학의 각 분야에서 건축·도시 관련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 지역사회의 현황정보제공 및 건축기본계획의 전략과제(정책, 핵심)에 대한 의견 개진
- 전문가자문단 : 기 수립된 타 도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전담연구팀과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단계별 과정에서 연구의 진행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목표 : 건축기본법이 추구하는 본연의 지향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설정된 3가지 목표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추진전략 : 경상북도의 지역별 현황 및 사업조사, 설문조사, 국내외 건축정책 등의 분석을 통해 경상북도 건축정책의 키워드를 도출, 3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12가지 전략으로 설정
- 전략별 정책과제 : 경상북도의 건축문화진흥을 위해 필히 실현되어야 하는 정책 과제들로서 12가지 추진전략의 성격에 맞추어 조합되며 시기적으로 단기(5년), 중기(10년), 장기(15년), 유형별로는 연구과제, 제도개선, 시범사업으로 분류됨
- 핵심전략사업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전략별 정책과제중 시급성, 큰 파급성, 높은 현실성의 관점으로부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필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선정된 사업

3. 기타

- 유산(遺産) :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 자산(資産) :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II. 경상북도 변천과정 및 현황분석

- ① 일반현황
 - ② 시대별 변천과정
 - ③ 지역별 건축 관련 현황
 - ④ 지역별 건축 관련 정책 사업 분석
 - ⑤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의식 조사 분석
 - ⑥ 경상북도 건축환경의 당면과제
-

1 일반현황

1. 지리적 환경

1)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① 지리적 위치

- 경상북도는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
- 동쪽은 동해안, 북쪽은 강원·충북, 서쪽은 충북·전북, 남쪽은 경남·울산과 연접
- 수도 서울에서 반경 170~430km내에 위치하고 항공,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입체적인 교통망이 연결되어 50분에서 3시간 내외의 편리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음
- 위도 상으로는 북위 35도 34분에서 37도 33분 사이에 위치하며, 워싱턴(미국), 도쿄(일본), 란저우(중국), 테헤란(이란), 리스본(포르투갈) 등과 비슷한 위치에 있음



[그림 2.1] 경상북도의 위치

[표 2.1] 경상북도의 지리적 위치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동단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단	동경 131° 52'	동서간 452.8km
	서단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서단	동경 127° 48'	남북간 348.5km
	남단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남단	북위 35° 34'	
	북단	울릉군 북면 관음리 북단	북위 37° 33'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② 행정구역

- 경상북도는 10개 시, 13개 군, 2개 구, 625개 읍·면·동으로 구성
- 경상북도 전체의 면적은 19,029.62km²로 전국의 18.99%를 차지

[표 2.2] 경상북도 행정구역 현황

구분	행정구역												
시 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면적 (km ²)	1,129.40	1,324.41	1,009.15	1,521.82	615.53	669.05	920.38	1,254.82	911.61	411.77			
구성비 (%)	5.9	7.0	5.3	8.0	3.2	3.5	4.8	6.6	4.8	2.2			
군 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면적 (km ²)	614.27	1,175.84	845.72	815.14	741.12	693.89	384.11	616.14	450.93	661.07	1,201.46	989.12	72.86
구성비 (%)	3.2	6.2	4.4	4.3	3.9	3.6	2.0	3.2	2.4	3.5	6.3	5.2	0.4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 지형·지세

- 죽령, 조령, 추풍령 등 큰 령의 이남에 위치
- 지질구조는 소백산지괴, 경상(영남)분지, 포항분지로 크게 구분 가능
- 동쪽은 청정 동해안, 북쪽은 강원, 서쪽은 충북, 전북, 남쪽은 경남, 울산과 연접, 대구를 둘러싸고 있음
- 대체로 산지가 많고 고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북부와 서부의 높고 험준한 소백산맥이 낙동강 유역의 광활한 평야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음
- 남쪽으로는 운문산, 비슬산 등이 있어 전체적으로 거대한 분지의 지형
-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청정 동해와 접함

3) 기상 및 기후

-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심한 편
- 동해안은 태백산맥과 바다의 영향으로 기온차가 그다지 심하지 않고 겨울에도 따뜻한 편
- 연간 강수량은 900~1,333.7mm로 지역적인 차가 크고 내륙지방은 여름철이 매우 덥고 비가 적게 오나 울릉도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난한 특수한 기후임
- 추운 날씨의 징후는 내륙에서 먼저 시작되고 동해안이 18~23일 정도 늦게 나타나며, 따뜻한 날씨는 동해안 지방에서 먼저 시작되어 내륙으로 올수록 늦어짐

[표 2.3] 경상북도 기상현황

기 온	평 균	14.3℃
	최 고	35.1℃
	최 저	-12.7℃
강수량	평 균	1,152.0mm
	최고 (7월)	188.3mm
	최저 (3월)	15mm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 인문환경

1) 인구현황

① 경상북도 인구 규모

- 경상북도의 인구는 2013년 조사 시점 2,739,509인으로 전국 50,219,669인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면적대비 비율인 18.99%보다는 낮은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음
- 경상북도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2009~2013년에는 0.43%로 전국 0.35% 대비 높게 나타남
- 2001년 이후 경북인구는 정체되고, 대도시의 인구는 다소 증가 또는 정체의 추세이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도시의 급격히 감소함

[표 2.4] 경상북도 인구추이-1

(단위 : 인, %)

구분	2001년	2005년	2009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01~'05	'05~'09	'09~'13
전국	47,357,362	48,138,077	49,182,038	50,219,669	0.61	0.25	0.35
경북	2,802,597	2,711,900	2,705,226	2,739,509	-0.33	0.18	0.43

자료 : 통계청

2) 인구특성

① 연령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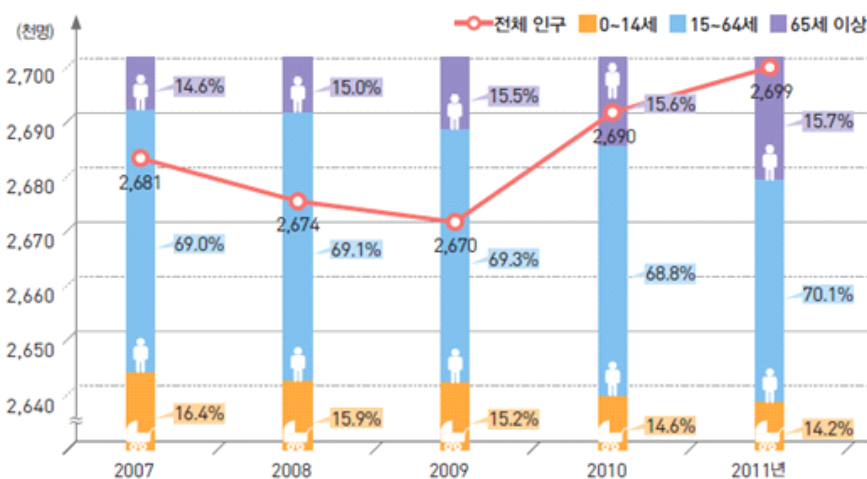
- 전국과 대비한 비율에서 경제활동인구는 낮으며,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국의 평균보다 높음
- 경상북도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인구가 총인구의 13.5%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14.7%보다 낮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은 전국에 비해 높은 편
-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는 총인구의 69.0%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73.1%보다 낮게 나타남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7.5%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12.2%보다 높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축·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책 시급

[표 2.5] 경상북도 인구추이-2

(단위 : 인)

구분	2001년		2005년		2009년		2013년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전국	경북
계	47,357,362	2,756,571	48,138,077	2,651,653	49,182,038	2,631,972	50,219,669	2,642,329
15세 미만	9,853,736	537,327	9,241,187	472,041	8,232,065	409,495	7,370,118	357,509
15~64세	33,925,226	1,892,209	34,530,248	1,805,401	35,694,138	1,799,100	36,711,849	1,823,041
65세 이상	3,578,370	327,035	4,366,642	374,211	5,255,835	423,377	6,137,702	461,779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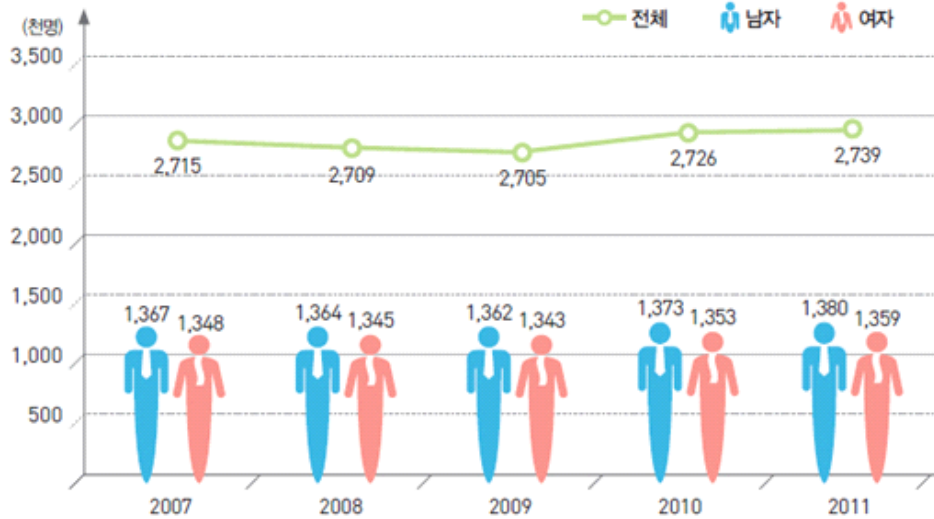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그림 2.2] 경상북도 인구추이-2

② 연령별 성별인구

- 경상북도의 성별인구는 남녀 비율이 50%로 안정적인 균형비를 나타내고 있음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그림 2.3] 경상북도 연도별 성별인구

③ 1~2인 가구 현황

- 1~2인 가구는 총 58.24%로 경상북도 가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경상북도에서 1~2인 가구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 경상북도의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46%(2000년)에서 28.81%(2010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전국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23.88%보다 높음
- 경상북도의 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37%(2000년)에서 29.43%(2010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24.25%보다 높음

[표 2.6] 경상북도 1~2인 가구추이

(단위 : 가구)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전 국	가구전체	14,311,807	15,887,128	17,339,422
	1인가구	2,224,433	3,170,675	4,142,165
	2인가구	2,730,548	3,520,545	4,205,052
경 북	가구전체	887,917	938,840	1,005,349
	1인가구	163,919	224,611	289,704
	2인가구	216,398	261,810	295,894

자료 : 통계청

④ 노인인구 변화

- 노인인구의 증가 대책 필요
- 경상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5%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2.2% 보다 높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책이 필요
-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경상북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에서 17.5%로 증가

[표 2.7] 경상북도 노인인구 비율

(단위 : 인, %)

구분	2001		2005		2009		2013	
	계	65세이상	계	65세이상	계	65세이상	계	65세이상
전국	47,357,362 (100.0)	3,578,370 (7.6)	48,138,077 (100.0)	4,366,642 (9.1)	49,182,038 (100.0)	5,255,835 (10.7)	50,219,669 (100.0)	6,137,702 (12.2)
경북	2,756,571 (100.0)	327,035 (11.9)	2,651,653 (100.0)	374,211 (14.1)	2,631,972 (100.0)	423,377 (16.1)	2,642,329 (100.0)	461,779 (17.5)

자료 : 통계청

⑤ 외국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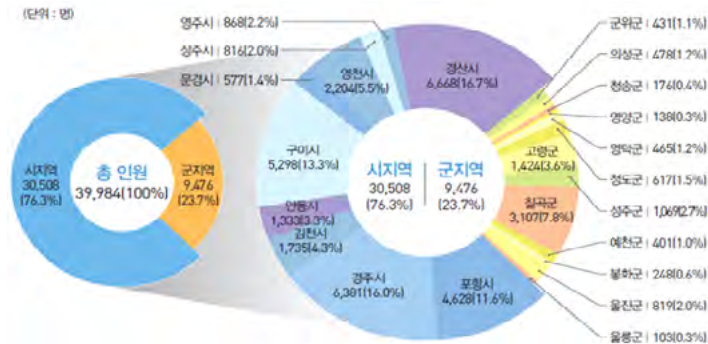
- 외국인 비율의 증가 추세
-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경상북도 전체인구에서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63%에서 1.46%로 증가
- 2012년 경상북도 외국인 인구는 1.46%로 전국 평균 1.95%보다 낮은 비율을 보임

[표 2.8] 경상북도 외국인 인구추이

(단위 : 인)

구분	2001		2005		2009		2012	
	계	외국인	계	외국인	계	외국인	계	외국인
전국	47,357,362	244,172	48,138,077	485,477	49,182,038	870,636	50,219,669	982,461
경북	2,802,597	17,893	2,711,900	23,409	2,705,226	35,350	2,739,509	40,067

자료 : 통계청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그림 2.4] 경상북도 외국인 현황

⑥ 도시와 농촌의 인구 현황

- 도시지역의 인구 집중이 심함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그림 2.5] 경상북도 지역별 인구 현황

- 경상북도의 도시화율은 2012년 76.79%로 전국 도시화율 평균인 90.0%에 비해서는 낮으나 인구의 도시집중은 심함
- 경상북도의 도시인구는 도시화, 산업화, 공업화의 영향으로 대도시로 이동하였고, 최근에는 증가 추세가 감소함

[표 2.9] 경상북도 인구분포도에 따른 도시화율

(단위 : 인,%)

구분	2006	2009	2012	연평균증가율	
				'06~'09'	'09~'12'
경북전체	2,689,000	2,669,880	2,698,350	-0.71	1.07
도시인구	2,082,000	2,053,960	2,072,130	-1.37	0.88
비도시 인구	607,000	615,920	626,220	1.47	1.67
도시화율	77.43	76.93	76.79	-	-

자료 : 국토교통부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경상북도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2.57%에서 35.45%로 증가
- 2010년 경상북도 농업과 수산업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5.45%와 18.60%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0] 경상북도 연령별 농업인구 추이 (단위 : 인,%)

구분	2005		2010	
	전국	경북	전국	경북
계	3,433,573 (100.0)	543,237 (100.0)	3,062,956 (100.0)	491,225 (100.0)
15세미만	335,085 (9.76)	42,793 (7.88)	270,392 (8.83)	36,002 (7.33)
15~64세	2,099,182 (61.14)	323,519 (59.55)	1,819,885 (59.42)	281,094 (57.22)
65세이상	999,306 (29.10)	176,925 (32.57)	972,679 (31.75)	174,129 (35.45)

자료 : 통계청

[표 2.11] 경상북도 연령별 어업인구 추이 (단위 : 인,%)

구분	2005		2010	
	전국	경북	전국	경북
계	232,821 (100.0)	15,690 (100.0)	182,039 (100.0)	11,099 (100.0)
15세미만	25,817 (11.1)	1,497 (9.6)	16,963 (9.3)	840 (7.6)
15~64세	163,936 (70.4)	11,632 (74.1)	123,983 (68.1)	8,201 (73.8)
65세이상	43,068 (18.5)	2,561 (16.3)	41,093 (22.6)	2,058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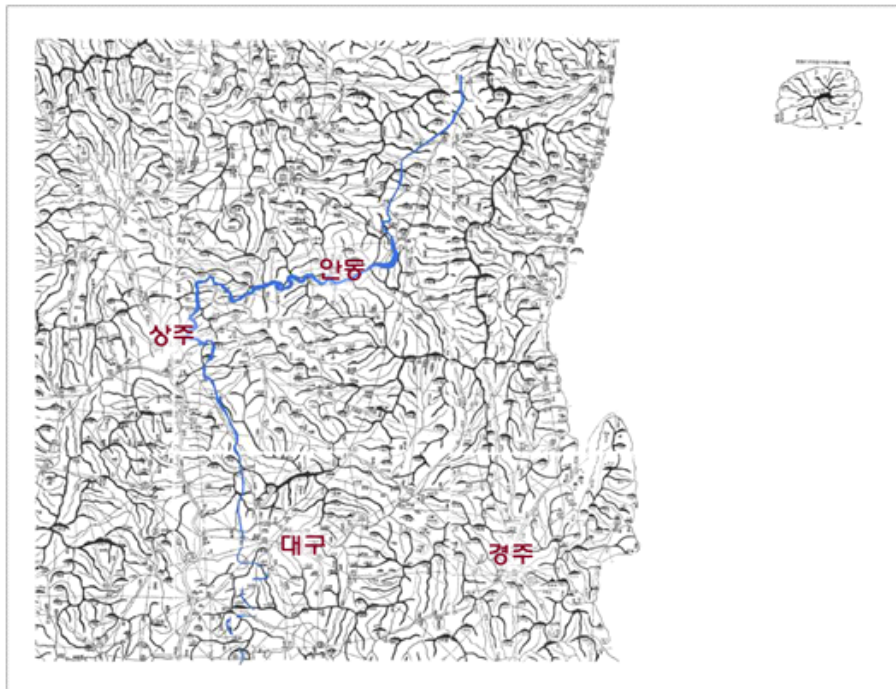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 시대별 변천과정

1. 형성기

1) 지리적 특성

- 경상북도는 옛날부터 '지광인중(地廣人衆)이라 하여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이 살았던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 우리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경상북도는 19,426.56km² 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로서 전체 국토면적의 약 20% (북한을 포함한 전 국토의 약 9%)임
- 한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태백산맥과 북서쪽으로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은 바다에 접하고 있어 대륙적 기후와 해양적 기후를 나타내고 있음
- 산맥들로 둘러싸여 대륙으로부터의 문화전파가 다소 늦어지기도 했으나, 오히려 전쟁의 피해를 적게 입었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음
- 중앙부에 흐르는 낙동강 유역 주변으로 농업이 발달하고 촌락이 형성되어 고대 가야문화와 신라문화를 발달시킨 모태가 됨



[그림 2.6] 조선시대 대동여지도의 경상북도 지형과 주요도시

2) 시대별 주요도시

① 통일신라시대

- 신라는 통일 후 확대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전국을 9주(州) 5소경(小京)으로 구획함
- 9주는 상주, 양주, 강주,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전주, 무주이며, 신라 및 가야지역에 3개, 구 백제지역에 3개, 구 고구려지역에 3개를 둠
- 통일신라의 수도가 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영역을 통치하기가 불편하여, 수도를 지금의 대구로 옮기려 하다가 그만두고, 그 대신 수도 외에 대가야의 본거지와 백제 및 고구려의 옛 땅에 5개의 소경을 둠
- 경상도 지역은 수도 이외에도 9주 중에서 상주와 양주의 2개 주가 속하여 삼국통일 이후에도 계속 중요시 됨

[표 2.12]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주의 이름	주의 수	소경	군의 수	현의 수	현재의 지명
상주(尙州)	1		10	30	상주(尙州)
양주(良州)	1	금관(金官 : 김해)	12	34	양산(梁山)
강주(康州)	1		11	27	진주(晉州)
한주(漢州)	1	중원(中原 : 충주)	27	46	광주(廣州)
삭주(朔州)	1	북원(北原 : 원주)	11	27	춘천(春川)
명주(溟州)	1	서원(西原 : 청주)	13	29	공주(公州)
웅주(熊州)	1		9	25	강릉(江陵)
전주(全州)	1	남원(南原 : 남원)	10	31	전주(全州)
무주(武州)	1		14	44	광주(光州)
합계	9	5	117	293	

2) 시대별 주요도시

② 고려시대

- '경상'(慶尙)이란 지명은 고려 때 경상지역의 대표적 고을인 경주(慶州)와 상주(尙州)의 앞글자에서 유래함
- 고려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의 중심이 개성이 있는 경기도로 옮겨져 경상북도의 중요성이 약해졌으나, 거란족의 침입 등으로 1100년대 이후에는 다시 경북지역이 중요시 됨
- 고려의 행정구역은 전국을 5도(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 양계(동계, 북계)와 경기도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 5도호부, 12목(8목)을 비롯하여 군, 현, 진 등을 설치함

- 경주는 3경의 하나인 동경, 상주는 12목 중의 하나이며, 안동은 도호부로 승격됨

② 조선시대

- ‘조선인재 반재영남’ (朝鮮人材 半在嶺南 : 조선시대의 인재 가운데 절반은 영남에 있다)
- 조선왕조가 시작되면서 경북지역은 인재의 보고, 재부의 원천이라 불리어질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며, 전국에서 가옥 수와 군·현의 수가 가장 많았음
- 경상도는 ‘땅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다’는 이유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좌도와 우도로 나눈 적이 있으며, 경상 좌·우로 나누어 좌도는 경주, 우도는 상주에 감영을 두었다가 대구로 옮김
- 정유재란으로 경상감영이 불타자 일시 안동으로 옮겼으나, 위치가 치우쳐 있음으로 대구에 정착하게 됨

2. 일제시대 (1910-45)

1) 주요철도

- 경북지역은 1905년 서울-부산 간의 경부선이 개통됨으로써 철도시대가 시작됨
- 주요철도의 개통에 의해 대구를 중심으로 정미소, 담배, 양주, 제지, 섬유 등 식료품 및 경공업이 발달함
- 당시의 공업은 주로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중화학공장을 북한지역에 많이 건설한 관계로 경상북도의 공업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짐

[표 2.13] 경상북도 내 주요 철도시설

철도명	전체구간	도내구간	개통일
경부선	서울-부산	신암-신거	1905
대구선	동대구-영천	동대구-영천	1918
경북선	김천-영주	김천-점촌 점촌-영주	1931 1966
동해남부선	부산진-포항	모화-포항	1935
중앙선	청량리-경주	영천-우보 우보-안동 안동-단양	1938 1940 1942



[그림 2.7] 일제시대의 철도노선도

2) 인구의 이동

- 지하자원이 빈약하고 대구의 섬유공업 이외에는 근대공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경상북도의 인구가 다른 지방으로 많이 이동해 감으로서 일제통치 하의 인구는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인구수도 전국 1위에서 3위로 떨어짐

[표 2.14] 일제시대 경상북도의 인구증감

(단위 : 천명)

구분	1925년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
경상북도	2,333 (12.0%)	2,417 (11.5%)	2,563 (11.2%)	2,472 (10.2%)	2,606 (10.1%)
지 수	100.0	103.6	109.9	106.0	111.7
전 국	19,523	21,058	22,899	24,326	25,900
지 수	100.0	107.9	117.3	124.6	132.7

자료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3. 산업시대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에 의한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도 크게 변화함
- 상기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수도권과 더불어 국토발전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1) 경제발전 5개년 계획

- 경상북도의 공업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1962-96)의 추진과 더불어 양적, 질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함

① 개발기 (1962-71)

- 우리나라의 공업이 빠른 성장단계로 들어섰으며, 1970년대의 성장바탕을 다져 놓음
- 1차, 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섬유 수출산업이 증가함
- 경인지역과 울산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개발을 하였기에, 경북지역의 공업은 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지 못한 시기임

② 성장기 (1972-81)

- 수도권과 부산권에 뒤떨어져 왔던 경북지역의 공업은 1970년대에 이르러 크게 발전함
- 3차, 4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포항 종합제철공장(1973), 구미 공업단지(1973), 논공단

지(농촌 공업화로 새마을 공장 건설)가 성장함

- 포항과 구미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건설되어 눈부신 발전을 하고, 대도시 주변의 경산, 달성, 칠곡 등이 성장함

③ 안정기 (1982-92)

- 1970년대부터 경공업 부문의 비중이 차츰 낮아지고 중공업 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1980년에 들어오면서 경상북도의 중공업(76.5%) 발달로 경공업(제조업 23.5%) 비중이 전환됨

2) 고속도로 건설

- 정부에서는 날로 심해져가는 수송난을 해결하기위하여 1970년 이후 경상북도에 철도를 신설하는 대신에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됨
- 경상북도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이 있음

① 경부고속도로 (1970, 서울-부산)

- 경상북도의 남서부 지역(김천-경주)을 통과함

② 구마고속도로 (1977, 대구-마산)

- 경상남도와의 교통(대구-현풍)을 연결함

③ 88올림픽고속도로 (1984, 옥포-고서)

- 호남지역과의 교통(옥포-고령)을 연결함

④ 중앙고속도로 (1994, 대구-춘천)

- 북부지방과 강원도와의 교통(대구-의성-안동)을 연결함



[그림 2.8]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그림 2.9] 경상북도의 고속도로 및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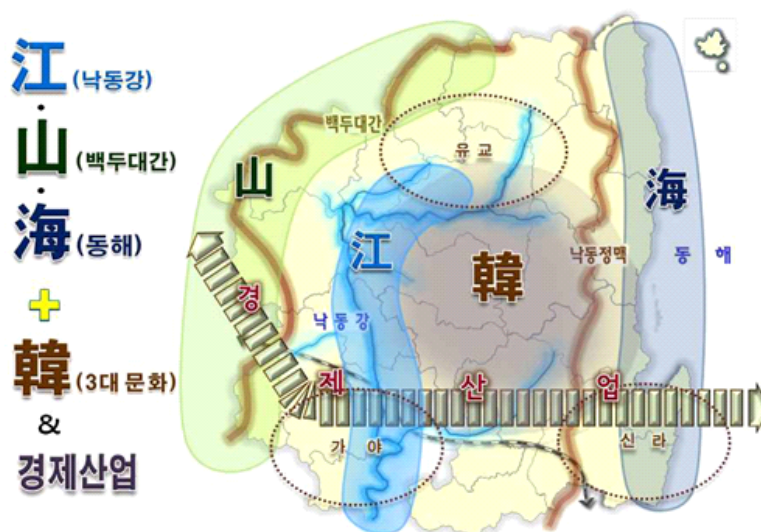
4. 문화시대

1) 2020년 경상북도 종합발전계획

- 2020년 경상북도의 발전비전은 '녹색·창조·통합의 새경북'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강·산·해가 어우러진 희망 경북을 지향함
- 녹색 : 국토, 교통, 산업, 환경의 지속가능한 녹색화 추진
- 창조 : 창의에 의한 새로운 가치·공간·제품의 창조 추진
- 통합 : 연계협력으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통합 추진

① 발전 공간구도

- 江(낙동강), 山(백두대간), 海(동해)와 더불어 韓(3대 문화), 경제산업(경부축)을 기본골격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융·복합될 수 있도록 설정함
- 韓(한)은 3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문화적 토양을 기반으로 문화를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
- 江(낙동강)은 소통과 경제의 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강 모델로 정립
- 山(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낙동정맥을 중심으로 Eco&Biz 벨트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녹색 레저 휴양 공간 및 소득을 창출하는 생태 비즈니스 모델로 확립
- 海(동해)는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을 '문화 삼각코리도'로 형성하여 남북통일과 동북아경제권의 교류증진을 대비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그림 2.10] 2020 경상북도 종합발전구도

② 3대 초광역축

- 낙동강, 백두대간, 동해안이 초광역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낙동강축, 백두대간축, 동해안축을 3대 초광역축으로 설정함

③ 4대 지역발전축

- 3대 초광역축을 보완하고자 4대 지역 발전축을 설정함
- 문화경제축 : 낙동강 중심의 관광·바이오벨트
- 산악생태축 : 백두대간 중심의 에코·비즈벨트
- 해양과학축 : 동해안 중심의 에너지·과학벨트
- 경제산업축 : 구미·대구·포항을 연계한 하이테크·융합벨트



[그림 2.11] 2020 경상북도 종합발전계획의 3대 초광역축(좌)과 4대 지역발전축(우)

④ 4대 생활권

- 경상북도의 생활권은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생활권,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연안생활권, 산업 및 자원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특화생활권 등으로 구분
- 북부자원권은 북부권의 중심역할 수행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문경, 예천, 봉화 등 북북권과 안동시를 중심으로 의성, 청송, 영양 등의 북남권으로 구분
- 동부해양권은 연안을 축으로 산업과 관광의 비중에 따라 영덕, 울진, 울릉이 포함된 연안북권과 포항과 경주가 속한 연안남권으로 구분
- 서부산업권은 낙동강을 기준으로 강서내륙권(김천, 상주)과 강동내륙권(구미)으로 구분
- 남부도시권은 동부권(경산, 군위, 영천, 청도)과 서부권(칠곡, 성주, 고령)으로 구분



[그림 2.12] 경상북도의 4대 생활권

[표 2.15] 경상북도의 4대 생활권

권역	해당 시·군	비전	목표
북부자원권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신발전 거점, 백두·낙동 그린 파라다이스	세계적인 문화환경지역, 국토의 신발전 거점, 녹색산업기반지역, 고품격 정주도시
동부해양권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신해양시대, 녹색산업 및 해양관광 중심	첨단 R&D 기반의 녹색산업 거점, 오감체험형 역사문화, 해양관광 거점
서부산업권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세계로 열린 첨단산업 네트워크 도시	IT 융복합산업 글로벌 거점 도약, 녹색산업 관문 육성, 녹색도시화 선도
남부도시권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차세대 지식기반서비스 연합도시	수송시스템산업(자동차부품 등) 전략적 육성, 한방/의료산업 기반 구축

2) 2014 경북도정

- 2014년 도정방향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북을 실현함
-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맞춤형 복지 주력, 도청 이전과 동해안 바다시대 준비,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융성 선도, 농업·제조업 등 기존 산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창조경제 견인, 권역별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표 2.16] 2014 경북도정의 분야별 추진전략

	도정방향	역점시책
1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분야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안동지역의 백신·한방, 영천의 항공, 구미·경산의 물(水)산업 등 유치 분야 확대 -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건설기계·항공 등 특화단지를 조성해 투자유치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금융 지원, 경영안정 자금 확대와 기술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육성
2	대한민국 '문화융성'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 왕경유적 복원, POST이스탄불, 해양실�크로드, 세계유교선비문화포럼 - 문화융성의 선도 지역으로서 신라, 유교, 가야 문화를 권역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동시에 발전 - 경북특성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실경뮤지컬, 백두대간 협곡열차 등으로 소득과 일자리 창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완공을 통해 MICE산업 육성
3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적 전략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이전, 원자력클러스터, 권역별 미래성장 기반구축 - 중남부권의 IC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동부권의 첨단 R&D 산업, 북부권의 생명산업 그린밸리 조성으로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4	FTA에 대응하여 농어업을 희망찬 미래산업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대책 추진, 인력양성, 수출확대, 어업·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농민사관학교 활성화와 귀농 컨설팅을 통한 농업 인재육성과 수출농업 활성화 주력 - 마을단위 영농사업지역 확대와 농촌 리모델링 사업으로 농어업의 미래 산업화와 살기좋은 농어촌 만들기
5	따뜻한 복지와 안전한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예산 확대, 맞춤형 복지 강화,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정부3.0 -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복지' 실현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일자리 확충과 임금조성, 치매 관리, 여성 경쟁력 강화 등 도민 '맞춤형 복지'에 매진 - 특수유해화학물질 대응전문가 양성 및 중소기업 안전진단 추진 등 선제대응시스템 구축, 정보공개 확대 및 ICT 활용한 정부3.0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6	경북의 魂을 한국의 정신으로 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정체성 글로벌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새마을세계화 명품브랜드화 - 문화예술을 통해 평화의 섬 독도 이미지 각인, 독도방파제, 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 - 새마을시범마을 확대와 해외 새마을연수센터 건립, UN, KOICA, UNDP와의 협력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7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동해안시대 개막, 신공항 건설, 행복생활권 - 환동해의 중심 해양경북 실현위한 휴양레포츠, 해양산업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울릉공항 추진 등 국토의 U자형 개발 -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휴양과 산업의 핵심축으로 산림치유센터와 산채클러스터, 멤브레인 기업 육성과 세계 물포럼 준비 - 행복생활권 구성과 각종 협력사업 발굴 및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원 대상 선정 등 지역 내 균형발전 기반구축

자료 : 경상북도청

3 지역별 건축 관련 현황

1. 건축물 현황

1) 면적별 건축물 현황

- 경상북도 내 전체 건축물 중 62%가 1백㎡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표 2.17] 경상북도 면적별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

구분	합계	1백㎡ 미만	1백㎡ ~2백㎡ 미만	2백㎡ ~3백㎡ 미만	3백㎡ ~5백㎡ 미만	5백㎡ ~1천㎡ 미만	1천㎡ ~3천㎡ 미만	3천㎡ ~1만㎡ 미만	1만㎡ 이상
전국	6,796,239	3,254,308	1,540,010	499,820	656,411	443,440	229,884	124,835	47,531
비율	100	48	23	7	10	7	3	2	1
경북	758,786	471,351	141,413	36,205	51,079	32,212	17,653	6,758	2,115
비율	100	62	19	5	7	4	2	1	0

자료 : 국가통계포털

2) 용도별 건축물 현황

- 용도에 따른 경상북도의 건축물은 주거용도가 가장 많으며, 전국과 비교할 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남

[표 2.18] 경상북도 용도별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전국	6,796,239	4,516,392	1,138,401	265,452	175,142	700,852
비율	100	67	17	4	3	10
경북	758,786	502,256	102,161	28,357	17,444	108,568
비율	100	66	14	4	2	14

자료 : 국가통계포털

3)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 소유구분에 따른 경상북도의 건축물은 개인소유가 가장 많으며, 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19] 경상북도 소유구분별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

시도명	합계	국공유	개인	법인	그 외 기타
전국	6,796,239	165,599	5,500,413	359,627	770,600
비율	100	3	81	5	11
경북	758,786	16,104	657,055	38,449	47,179
비율	100	2	86	1	1

자료 : 국가통계포털

4) 층수별 건축물 현황

- 층수에 따른 경상북도의 건축물은 82% 정도가 1층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전국과 비교하면 1층 건축물이 상당히 많음

[표 2.20] 경상북도 층수별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

시도명	계	1층	2-4층	5층	6-10층	11-20층	21-30층	31층이상	그 외 기타
전국	6,796,239	4,305,333	2,180,533	137,463	64,560	73,936	13,599	1,020	19,795
비율	100	63	32	2	1	1	0	0	1
경북	758,786	619,671	127,922	4,752	2,024	2,776	318	38	1,285
비율	100	82	17	1	0	0	0	0	0

자료 : 국가통계포털

5) 시·군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녹지지역(79.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거지역(9.3%), 공업지역(7.4%), 상업지역(1.5%)의 순으로 나타남
- 시군지역별로 보면,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모든 용도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지역별 토지이용현황으로 녹지지역은 경주시, 칠곡군, 경산시, 주거지역은 포항시, 칠곡군, 울진군, 공업지역은 구미시, 영천시, 상업지역은 김천시, 경산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2.21] 경상북도 시군 용도별 토지이용

(단위 : km², %)

구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시	포항시	291.6	16.9	103.3	64.4	5.0	19.6	36.6	28.5	212.8	15.5
	경주시	456.9	26.4	3.8	2.3	2.9	11.4	20.9	16.3	411.3	29.9
	김천시	61.5	3.6	2.3	1.4	1.6	6.4	3.9	3.1	42.2	3.1
	안동시	72.8	4.2	1.5	0.9	1.5	6.0	1.9	1.5	57.4	4.2
	구미시	185.7	10.7	3.5	2.2	3.5	13.7	29.5	23.0	126.8	9.2
	영주시	50.1	2.9	1.3	0.8	1.3	5.2	3.0	2.4	37.5	2.7
	영천시	56.9	3.3	0.9	0.6	0.9	3.5	7.7	6.0	39.6	2.9
	상주시	50.3	2.9	1.1	0.7	1.1	4.5	2.5	1.9	37.9	2.8
	문경시	37.9	2.2	1.2	0.8	1.2	4.8	2.9	2.3	27.0	2.0
	경산시	108.7	6.3	1.6	1.0	1.6	6.2	5.8	4.5	84.7	6.2
	소계	1372.3	79.4	120.5	75.1	20.6	81.3	114.8	89.3	1,077.1	78.4
군	군위군	7.4	0.4	1.0	0.6	0.1	0.5	0.2	0.2	6.1	0.4
	의성군	32.6	1.9	3.9	2.4	0.5	2.0	1.0	0.8	27.2	2.0
	청송군	6.2	0.4	1.6	1.0	0.3	1.2	0.0	0.0	4.3	0.3
	영양군	11.5	0.7	1.3	0.8	0.3	1.1	0.1	0.1	9.8	0.7
	영덕군	15.0	0.9	3.2	2.0	0.7	2.6	0.3	0.3	10.7	0.8
	청도군	21.2	1.2	2.2	1.4	0.3	1.2	0.2	0.2	18.4	1.3
	고령군	30.5	1.8	2.9	1.8	0.1	0.6	1.8	1.4	25.7	1.9
	성주군	9.6	0.6	1.9	1.2	0.2	0.7	1.0	0.8	6.6	0.5
	칠곡군	148.1	8.6	10.8	6.7	0.6	2.5	5.8	4.5	130.9	9.5
	예천군	12.4	0.7	3.2	2.0	0.4	1.7	0.3	0.3	8.5	0.6
	봉화군	9.3	0.5	1.7	1.1	0.2	0.8	0.1	0.1	7.3	0.5
	울진군	44.1	2.6	5.9	3.7	0.9	3.4	2.8	2.2	34.5	2.5
	울릉군	7.6	0.4	0.5	0.3	1.0	0.3	0.1	0.1	6.9	0.5
	소계	355.4	20.6	40.0	24.9	4.7	18.7	13.7	10.7	296.9	21.6
합계		1,727.7	100.0	160.5	100.0	25.4	100.0	128.6	100.0	1,374.0	100.0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 건축허가 현황

1)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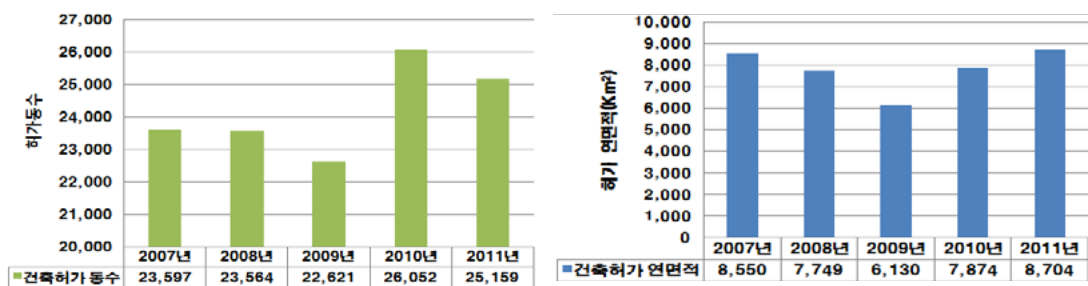
- 경상북도의 연도별 건축허가 수는 2007년 23,597동, 2008년 23,564동, 2009년 22,621동, 2010년 26,052동, 2011년 25,159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면적은 2011년 8,705km²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11년 허가 건축물의 구조별 연면적을 살펴보면 철골구조가 4,250km²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콘크리트구조 3,844km², 철골·철근콘크리트조 375km², 조적조 138km², 목조 92km²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2] 경상북도 건축허가 현황

(단위 : 동수, m²)

연별		합계 Total	콘크리트 Concrete	철골 Steelframe	조적 Masonry	철골·철근 ferro- concrete	나무 Wooden	기타 Others
2007	동수	23,597	5,791	13,878	2,602	111	965	250
	연면적	8,550,307	4,742,295	3,347,453	177,861	212,092	59,935	10,671
2008	동수	23,564	5,210	14,468	2,595	96	1,085	110
	연면적	7,748,549	3,598,061	3,635,443	197,086	228,661	81,818	7,480
2009	동수	22,621	4,636	14,158	2,395	108	1,180	144
	연면적	6,130,294	2,629,814	3,119,893	167,926	121,742	83,479	7,440
2010	동수	26,052	4,920	17,502	2,091	85	1,276	178
	연면적	7,874,020	2,875,344	4,587,748	147,807	160,460	96,062	6,599
2011	동수	25,159	6,121	15,746	1,894	91	1,231	76
	연면적	8,704,856	3,844,279	4,250,168	137,910	375,381	91,664	5,454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그림 2.13] 경상북도 건축허가 현황(동수, 연면적별)

2)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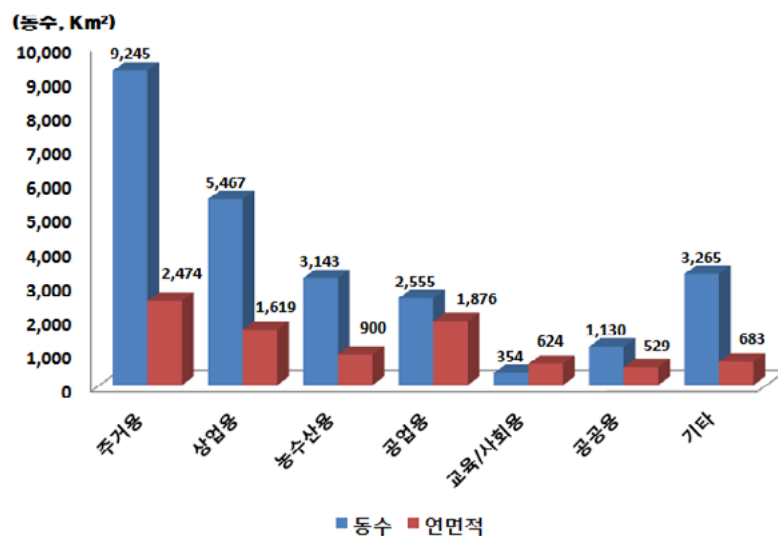
- 경상북도 내의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동수와 연면적 모두 주거용도가 가장 많고, 건축물 동수에서는 두 번째로 상업용도가 많으나 연면적에서는 공업용도가 많음

[표 2.23] 경상북도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단위 : 동수, m²)

구분		합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주거용	동수	9,245	8,085	1,024	136
	연면적	2,474,050	2,370,446	85,317	18,287
상업용	동수	5,467	3,231	1,555	681
	연면적	1,618,608	1,308,691	175,507	134,410
농수산용	동수	3,143	2,259	868	16
	연면적	900,078	721,232	176,279	2,567
공업용	동수	2,555	998	1,544	13
	연면적	1,876,270	1,192,425	672,841	11,004
교육/사회용	동수	354	180	172	2
	연면적	623,816	572,568	50,528	720
공공용	동수	1,130	432	601	97
	연면적	528,754	278,314	204,274	46,166
기타	동수	3,265	2,255	953	57
	연면	683,280	553,297	116,592	13,391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그림 2.14] 경상북도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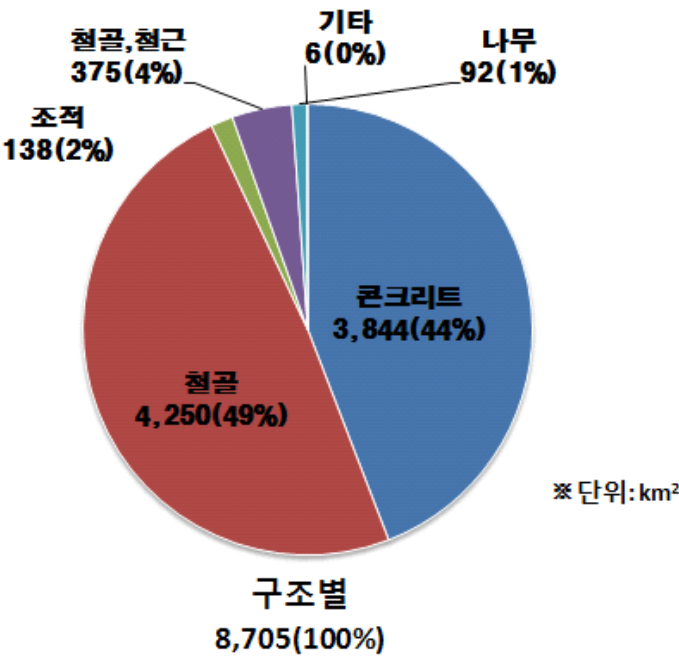
3) 구조별 건축허가 현황

- 구조별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콘크리트와 철골 재료가 거의 90%를 차지함
- 전국과 비교하면, 철골 구조가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24] 경상북도 구조별 건축허가 현황 (단위 : 동, %)

시도명	합계	콘크리트	철골	조적	철골철근	나무	기타
전국	230,928	90,777	108,027	17,398	2,331	11,826	569
비율	100	39.31	46.78	7.53	1.01	5.12	0.25
경북	23,902	6,126	14,623	1,730	77	1,259	87
비율	100	25.63	61.18	7.24	0.32	5.27	0.36

자료 : 국가통계포털



[그림 2.15] 경상북도 구조별 건축허가 현황

4) 시·군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 경상북도의 건축허가 동수(2011)는 주거용(36.7%), 상업용(21.7%), 농수산용(12.5%), 공업용(10.2%), 교육/사회용(4.5%), 공공용(1.4%) 순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대부분 주거용이 가장 많으나, 포항시, 칠곡군, 울릉군은 상업용, 고령군은 공업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5] 경상북도 시·군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단위 : 동수, m²)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교육/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포항시	2,686	1,438,657	864	486,375	890	449,506	157	35,956	366	229,652	48	36,650	120	79,908	241	120,610
경주시	2,715	907,484	1,152	251,363	566	123,063	184	50,874	465	365,261	19	13,738	144	63,225	185	39,960
김천시	1,180	760,339	370	76,346	256	184,882	212	72,327	110	212,514	27	175,438	52	13,853	153	24,979
안동시	1,457	551,024	456	150,006	398	90,474	176	55,658	76	53,989	21	129,894	85	32,374	245	38,629
구미시	1,709	978,117	512	357,602	468	184,741	162	42,932	358	304,980	20	10,860	94	44,520	95	32,482
영주시	1,012	260,170	379	69,197	156	33,990	259	73,616	41	35,410	8	1,734	31	29,209	138	17,014
영천시	1,389	467,175	577	157,836	241	45,270	166	54,415	175	122,566	16	7,750	25	22,924	189	56,414
상주시	1,344	228,271	470	84,095	227	38,288	175	39,790	30	12,910	2	75	73	11,241	367	41,872
문경시	1,022	320,760	357	123,286	206	39,928	164	32,795	38	32,193	32	29,691	32	27,268	193	35,599
경산시	1,666	794,342	576	247,366	409	147,557	198	45,832	268	214,886	6	3,698	63	59,874	146	75,129
군위군	580	78,221	305	30,230	53	6,805	52	14,639	29	7,269	6	2,242	49	3,120	86	13,916
의성군	695	128,733	295	35,381	101	14,881	77	27,548	37	14,954	3	168	36	14,573	146	21,228
청송군	568	84,444	243	22,757	101	11,837	62	28,171	3	4,826	7	2,057	19	2,827	133	11,969
영양군	410	76,526	159	17,097	44	2,876	108	40,118	4	2,035	-	-	17	7,028	78	7,372
영덕군	599	107,366	217	21,414	128	19,867	73	30,335	5	1,396	12	4,487	36	18,919	128	10,948
청도군	1,030	146,773	507	48,728	149	20,059	190	49,211	24	10,146	3	2,498	28	3,944	129	12,187
고령군	554	152,921	110	14,369	109	21,048	48	14,583	212	94,019	2	686	45	4,036	28	4,180
성주군	1,096	256,432	426	70,727	181	25,131	193	49,086	151	79,198	4	461	20	5,545	121	26,284
칠곡군	1,164	316,641	304	57,623	417	88,267	50	11,470	137	60,688	4	2,270	82	35,841	170	60,482
예천군	784	135,306	229	28,885	94	14,014	221	61,311	5	1,622	66	9,930	23	5,864	146	13,680
봉화군	724	152,655	363	38,059	91	11,297	144	54,606	6	9,422	1	435	27	29,802	92	9,034
울진군	624	328,241	333	82,705	126	26,728	71	14,505	12	5,334	31	185,689	11	7,354	40	5,926
울릉군	151	34,258	41	2,603	56	18,099	1	300	3	1,000	16	3,365	18	5,505	16	3,386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3. 주택 건축물 현황

1) 경상북도 연도별 · 용도별 주택 현황

- 경상북도의 주택은 연도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 전체적으로 단독주택과 다른 유형의 주택이 반반의 비율로 나타남
- 1979년 이전에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으나, 1980년 이후에는 아파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최근에는 연립주택과 영업용 건물 내 주택은 감소 추세임
- 경상북도의 주택 환경의 문제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후 주택 발생과 구도심의 인구 감소로 인한 폐·공가의 발생이 전체 주거환경을 악화

[표 2.26] 경상북도 연도별 용도별 주택 현황

(단위 : 호수)

구 분	합 계	1979년이전	1980~1994년	1995~2004년	2005~2010년
단독주택	424,441	153,863	131,576	98,168	40834
아파트	370,429	2,583	130,185	174,268	63393
연립주택	21,207	1,112	13,493	5,623	979
다세대주택	28,605	95	11,283	15,140	2087
영업용건물내	13,593	2,004	5,490	4,560	1,539
합 계	858,275	159,657	292,027	297,759	108,832

자료 : 통계청

2) 경상북도 주택보급률

- 경상북도의 주택보급률은 2007년경 130%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다가, 현재는 110% 정도로 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높게 나타남

[표 2.27] 경상북도 주택 보급률 현황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가구 수	주택 수	보급률
전국	18,057.0	18,550.9	102.7
경북	1,037.2	1,141.9	110.1

자료 : 국가통계포털

3) 시·군별 주택 및 보급률 현황

- 경상북도 시·군별 주택현황(2011)은 단독주택(5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아파트 (36%), 다가구주택(19%) 순으로 나타남
- 10개시 대부분 단독주택 비율이 높으나,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는 아파트 비율이 높음
- 13개 군 중 칠곡군에서 주택수가 가장 많으며, 울릉군이 가장 적게 나타남
- 경상북도의 주택보급률(2011)은 109%이며, 각 시군 모두 100%가 넘고, 특히 청도군 (116%)과 칠곡군(115%)이 높게 나타남

[표 2.28] 경상북도 시군별 주택보급률 현황

(단위 : 가구, 호)

구분	일반 가구수	주택수						주택 보급률 (%)
		합계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포항시	191,924	208,030	87,276	45,049	104,658	5,741	10,415	108
경주시	88,816	108,899	64,560	21,880	37,863	2,123	5,347	110
김천시	48,882	52,717	33,111	5,495	18,323	782	501	107
안동시	64,946	70,174	41,211	10,921	26,922	1,563	473	108
구미시	150,757	166,339	71,987	5,495	87,078	2,684	4,589	110
영주시	41,833	43,045	26,901	10,921	13,899	2,082	163	102
영천시	37,866	41,529	26,192	51,576	13,742	810	785	109
상주시	40,803	44,838	34,860	4,875	8,472	488	1,018	109
문경시	28,445	30,710	22,805	3,508	5,789	1,394	722	108
경산시	104,464	112,883	57,816	38,863	53,000	578	1,588	108
군위군	9,132	10,441	8,888	413	193	261	99	114
의성군	24,030	26,772	24,663	1,017	1,400	274	435	111
청송군	11,229	12,498	10,587	571	1,328	217	388	111
영양군	7,487	8,184	7,547	351	125	206	306	109
영덕군	16,892	18,720	16,599	1,303	894	818	409	110
청도군	16,760	19,698	17,258	535	1,504	363	371	116
고령군	13,110	14,809	10,454	1,063	3,639	77	439	111
성주군	15,124	16,730	15,434	788	911	191	184	110
칠곡군	41,402	47,920	25,544	12,310	20,233	223	1,920	115
예천군	19,218	21,411	18,205	748	2,507	486	213	111
봉화군	13,734	14,977	12,952	512	1,405	390	230	109
울진군	20,699	23,389	16,542	1,855	4,424	1,581	842	113
울릉군	3,485	3,744	3,229	858	223	58	230	107
합계	1,011,038	1,118,457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4. 지역 건축 및 공간 환경 현황

1) 문화공간 현황

- 현재 경상북도 내의 문화공간은 전체 231개 이고, 공연시설이 가장 많으며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전시실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서 공공문화공간의 분포 격차로 인한 불균형 발생

[표 2.29] 경상북도 문화공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 장	민간 공연 장	영 화 관	스 크 린 수	미 술 관	화 랑	시·군 민 회관	종합 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	문 화 원	국 악 원	전수 회관
포항시	33	1	-	3	23	1	-	1	3	-	1	-	-
경주시	22	5	4	2	5	1	-	3	1	-	1	-	-
김천시	14	3	-	1	4	-	-	2	2	-	1	-	1
안동시	31	4	-	6	15	-	-	2	1	-	1	-	2
구미시	44	2	-	4	34	-	-	1	2	-	1	-	-
영주시	5	-	-	1	1	-	-	1	1	-	1	-	-
영천시	9	1	-	-	-	1	2	1	2	1	1	-	-
상주시	5	1	-	-	-	-	-	1	1	-	1	-	1
문경시	5	2	-	-	-	-	-	1	1	-	1	-	-
경산시	16	1	-	1	8	-	-	1	1	2	1	-	1
군위군	4	1	-	-	-	-	-	1	1	-	1	-	-
의성군	3	-	-	-	-	-	-	2	-	-	1	-	-
청송군	2	-	-	-	-	1	-	-	-	-	1	-	-
영양군	2	-	-	-	-	-	-	1	-	-	1	-	-
영덕군	3	1	-	-	-	-	-	1	-	-	1	-	-
청도군	7	-	-	-	-	1	3	1	-	-	1	-	1
고령군	3	1	-	-	-	-	-	1	-	-	1	-	-
성주군	3	1	-	-	-	-	-	1	-	-	1	-	-
칠곡군	7	1	-	1	1	-	-	2	1	-	1	-	-
예천군	4	-	-	-	-	-	-	1	-	-	1	-	2
봉화군	2	-	-	-	-	-	-	-	-	1	1	-	-
울진군	4	1	-	-	-	1	-	1	-	-	1	-	-
울릉군	3	1	-	-	-	-	-	1	-	-	1	-	-
합계	231	27	4	19	91	6	5	27	17	4	23		8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 교육시설 현황

- 경상북도의 교육시설은 분교를 제외하면 1,785개이며, 개수로는 유치원이 가장 많음
- 중학교까지는 국공립의 비율이 높음
- 농촌지역에 있는 분교의 경우는 폐교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활용 방안이 필요

[표 2.30] 경상북도 교육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학교수	
		본교	분교
유치원		701	
초등학교		484	53
중학교	국공립	204	12
	사립	75	-
	소계	279	12
일반고등학교	국공립	56	-
	사립	70	-
	소계	126	-
특수목적 고등학교	국공립	6	-
	사립	2	-
	소계	8	-
특성화 고등학교	국공립	32	-
	사립	17	-
	소계	49	-
자율고등학교	국공립	7	-
	사립	2	-
	소계	9	-
전문대학		16	-
교육대학		-	-
대학교		21	-
대학원		83	-
기타학교		9	-
합계		1,785	65

자료 : 경상북도 교육청

3) 체육시설 현황

- 경상북도 내 체육시설은 전체 4,515개이며, 이중 공공체육시설은 1,411개, 신고체육시설은 3,064개, 등록체육시설은 40개임

[표 2.31] 경상북도 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개소
공공체육시설	육상경기장		29
	축구장		49
	하키장		1
	야구장		13
	사이클		-
	테니스장		47
	씨름장		7
	간이 운동장		1137
	체육관	구기체육관	20
		투기체육관	3
		생활체육관	21
	수영장		17
	구궁장		14
	양궁장		1
	승마장		3
	골프 연습장		3
	조정 카누장		-
	요트장		1
	빙상장		1
	전천후 게이트볼장		29
	롤러스케이트장		11
	사격장		4
	합계		1,411
신고체육시설	요트장		1
	조정장		-
	카누장		-
	빙상장		3
	승마장		13
	종합체육시설		13
	수영장		33
	체육도장		776
	골프 연습장		507
	체력 단련장		330
	당구장		1,264
	썰매장		9
	무도장		3
	무도학원		72
	합계		3064
등록체육시설	골프장		40
	스키장		-
	자동차 경주장		-
	합계		40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4) 도로 현황

- 경상북도 내 도로는 12,416km이며, 시군도, 지방도, 일반도로, 고속도로 순으로 나타남

[표 2.32] 경상북도 도로 현황

(단위 : m)

구분	합계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시·군도
포항시	883,813	14,640	161,276	182,088	525,809
경주시	1,002,326	31,460	246,056	141,850	582,960
김천시	924,983	50,280	137,572	155,895	581,236
안동시	975,725	32,050	168,920	244,491	530,264
구미시	533,430	34,800	107,504	82,592	308,534
영주시	509,645	24,320	67,050	85,895	332,380
영천시	588,290	53,430	102,460	124,835	307,565
상주시	802,420	71,650	107,950	224,404	398,416
문경시	609,478	22,510	90,785	141,595	354,588
경산시	952,665	33,480	29,962	92,240	796,983
군위군	273,649	13,800	48,413	121,436	90,000
의성군	523,147	15,780	84,686	265,031	157,700
청송군	362,834	-	98,764	136,370	127,700
영양군	357,411	-	60,678	158,133	138,600
영덕군	419,083	-	81,935	142,470	194,678
청도군	379,946	16,730	101,160	97,756	164,300
고령군	223,123	33,810	38,933	44,580	105,800
성주군	373,094	32,980	88,654	87,760	163,700
칠곡군	328,870	42,520	80,350	53,100	152,900
예천군	397,622	12,140	62,092	132,100	191,290
봉화군	483,783	-	127,153	138,430	218,200
울진군	427,851	-	126,170	112,090	189,591
울릉군	83,000	-	-	44,200	38,800
합계	12,416,188	536,380	2,218,523	3,009,341	6,651,994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5) 공원 현황

- 경상북도내의 공원은 전체 1,373개가 있으며, 대부분은 도시 지역의 도시공원임
- 국립공원은 9개, 도립공원은 10개소가 있음

[표 2.33] 경상북도 공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자연공원				도시공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계	국립 공원	도립 공원	시· 군립 공원	계	어린 이 공원	소공 원	근린 공원	역사 공원	문화 공원	수변 공원	묘지 공원	체육 공원	기타 공원	
포항시	1	-	-	1	244	184	-	55	-	1	-	1	3	-	-
경주시		1	-		116	73	13	27	-	1	1	1	-	-	1
김천시	1	-	1	-	76	54	3	19	-	-	-	-	-	-	3
안동시	1	-	1	-	76	43	3	25	-	3	2	-	2	-	1
구미시	1	-	1	-	205	153	9	36	-	-	4	1	-	-	-
영주시	1	1	-	-	51	26	4	17	1	3	-	-	-	-	1
영천시	1	-	1	-	62	29	20	12	1	-	-	-	1	-	1
상주시	1	1	-	-	42	24	-	16	1	-	-	-	-	-	1
문경시	3	2	1	-	50	33	4	12	-	1	-	-	-	-	1
경산시	1	-	1	-	142	97	17	27	1	-	-	1	1	-	2
군위군	1	-	1	-	8	5	-	1	-	-	1	-	-	-	-
의성군	1	-	-	1	15	5	1	7	-	1	-	-	-	-	-
청송군	1	1	-		12	6	-	6	-	-	-	-	-	-	-
영양군	-	-	-	-	5	-	-	4	-	-	1	-	-	-	-
영덕군	1	1	-	-	27	15	2	10	-	-	-	-	-	-	-
청도군	1	-	-	1	14	9	-	5	-	-	-	-	-	-	1
고령군	-	-	-	-	13	4	1	8	-	-	-	-	-	-	-
성주군	1	1	-	-	16	10	-	5	1	-	-	-	-	-	-
칠곡군	2	-	2	-	73	53	2	16	-	-	1	1	-	-	1
예천군	-	-	-	-	20	14	-	6	-	-		-	-	-	-
봉화군	2	1	1	-	12	8	-	4	-	-	-	-	-	-	-
울진군	2	-	-	2	47	27	2	16	1	1	-	-	-	-	1
울릉군	-	-	-	-	10	5	3	2	-	-	-	-	-	-	-
계	23	9	10	5	1,336	877	84	336	6	11	10	5	7	0	14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6) 하천 현황

- 경상북도 내의 하천 현황을 보면, 국가하천은 6개, 지방하천 359개, 기타하천은 3,821개임
- 총 연장은 11,216km이며, 이중 국가 및 지방하천은 4,635km임

[표 2.34] 경상북도 하천 현황

(단위 : km)

구분	하천수	총연장	요개수			
			합계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합계	4,186	15,851	15,109	7,654	7,455	50.7
국가하천	6	430	464	450	14	97.0
지방하천	359	4,205	3,429	2,501	928	72.9
기타	3,821	11,216	11,216	4,703	6,513	41.9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5. 문화재 현황

1) 문화재 현황

- 경상북도의 문화재는 총 1,898개 (국보 55점, 보물 308점, 사적 및 명승 111점, 천연기념물 63개 등)이 있으나, 전국의 8.4% 수준으로 문화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시별로는 경주시가 314개, 안동시가 301개, 영주시가 127개, 군별로는 봉화군이 95개, 예천군이 83개, 청도군이 73개를 보유하고 있음

[표 2.35]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황 - 1

연별 및 시군별	총계(국 가+지방)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및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중요 무형문화재
2007	1,765	572	52	268	112	60	69	11
2008	1,794	584	52	276	115	60	69	12
2009	1,835	603	54	288	115	62	72	12
2010	1,871	620	55	302	115	63	73	12
2011	1,898	625	55	308	111	64	75	12
포항시	63	16	1	6	3	3	1	2
경주시	314	213	32	86	74	3	16	2
김천시	54	17	1	15	-	1	-	-
안동시	301	84	5	39	4	7	27	2
구미시	80	14	1	7	3	2	1	-
영주시	127	41	7	24	5	3	2	-
영천시	82	24	1	18	-	1	4	-
상주시	91	20	-	17	1	2	-	-
문경시	74	21	1	11	3	2	2	2
경산시	31	12	-	6	2	2	1	1
군위군	31	5	1	3	1	-	-	-
의성군	55	10	1	5	-	3	1	-
청송군	42	9	-	1	1	4	3	-
영양군	55	8	1	2	-	4	1	-
영덕군	72	5	-	2	-	1	2	-
청도군	73	26	-	18	-	6	2	-
고령군	28	9	-	4	4	-	1	-
성주군	69	10	-	5	2	1	1	1
칠곡군	25	8	-	6	1	1	-	-
예천군	83	31	-	20	3	3	3	2
봉화군	95	19	1	9	3	1	5	-
울진군	35	13	2	4	1	6	-	-
울릉군	18	10	-	-	-	8	2	-

[표 2.36]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황 - 2

지정문화재							등록문화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연별 및 시군별	소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2007	649	361	140	120	28	520	24
2008	649	361	139	121	28	534	27
2009	656	364	141	120	31	549	27
2010	664	365	145	124	30	561	26
2011	676	374	147	125	30	571	26
포항시	22	12	8	2	-	23	2
경주시	56	31	17	4	4	43	2
김천시	18	11	4	-	3	18	1
안동시	137	65	19	48	5	79	1
구미시	34	19	7	7	1	32	-
영주시	43	30	5	7	1	43	-
영천시	42	30	8	4	-	13	3
상주시	43	16	19	7	1	26	2
문경시	28	18	6	1	3	22	3
경산시	10	5	4	-	1	9	-
군위군	11	8	2	1	-	14	1
의성군	27	23	4	-	-	18	-
청송군	14	7	1	3	3	19	-
영양군	17	7	4	6	-	29	1
영덕군	24	8	5	9	2	42	1
청도군	29	17	9	1	2	16	2
고령군	11	7	3	1	-	8	-
성주군	35	16	10	8	1	24	-
칠곡군	7	5	2	-	-	8	2
예천군	26	17	2	5	2	26	-
봉화군	30	15	3	11	1	44	2
울진군	10	7	3	-	-	10	2
울릉군	2	-	2	-	-	5	1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 건축문화재 현황

- 경상북도는 전통 사찰이 171개소로 전국의 20%, 서원은 56개소로 21%, 향교는 40개소로 18%를 차지하고 있음
- 경상북도에는 유네스코 (UNESCO)등록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1995, 12월), 경주역사유적지구(2000,12월 :5개 지구 52점), 한국의 역사마을인 하회와 양동(2010년 8월)마을이 있음
- 경주시는 문화재는 가장 많지만 건축문화재 비율이 가장 낮고, 안동시는 문화재 중 건축문화재수가 가장 많은 곳임
- 영덕군은 문화재 중 건축문화재 비율(78%)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은 건축문화재 비율이 70%가 넘는 지역임
- 전체 문화재 가운데 건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43% 정도이지만, 불상이나 석비 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물을 감안한다면 절반이 훨씬 넘는 비율로 나타남

[표 2.37] 경상북도 건축문화재 현황

(단위 : 개)

시군		전체문화재	건축문화재	비율
시	안동	294	195	67%
	영천	81	41	51%
	포항	62	27	44%
	경산	32	11	34%
	상주	88	30	34%
	영주	126	42	33%
	구미	78	25	32%
	김천	53	12	23%
	문경	72	16	22%
	경주	315	42	13%
군	영덕	72	56	78%
	영양	55	39	71%
	청송	42	30	71%
	봉화	94	66	70%
	성주	67	40	60%
	칠곡	23	12	52%
	예천	83	41	49%
	의성	50	19	38%
	청도	73	26	36%
	군위	31	11	35%
	울릉	18	6	33%
	울진	35	11	31%
	고령	27	8	30%
계		1,871	806	43%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3) 전통가옥 문화재 지정현황

- 경상북도 내의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이 13개, 중요민속자료가 66개 있음
- 지방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66개, 민속자료가 113개 있고, 문화재자료는 91개 있음

[표 2.38] 경상북도 전통가옥 문화재 지정현황

(단위 : 개수)

문화재별(1)	문화재별(2)	행정구역별(1)	2009	2010	2011	2012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전국	2	2	2	5
		경상북도	0	0	0	-
	보물	전국	14	14	14	15
		경상북도	12	12	12	13
	중요민속자료	전국	152	153	155	160
		경상북도	61	62	64	66
지방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전국	63	63	-	-
		경상북도	61	62	64	66
	기념물	전국	8	8	-	-
		경상북도	6	6	-	-
	민속자료	전국	200	200	-	-
		경상북도	113	113	-	-
문화재자료	소계	전국	216	216	-	-
		경상북도	91	91	-	-
합계	소계	전국	655	656	-	180
		경상북도	296	297	-	79

[표 2.39] 민속마을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마을별(1)	마을별(2)	2009	2010	2011	2012
안동하회	유료	432,540	564,686	474,786	486,173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표 2.40] 건축문화재 -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현황

행정구역별(1)	지원내역별(1)	지원내역별(2)	2009	2010	2011	2012
전국	예산지원 (백만원)	소계	4,178	4,178	3,985	4,048
		국비	2,925	2,925	2,391	2,429
		지방비	1,253	1,253	1,594	1,619
	인력지원 (명)	상시	136	136	178	193
		수시	475	475	295	270
	지원문화재 (점)	소계	365	433	462	476
경상북도	예산지원 (백만원)	소계	540	576	497	495
		국비	378	403	298	297
		지방비	162	173	199	198
	인력지원 (명)	상시	14	14	21	24
		수시	77	84	42	30
	지원문화재 (점)	소계	66	74	76	79

4) 근대문화유산 현황

-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비지정 근대문화유산은 658개가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안동시, 경주시, 봉화군, 영주시 순으로 많은 근대건축 유산이 분포됨

[표 2.41] 경상북도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현황

(단위 : 개)

시	근대건축물수	군	근대건축물수
포항시	11	군위군	20
경주시	74	의성군	40
김천시	28	청송군	5
안동시	93	영양군	11
구미시	10	영덕군	17
영주시	66	청도군	19
영천시	42	성주군	9
상주시	45	칠곡군	28
문경시	25	예천군	6
경산시	20	봉화군	72
		울진군	17
총 합계		658	

자료 :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표 2.42] 경상북도 지역 등록문화재 현황

연번	종목	명칭	명칭 (한자)	지역	소재지	관리자 (단체)	소유자	지정일
1	등록문화재 제49호	안동역 급수탑	安東驛 給水塔	안동시	운흥동 207-2 외		한국철도공사	2003 -01-28
2	등록문화재 제50호	영천역 급수탑	永川驛 給水塔	영천시	완산동 891	한국철도 시설공단	국토교통부	2003 01-28
3	등록문화재 제218호	봉화 유곡리 김직현가옥	奉化 西谷里 金直鉉 家屋	봉화군	봉화읍 토일길 156-12 (유곡리)		김직현	2005 11-11
4	등록문화재 제235호	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		울릉군	울릉읍 도동1길 27, 외 1필지 (도동리)	문화유산 국민신탁	문화재청	2006 03-02
5	등록문화재 제253호	영천 과전동 성용환 가옥	永川 果田洞 成龍煥 家屋	영천시	교창길 25, 외 1필지 (과전동)		성용환	2006 06-19
6	등록문화재 제254호	영천 구화룡교	永川 舊 化龍橋	영천시	서부동 750-1 외		영천시	2006 06-19
7	등록문화재 제255호	영양 구 용화광산 선광장	英陽 舊 龍化鑛山 選鑛場	영양군	일원면 용화2리 337번지 일원		영양군	2006 06-19
8	등록문화재 제256호	청도 풍각 면사무소	淸道 豐角面事 務所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600-1		청도군	2006 06-19
9	등록문화재 제257호	봉화 척곡교회	奉化 尺谷敎會	봉화군	법전면 건문골길 186-42, 외 1필지 (척곡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주노회유지재단	2006 06-19
10	등록문화재 제278호	상주 구내서면 사무소	尙州 舊 內西面事 務所	상주시	내서면 신촌2길 10-5 (신촌리)	상주시	상주시	2006 09-19
11	등록문화재 제284호	상주농협 협동조합 구창고	尙州 農業協同 組合 舊 倉庫	상주시	왕산로 64, , 168-2 (남성동)		상주농업 협동조합	2006 12-04
12	등록문화재 제286호	울진 행곡교회	蔚珍 杏谷敎會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102-1		(재)대한기독교 침례교회	2006 12-04

13	등록문화재 제287호	울진 용장교회	蔚珍 龍場教會	경북 울진군	죽변면 용장길 151-7 (화성리)		(재)대한기독교 침례교회	2006 12-04
14	등록문화재 제288호	영덕 송천예배당	盈德 松川禮拜堂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405-1		(재)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	2006 12-04
15	등록문화재 제289호	문경 구금융조합 사택	聞慶 舊 金融組合 舍宅	경북 문경시	산양면 불암2길 14-6 (불암리)		문경시	2006 12-04
16	등록문화재 제290호	경주 구 서경사	慶州 舊 西慶寺	경북 경주시	서부동 93		경주시	2006 12-04
17	등록문화재 제291호	군위성결 교회	舊 軍威聖潔 教會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서4길 6 (동부리)		(재)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2006 12-04
18	등록문화재 제292호	경주 우안 양수장	慶州 右岸 揚水場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	한국농어 촌공사 포항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2006 12-04
19	등록문화재 제293호	청도 이호우· 이영도 생가	淸道 李鎬雨·李 永道 生家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천길 46, , 259-28, 259-33, 259-24 (내호리)	.	이상현	2006 12-04
20	등록문화재 제304호	문경 가은역	聞慶 加恩驛	경북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2441, 외 (왕능리)	.	문경시	2006 12-04
21	등록문화재 제326호	문경 구 불정역	聞慶 舊 佛井驛	경북 문경시	불정강변길 187 (불정동)	한국철도 시설공단	국토교통부	2007 04-30
22	등록문화재 제405호	김천 부항지서(釜 項支署) 망루(望樓)	金泉 釜項支署 望樓	경북 김천시	부항면 사등3길 12 (사등리)		경찰청	2008 10-01
23	등록문화재 제496호	최송설당 상		경북 김천시	송설로 90	학교법인 송설당 교육재단	학교법인 송설당 교육재단	2012 06-19
24	등록문화재 제497호	청송 소류정	靑松 小流亭	경북 청송군		장옥순	장옥순	2012 08-09
25	등록문화재 제540호	영암선 개통 기념비		경북 봉화군		.	한국철도공사	2013 02-21
26	등록문화재 제541호	박문서관 목판 일괄	博文書館 木板 一括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한국국학 진흥원	노승주	2013 04-17

자료 : 문화재청

6. 건축관련 산업체계 현황

1) 건축관련 산업체 현황

- 경상북도의 건축관련 산업체 수는 449개로 전체 산업체 수의 4.3%를 차지함
- 100명 이상의 대규모 산업체는 없으며, 4명 이하의 영세한 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함

[표 2.43] 경상북도 건축관련 산업체 현황

구분	1명	2-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199명	200-299명	300이상	합계
경상북도	80	243	78	27	16	5				449
전국합계	1,430	4,804	2,439	1,220	752	195	93	24	30	10,987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 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2) 경제활동인구 대비 종사자 수 현황

- 경상북도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 종사자 비율은 0.17%로 인천광역시와 함께 전국에서 최하위임

[표 2.44] 경상북도 경제활동인구대비 건축산업종사자 현황

구분	경제활동인구(천명)	종사자 수(천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
경상북도	1397	2.37	0.17
전국합계	23,744	118.68	0.50

자료 : 상계서

3) 경제활동인구 대비 건축설계 종사자 수 현황

- 경상북도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건축설계 종사자 비율은 0.09%로 전라북도와 함께 전국에서 최하위임

[표 2.45] 경상북도 경제활동인구대비 건축설계종사자 현황

구분	경제활동인구(천명)	종사자 수(천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
경상북도	1397	1.311	0.09
전국합계	23,744	53.587	0.23

자료 : 상계서

4) 건축설계산업 규모 현황

- 경상북도의 건축설계 산업체수는 327개로 전국의 4.4%이고, 종사자 수는 2.4%에 불과함
- 매출액은 전국의 1.3%로 매우 낮음

[표 2.46] 경상북도 건축설계산업 규모 현황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개수	%	개수	%	액수	%
경상북도	327	4.4	1,311	2.4	52,435	1.3
전국합계	7,463	100	53,587	100	4,016,407	100

자료 : 상계서

5) 건축관련 산업체, 종사자 및 매출액 현황

- 업체당 매출액은 평균 4억6천4백만원, 1인당 연간 급여는 2천3백만원으로 전국최하위 수준임
- 전체적으로 건축산업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임

[표 2.47] 경상북도 건축관련 산업체, 종사자 및 매출액 현황

시도	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매출액 (백만원)	업체당 매출액 (백만원)	1인당 연간급여 (백만원)
전국	16,850	231,714	23,629,546	1,402	32
서울특별시	4,773	93,205	10,659,073	2,233	37
부산광역시	1,109	14,655	1,979,887	1,785	31
대구광역시	809	6,270	365,065	451	24
인천광역시	573	6,479	486,048	848	29
광주광역시	546	5,316	371,337	680	23
대전광역시	414	4,940	426,922	1,031	29
울산광역시	434	5,281	363,759	838	26
경기도	3,596	50,093	5,643,538	1,569	33
강원도	527	3,994	285,937	543	26
충청북도	550	6,788	497,766	905	26
충청남도	600	4,926	355,743	593	28
전라북도	464	4,229	270,186	582	21
전라남도	499	5,574	428,301	858	27
경상북도	741	6,783	464,740	627	23
경상남도	1,044	11,159	911,081	873	27
제주도	171	2,022	120,163	703	25

자료 : 통계청

7. 에너지 관련 현황

1) 에너지 관리대상 현황

- 경상북도의 에너지 관리대상 산업체 수는 268개임
- 지역별로는 국가 산업단지가 많은 구미시, 포항시 등의 순으로 많음

[표 2.48] 경상북도 에너지 관리대상 현황

(단위 : 건, TOE/연)

구분	관리대상	에너지 사용량 현황		
		2,000~5,000 미만	5,000~30,000 미만	30,000 이상
2011	268	120	104	44
포항시	59	14	34	11
경주시	28	19	8	1
김천시	13	4	5	4
안동시	5	3	2	-
구미시	81	27	31	23
영주시	8	3	3	2
영천시	11	8	3	-
상주시	2	1	1	-
문경시	3	2	1	-
경산시	19	13	4	2
군위군	1	1	-	-
의성군	1	1	-	-
청송군	1	1	-	-
영양군	-	-	-	-
영덕군	-	-	-	-
청도군	-	-	-	-
고령군	17	14	3	-
성주군	1	1	-	-
칠곡군	14	7	6	1
예천군	1	-	1	-
봉화군	2	1	1	-
울진군	1	-	1	-
울릉군	-	-	-	-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현황

- 경상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바이오, 태양광, 폐기물 순으로 이용됨
- 다른 지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저조한 편

[표 2.49]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현황

(단위 : 1,000 toe)

구분	합계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 전지	폐기물	지열	해양
합계	109,142	8,709	29,207	40,692	-	2,600	-	22,933	5,001	-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4 지역별 건축 관련 정책 사업 분석

1. 경상북도 건축 관련 정책 및 사업

1) 경상북도 건축 관련 정책 분석

① 도시와 농촌 및 각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 도청신도시 조성으로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 추구
- 문화도시, 생태도시, 행정·지식산업도시에 부합하는 행정복합중심도시로 조성
- 도청신도시는 전통문화와 생태환경, 행정 지식이 융합되는 압축도시로 조성 중이며, 경상북도의 중추관리 도시로서 허브기능 강화

②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도시 조성

- 도청신도시, 혁신도시 및 권역별 거점도시를 공간 중심권으로 육성
-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창조도시, 슬로시티 구축

③ 권역별 특화발전전략 수립하여 도시 및 건축 지원

- 북부자원권 :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 농업비즈니스파크, 지역산업 클러스터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기반 조성
- 서부산업권 : IT 기반 신산업밸리형 도시권 육성, 거점단지를 연계한 주력산업기반의 광역클러스터 구축
- 남부도시권 : 대도시권과의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네트워크도시 기반 마련, 주력산업 지식산업화 및 신성장 지식산업 육성
- 동부해양권 : 철강 및 첨단소재 R&D 기능 강화와 신소재부품 관련 기술개발로 기간산업의 고부가치화 추진,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기반 확충

2)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기반 강화 정책 추진

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형 사업 추진

- 고령친화모델을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고령친화형 도시 조성
- 기초생활권 및 읍면단위 개발사업에 고령친화형 사업을 도입하고 농어촌 마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

-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 추진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요양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공립치매병원 등 보건복지 인프라 사업과 연계

③ 쇠퇴하고 있는 농어촌마을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마을 단위 사업 추진

-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 농촌마을 종합개발, 어촌 종합개발과 같은 마을개발 추진
- 녹색마을개발사업 : 친환경 정책에 의해 농어촌 및 소도시의 에너지 자립과 생태보전, 체험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 산림탄소순환마을 : 산촌지역의 녹색인프라 구축 및 생태휴양자원 확충으로 산촌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자연생태우수마을 : 환경보전에 보다 적극적,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 조성된 마을을 지정하여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녹색농촌체험마을 : 농어촌관광 활성화 등 도농교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을 조성하여 운영

3) 전통 문화 자산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① 전통 문화 유산을 세계화하기 위해 하회마을과 양동 마을 보존 사업 시행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 마을과 양동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퇴락 및 변형 가옥 보수 정비
- 생활 문화 전승 및 보존을 위해 양동마을에는 전통 문화체험 교실, 하회마을에서는 유교 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

② 경북의 고유한 색깔로 한국성 강조하는 프로그램 개발

- 고택·종택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해 한옥 명품화 사업을 6개 시·군에 있는 20개 고택에서 추진하고, 전통 한옥 33개동을 개보수

4) 문화 산업 육성하기 위해 문화 기반시설 및 인프라 조성

①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2010~2019년, 50개 사업)

- 국가사업으로 국립수목원, 국립테라피단지, 국립생물자원관을 건립하고 선도사업으로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9개 사업 실행
- 권역별 문화 선도 및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유교권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 신라권 :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삼국유사가온누리
- 가야권 :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 생태권 : 낙동강이야기나라, 녹색문화상상벨트

②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 시설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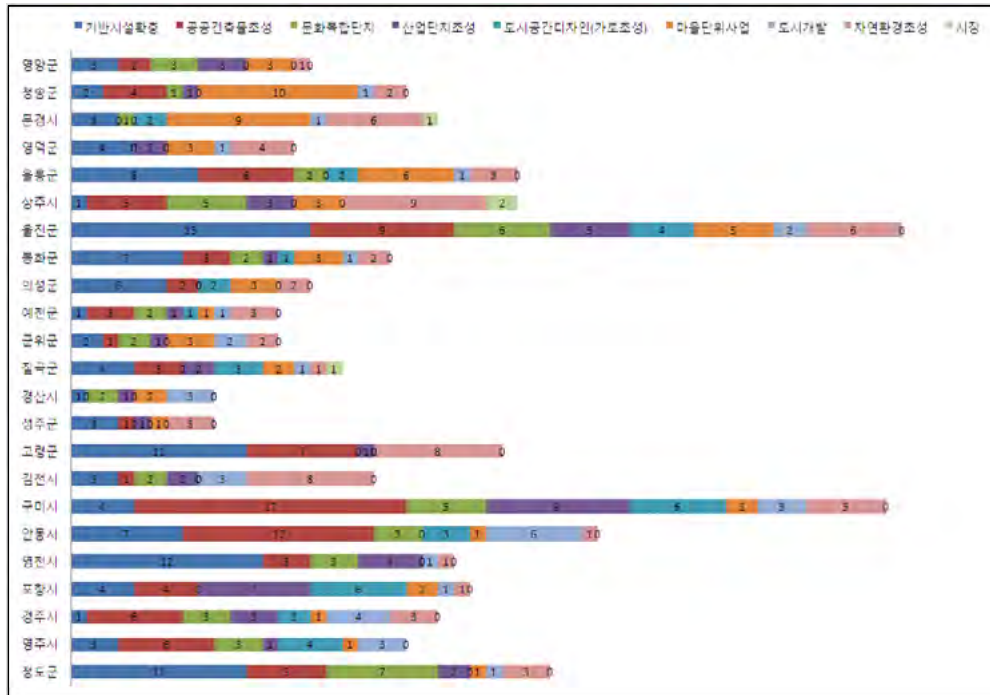
- 문화 영상산업 발전 기반 구축 위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을 운영하여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하고 산업화 추진
-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건립하여 보문단지MICE 산업 육성
- 안동에 세계유교문화컨벤션센터 건립하여 세계유교문화대회 유치

③ 시·군 간 문화기반시설의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문화시설 확대

- 경상북도 내 58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에 39개소, 군에 19개소로 분포되어 군민 생활권내 도서관이 부족하여 확충 계획
- 성주군과 울진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박물관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청도, 울진에 미술관이 있음
- 의성, 청송, 청도, 봉화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1개 이상의 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2010), 경주 예술의 전당(2010)등 문화예술회관, 청도에 코미디 전용극장인 철가방코미디극장(2011) 건립
- 안동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건립하고, 안동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2. 경상북도 지역별 건축관련 정책 및 사업

- 23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건축관련 사업은 총 530개이며, 이 사업들을 기반시설, 공공 건축물, 문화복합단지, 산업단지, 도시공간디자인, 마을단위사업, 도시개발, 자연환경조성, 전통시장개선 등 9개 항목으로 분류해 보면 전반적으로 기반시설 사업과 공공건축물 사업이 많음
- 울진군과 구미시가 건축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



[그림 2.16] 시·군별 건축 관련 사업 분포도

[표 2.50] 시·군별 건축 관련 사업 현황

	기반시설 확충	공공건축물 조성	문화 복합 단지	산업 단지 조성	도시 공간 디자인	마을 단위 사업	도시 개발	자연 환경 조성	전통 시장 개선
청도군	11	5	7	2	-	1	1	3	-
영주시	3	6	3	1	4	1	3	-	-
경주시	1	6	3	3	2	1	4	3	-
포항시	4	4	-	7	6	2	1	1	-
영천시	12	3	3	4	-	-	1	1	-
안동시	7	12	3	-	3	1	6	1	-
구미시	4	17	5	9	6	2	3	5	-
김천시	3	1	2	2	-	-	3	8	-
고령군	11	7	-	1	-	-	-	8	-
성주군	3	1	-	1	-	1	-	3	-
경산시	1	-	2	1	-	2	3	-	-
칠곡군	4	3	-	2	3	2	1	1	1
군위군	2	1	2	1	-	3	2	2	-
예천군	1	3	2	1	1	1	1	3	-
의성군	6	2	-	-	2	3	-	2	-
봉화군	7	3	2	1	1	3	1	2	-
울진군	15	9	6	5	4	5	2	6	-
상주시	1	5	5	3	-	3	-	9	2
울릉군	8	6	2	-	2	6	1	3	-
영덕군	4	-	-	2	-	3	1	4	-
문경시	3	-	1	-	2	9	1	6	1
청송군	2	4	1	1	-	10	1	2	-
영양군	3	2	3	3	-	3	-	1	-

1) 경상북도 지역별 건축 관련 사업 분석

[표 2.51] 각 시·군의 대표적 건축관련 사업

시/군	사업	담당부서	기간	사업비	비고
영주	한국인삼박물관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2009~2012	110억	
	생태관찰원	녹색환경과	2012~2013	40억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산림녹지과	2010~2014	1,380억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	재난관리과	2010~2020	1조1,215억	
	무심지리 문화경관 조성	문화예술과	2012~2015	223억	
문경	종합체육관 리모델링 (종합체육관)	새마을 체육과	2012~2015	30억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	문화관광과	2011~2013	13억	
	도심지 재 창조 (구 시가지 정비)	주차장	계획중	26억	
		공용주차장	2013	7억 4,000만원	
		전주지중화	2013~2015	220억	
		간판디자인	2013~2016	45억	
	주요가로 디자인 개선		2012~2014		
안동	경북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	일자리 경제과	2008~2012	302억	
	선비유교길 조성 (하회 슬로시티 조성 완료)	체육관광과	2011~2013	10억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도시 디자인과	2013~2022	4,000억	
	도심 실개천 생태복원	재난방재과	2011~2013	101억 5,000만원	
포항	포항 중앙도서관 건립	문화예술과	2013~2015	240억	
	포항 국제비즈니스 센터 건립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청	2009~	3000억	
	호미곶 경관 디자인 명소화 사업	테라노바팀	2011~2013	26억	
	동빈내항 복원	포항운하 건설TF팀	2006~2014	1,600억	
	영일만 1일반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지원과	2004~2013	1,021억	
	영일만 2일반 산업단지 조성		2005~2011	975억	
	영일만 3일반 산업단지 조성		2007~2012	285억	
	용산 1지구 도시개발사업		2004~2008	130억	
	용산 2지구 도시개발사업		2003~2010	205억	
	영일만 4일반 산업단지 조성		2008~2018	9,295억	
	포항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지원과	2008~2020	4,600억	
	포항 국가산업단지 (블루베리) 조성	산업단지 지원과	2009~2019	7,645억	
	어린이타운 조성	업무시설과	2010~2013	90억	
	두호주공 2,3차 아파트 마을재생 사업	테라노바팀	2012~2013	6억 4,500만원	
	남구 송도 해도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	포항운하 건설TF팀	2011~2020	민간사업	

시/군	사업	담당부서	기간	사업비	비고
경주	보문단지 리모델링	경상북도 관광공사	2010~2018	5,550억	
김천	경북드림밸리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기획담당	2007~2018	8,646억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정보통신과	2010~2014	342억	
	그린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아포읍 일원)	친환경 농업과	2010~2013	100억	
	삼애원 이전 신시가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지원과	-	-	
	직지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건설과	2008~2012	70억	
상주	경북대 상주캠퍼스 주변개발	경북 개발공사	2009~2013	108억	
	경상감영 역사공원 조성	새마을 관광과	2013~2017	221억 7,000만원	
	친환경 자연웰빙단지 조성 (오봉산 권역)	농업정책과	2011~2015	78억 5,7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 (계산, 오동, 낙양지구)	도시과	2006~2012	47억 9,600만원	
			2006~2012	45억 6,900만원	
			2008~2014	82억 9,300만원	
구미	구미역변 뉴타운 조성 (원평동 불량주거지 재개발)	건축과	-	민간사업	
	인동도시 숲 조경공사 (인동부도심 가로 및 주변환경 정비)	공원녹지과	2007~2009	35억	
			1차 2013~ 2차 2013~2015	5,005억 17억	

시/군	사업	담당부서	기간	사업비	비고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 공원	삼성현 문화박물관	2004~2013	443억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관광과			
	블루그린 스포레저파크 조성	산림녹지과			
	영남대 역세권 개발 육동권역	도시과			
	임당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도시과			
	경산 삼살개 테마공원	문화관광과	2012~2014	70억	
	마을종합정비사업 (사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건설방재과	2009~2013	70억	
	자인면, 와촌면, 남천면 등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건설방재과	2002~2016	270억	
영천	최무선 과학관 건립	문화공보 관광과	2008~2012	103억	
	최무선 역사테마파크 조성	문화공보 관광과	2014~		
	노계 가사문화관 건립 (박인로 문학공원 조성)	문화공보 관광과	2014~		
	경제 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조성 (중앙동, 호산면 대기리)	도시계획과	2006~2013	2,016억	
	화랑설화 마을, 한의마을 조성	기업유치단	2010~2015	572억	
			2011~2015	371억	
청도	비슬산 산림치유 휴양단지 조성	산업산림과	2010~2015	451억	
	새마을 운동 발상지 가꾸기	새마을과	2010~2013	233억	
군위	삼국유사 가온누리	문화관광과	2010~2016	1,374억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	문화관광과	2012~2016	121억	
칠곡	낙동강 호국 평화공원	전략기획과	2010~2013	547억	
	가산산성 성벽 및 관아복원	새마을 문화과	2013~2025	950억	
성주	한개마을 종합정비사업	문화체육과	2009~2018	450억	
	성주참외 (역점시책 5중 하나) 홍보관	농정과	2013~2025	950억	

시/군	사업	담당부서	기간	사업비	비고
고령	가야문화권 특정지역지정 및 추진 사업	관광진흥과	2011~2019	900억	
	주산성 복원, 왕릉전시관, 암각화전시관 등	문화새마을 체육과	2011~2019	2,030억	
	낙동강 고령 프로젝트	관광진흥과	2011~2015	705억	
울진	백암온천 관광지 조성	문화관광과	1980~2020	522억	
	오토 캠핑장, 펜션단지	문화관광과	2009~2020	1,672억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산림녹지과	2011~2017	531억	
영덕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	문화관광과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전통생활 정신 문화체험지구	문화관광과		579억	
	산림 로하스파크 조성- 숲 치유센터	산림축산과	2012~2016	200억	
울릉	삼국시내 우산국 관광자원 개발 (우산국 박물관, 수장고(중지), 야외 전시물)	관광과	2010~2013	116억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 전시관, 관아복원	관광과	2008~2015	451억	
예천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	농정과	2013~2016	100억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문화관광과	2011~2015	1,155억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산림축산과	2010~2014	1,546억	
봉화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 (산양삼 테마관, 춘양목 코티지)	문화관광과	2012~2016	113억	
	누.정 休문화누리 공간	문화관광과	2012~2016	413억	
청송	유교문화 전시체험관	문화관광과		761억	
	술누리 그림보세상 조성	기획감사실	2011~2018	584억	
영양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연구시설, 전시·교육 시설	산지이용과	2011~2015	918억	
	국가산채식품 클러스터 조성	산림 비즈니스 담당	2013~2017	850억	
의성	의성공립 치매 병원	노인 여성복지과	2012~2013	118억 7,400만원	
	신라 본 역사지움	새마을 문화과	2011~2016	428억	

자료 : 시·군의 홈페이지(2013)

5]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의식 조사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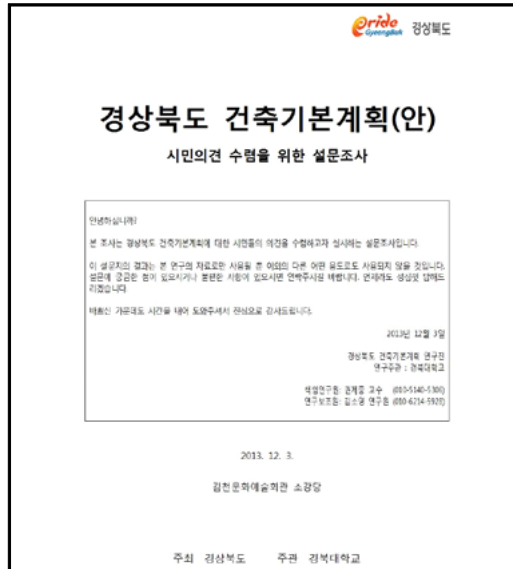
-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민들의 건축 및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건축물과 공간환경, 건축디자인에 관련된 도민의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계획 수립과 전략 개발시 포함할 것임

2) 조사 내용

- 경북 건축의 전망,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 현실적인 문제점과 잠재력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
-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계획의 취지에 대한 내용 포함
- 건축기본계획의 중점적인 내용에 대하여 분야별로 질문하고 핵심전략사업에 대하여 종류와 선호 지역에 대한 내용 포함

3)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경상북도 거주 지역주민 대상 (183명 조사)
- 조사기간 : 2013. 12. 3 ~ 2014. 1. 20
- 표본추출방법 : 지역별 배부 단순무작위 표본 추출 및 공청회장 배부 후 회수
- 조사방법 : 직접 접수 또는 면담 조사



[그림 2.17] 설문지 표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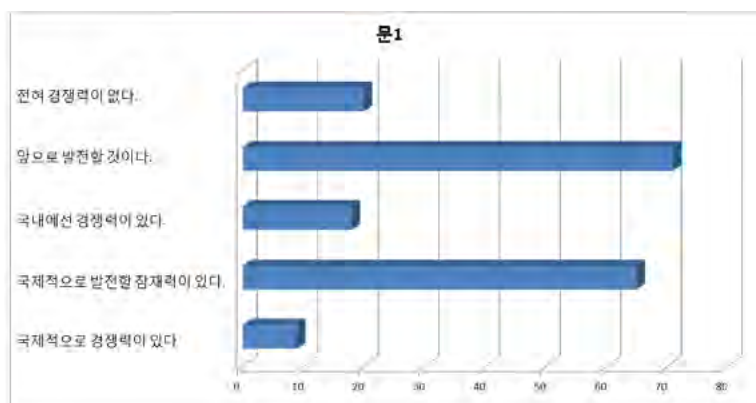
4) 답변자의 특성

- 답변자의 특성 분석은 아래와 같이 분석함
- 남녀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70%, 여성이 30% 이며, 나이는 40대 이상이 57% 임
- 거주지별 분포는 경상북도내 거주자가 73%이며 도시거주자가 74% 임
- 응답자의 최종학력 분석은 석사 이상이 38%, 대졸이상이 54%로서 대졸 이상이 92% 이상을 보여줌
- 직업별 유형은 산업계와 학계가 33%, 공무원이 26% 로서 59%의 과반을 차지하며 그 외 시민, 학생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2. 조사 결과

1) 경상북도 건축의 대내외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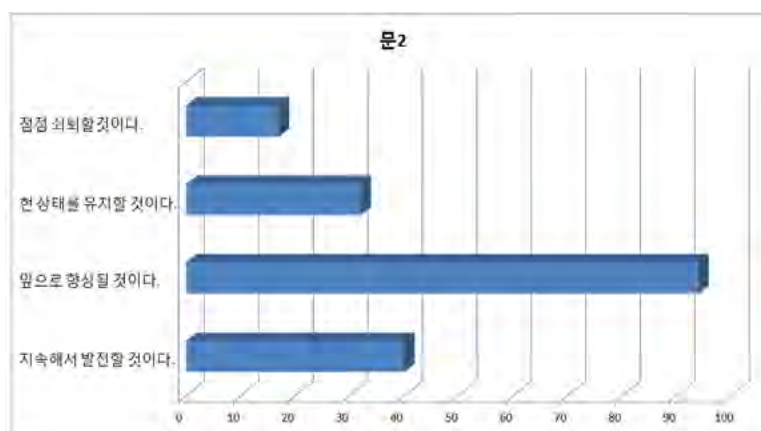
-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38.8%), “국제적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35.5%), “전혀 경쟁력이 없다” (10.9%)의 순으로 조사됨
- 종합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것”과 “국제적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답이 74.3%로서 전반적으로 발전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음



[그림 2.18] 경상북도 건축의 대내외 경쟁력

2) 경상북도 건축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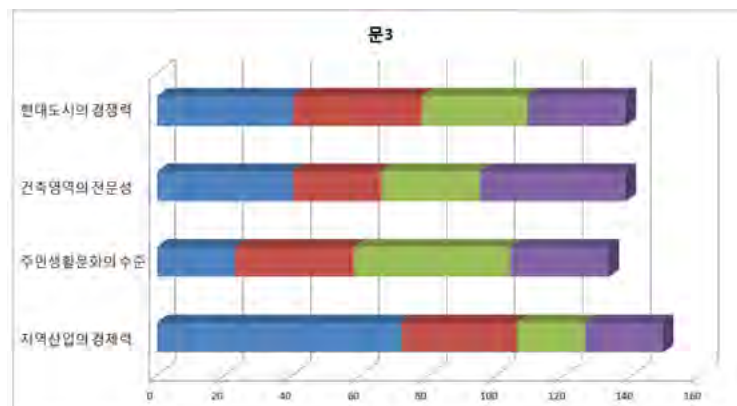
- “앞으로 향상될 것이다” (51.4%),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21.9%),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17.5%)의 순으로 조사됨
- “앞으로 향상”과 “지속적 발전”이 73.3%, “현상유지”는 17.5%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향상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그림 2.19] 경상북도 건축의 전망

3) 경상북도 건축의 쇠퇴에 영향 미칠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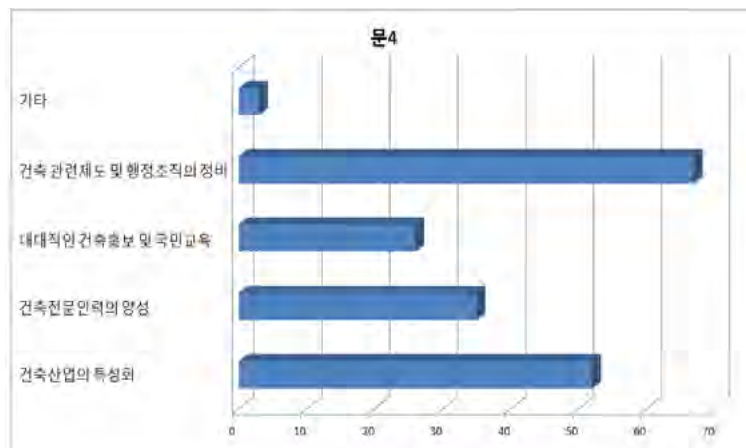
- 1번 선택은 “지역산업의 경제력” (39.3%), “건축영역의 전문성” (21.9%), “현대도시의 경쟁력” (21.9%) 의 순서임
- 2번 선택은 “현대도시의 경쟁력” (20.8%), “주민생활문화의 수준” (19.1%), “지역산업의 경제력” (18.6%) 의 순서임
- 종합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제력”과 “현대도시의 경쟁력” “건축영역의 전문성” 이 경상북도 건축의 쇠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림 2.20] 경상북도 건축의 쇠퇴에 영향 미칠 요소

4) 경상북도 건축발전을 위하여 가장 개선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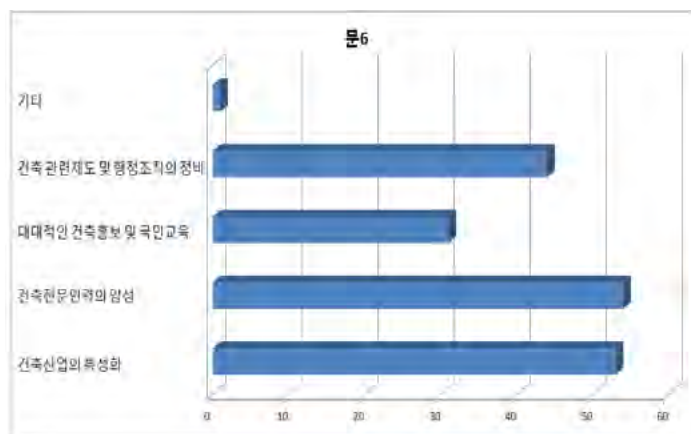
- 건축 관련제도 및 행정조직의 정비” (36.6%), “건축 산업의 특성화” (28.4%), “건축전문인력의 양성” (19.1%)의 순으로 조사됨
- “건축 산업의 특성화”와, “건축전문인력의 양성”에 비해 “건축 관련제도 및 행정조직의 정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림 2.21] 경상북도 건축발전을 위해 가장 개선할 점

5) 경상북도 건축발전을 위하여 육성 및 개선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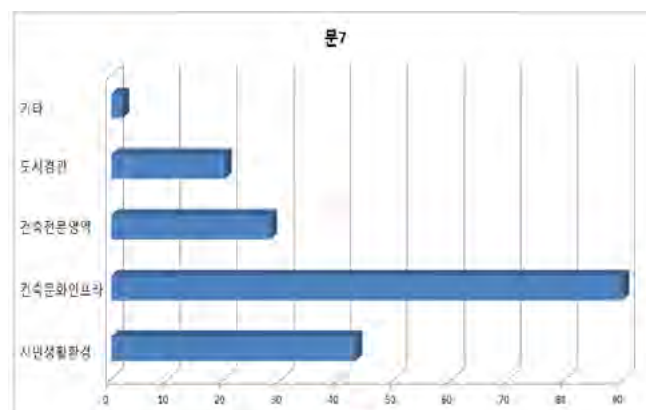
- "건축전문인력의 양성" (29.5%), "건축 산업의 특성화" (28.4%), "건축 관련제도 및 행정조직의 정비" (24.0%)의 순으로 조사됨
- "건축전문인력의 양성" 과 "건축 산업의 특성화" 와 함께 "건축 관련제도 및 행정조직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육성 및 개선해야 건축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림 2.22] 경상북도 건축발전을 위해 육성 및 개선할 점

6) 경상북도 건축의 우선적 고려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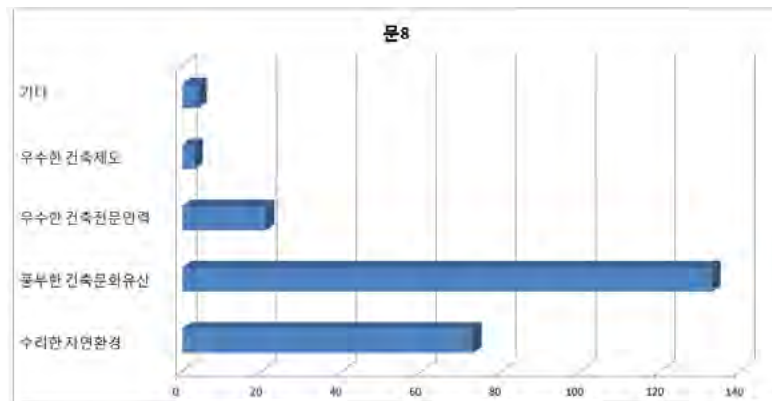
- "건축문화 인프라" (49.2%), "시민생활환경" (23.5%), "건축전문영역" (15.3%)의 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과반수가 "건축문화 인프라"를 우선적 고려대상으로 본 것은 시·군의 건축문화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민생활환경"과 "건축전문영역"이 그 다음 순위로 보여지는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전문영역보다 큰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군지역임을 감안하면 "도시경관"에 대한 고려는 낮음



[그림 2.23] 경상북도 건축의 우선 고려사항

7) 경상북도 건축의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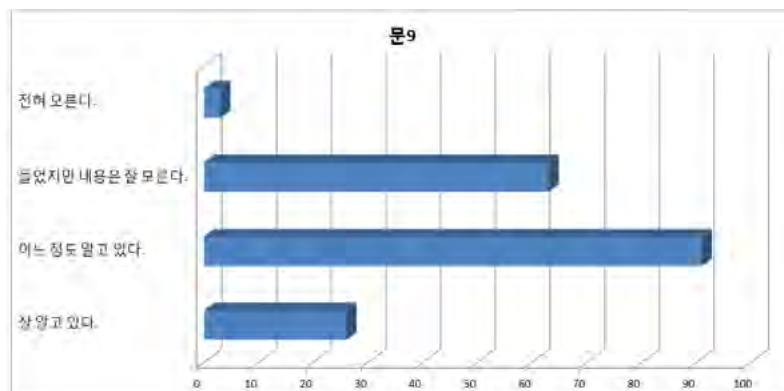
- "풍부한 건축문화유산" (72.7%), "수려한 자연환경"(39.9%), "우수한 건축전문인력" (11.5%)의 순으로 조사됨
- "풍부한 건축문화유산"을 가장 높은 잠재력으로 보고 있어 건축문화유산에 기반 한 건축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려한 자연환경"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관광 등과 연계한 건축정책도 필요하며, "건축전문인력"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그림 2.24] 경상북도 건축의 잠재력

8)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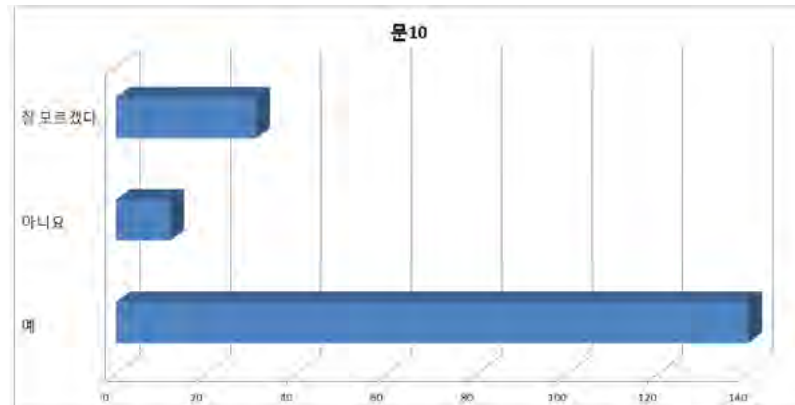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9.7%), "들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34.4%), "잘 알고 있다" (14.2%)의 순으로 조사됨
- "잘 알고 있다" 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는 답변이 전체의 64.0% 이나, "들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 34.4% 이므로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보다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5]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9) 「건축기본법」을 통해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건축의 진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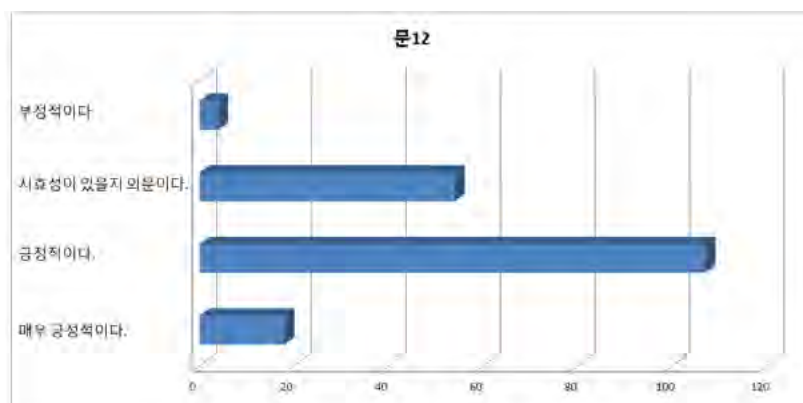
- “예” (76.5%), “잘 모르겠다.” (17.0%), “아니요” (6.6%)의 순으로 조사됨
-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건축의 진흥여부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건축기본계획을 통해서 진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림 2.26] 「건축기본법」을 통해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건축의 진흥 여부

10)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5년 단위 건축기본계획의 향후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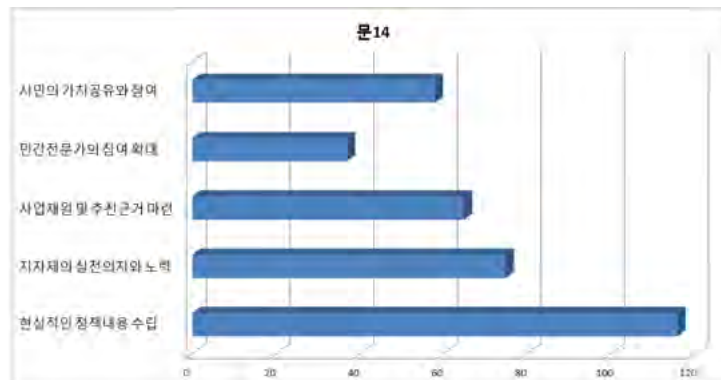
- “긍정적이다” (58.5%),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29.5%), “매우 긍정적이다” (9.9%)의 순으로 조사됨
- 건축기본계획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답변이 68.4% 이므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답변은 판단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건축기본계획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27]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5년 단위 건축기본계획의 향후 영향력

11) 건축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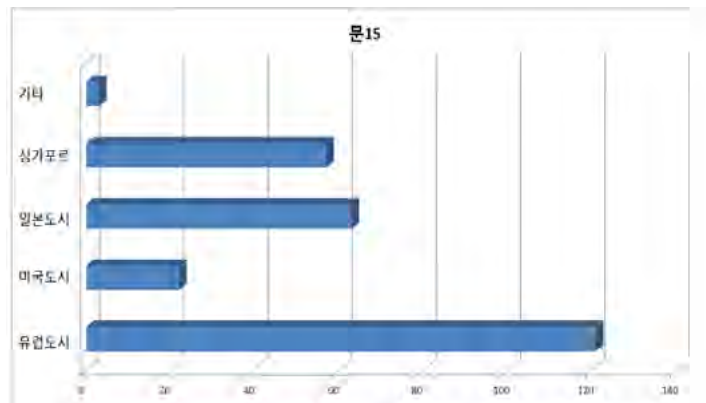
- “현실적인 정책내용 수립” (63.4%), “지자체의 실천의지와 노력” (41.0%), “사업재원 및 추진근거 마련” (35.5%)의 순으로 조사됨
- 건축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정책내용의 수립”이 선행된 후에 “지자체의 실천의지” 여부 및 “사업재원 및 추진근거”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건축기본계획의 추진 단계가 그대로 나타나므로 설문 응답자들도 구체적인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림 2.28] 건축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조건

12)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참조할 만한 선진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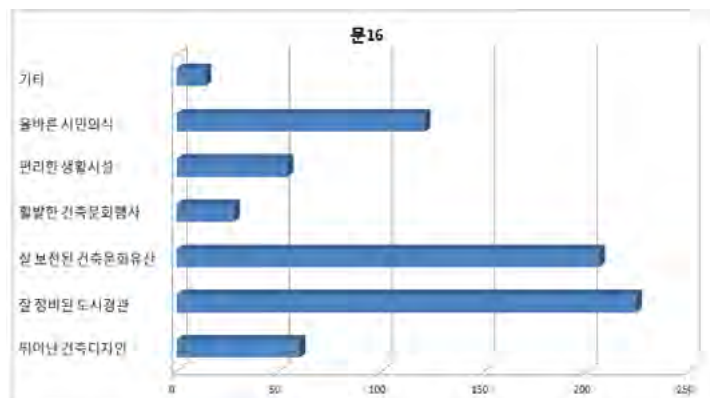
- “유럽도시” (66.1%), “일본도시” (34.4%), “싱가포르” (31.2%)의 순으로 조사됨
- “유럽도시”가 선택된 것은 대도시 선호보다는 다양성의 추구로 이해할 수 있고, “일본도시”가 선택된 것은 지역적 및 문화적으로 연관성이 큰 일본지역에서 참조할 점을 찾고자 하는 점으로 이해됨
- “싱가포르” 역시 도시국가이지만 청결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대도시 중심 또는 너무 큰 규모에 대한 거리감으로 판단됨



[그림 2.29]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참조할 만한 선진도시

13) 선진 도시사례를 통해 건축기본계획에서 고려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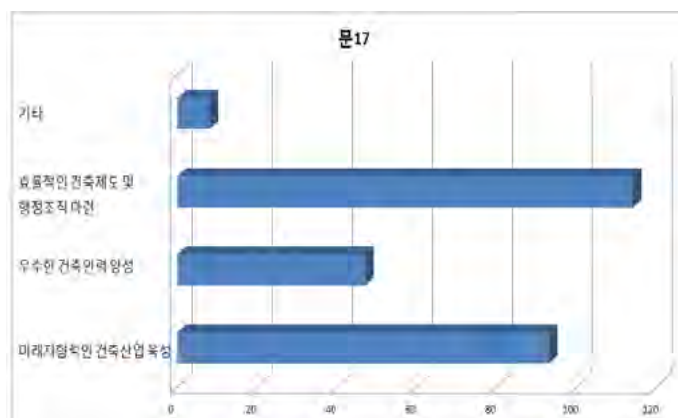
- "도시경관" (61.2%), "건축문화유산" (56.3%), "시민의식" (33.3%)의 순으로 조사됨
- 다양한 모습의 시군지역의 현황을 감안하면 "잘 정비된 도시경관"에 대한 높은 선호와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 "잘 보존된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올바른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2.30] 선진도시사례를 통해 건축기본계획에서 고려할 점

14)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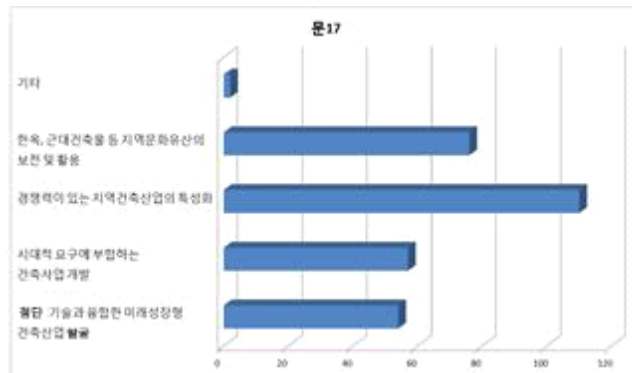
- "효율적인 건축제도 및 행정조직 마련" (62.3%),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 (50.8%), "우수한 건축인력 양성" (25.7%)의 순으로 조사됨
- 선호도의 순으로 보아 "제도, 행정조직 및 산업의 육성"을 건축기본계획에서 다루기를 바라고 있음
- "건축인력의 양성"은 산업의 육성과 비교해 반 정도의 선호도임을 미루어 제도와 산업에 대한 선호도에 비하여 "건축인력의 양성"은 중점적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짐



[그림 2.31]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

15)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에서 미래지향적 건축산업 육성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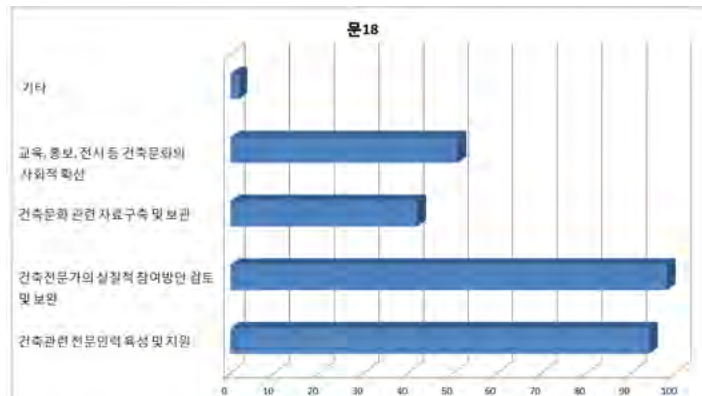
- "지역 건축산업의 특성화" (60.1%), "지역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 (41.5%),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업 개발" (36.6%)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 건축산업의 특성화", "지역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 높은 선호도로 조사된 것으로 지역 특성의 반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업의 개발"이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형 건축산업"보다 조금 더 높은 선호가 보이는 것은 "미래성장형"보다는 지역의 특색 반영과 문화유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짐



[그림 2.32] 미래지향적 건축산업 육성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16)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에서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를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방안 검토 및 보완" (53.5%), "건축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51.4%), "교육, 홍보, 전시 등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 (27.9%)의 순으로 조사됨
-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와 "건축 전문인력의 육성"이 과반의 선호도를 보인 것은 전문가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계획의 운영과 전문인력의 육성을 중요하게 인식함
-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도 중요하나 반 정도의 선호도임에 유의할 점임



[그림 2.33]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를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17)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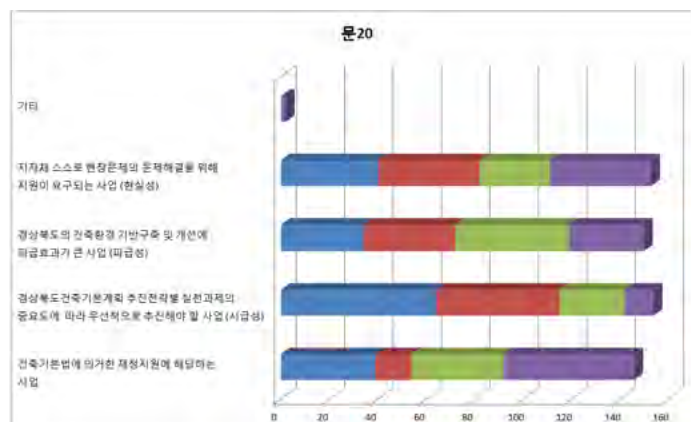
- "건축·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디자인 관리방안" (70.0%),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36.1%), "민관협력사업의 관리 및 지원방안" (33.9%)의 순으로 조사됨
- 건축·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디자인 관리가 70% 가까이 선호된 것은 통합적인 제도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높다는 취지임
- 공공건축의 질적인 향상과 민관협력사업의 지원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제도로서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기본계획의 고려가 필요함



[그림 2.34]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을 위해 다루어야 할 내용

18)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사업의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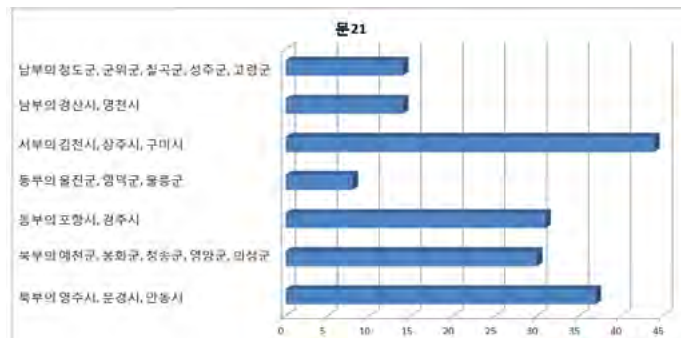
- "시급성" (35.0%), "현실성" (21.9%), "재정지원 해당사업" (21.3%)의 순서로 1번, "시급성" (27.9%), "현실성" (23.0%), "파급성" (20.8%)의 순서로 2번 선호도로 조사됨
-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시급성", "현실성", "파급성"의 순으로 핵심전략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2.35]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사업의 선정기준

19)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핵심전략사업 우선적 실행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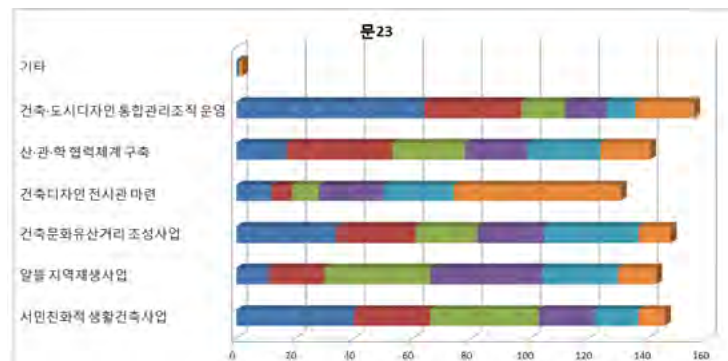
- 서부의 김천, 상주, 구미시가 24.0%, 북부의 영주, 문경, 안동시가 20.2%, 동부의 포항, 경주시가 17.0%, 북부의 예천, 봉화, 청송, 영양, 의성군이 16.4% 로 조사됨
-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남부지역 보다는 북부지역에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인 선호에 크게 치우친 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초적인 선호도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



[그림 2.36]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핵심전략사업 우선적 실행지역

20)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핵심전략사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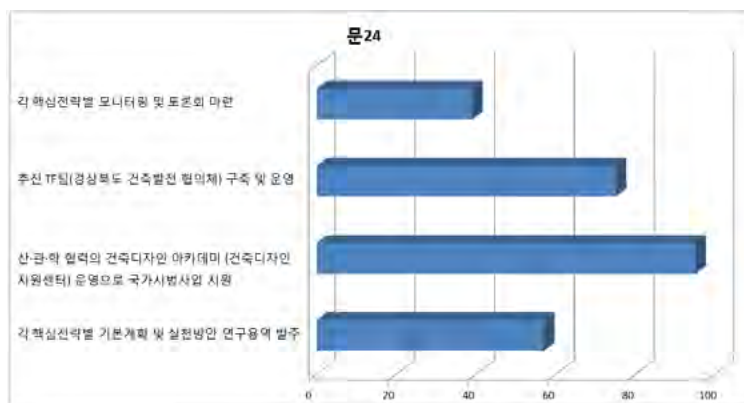
-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조직 운영" (35.0%), "서민친화적 생활건축사업" (21.9%)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18.6%) 의 순서로 1번 선호도로 조사되며,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19.7%),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조직 운영" (18.0%),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14.8%) 의 순서로 2번 선호도로 조사됨
-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조직 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서민친화적 생활건축사업"과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이 후 순위로 나타나므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2.37]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핵심전략사업 우선순위

21)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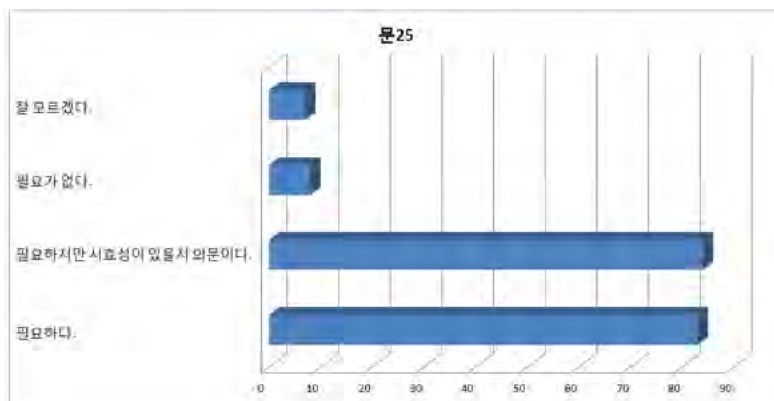
- "산·관·학 협력의 건축디자인 아카데미(건축디자인 지원센터)운영으로 국가시범사업 지원" (52.0%), "추진 TF팀(경상북도 건축발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41.0%), "각 핵심전략별 기본계획 및 실천방안 연구용역 발주" (31.2%)의 순으로 조사됨
- 종합적으로 보면 "건축디자인 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국가시범사업의 지원"이 실질적인 기본계획의 추진과 연관성이 크므로 실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추진 TF팀(경상북도 건축발전 협의체) 구축 및 운영"도 실질적인 추진에 중요하므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므로 실질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38]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 방법

22)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별 시군의 '기초건축기본계획'의 필요성

- "필요하지만 시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는 (45.9%), "필요하다" (45.4%)의 선호도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회신의 내용으로 보면 대다수가 개별 시군의 기초건축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초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음



[그림 2.39] 개별 시군의 기초건축기본계획의 필요성

6 경상북도 건축 환경의 당면과제

1.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건축산업 진흥

- 오늘날의 신기술, 지역고유의 건축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등 시대적 변화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축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기존의 개발중심, 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상복합건물 등 주거건축에 대한 투기적인 민간개발사업에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형사업으로 건전한 건축 산업,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함
- 경상북도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초고령화 현상의 취약 농어촌지역에 대한 복지중심의 도시 재생적 건축 산업 장려 등이 요구됨

2. 도민일상문화로서의 건축문화 전파

- 탈산업화의 문화시대를 맞아 경상북도 내 잠재되어있는 문화가치, 특히 다양한 건축문화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문화에 대한 도민의 공감과 자생력이 요구됨
- 대도시 중심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에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건축행사 및 홍보, 교육 등을 통해서 건축문화를 실질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형성함
- 경상북도의 매우 열악한 건축 관련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지원센터, 건축아카이브, 건축박물관 등을 구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함

3. 건축·도시 통합의 관리체계 구축

- 경상북도 시·군의 건축담당부서는 현재 건축물의 허가 및 지적, 민원상담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어서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기존의 건축물로 국한된 업무에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아우르는 건축·도시 통합의 건축 디자인 전문부서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가 매우 시급함
-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민·관·학 협력 운영체계가 요구됨

Ⅲ. 국내외 사례분석

- ① 국내 건축기본계획의 특징
 - ② 해외 건축정책 사례
 - 유럽
 - 미국
 - 일본
 - ③ 시사점
-

① 국내 건축기본계획의 특징

1.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2010년 5월 수립)

1) 계획의 의의 및 성격

-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국가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초의 최상위 국가계획
- 5개년 단위의 계획으로 건축정책의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 경관, 디자인, 기술, 산업, 문화 등 건축·도시경관 분야의 다양한 정책대상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구체화하고 심화·발전시키는 녹색계획

2) 범위

① 시간적 범위 : 2010년-2014년

② 내용적 범위 : 「건축기본법」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주요 항목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 도시경관 향상과 지역 건축의 발전
-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선도시범사업
-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 한옥의 보전 및 진흥과 건축문화의 기반을 구축
-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3)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기본법」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내용

[표 3.1]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비 전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목 표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전략·세부 실천과제	1.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 SOC 국가기반시설 디자인 재고 -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2. 건축, 도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3. 녹색건축 도시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 건축물 에너지 효율재고 - 친환경 주택건설공급 활성화 -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4.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도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건축·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 활용 -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 지역별 대표거리(브랜드거리조성)사업 추진 6. 건축문화의 세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정책 목표(생활공간, 녹색성장, 건축문화) + 6대전략 + 18개 실천과제 - 국가건축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이며, 지역의 특성/문제는 지역건축기본계획에 일임 - 건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용적 전략계획 - 건축문화 세계화, 산업고도화 등 중시 -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 부합 - SOC 국가기반시설, 공공부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과제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조 		

2. 경기도 건축기본계획(2011년 6월 수립)

1) 계획의 의의 및 성격

-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해 단기·중기·장기로 분류해 핵심전략사업을 도출하는 5개년 단위
의 중기전략 및 실행계획
- 경기도 시·군을 포괄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전략계획
- 국가계획의 틀 속에서 수립하는 광역단위계획
- 경기도의 건축·도시 관련 계획 간의 조정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경기도 건축디
자인기준도 함께 수립)

2) 범위

① 시간적 범위 : 2011년-2016년

② 내용적 범위 : 「건축기본법」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의 내용에 기반하고, 경기도 건축 기본조례 제5조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3)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건축기본법」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 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 (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4) 내용

[표 3.2]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비 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		
목 표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구현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
전략세부 실천과제	1. 생활공간의 품격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커뮤니티 공간조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2. 효율적인 디자인품질 관리체계 구축 - 건축·도시디자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경기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법·제도 개선 -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관리방안 마련	3. 녹색건축 도시 관련 기준 정비 -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지침 마련 -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유도방안 마련 4. 녹색 도시환경조성 기반 마련 - 녹색 정주공간의 인식 확산 및 발전기반 강화 - 지속가능한 건축·도시 구현을 위한 기술 활성화	5.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 다양한 무한공간창출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기준 마련 - 건축문화 창조역량 강화 6. 건축문화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 건축자산 DB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 문화 공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특 징	- 3대 목표(생활공간, 녹색공간, 입체공간) + 6대 전략 + 13개 실천과제 - 대규모 계획도시, 자연발생적 기성시가지와 함께 비도시지역이 혼재 - 건축·도시 관련 계획 간의 조정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경기도 건축디자인기준도 함께 수립) - 건축적 이슈가 있는 지역의 개선을 위한 특별 관리지역 제안하고 건물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 단기/중기/장기로 분류하고 핵심전략사업 도출하는 중기전략 및 실행계획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체계 수용한 광역단위계획 - 31개 시군의 문제가 독립적이며, 사업별 시군의 참여의사 파악		

3.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2011년 12월 수립)

1) 계획의 의의 및 성격

- 건축·도시 관련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계획이며, 서울시 건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문의 계획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실천계획
- 서울시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협력계획이자 장기발전계획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체계 수용

2) 범위

- ① 시간적 범위 : 장기 2015년-2024년 / 단기 2011년-2015년
- ② 내용적 범위 : -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정한 사항
- 「건축기본법」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 5조

3)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4) 내용

[표 3.3]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비 전	행복한 도시,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건축문화		
목 표	활기찬 문화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푸른 도시 서울	균형 있는 입체도시 서울
전략·세부 실천과제	1. 건축문화 지역특성화 - 장소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 - 한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 근대 건축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 - 초고층건축물 건립 방향 2. 건축문화 기반구축 - 건축문화 전담기관 설립 및 홍보 강화 - 우수건축인 발굴·육성·지원	3. 녹색 건축·도시환경 기반 구축 - 탄소저감형 녹색도시 조성 - 건축물 에너지 관리 체계 4.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 건축물의 생애관리 -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5. 건축·도시디자인 관리 체계 개선 -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계획간 연계시스템 강화 - 건축·도시 관리수단 선진화 - 공공건축물 기획·발주체계 개편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 주거환경지수 개발 및 적용 -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특 징	- 3대 목표(문화도시, 푸른도시, 입체도시) + 6대전략 + 15개 실천과제 - 공공건축 품격 향상 방안 및 민간 참여 중시 - 한옥 보급 활성화, 근대건축물 보존 활용 등 서울의 역사성 중시 - 도시기능 고도화에 따른 입체복합 건축공간 활성화 주목 - 공공성 고려한 초고층 건축물 입지 기준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체계 수용 - 연구과제/국가연계사업/시범사업/제도개선으로 구분 - 추후 파생될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계획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실천계획		

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2012년 2월 수립)

1) 계획의 의의 및 성격

- 건축·도시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통합계획
- 건축·도시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용적 전략계획
- 21세기형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녹색계획
- 개념계획이 아닌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실천계획

2) 범위

- ① 시간적 범위 : 2011년(기준년도)-2015년(목표년도)
- ② 내용적 범위 : - 「건축기본법」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 상의 내용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 상의 내용

3)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4) 내용

[표 3.4] 부산시 건축기본계획

비 전	아름다운 건축, 행복한 푸른 도시, 부산		
목 표	생활경관도시	녹색정주도시	건축문화도시
전략세부 실천과제	1. 일상공간의 생활 편의적 공공성 개선 -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 도시 보행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자전거 운행성 개선 - 약자에게 친근한 건축과 도시공간 2. 자연과 지역성을 배려한 매력적 도시공간 - 자연지형 공간조직, 도시형태 등을 입지 및 토지 이용 별로 차등 관리 - 도시인프라를 포함한 공간 환경 전반에 공공 디자인 적용 3. 미래세대와 함께 할 건축자산의 보전과 창출 - 역사·문화적 건축물/장소 보존 및 지원 - 달동네·재래시장 등 생활문화 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4.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정주환경 조성 -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자력수복형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정주성/경관성 개선사업 5. 지역밀착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도심부 발전계획 :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 커뮤니티 뉴딜 정책 수립 - 도시건축의 방재성 재고를 통한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 리모델링 활성화 : 공동주택 친환경 녹색 리모델링 활성화 6. 녹색건축에 기반 한 생태적 도시성장 - 자원순환형 녹색입체 도시 -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정책의 융합화	7. 통합과 협치의 도시건축행정시스템 -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및 심의제도 개선 8. 문화시스템으로서의 도시건축 - 부산건축의 비전 공유와 확산 - 시민 참여형 건축문화기반 강화 9.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건축산업시스템 - 지속가능한 지역 건설 산업을 위한 지원 - 지역설계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특 징	- 3대 목표 + 9대 전략 + 22개 정책과제 + 23개 실천과제 - 9대 전략별 정책방향 제시 - 실천단계에서 제도와 관련된 정책과제, 예산과 관련된 실행과제로 분리 - 기존의 건축관련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체계와 방향성을 구축 - 주민자력형 근린주거지재생 및 서민주거복지 중시		

5.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2012년 7월 수립)

1) 계획의 의의 및 성격

-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하여 도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건축·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계획
- 전라북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5개년 단위의 실천계획
- 전라북도의 중복 및 유사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협력계획
- 건축 및 도시 분야 다양한 시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

2) 범위

- ① 시간적 범위 : 2012년-2017년
- ② 내용적 범위 : 「건축기본법」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의 내용에 기반

3)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4) 내용

[표 3.5]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비 전	전통과 미래,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 전라북도		
목 표	고유한 건축문화 창조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구현
전략·세부 실천과제	1. 건축문화 자산 활용 - 지역건축 자산 특성화 - 건축자산 정보 구축 2. 건축문화 가치 향상 - 신개발지 이미지 특화 - 건축문화 향유기회 확대	3. 도시공간 경쟁력 재고 - 아름다운 건축물 활성화 - 거점형 도시공간 창출 4. 농어촌 생활공간 재창조 - 농어촌 정주공간 개선 - 농어촌 유희공간 활용	5. 친환경 건축도시 기반강화 - 탄소저감형 녹색건축 조성 - 녹색건축 역량강화 6. 건축도시조경 효율적 관리 - 건축도시조경 관리시스템 개선 - 건축물 생애관리
특 징	- 3대 목표(건축문화, 생활공간, 지속가능) + 6대 전략 + 12개 실천과제 + 26개 세부과제 -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의 비중이 큰 지역 - 구도심을 포함한 기존 시가지 및 농어촌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에 주목 - 서해안발전 종합계획,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등 대규모 국가주도사업과의 연계성 고려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체계 수용 - 14개 시군 각각의 문제가 다양하며, 각 시군의 특화사업 파악 - 새로운 전략사업의 도출보다는 기존의 시군 특성을 브랜드화 하는 전략수립		

6.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2013년 1월 수립)

1) 계획의 의의 및 성격

-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하여 경상남도 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는 정책계획
- 5개년 단위 계획으로 경상남도 건축정책의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
- 경상남도의 건축·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의 통합적 조정을 통해 지역 내 건축·도시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계획

2) 범위

- ① 시간적 범위 : 2013년-2017년
- ② 내용적 범위 : - 「건축기본법」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의 내용에 기반
- 경상남도 건축정책 및 문화진흥조례 제5조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내용

3)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4) 내용

[표 3.6]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비 전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녹색 경남건축		
목 표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친환경 녹색경남 구현	정체성 있는 건축문화 창조
전략·세부 실천과제	1. 건축·도시디자인 향상 -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2. 건축·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 건축·도시디자인통합관리 체계 구축 - 협치의 건축·도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	3. 친환경 건축·도시 조성 - 저탄소 녹색건축·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 저탄소 녹색건축 설계기술 활성화 및 보급 4.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 노후건축물 녹색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 건축물 생애관리 토대 구축	5. 지역성을 살린 건축문화 형성 - 경상남도 건축문화유산DB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 경상남도 건축지리지 구축과 건축문화유산 보전·활용 - 경상남도 우수건축 및 공간환경 창출과 활용 6. 건축문화 창조 기반 구축 - 창의적 건축문화 활성화 및 교육·홍보 강화 - 지역기반의 건축문화 창조역량 제고 - 건축·도시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구축
특 징	- 3대 목표(생활공간, 녹색경남, 건축문화) + 6대 전략 + 14개 실천과제 + 36개 세부과제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색 -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축의 공공성 회복에 주목 -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등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성 고려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체계 수용 - 실천단계에서 제도와 관련된 실천과제, 예산과 관련된 세부과제와 실행사업으로 분리		

7.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2013년 4월 수립)

1) 계획의 의의 및 성격

- 국가계획의 틀 속에서 수립하는 광역단위계획
- 건축·도시 관련 계획 간의 조정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5년 단위 계획으로 대구광역시 건축정책의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행계획
- 구·군 정책방향 제시

2) 범위

- ① 시간적 범위 : 2013년-2017년
- ② 내용적 범위 : - 「건축기본법」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의 내용에 기반

3)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

4) 내용

[표 3.7] 대구시 건축기본계획

비 전	행복과 희망의 삶 터, 대구		
목 표	대구 건축문화의 저변화	지속성장 기반 확보	창의적 건축활동 촉진
전략·세부 실천과제	1. 대구 건축의 전통성 확립 - 건축문화 기반 확충 - 전통공간의 보존 및 활용 2. 시민 건축문화 확산 -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 마을 만들기 운동 촉진 - 시민참여제 확산 -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주거지 조성	3. 일류 녹색도시 조성 - 대구 녹색스탠다드 확립 - 녹색 도시환경 조성 시범사업 추진 4. 미래 건축·도시 기술 구현 - 유비쿼터스 시범지구 조성 - 공간정보활용 극대화 도모	5. 창의활동 기반 마련 - 이전후적지 랜드마크 개발 -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특성화 촉진 6. 건축산업 부흥 촉진 - 건강한 건축산업 육성기반 마련 - 대구건축 우수 품질인증 확산
특 징	- 3대 목표(건축문화, 지속성장, 생활공간 및 산업) + 6대 전략 + 13개 실천과제 + 49개 세부과제 - 구도심을 포함한 기존 시가지의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축 - 건축을 산업이 아닌 문화로 접근하고자 하는 전략 추구 - 민관협력 사업 및 각종 신설지원센터 사업과의 연계성 고려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체계 수용 - 대구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전략사업의 도출보다는 기존 건축기본계획의 여러 사업들을 다각화하는 전략수립		

2 해외 건축정책 사례

1. 유럽

1) 유럽의 건축정책 특징

- 유럽 선진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부터 건축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건축을 국가적 문화유산 측면에서 장려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를 육성함
- 영국은 정부정책 조연자로서의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주도의 '건축·건조환경위원회'(CABE :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를 구성함
 - 건축·건조환경위원회(CABE)는 건축정책의 입안과정 조연, 진행과정 및 결과를 연간보고서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까지 담당함
 - 건축, 도시, 조경 등 공공공간에 관련된 민간전문가와 디자인 리뷰 패널, 업무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1999년부터 정부의 건축정책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행하고, 주요 정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며, 2005년에는 영국의 건축정책에 관한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정리한 리뷰보고서를 발행함
 - 디자인 리뷰패널은 공공건축, 학교시설, 런던올림픽 관련 프로젝트 등 공공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공공공간 디자인과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함
 -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 전문 디자인기술 지원, 교육여건 개선, 기술개발 장려 및 연구개발, 캠페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분야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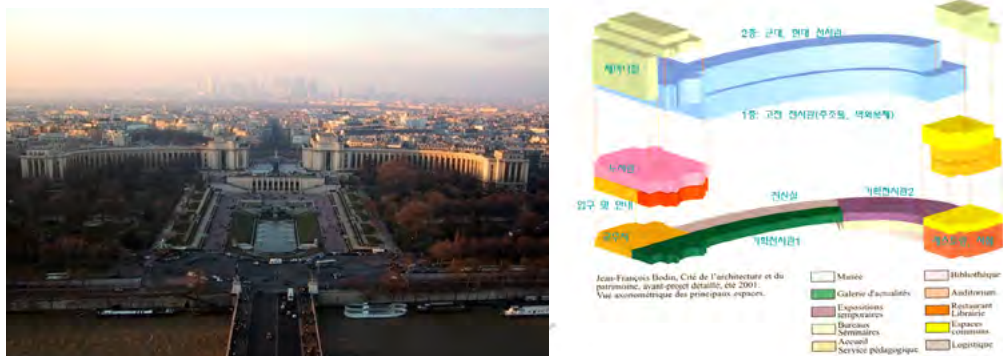
[표 3.8] 영국의 건축·건조환경위원회 조직구성

건축·건조환경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총 14인)		
디자인리뷰패널 (건축, 환경, 커뮤니티 관련 전문자문가)	업무지원팀 (5개 팀, 약 100여명의 조직)	공공공간 자문위원회 (11명, 3년 임기)
- Design Review: 40여명, 3-5년 임기 - London 2012: 16명, 2012 런던올림픽 준비 관련 - School Design: 30명, 교육시설에 관한 프로그램 디자인 자문	- 공공공간팀 - 지식기술팀 - 교육홍보팀 - 재정팀 - 건축디자인팀	- 지역건축위원회: 8개지역에 대한 각 위원회, 대표 3인 - 공공공간 Enablers - 건축 Enablers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9), 유럽의 건축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 프랑스는 최초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유산을 중시하여 1977년 공공건축법과 공공건축위원회(MIQCP : 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Qualité des Constructions

- Publiques)를 조직하고, 1998년 건축부문은 건설관련부서로부터 독립하여 문화통신부 산하의 건축문화유산부(DAPA : 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에서 전담함
- 프랑스는 1970년대에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 건축유산을 단지 과거흔적의 보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생성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문화부는 1974년 문화환경부, 1978년 건축부문과 문화유산부문이 각각 독립적으로 문화통신부로 편입됨
 - 건축부문은 문화통신부만 아니라 시설·교통·주택부와 국토개발환경부에 산발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가, 1998년에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건설관련부서로부터 독립하여 문화통신부에 전속되고, 건축문화유산부(DAPA)에서 전담함
 - 주요 건축정책으로는 공공건축위원회(MIQCP), 메디시스 해외장학제도, 젊은 건축가의 새 앨범, 건축대중상, 건축국가대상, 건축의 집, 20세기 건축유산표, 건축·도시·경관 보호지역(ZPPAUP) 등의 제도개설과 Chaillot 파리건축박물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설립이 있음



[그림 3.1] 파리건축박물관

- 네덜란드는 정부주도로 추진전담기구를 구축하여 건축정책이 건축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함
 - 1991년부터 2005년까지 4차례의 건축정책 문서를 발간하여 건축 관련 인프라 조성(1차), 건축 관련 영역의 확장(2차), 시범프로젝트 선정(3차), 문화정책과의 통합(4차) 등을 수립함
 - 첫 번째 건축정책 Space for Architecture(1991-1996)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건축협회(Nai), 건축 관련 자금 확보를 위한 건축지원재단, 각 지방 건축센터 등 건축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인프라를 조성함

- 두 번째 건축정책 Architecture of Space(1997-2000)에서는 건축 관련 부처와 서명을 이끌어 도시개발과 조경,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건축정책 규모 및 범위를 확장함
- 세 번째 건축정책 Shaping the Netherlands(2001-2004)에서는 9개의 대형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건축문화관련 정책을 선행 정책과제로 도출하여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
- 네 번째 건축정책 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2005)에서는 건축과 문화와 접목하여 문화정책 요소들이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국가건축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The Royal Institute of Dutch Architects)는 건축·도시 관련 부처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방식, 공공건축에 관한 계획 및 설계절차, 공공공간과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비롯하여 국가건축물에 대한 관리, 인프라 확충, 법률제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함
- '개발을 통한 보존'이라는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1990년대 말에는 벨베데어(Belvedere) 정책이 개발을 통해 기존 문화유산을 남기고 보존하는 방법을 육성하는 것으로, 공간계획에 있어서 기존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려하고, 계획과 디자인에 있어서 문화·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표 3.9]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단계별 추진전략

제1차 건축정책 (1991-1996)	제2차 건축정책 (1997-2000)	제3차 건축정책 (2001-2004)	제4차 건축정책 (2005)
Space for Architecture	Architecture of Space	Shaping the Netherlands	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 + Belvedere (문화정책)
- 정부주도 건축정책 수립 - 관련 기관 설립	- 영역확장	- 시범프로젝트를 통한 구체적 실현	- 문화정책과의 건축정책 통합

자료 : 대한건축학회(2006), 건축기본법 연구

- 핀란드는 교육부주도로 건축정책위원회 프로그램 초안을 교육부의 검토 및 평가 실시하여 건축을 일반교과목에 포함시키고, 교육부가 건축교육을 개발하여 시민참여 능력을 향상
- 핀란드 교육부는 1996년 2월에 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Tore Tallqvist 교수)로 하여금 핀란드 건축정책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위임하여 1997년 5월에 초안이 완성되고 충분한 평가 후에 다시 1998년 1월에 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Pekka Laatio 건축가)를 임명하여 24개 조항의 건축정책을 만들

- 이 건축정책의 특징은 '우수한 공간환경에 대한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었다는 점, 공공의 개입에 큰 가치를 둔 점, 시민이 우수한 공간환경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성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과한 점이며, 이 의무사항으로 인해 교육과 정보가 강조됨
- 건축정책의 내용에 "교육부는 건축의 핵심인 예술과 문화의 상호작용을 독려하고, 문화정책에 있어서 건축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의 기본을 만들 때 건축교육의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은 실험적 건축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에 관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서술됨

2) 유럽공동체 차원의 건축정책

- 유럽 각국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유럽공동체의 차원에서 건축에 대한 유럽공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짐

① 유럽 건축정책 포럼(The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

- 개요
 - 2000년 11월 23일 프랑스 문화통신부 제창으로 2001년 2월 12일에 결의함
 - 유럽공동체의 건축정책으로 유럽 건축정책 포럼의 활동이 가장 대표적으로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도시·농촌 환경에서의 건축의 품격·품질에 관한 결의안'과 '가우디 GAUDI 프로젝트'를 발의함
- 주요내용
 - '도시·농촌 환경에서의 건축의 품격·품질에 관한 결의안'에서는 건축의 기본원칙에 있어서 건축이 일상 삶, 역사·문화, 미래 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점을 들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통합과 경제발전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부칙에서 설명하고 있음
 - 결의안은 또한 건축이 도시와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성을 명시하고, 건축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문제가 일관된 정책으로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건축이 경제적, 문화적인 전 문서비스임이 명시되어 있음
- 시사점
 - 이 결의안은 각 국의 건축정책이 공유하는 가치와 방법이 뚜렷이 정리된 것으로 유럽시민의 삶에서 일상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비롯된 것임
 - 각 조문의 내용은 1990년대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건축정책의 기초를 종합하고 있으므로, 건축정책을 뒷받침할 「건축기본법」의 역할 및 중요성을 시사

[표 3.10] 도시·농촌 환경에서의 건축의 품격·품질에 관한 결의안 전문

<p>1장. 기본이념</p> <p>a) 건축은 각국의 역사, 문화, 다양한 삶의 근본적인 특징을 이룬다. 건축은 시민의 일상 삶에서 중요한 예술적 표현의 도구가 된다. 또한 건축은 미래의 유산을 이룬다.</p> <p>b) 건축의 품격, 품질은 농촌과 도시환경 모두를 이룬다.</p> <p>c) 공간을 물리적으로 다루는 문화적 차원과 질을 지역의 일관된 커뮤니티 정책에서 고려해야 한다.</p> <p>d) 건축은 지적, 문화적, 예술적, 전문적 활동이다. 건축서비스는 따라서 문화적인 동시에 경제적인 전문서비스이다.</p> <p>부칙.</p> <p>a) 역사적 연속성의 중요성, 공공공간의 품격·품질, 사회적 교류, 풍부한 도시적 다양성은 유럽 마을과 도시의 공통 특징이다.</p> <p>b) 훌륭한 품격·품질의 건축은 농촌이든, 도시든 시민과 환경의 생생한 맥락과 관계를 개선하여 사회의 통합성과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과 지역경제발전의 증진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p> <p>2장. 회원국 권장사항</p> <p>a) 건축과 도시설계의 지식을 증진하는 노력을 증대하고, 발주자와 일반공공이 건축, 도시, 경관문화의 평가에 있어서 더 잘 알고 숙련되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p> <p>b) 건축서비스가 필요한 결정과 조치에서 건축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p> <p>c) 모범적인 공공건축정책을 통해 건축의 품격·품을 증진할 것</p> <p>d) 건축영역에서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장려할 것</p> <p>3장. 위원회 요청사항</p> <p>a) 건축의 품질과 건축서비스의 특수성을 모든 정책, 조치,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것</p> <p>b) 회원국과 상담하고 기금원칙에 상응하여 건축의 품격·품을 더 폭넓게 고려하고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구할 것</p> <p>c) 기존 프로그램의 맥락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을 올바르게 존중하며 건축문화와 도시문화의 인식제고를 증진, 확산하는 조치를 장려할 것 - 문화유산과 건축을 향상시키는 제도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유럽규모의 초기사업을 지원할 것 - 특히 학생과 전문가의 교육과 이동을 장려하여 우수실무의 확산을 촉진할 것 <p>d) 의회에 그런 조치의 실행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킬 것</p>
--

자료 : 상게서



[그림 3.2] 유럽건축정책포럼

② 가우디 프로젝트

(GAUDI : Governance, Architecture and Urbanism as Democratic Interaction)

- 개요
 - 유럽전역에 건축문화의 확산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 참여도시는 브뤼셀, 베를린, 바르셀로나, 헬싱키, 글래스고우, 더블린, 코펜하겐, 런던, 마드리드, 파리, 비엔나, 로테르담, 로마, 스톡홀름 등 13개국 8개 조직과 11개 협력파트너로 구성되고, 프랑스 건축가협회가 일반적 조정임무를 수행함
 - 이 프로그램은 유럽 건축정책 포럼의 결의에 의해 직접 수립되었고, 유럽 전역에서 건축과 문화재의 향상에 관한 기관의 네트워킹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컬처 2000 프로그램'에 근거함
- 주요내용
 - 건축의 확산을 위한 문화중심지 간의 3년간 협약(2001-2004)으로 건축박물관, 건축·도시정보센터, 건축·도시의 전문조직 및 교육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 첫 번째의 가우디 프로그램은 유럽에서의 혁신적 생활공간과 건축·도시에 관한 기록 작업이 포함되었고, 젊은 건축가들과 공공공간을 위한 워크숍, 개발프로젝트에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함
- 시사점
 - 가우디 프로젝트는 민주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거버넌스, 건축·도시의 문화적 발의로서 건축문화의 확산을 위해 산·관·학 협력과 건축전문기관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함



[그림 3.3] 가우디 프로젝트

③ 유로판 설계공모전

• 개요

- 1971년 프랑스 정부가 도시 및 건축설계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도시·건설·건축계획부(PUCA : Plan Urbanisme Construction Architecture)를 신설하고 '새로운 건축프로그램'이란 의미의 PAN(Programme d'Architecture Nouvelle) 설계공모전을 개최한 것에서 유래됨
- PAN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설계공모전으로 건축·도시설계에 있어서 보다 창의적인 작업 및 연구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40세 이하의 젊은 건축가를 대상으로 실행함
- 세계전쟁 이후에 긴급한 주택난은 50-60년대 프랑스에서 대량의 집합주택을 양산시켰으며, 이에 건축계는 사회전반의 개혁운동인 'Mai 68'(1968년 5월)을 통해 건축교육 개편과 더불어 PAN 설계공모전이 주거건축을 주요 주제로 16년 동안 총 14회 개최됨

• 주요내용

- 1988년 프랑스의 PAN이 유럽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유로판(EUROPAN)으로 확산됨
-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등 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EUROPAN은 매 2년에 1회씩 건축·도시분야의 공모전으로 진행됨
- PAN과 마찬가지로 40세 이하의 젊은 건축가로 국한되어 있고, 모든 참여국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동일한 규칙 하에 진행됨
- 주거문제에 집중되었던 PAN과는 달리 EUROPAN은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공간, 교통, 환경 등 도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시사점

- EUROPAN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유럽에 적합한 형태를 제안하여 젊은 건축가들이 공간디자인 분야의 개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국가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건축·도시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킴
- 둘째, 당선된 설계의 실현으로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제공뿐만 아니라 당선자는 설계를 실현시키는 기회를 부여받음
- 또한 각 지역별로 공모전 개최내용을 기록, 당선안, 당선자 에세이 및 대담 등과 함께 출판하고 각 지역마다 전시회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알리고 이를 통하여 건축·도시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킴



[그림 3.4] EUROPAN 10

[표 3.11] PAN 설계공모전

차수	개최시기	주제
PAN 1	1972년 3월	주제 없음
PAN 2	1972년 10월	주제 없음
PAN 3	1973년 2월	주제 없음
PAN 4	1973년 6월	주제 없음
PAN 5	1974년 2월	서민지역의 거주성
PAN 6	1974년 5월	사회적 관광지의 거주성
PAN 7	1975년	주제 없음
PAN 8	1976년	주제 없음
PAN 9	1977년	대규모 단지의 개선
PAN 10	1978년	주제 없음
PAN 11	1980년	변두리 지역
PAN 12	1982년	주거건물에서 지역 복리시설까지
PAN 13	1984년	외곽지역을 건설하라
PAN 14	1987년	주거의 재검토

[표 3.12] EUROPAN 설계공모전

차수	시기	주제	대상지 개수	등록	제출	당선	입선
EUROPAN 1	1988 1989	Evolving Lifestyles	-	2300	800	44	39
EUROPAN 2	1990 1991	Housing Living in City, Re-evaluation of Urban Areas	49	4100	1422	43	45
EUROPAN 3	1993 1994	At Home in the City, Urbanization of Residential Areas	53	4500	2230	44	41
EUROPAN 4	1995 1997	Constructing the Town upon the Town,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Urban Sites	65	4500	2432	51	59
EUROPAN 5	1998 1999	New Housing Landscapes, Travel and Proximity	68	3540	1700	50	63
EUROPAN 6	2000 2001	In-between Cities, Architectural Dynamics and New Urbanity	67	3900	2100	55	60
EUROPAN 7	2002 2003	Sub-urban Challenge, Urban Intensity and housing Diversity	67	3750	2010	57	62
EUROPAN 8	2005 2006	European Urbanity and Strategic Projects	74	-	-	143	
EUROPAN 9	2007 2008	European Urbanity, Sustainable City and New Public Spaces	73	-	-	-	-

자료 : 대한건축가협회(2007), 건축가,

2. 미국

1) 미국의 국가적 건축정책 특징

- 미국은 국가적 건축정책의 관점에서 건축·도시 분야를 포함한 건축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요인을 분석하였음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문제, 제도적 비효율성, 인력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부족 등을 대표적 저하요인으로 도출한 바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산하 민간산업분과에 건설소위원회가 별도로 설치(1994) 되었음
 - 범국가 차원의 건축 분야 미래 비전인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고 건축의 고품질 고성능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의 건축정책은 기술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아래의 주요 정부 기관들은 그린빌딩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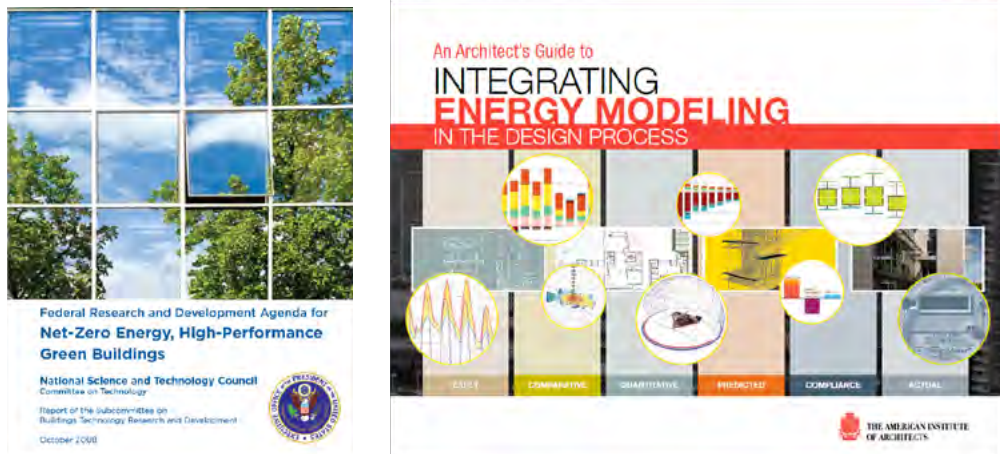
- 친환경적인 건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이 주된 흐름임을 보여주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중심으로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러한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NSTC는 연방기술개발 지원기구로서 다양한 기관들을 통괄하여 행정부의 과학과 기술정책을 조율하는 주된 기구로서 백악관 산하 기구이며 주목적은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과학기술 투자의 분명한 국가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임
 - 상업용 건축물의 순제로에너지 계획 (Net-Zero Energy, High Performance Green Buildings) 목표는 순제로에너지 상업용 건물의 개발과 건립을 위하여 기술과 실행, 정책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것임
 - 2030년까지 새로 건립되는 모든 상업용 건축물과 2040년까지 모든 기존 상업용 건축물의 50%, 2050년까지 모든 상업용 건축물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과학기술 중심인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정책은 에너지 분야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
 - 「건축기본법」 취지와 같이 건축의 생활 공간적 · 사회적 · 문화적 공공성 확보 등 건축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경우와 미국의 국가적 정책은 대비됨
 - 미국은 민간 영역의 미국건축가협회(AIA)가 건축적 이슈를 주도하고 국가적 건축문화적인 영향력은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건물기술연구개발위원회 (BTRD, Build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Subcommittee)
 - BTRD 분과위원회는 복합기구로서 건물기술과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연구,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조율을 책임지는 기구임
 - 특히 에너지 효율성, 건물시스템의 자동운영과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생 등에 집중되는 건물 기술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발전을 지원하는 가이드를 제공함
 - 에너지부 (DOE)
 -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통계적으로 제공하여 에너지의 소비현황 및 건설과 기술 및 에너지 소비의 기반지식을 제공하고 있음
(<http://buildingsdatabook.eren.doe.gov/>)
 - 에너지 소비의 통계를 근거로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을 제공함
 -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건물시스템의 자동화된 운영과 지속가능한 재생 등 건축기술 발전과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함

- 환경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그린 빌딩에 대한 정책과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제공함
 - 건축물이 전체 에너지 중 36%를 소비하고 전기의 65%를 소비하므로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http://www.epa.gov/oaintntr/projects/>)



[그림 3.5] 미국(에너지부, 환경청, 건축가협회) 에너지 관련 홈페이지 기술제공 사례

- 미국건축가협회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Building Performance)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모델링 가이드를 제공



[그림 3.6] 그린 빌딩과 에너지 모델링을 위한 가이드 사례

2) 미국의 지역적 건축정책

- 미국의 각 지역적 건축정책은 국가적이거나 광역적인 공통적 이슈보다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사례들이 다수임
- 특히 정책으로 소개되는 사례들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소개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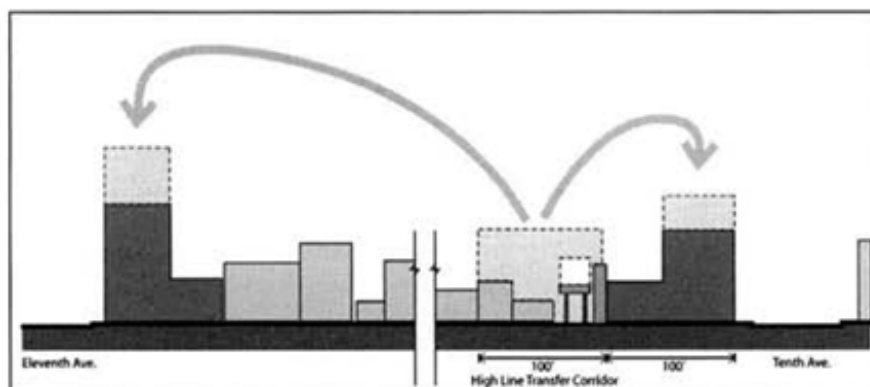
사례들이 있으므로 경상북도의 광역 및 기초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할 사례들이 많다고 판단됨

① 맨해튼 하이라인 보존 및 재활용사업

- 개요
 - 뉴욕 맨해튼의 지역적 특색을 가진 고가철도 재활용 및 도심활성화
 - 1990년대 이후, 웨스트 첼시 주변의 문화갤러리 사업이 활성화됨
 - 그 후 낙후 지역의 부분적 고급화 진행, 산업시설의 공존과 주거시설의 부족 등 시설간의 불균형 초래
 - 뉴욕시 도시계획국은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재정비 계획 수립
 - 핵심은 30여 년간 사용이 중단된 하이라인의 철거 대신 보존과 활용
 - 2006년 미국 도시계획가협회의 우수 계획상 선정
- 시사점
 - 갤러리 개발 촉진, 과거 산업지역 성격 보존, 새로운 주거지역 개발 및 저소득층 유치,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활용



[그림 3.7] 폐고가철도인 하이라인 재활용 사례



[그림 3.8] 하이라인 주변의 개발 개념도 사례

② 미국 미니애폴리스 도시재생프로그램 NRP(Neighborhood Revitalization Program)

• 개요

- 1980년대 중반 미니애폴리스 시는 도심의 심각한 쇠퇴, 일자리 감소, 급속한 교외화 현상으로 인구감소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이 스스로 계획한 마을계획에 의하여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재생프로그램(NRP) 정책을 마련하였음
- NRP는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NRP 정책이 사회의 의회승인을 받아 실행하는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서 상향식 마을 재생 프로그램임
- 마을의 자원배분은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마을계획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의 현황과 경제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NRP는 마을의 규모, 빈곤 정도, 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자원 배분함

• 주요내용

- 미니애폴리스 시 전체를 81개 마을로 구분하여 마을계획 수립, 실행
-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씩 총 4억 달러 소요
- 미니애폴리스 시를 관할하는 다섯 개의 행정기관과 각 부문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NRP 정책이사회에서 마을계획을 승인함
- NRP 정책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 NRP사무국은 마을사업과 관련된 시의 각 부서들과 상호 협력하고 마을계획 실행을 촉진함

• 시사점

- 주민들의 참여와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기반 가운데 행정기관과 각 부문 대표자들의 정책이사회에서 재생정책이 수립되고 협의하는 기반 가운데 마을 중심의 재생사업이 이루어짐

③ 문화도시재생 사례 - 미국 켄터키 주 파두카 (Paducah) 시

• 개요

- 2000년에 시작된 켄터키 Paducah의 예술인재배치 지원프로그램 (Artist Relocation Incentive Program) 은 예술에 의한 재생의 전국적인 모범사례임
- 파두카(Paducah)는 켄터키 오키와 강가에 있는 인구 2.5만 명의 소도시
- 또한 미국 제일의 퀼트 도시로서 전국 퀼트 쇼를 하고 입장객은 2.5만 명 정도임
- 미국퀼트박물관과 많은 퀼트제작자들과 판매점이 있으며 이미 퀼트공예도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한 사람들의 유인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비교적 쉬웠음

- 쇠퇴하는 도심을 중심으로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심에 예술가를 집중시키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 주요내용

- 파두카(Paducah)의 예술인 재배치 지원프로그램(Artist Relocation Incentive Program)은 예술가로부터 계획서를 받고 건물을 임대하거나 팔고 계획서의 사업을 하는데 지원금을 2500달러까지 주며 파두카 은행(Paducah Bank)는 저리로 융자해줌
- 이를 통해 이곳에 예술가와 주민이 3천만달러 이상 투자함
- 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한 Zoning 조례를 채택하여 한 건물에서 주거와 상업이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예술가(미술, 사진), 상인(미술, 공예, 골동품, 체험 포함), 주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

• 시사점

-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점을 잘 반영하고, 주민의 선호를 잘 반영하고, 정책과 지원을 잘 사용하여야 함
- 파두카(Paducah)시에서 경제재구조위원회는 지역건물주, 지역 상인들과 잘 연계하여 각 집단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함
- 예술에 의한 재생이 쉽게 채택되지만 지역자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 주민에 대한 잠재적 영향, 참여조직, 리더십 구축, 현실적인 추진계획 등에 대한 분석 및 계획이 필요함
- 경북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먼저 지역적 특색에 맞는 접근 방법을 발굴하고 이를 광역건축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 현황을 반영한 지원정책 보존 및 활성화 정책 등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④ 미국 뉴욕 건축가협회의 소규모 설계사무소 지원책

- 개요 주요내용 시사점으로 재정리 요망
- New Practice : 매년 6~7개 소형회사들을 선정하여 뉴욕 AIA 건물 1층 전시실에서 전시회 개최
- Emerging NY Architecture : 소규모(1~2인) 사무소를 위해, 2년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특정 대지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그림 3.9] 뉴욕건축가협회 전시장

3) 미국 건축박물관의 사례

- 미국에는 다수의 건축 전문 박물관 및 전시관이 있으며,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전시관의 기능은 매우 근본적인 기능임
 - 전시관들은 사이버 전시를 통하여 자체 전시관이 가지고 있는 DB를 공개적으로 활용하고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대개의 박물관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적 목적을 충실히 병행하고 있음

① 초고층 박물관 (The Skyscraper Museum, N.Y.)

- 뉴욕시의 건축적 자산들을 전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기획전시, 다양한 공개 프로그램, 도서 출판 등을 통하여 고층 건축물들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전파하고 있음

② 국립건축박물관 (National Building Museum, Washington D.C.)

- 건축과 공학, 그리고 디자인 분야의 박물관을 표방함
- 전시와 여름 캠프, 다양한 동영상 제공, 다양한 온라인 전시도 제공하고 있음
- 건축물 자체의 상징성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려 건축물의 상징성도 큼
-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역할도 큼

③ 뉴욕 현대미술관 건축과 디자인 부문 (The Museum of Modern Art, N.Y.)

- 근대건축의 다양한 내용을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음
- 온라인 전시의 활성화로 직접 박물관을 찾지 않아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도 20여개 이상의 온라인 전시가 열리고 있음

④ 시카고 건축 & 디자인 박물관 (The Chicago Athenaeum Museum of Architecture and Design, Chicago)

- 1988년도에 개관되었으므로 미국의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건축 디자인

박물관이 그리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은 아님

- 건축,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그래픽, 도시설계의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전시하고 있음
- “Good Design” 시상을 주관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 분야가 강점임

⑤ MIT 건축박물관 (Museum of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Bo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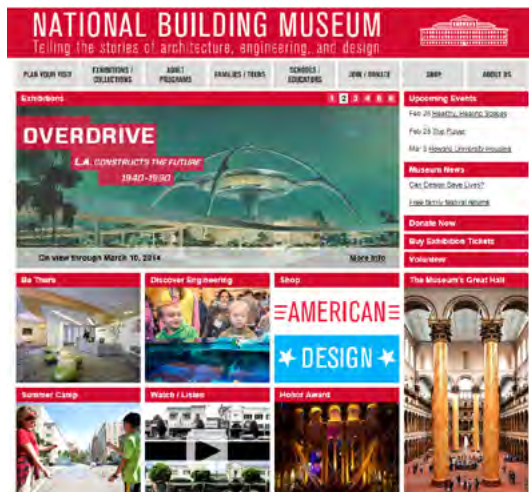
- MIT 대학 교육과 연관된 다양한 건축 컬렉션 (The Architecture & Design Collection) 이 특징임
-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 설립된 건축설계회사 TAC (The Architects Collaborative) 의 현대건축 관련 소장품들이 좋은 역사적 자료임
- 도면, 수업자료, 미국과 유럽의 건축교육자료, 19-20세기의 건축도면 자료 등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음

⑥ 미국건축재단 박물관 (The Octagon Museum of the American Architectural Foundation, Washington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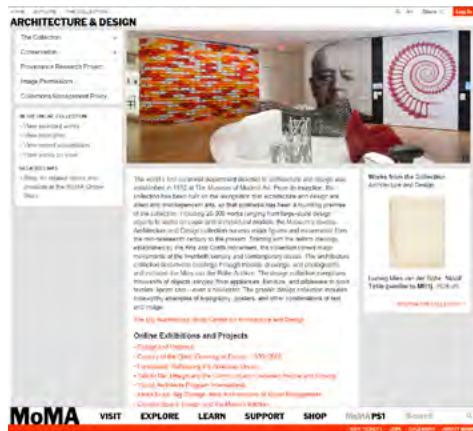
- 워싱턴의 옥타곤 박물관은 미국건축재단의 박물관임
- 미국에서 건축과 디자인 분야의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며, 건축도면, 장식예술품, 유명 건축물의 파편들도 종합적으로 소장하고 있음
- 현재 미국건축가협회 (AIA)에서 1801년도의 옛 건물을 보수, 복원하여 초기 미국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건축물 사례로 박물관 건물도 잘 활용하고 있음



[그림 3.10] 초고층 박물관, 뉴욕



[그림 3.11] 국립건축박물관, 워싱턴



[그림 3.12] MOMA



[그림 3.13] 시카고 건축박물관



[그림 3.14] MIT 건축박물관



[그림 3.15] 워싱턴 옥타곤 박물관

3. 일본

1) 일본의 건축정책 특징

- 일본의 경우 건축·도시환경 조성 프로그램의 관점으로부터는 건축문화를 장려하는 집중된 국가적 차원의 장려정책보다는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별 실천사례로서의 사례들이 다수 존재함
- 건축·도시환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적 정책은 전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나 미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천전략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의 주요관심은 환경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공공이 담당하는 건축행정에서 절차적,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합리적인 운영사례가 발견됨

2) 국가적 건축정책 사례 : 환경미래도시 구상

• 정책추진 배경

- 인구감소, 저출산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지역커뮤니티의 붕괴와 사회적 연대감의 상실, 지속되는 환경, 에너지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의 심화
-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이미 환경 도시 구축이 성숙기를 맞이해 환경 도시 구축 수법을 패키지로 하여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단계에 돌입해 있다는 위기의식

• 정책개요

- 2010년 6월 18일 2020년까지 연평균 명목 GDP 3% 성장을 목표로 일본 정부는 7개의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신성장 전략”을 공표함
- 신성장 전략에서는 7개의 전략 분야(환경·에너지, 건강, 아시아, 관광·지역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 고용·인재, 금융)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 중 경제성장에 특히 공헌도가 높은 21개의 시책이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 중의 하나가 “환경미래도시” 구상임
- “환경미래도시”는 스마트 그리드, 재생 가능 에너지, 차세대 자동차를 조합한 도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사업 재편이나 관련 산업의 육성, 재생 가능 에너지의 종합적인 이용 확대의 시책을 엄선된 전략적 도시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미래를 위한 기술, 사회경제 시스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마을 만들기로 세계에 유례없는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성공 사례를 수요 확대나 안정적인 고용 창출, 글로벌 과제의 해결력 강화에도 연결시키며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수출 패키지로써 해외의 다른 도시지역으로의 보급 전개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추진방향

- “환경미래도시”의 개념을 일본 국내외에 보급 전개할 수 있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창출하며, 자율 모델을 확립함
- (1) “환경미래도시” 구상 전체의 효과적 추진, (2) 각 “환경미래도시”에서의 경영 관점으로부터의 매니지먼트, (3) 사회적 실험 등의 진척 관리라는 관점으로부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철저
- 해외와의 지식이나 지식의 상호 제공과 인적 관계의 구축을 도모해 그 성과를 상호 이용하기 위한 플랫폼 준비를 하는 국제적인 제휴를 정부·도시·지역 차원에서 강화함

- 정부 내에 추진 조직을 설치하고 자금의 집약화를 도모하여 각 “환경미래도시”의 실시 주체인 컨소시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컨소시엄으로부터의 규제 및 제도의 개혁 요구에 대해 정부와의 조정 등을 실시함
- 추진상황
 - 2010년 6월 전략의 발표 이래 “환경미래도시” 구상 전문가 검토회의 조직 및 검토위원회의 실시
 - 자율모델의 확립을 위해 2011년 12월 일본 내 각 지자체들의 응모 및 선정단계를 거쳐 현재 13개시(도쿄도 치요다구,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아이치현 도요타시 등)가 “환경모델도시”라는 이름으로 선정함
 - 2012년 말 선정된 지자체들이 자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에 제출, 승인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계획이 추진 중임
 - 주요 “환경미래도시” 사업에는 태양광 발전이나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한 에너지 절약 주택, 전력공급을 자동 조절하는 차세대 송전망, 전기자동차 등의 신교통 시스템, 쓰레기나 폐품의 재활용 시스템 등 일본의 강점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 “환경미래도시” 구상의 최종 목표는 ‘도시 전체’를 수출 패키지화해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제휴하는 것임
 - 일본 정부는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해 가칭 「환경미래도시정비촉진법」의 검토를 마치고 제정 작업 중에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관계 부처는 차세대 사회시스템이나 설비 보조 등의 관련 예산을 집중 집행하고 규제 개혁, 세제의 그린화 등도 철저히 지원한다는 방침임



[그림 3.16] 일본 환경미래도시 홈페이지



자료 : 요코하마시 홈페이지
[그림 3.17] 환경모델도시 요코하마의 환경미래도시계획

3) 지자체 건축정책 사례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 정책추진 배경

- 자연환경이 우수했던 구마모토현은 1980년대 중반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수자원과 환경이 오염되어 미나마타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환경도시 구마모토의 지역이미지가 실추되는 사건을 겪음
- 당시 구마모토현의 지사인 호소가와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던 중 1987년 베를린 국제건축전(IBA)방문을 계기로 공공프로젝트를 통한 도시이미지 창출의 가능성을 발견함
- 호소가와 지사는 베를린 국제건축전에 참가하였던 아라타 이소자키에게 자문을 구하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1988년에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AP)를 발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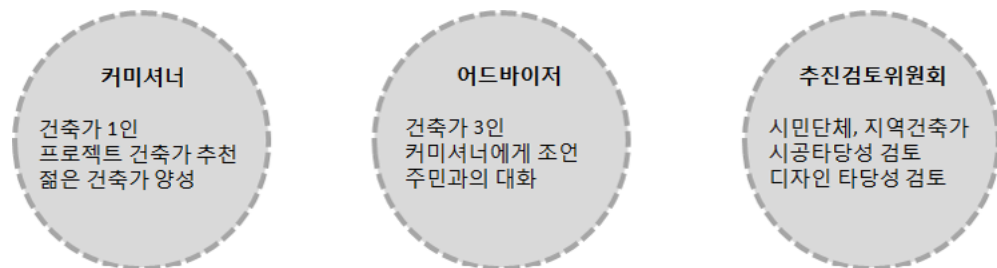
- 정책추진과정

- KAP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일관된 사업추진을 위해 구마모토현 토목부 건축과에 프로젝트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여 프로젝트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사무국은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자문과 건축가 선정을 위해 공공건축가 성격의 외부 전문가인 커미셔너를 선임하여 사업을 추진함
- 또한 프로젝트 수행 시 건축, 토목, 행정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중요 사안에 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시스템

- 현장사업 : 구마모토현 내 역사적인 건물 또는 호평을 받고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인증사업(K.A.P선정 기존건축물) 및 아트폴리스 참가작품을 제외한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표창(K.A.P 추진상)을 실시함
- 프로젝트 사업 : 사업주가 프로젝트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하면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고, 커미셔너와 부커미셔너가 적성과 능력을 겸비한 국내외 건축가를 추천하거나 현상설계 등을 실시하여 그 사업에 적절한 설계자를 선정하여 추천함. 설계자는 그 건조물에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거듭하면서 건조물의 설계를 추진. 사업주는 민간 또는 공공단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 등의 건축물은 물론 다리 등의 토목구조물, 공원과 경관 조성물 등 환경정비와 다양한 프로젝트가 참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획, 홍보, 인재육성 사업 : 심포지엄, 강연회 등의 개최, 홍보지 등의 발행, 홈페이지의 운영, 견학회 개최, 각 단체와의 기획, 홍보 협력 등을 시행하여 KAP의 이념을 달성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 추진함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운영
 - 참가프로젝트 : 민간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고, 현재까지 완성되었거나 설계중인 참가 프로젝트는 구마모토 북 경찰서 등 74개로 이 중에서 4개는 민간사업이고 나머지 70개는 공공사업임
 - 설계자 선정 : 커미셔너와 부커미셔너가 가장 그 사업에 적절한 설계자를 선정하여 추천함
 - 어드바이저 : 커미셔너와 부커미셔너는 구마모토현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지인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현지의 원로 건축가로 선정되며, 커미셔너와 협력함
 - 설계자와 커미셔너의 관계 : 초기에는 설계자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커미셔너는 설계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계자를 도와 설계를 완성함



[그림 3.18]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구성원

- 커미셔너 제도의 특징
 - KAP의 주체는 구마모토현이지만 공공프로젝트의 수준향상을 위해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커미셔너임
 - 구마모토현은 아라타 이소자키를 초대 커미셔너로 선정하여 아트폴리스 전반의 기획과 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건축가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 커미셔너 제도의 도입은 당시 일본에서의 설계자 선정방식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위원회 방식과 현상공모방식에 의한 한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었던 것으로 다양한 건축물을 통한 개성 있고 활력 있는 도시창조를 위해 커미셔너 방식을 도입함

- 현재까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커미셔너는 3대째로 이어지고 있으며 1기 커미셔너인 아라타 이소자키(1988~1995), 2기 다카하시 테이이치(1996~2004)에 이어 현재는 이토 토요(2005~)가 활동 중임
- 초대 커미셔너는 호소가와 지사의 추천으로 선임되었고 2기부터는 선임 커미셔너가 추천하고 지사가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구마모토미나미경찰서 구마모토역 파출소 (2012)	구마모토역 히가시구치 역전광장(2011)	기쿠치 시가지 포켓파크 (2012)
시라카와교 좌측 강변 화장실 (2011)	우토시립 우토소학교 (2011)	규센도 휴가촌 목조 방갈로 (2008)

[그림 3.19]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최근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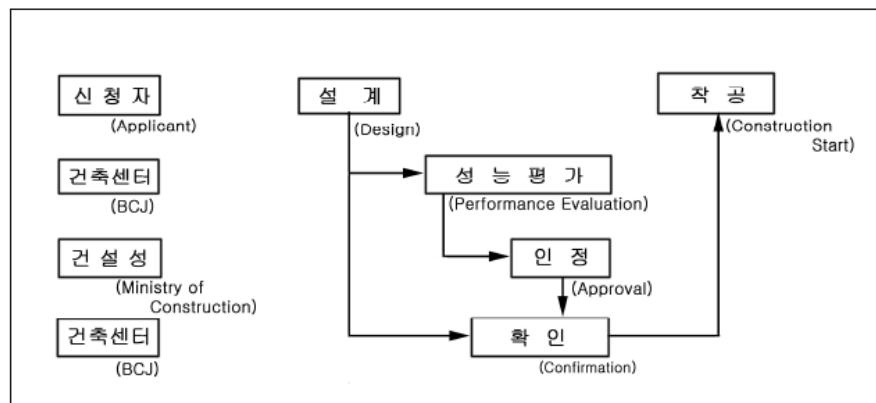
4) 건축행정 업무의 합리적 지원 시스템 사례

: 일본건축센터(The Building Center of Japan, BJC)의 건축허가 업무대행

- 일본건축센터의 소개
 - 일본건축센터는 카스미가세키빌딩(36층) 등 초고층 빌딩건설의 분위기가 높았던 1965년에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신기술의 평가,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도시, 주택분야를 포함한 넓은 건축에 관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2000년 6월의 「건축기준법」(우리나라의 건축법)의 개정과 함께 확인검사(우리나라의 건축허가)업무의 개시 등 행정업무의 위탁수행업무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건축센터의 주요역할은 신건축기술의 평가, 개발, 연구, 국제교류 및 이러한 것들을 둘러싼 정보교환 등의 폭넓은 업무를 통해서 건축기술이나 건축계의 발전과 국민생활

의 향상에 공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본건축센터의 조직 및 건축 관련 대행행정업무의 내용
 - 직원은 2007년 조사시점에 약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됨
 - 일본건축센터의 주요업무는 건축조사, 신기술평가, “건축확인” 대행업무, ISO 업무, 「건축기준법」의 영문 작성 등 공익업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우리나라의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건축확인” 대행업무가 건축행정을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내용에 해당함
 - 관청 등에서 건축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부터 2006년 「건축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기관에 위탁함
 - 현재 “건축확인” 업무는 총 120개의 기관(장관지정 40, 지자체 지정 80, 기타 재단, NPO)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 및 국토교통성 지정 민간기관에서 “건축확인” 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초기에는 10%에서 현재는 전국평균 65%를 담당하고 있으며, 오사카부의 경우는 95%가 “민간확인”임
- 시사점
 - 건축제도가 지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으면 되므로 우리의 “건축허가”라는 용어 대신 “건축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본 건축행정상의 사고로부터 건축 관련 행정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자체별 행정인력의 상황에 따라 건축행정업무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하지만 2005년에 있었던 건축사사무소의 구조기술서 위조 등의 사건 등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건축확인” 업무를 둘러싼 비리가능성 등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할 수 있음



[그림 3.20] 일본건축센터의 건축확인업무 흐름도

3 시사점

1. 계획수립의 위계성과 시기성을 고려해봐야 할 건축정책

- 국내에서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 이에 따라서 도 및 광역시의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최초의 국가건축정책이지만, 국가계획수립과 도 및 광역시 계획수립과의 시간적 차이를 고려해야 함
- 특히 시·군·구의 기초건축기본계획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국가정부시책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토대로 한 장기적 발전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럽의 경우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영국, 건축문화유산 중심의 프랑스, 건축프로젝트 실천성의 네덜란드, 건축교육 강조의 핀란드 등 각국의 특징과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국가건축정책과 일본과 같이 각 주마다의 실질적인 건축제도 및 진흥책이 발달함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산·관·학 협력의 건축정책

- 건축정책은 세계 공통적으로 탈산업화의 시기에 건축이 건축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부공간을 포함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건축의 공공성을 중요시 여김
- 이러한 건축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향유하면서 건축문화를 진흥함

3. 건축디자인이 중요시되는 건축정책

- 건축정책의 대상은 공통적으로 건축디자인 향상, 건축유산 보호, 건축인력 양성, 전시 및 교육 등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임
- 특히, 건축디자인은 개별 건축주의 기호를 넘어서 공공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 차원으로 인식됨
-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전 활성화, 신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육성, 중소설계사무소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됨

4.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과의 연관성

-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이후 단위 시군의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특히 현시점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개발 위주의 건축기본계획 방향 보다는 현실적인 지역재생 관점의 건축정책과 기본계획이 더욱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경상북도는 '경북형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알뜰 지역재생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정리하고자 함
- 해외의 사례들은 국가적 정책과 사업부터 지역 단계의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여기서는 해외의 지역적인 사업도 소개하여 향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실행 시 기초자치단체와의 실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함

IV.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방향 및 세부사업

- ①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② 목표 및 전략
 - ③ 세부과제 및 사업
 - ④ 추진계획
-

①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1.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건축기본법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계획을 수립함

1)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경북 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고려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강구

2)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구현

-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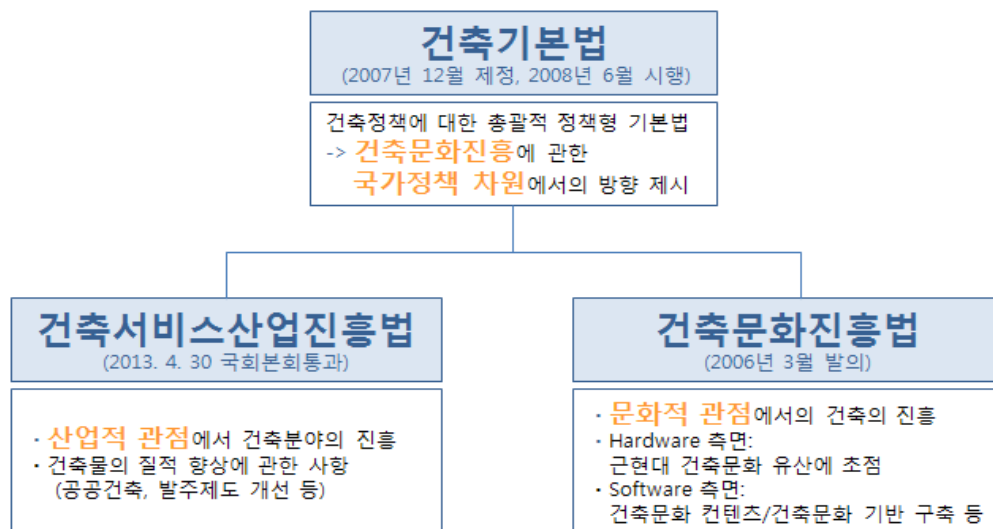
3)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구현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향상 성취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 존중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풍토 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방법 강구
-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방법 고려

2.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1) '건축문화를 진흥한다' 는 「건축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 「건축기본법」의 목적(제1조) :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008년 6월에 시행된 「건축기본법」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총괄적인 건축정책으로 2013년 6월에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산업적 관점과 2006년 3월에 발의되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의 중복성의 시비로 보류된 「건축문화진흥법」의 문화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음



자료 :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안)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체육부, 2012

[그림 4.1] 「건축기본법」의 위계

2) 건축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건축정책의 목표설정

- 상위계획인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2010-14)이 개정될 시점에 있으므로, 「건축기본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함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은 제1차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이 바뀔 시점에 수립되므로, 건축문화 진흥이라는 「건축기본법」 취지와 이에 내포된 산업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을 적극 수용하여 계획의 목표에 반영함

- 또한 주요전략에 있어서도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인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에서 안전과 복지,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에서 미래사회와 환경,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에서 문화성, 지역성, 창의성 등의 키워드를 고려함



[그림 4.2] 「건축기본법」과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과의 연관관계

2 목표 및 전략

1. 설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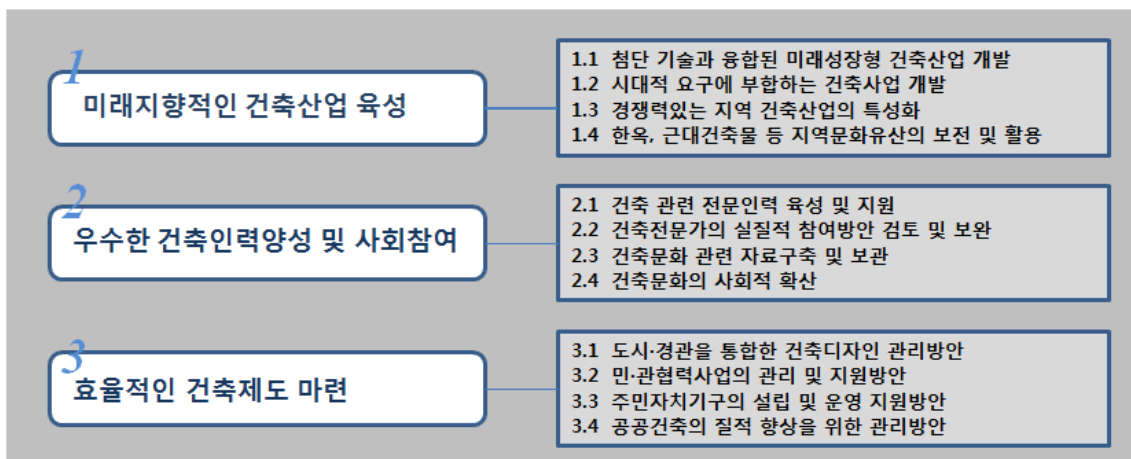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일반현황, 시대별 변천과정, 지역별 건축현황, 지역별 건축정책·사업, 설문조사, 국내외 건축정책 등의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함
- 이를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 건축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도출된 키워드를 조합하여 목표 및 비전에 따라서 하부 목표와 전략을 설정함

2. 계획의 비전

- 경상북도 고유의 아름답고 건전한 건축환경 조성
- 이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고 정체성을 담은 경북다운 건축문화 정착과 농어민에게 도움되고 서민 친화적인 건축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3. 계획의 목표 및 전략

- 경상북도의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3개 부문별 목표와 12개 전략



[그림 4.3]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3목표 12전략

3 세부과제 및 사업

1. 전략별 정책과제

1) 목표 1 :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

- 경상북도의 건축문화진흥을 위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건축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화함

[표 4.1] 목표1 :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의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전략	정책과제	기대효과
1.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형 건축산업 발굴	1.1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사업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효과 극대화 -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 -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요구로 인한 정체된 일자리 확대
	1.2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및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량 감소 - 막대한 건설 폐기물의 감축
	1.3 U-CITY 미래성장형 융복합 건축산업	-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건축·도시 환경의 사회비용 최소화 -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따른 지자체, 기업, 시민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대효과 창출 - 주거편의 증진 및 안전성, 효율성, 쾌적성 증대 등의 삶의 질 향상
2.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업 개발	2.1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순차적 개발체계 구축	- 본질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3차원적인 양질의 도시 관리 -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방식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 -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및 우수한 건축가 양성
	2.2 민·관협력형 건축사업 실행 방안 연구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된 주거문화 형성 - 획일적인 아파트 설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택설계로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2.3 지역의 여건 및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개발	- 점차 더 열악해지는 농어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모델 개발
3. 경쟁력 있는 지역 건축산업의 특성화	3.1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 방안	-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 기대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건축산업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자산 형성
	3.2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 강화	- 지역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 - 열악한 건축·도시 전문인력 구조 개편
	3.3 지역 특성화의 중장기 전략	- 지역 건축·도시환경의 정체성 확립 - 지역에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지역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4. 한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4.1 경상북도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계획	- 지역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DB 구축 -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기반시설의 증대 - 한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선정 및 보존의 기회 마련
	4.2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유지 관리 계획	- 근대건축물과 한옥을 유지관리 및 훌륭한 인재와 풍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자원의 실용적 콘텐츠화 - 건축문화유산 활용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한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
	4.3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 사군별 다양한 축제 및 지역 문화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 - 유교문화, 교육도시, 산업도시 간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가능성 제고 -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목표 2 :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

- 경상북도의 건축문화진흥을 위해서는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축문화 관련 자료를 구축 및 보관하여 전문가의 사용뿐만 아니라 전시,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건축을 문화적으로 널리 전파함

[표 4.2] 목표2 :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의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전략	정책과제	기대효과
5. 건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5.1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 다양한 계층의 우수건축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좋은 건축·도시 공간 조성 - 신진건축가의 참여 확대를 통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 지역의 우수 신진건축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 및 우수 설계기반 마련
	5.2 (중)소규모 건축사무소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 우수 건축사무소의 확보를 통해 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향상 및 지역의 경관 개선 - 건축·도시 환경의 지역특성 반영 및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5.3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역량 강화	- 지역 건축가들의 역량제고를 통한 지역 건축·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건축 관련 국가적 변화와 지역 현안 등에 대응하는 지역건축전문가의 능력 강화
6. 민간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방안 마련	6.1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활용 체계 구축	- 건축·도시 관련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창조적인 건축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비용절감, 시설물이용 및 사용성 향상
	6.2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설립	-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 - 경상북도민의 건축에 대한 인식 확대와 건축문화의식의 고취
	6.3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영역확대 지원	- 지역 건축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건축·도시환경과 디자인의 질적 향상 - 지역 기반의 민간전문가들의 지역 내 역할 확대로 건축산업 인지도 제고
7. 건축문화 관련 자료 구축 및 보관	7.1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 경상북도 건축역사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 체계의 구축 - 전통건축 및 지역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가능 - 역사 문화에 기반한 건축문화 자산의 보존 및 활용 - 경북내 지역 건축문화자산의 홍보 활성화
	7.2 근현대 건축물 자료의 종합적 DB 구축	- 건축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체계 구축 - 근·현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건축자료의 관리 보존 - 지역의 건축자산을 활용한 향토적 건축문화의 창조 - '경상북도 근현대 건축가 아카이브' 기획 및 시범사업 - 건축문화자산 자료구축과 연계해 경상북도의 통합 건축문화정보 지도 제작 및 홍보
	7.3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방안 수립	- 건축, 문화재, 관광, 지역산업 등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건축문화 중심의 종합적인 정보제공의 기틀 마련 - 건축문화자산의 축적 및 활용에 다양한 조직 간의 교류 활성화 - 지역 내 건축문화관광 및 농촌기반산업 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8.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	8.1 복합적인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 도민들에게 경상북도 건축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관광·교육 기능이 복합된 건축디자인 전시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구 - 도민을 위한 문화 관광 교육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운영으로 체험 극대화 - 건축디자인 전시관 운영 및 건축디자인 전시관 모니터링
	8.2 콘텐츠 중심의 지역건축문화 체계화 및 전파	-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역사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체계화 - 전통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건축역사문화의 홍보 - 건축역사문화 지역별 스토리의 통합적 관리방안 수립 -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행사의 내실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여 건축문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 유발
	8.3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건축문화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적 수요 확산 - 지역의 건축문화 자산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및 자긍심 고취 - 건축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도민대상의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방안 연구 및 운영 및 시범 사업 추진, 모니터링

3) 목표 3 :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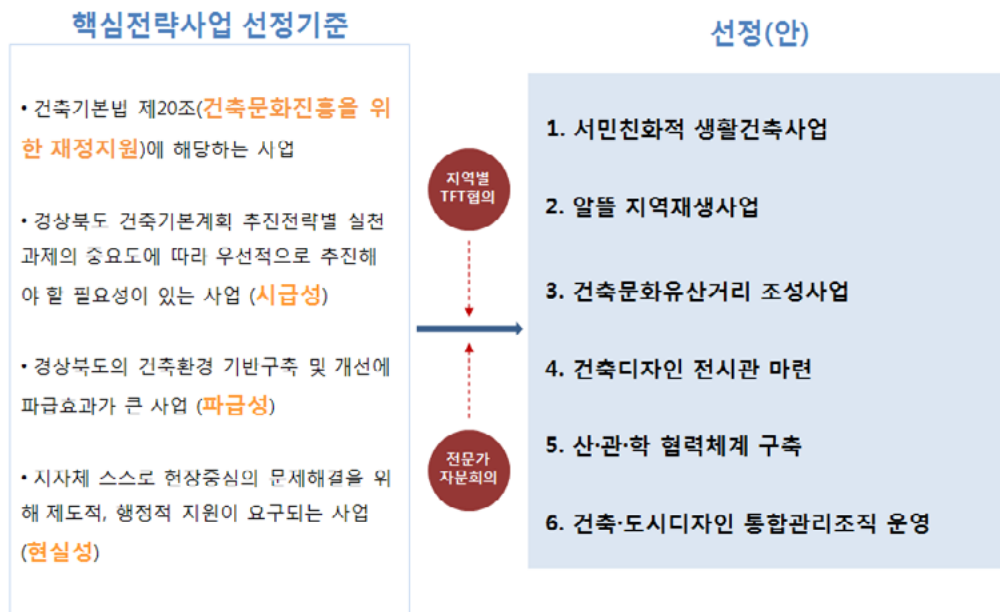
- 경상북도 건축산업 발전, 건축인력 양성, 건축문화 전파 등의 건축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업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건축 관련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이 요구됨

[표 4.3] 목표3 :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의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전략	정책과제	기대효과
9. 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디자인 관리방안	9.1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적합한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관련사업의 통합적 실행 가능 - 경상북도와 기초지자체간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부서의 역할 및 운영기준 마련을 통한 효과적 연계가 가능 - 건축기본계획의 실행조직으로서의 근거마련
	9.2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의 업무기준과 절차의 제시를 통한 건축디자인의 품질 향상 유도 - 민간건축물에 대한 공공기준의 지원 및 기준 적용의 지침 역할
	9.3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내 건축·도시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계획의 위계정립 - 경상북도 건축·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비전의 공유 및 정책적 방향성의 제시 - 건축·도시 관련사업 전반에 걸친 관련 주체의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절차의 의무화
10. 민·관협력 사업의 관리 및 지원방안	10.1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조직의 정비를 통해 민·관협력사업의 적정총량관리 및 사업계획수립의 총괄관리 기능 수행 - 원활한 민·관협력사업의 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사업계획 추진의 불안정성의 최소화 - 지방정부가 사업방식의 도입여부, 적절공급규모검토, 기관간 협의체계 등 사업전반 관리체계 구축
	10.2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민관협력 사업 모델 개발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형 민관협력사업의 도입으로 공공의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도시쇠퇴나 사회적 배제 등 사회 및 경제적 문제 해결을 기대 - 민간사업의 수익성, 공공사업의 공익성이 절충 및 담보된 다양한 사업유형의 구축 - 공공 단독의 시행과 비교하여 경제적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는 근거모델의 수립
11. 주민참여기구의 설립 및 운영 지원방안	11.1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스스로 지역 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로 사업을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역의 주인인식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관리 유도 가능 - 공공건축물 기획 및 계획과정에서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인인식 및 애착심 고취하여 자발적 관리 유도
	11.2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함께 해결하여 자발적인 정주환경 관리 유도 - 성공적인 주민참여 사례 교육을 통해 파급효과 기대 -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
	11.3 주민참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전문가집단 등 관련 사업주체간 협력네트워크 기반으로 주민주도하에 사업추진, 지역 자긍심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12.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12.1 도시·건축 관련 심의제도 개선 및 투명심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건축 관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12.2 공공건축 발주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발주방식과 공정성을 통한 설계경기 및 건축산업의 활성화 마련 - 투명한 발주방식과 이에 따른 공공건축의 신뢰성 회복 - 지역업체의 설계공모 참여 확대 및 건전성 확보
	12.3 공공건축 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 -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와 디자인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디자인의 질적 수준 마련 -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공건축 건축디자인 기준을 확립하고, 공공건축이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

2. 핵심전략별 실행 사업

1) 선정기준



2) 실행 사업 및 기대효과

[표 4.4] 핵심전략의 실행사업 및 기대효과

핵심전략	실행사업	기대효과
1. 도민 친화적 생활건축사업	1.1 복지복합형 실버세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의 당면과제인 초고령화의 취약 농어촌지역에 부합하는 복지중심의 주택 실현 - 단지 내에 노인만의 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공생할 수 있는 다세대 공생형 거주를 제공함 - 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복지시설 등)이 단지 거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1.2 생활밀착형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용지에 동사무소, 복지관,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시설과 민간임대주택인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복합개발이 가능함 - BTL 방식을 통해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모두 민간사업자가 운영 및 관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주무관청을 통해 지급받는 형태 -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경상북도형 행복 주택 모델 개발

2.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2.1 주민 주도형 소도시 지역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소도시 지역재생 기본계획 수립 - 소도시 지역재생기본계획에 따라 쇠퇴지수가 높은 지역부터 소도시지역재생사업 시행 - 주민 스스로 지역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참여로 사업 시행하여 자발적으로 소도시 재생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
	2.2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공동체 의식 회복 - 21C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주민과 함께 농어촌 마을을 건강한 정주환경으로 관리 - 생활환경개선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마을 환경 개선 -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 - '경북 행복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3. 건축문화유산 거리 조성사업	3.1 근대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에 산재한 근대건축자산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를 통해 특화된 가로 경관을 활성화하여 관광자원화 -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유산으로서의 근대건축물과 내 외부 공간 환경 계획을 포함한 역사적 거리를 갖고 충실한 콘텐츠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되, 기존 건축물의 원형은 보존하면서 내부공간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가능
	3.2 전통한옥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형 실버타운과 유교, 화랑도 등 전통 교육프로그램의 복합적 특화시범사업을 한옥 전통거리사업의 구체적인 콘텐츠와 추진전략으로 진행하여 생활형 한옥전통거리 마련 - 고택, 종택, 향교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한옥의 개보수 및 신축을 통해 전통한옥마을과 한 스타일로서의 한옥건축공간의 명품화 실현하며 실제적인 생활과 문화가 함께하는 경상북도만이 차별화 된 한옥브랜드 공간환경 조성사업의 실현
4.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마련	4.1 건축디자인 DB(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의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체계 구축 - 근현대를 아우르는 종합적 건축문화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 보존 활용이 가능 - 현재 생산되는 건축디자인 기록자료를 포함한 미래 건축문화 자료의 체계적인 활용성 증대
	4.2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의 건축디자인 관련 종합적인 자료의 수장 전시 교육 및 지원 - 새로운 시설건립보다는 실질적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 - 경상북도의 건축관련 문화행사의 다각화를 위한 지원 - 도민을 위한 건축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인문교양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산·관·학 협력 체계 구축	5.1 '공공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산·관·학 협의체(안)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조성 시 기획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예산낭비 등 문제점 보완 -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디자인 강화 유도
	5.2 '건축디자인 아카데미'(안)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한 경상북도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 - 건축·도시 관련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건축·도시 분야의 경쟁력 강화
6.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조직 운영	6.1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사업 행정조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및 사업의 통합적 조정, 관리 및 운영이 가능 - 건축·도시 관련 사업 프로세스의 전 영역에 걸쳐 기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내용의 조정 및 관리수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일관된 방향의 사업추진이 가능
	6.2 경상북도와 기초지자체의 건축·도시 협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 시군의 행정조직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경상북도와와의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일관된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 경상북도 지자체 조직의 현황에 적합한 총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연계와 통합 가능

4 추진계획

1. 추진계획의 기본방향

1) 정책과제와 실행사업을 겸비한 체계적인 추진

- 「건축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육성하는 3개 목표와 12개의 전략 및 그와 연관된 35개 정책과제로 구성하며, 12개 전략들의 우선과제로서 6개의 핵심전략과 13개 실행사업으로 구성함
- 6개의 핵심전략은 각 상황에 부합하게 12개의 전략을 융합하여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13개 실행사업을 도출함
- 따라서 비전인 '경상북도 고유의 아름답고 건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과제와 실행사업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디자인 중심의 사업추진

- 각 핵심전략과 실행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범사업, 설계공모전, 협의제, 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을 걸쳐 건축디자인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건축디자인은 건축의 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을 지니므로 도민일상문화로서 실행함

3) 국가(시범)사업을 고려한 현실적인 사업추진

- 6개의 핵심전략 하부의 12개 실행사업은 시사성이 있는 국가(시범)사업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획함
- 특히 시·군의 사업발굴은 산·관·학 협력의 건축디자인 아카데미(워크숍)를 실시하여 구체화하고자 함

2. 추진체계

1) 12개 전략별 정책과제

목표 및 전략		정책과제	추진기간			과제구분		
			단기	중기	장기	연구	제도	핵심연계
①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	1.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형 건축산업 발굴	1.1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사업			○	○		
		1.2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및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		○		
		1.3 U-CITY 미래성장형 융복합 건축산업			○	○		
	2.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업 개발	2.1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순차적 개발체계 구축	○			○		○
		2.2 민·관협력형 건축사업 실행방안 연구		○		○		○
		2.3 지역의 여건 및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개발			○	○		○
	3. 경쟁력 있는 지역 건축산업의 특성화	3.1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 방안		○		○		
		3.2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 강화	○			○		
		3.3 지역 특성화의 중장기 전략	○			○		
	4. 한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4.1 경상북도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계획	○			○		○
		4.2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유지 관리 계획	○			○		○
		4.3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		○		○
② 우수한 건축 인력양성 및 사회참여	5. 건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5.1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	○		
		5.2 (중)소규모 건축사무소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		○		
		5.3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역량 강화			○	○		
	6. 민간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방안 마련	6.1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활용체계 구축	○			○		○
		6.2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설립	○			○		○
		6.3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영역확대 지원			○	○		
	7. 건축문화 관련 자료구축 및 보관	7.1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		○		○
		7.2 근현대 건축물 자료의 종합적 DB 구축		○		○		○
		7.3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방안 수립	○			○	○	○
	8.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	8.1 복합적인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			○		○
		8.2 콘텐츠 중심의 지역건축문화 체계화 및 전파			○	○		
		8.3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③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	9. 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 디자인 관리방안	9.1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			○	○	○
		9.2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및 활용	○	○		○	○	
		9.3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조례 개정 및 제정	○			○	○	
	10. 민·관협력 사업의 관리 및 지원 방안	10.1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	○	
		10.2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민·관협력 사업모델 개발 및 적용	○			○	○	
	11. 주민참여기구의 설립 및 운영지원 방안	11.1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				○	○
		11.2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		○		○
		11.3 주민참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	○
	12.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12.1 도시·건축 관련 심의제도 개선 및 투명심사제	○				○	
		12.2 공공건축 발주제도 개선	○				○	
		12.3 공공건축 관리체계 개선	○				○	

2) 6개 핵심전략별 12개 실행사업

핵심전략	실행사업	실행단계				
		실행계획	설계공모	협업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1. 도민 친화적 생활건축사업	1.1 복지복합형 실버세대 주택	○	○	○		○
	1.2 생활밀착형 행복주택	○	○	○		○
2.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2.1 주민 주도형 소도시 지역재생사업	○		○	○	○
	2.2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사업	○		○	○	○
3.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3.1 근대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	○	○	○	○
	3.2 전통한옥 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	○	○	○	○
4.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마련	4.1 건축디자인 DB(아카이브) 구축	○			○	○
	4.2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	○		○	○
5.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5.1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산·관·학 협의체'(안) 설치 및 운영	○			○	○
	5.2 '건축디자인 아카데미'(안) 설치 및 운영	○				○
6.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조직 운영	6.1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사업 행정조직 신설	○		○		○
	6.2 경상북도와 기초지자체의 건축·도시 협의체계 구축	○		○		○

3) 관련 국가사업

- 국토환경(건축)디자인 시범사업, 행복주택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도시재생시범사업 등

V.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12전략별 정책과제

- ①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
 - ②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
 - ③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
-

12전략별 정책과제

①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

1.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형 건축산업 발굴
2.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업 개발
3. 경쟁력 있는 지역 건축산업의 특성화
4. 한옥, 근대 건축물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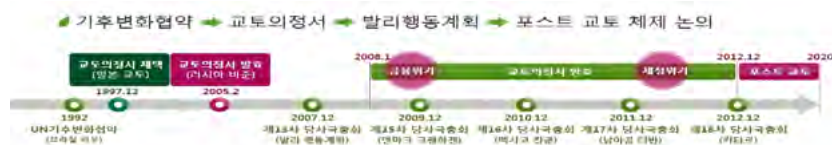
1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형 건축산업 발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제도적, 행정적 기반 마련

- 한국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250.01Mtoe(Million tones of Oil Equivalent)으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15.46mt으로 세계 9위이며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세계 최고수준의 증가세 기록
- 2010년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6,858천toe로 전국 에너지 소비량의 9.25%,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21,930toe로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6.93%를 차지함
- 녹색건축물 및 도시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책이 국가적 관점에서 마련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조례 및 제도 미흡으로 현실적 대응을 위한 개선이 필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신축 및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고, 경상북도의 건축·도시 부분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성능지표점수 관리 및 녹색건축물인증 관리 등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개선책 필요

- 1997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기후변화협약'
- 2009년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축건축물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를 의무화
- 2009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 2010년 업무용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시행
- 2010년 12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2013년 9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2013), 에너지기후변화 종합설명회

[그림 5.1] 에너지·기후변화의 국제동향

2) 건축도시정책 및 패러다임 변화

- 과거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로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 대두
- 2000년대 이후 관리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성장중심 경제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
-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5%~30%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분야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잠재성이 큰 분야임
-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시각 변화 및 수요 증가, 자원 및 에너지절약에 효율적이며 건축물의 가치 상승과 수명유지에 효과적인 환경 친화적 건축 산업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2018년 기후변화 협약이 본격 발효될 때를 대비한 규제강화 정책의 연이은 도입 등으로 인해 재건축 및 건축물의 신규공급 보다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대두
- 침체된 건설경기 속 신축에 비해 비용, 공사기간 절감의 장점이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성을 높이며 더불어 이미지 개선의 효과와 사회적 발생비용 절감이 가능
- 2011년 기준 경상북도 주택보급율은 109.5%로 100%를 넘어서고 전국평균 102.9%보다 높아 신규 주택의 보급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
- 전국 공동주택 중 21년 이상 된 세대수가 14.1%, 11년 이상 된 세대수는 57.6%를 차지하여 노후화 공동주택 및 건물의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
- 건축물의 리모델링 면적의 비중은 교육 및 사회용 건축물의 리모델링 비중이 가장 높고 주거용 건축물은 아파트의 경우 경제성 부족 및 정부의 각종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에 편중되어 나타남

3) U-CITY를 통한 친환경적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구현

-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시공간에 적극 도입하여, 도시 활동에 초래되는 사회비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이면서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 U-CITY의 성공모델이 될 최적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상북도는 2012년 기준으로 시범사업이 전무한 상태
- U-CITY 서비스와 GIS서비스 관련 연구 및 정책방향을 토대로 경상북도의 지역 현황에 적합한 표준모델 개발 필요

[표 5.1] 시범도시 지정 현황

년도	지자체수	지 자 체	비 고
'09년	3곳	인천송도, 부산시, 서울마포구	
'10년	5곳	인천송도, 부산시, 여주시, 서울마포구, 강릉시	
'11년	7곳	인천송도, 서울은평구, 안산시, 나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부산시	
'12년	6곳	인천송도, 부산시, 전주시, 남양주시, 영주시, 양산시, 전담기관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건설도시방재국, 환경산림국, 창조경제산업실, 안전행정국, 기획조정실

2) 대상

-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산업
-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및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 U-CITY 미래성장형 융복합 건축산업

3. 정책과제

1)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산업

①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

-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 및 조례 개선 연구

- *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효율 관련 법규, 규정 등 상위계획 조사
- *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의 건축·도시 분야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관련 조례, 지침 등 현황 분석
- * 경상북도 내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성능지표 및 건물유형별 분류현황,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분석
- * 경상북도 각 시·군의 지역 현황에 적합한 관련 법령, 조례 등의 정비 및 개정
- * 경상북도 각 시·군의 지역 현황에 적합한 관련 위원회의 운영세칙, 심의 기준 수립

- 최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제도를 도입하여 녹색건축전문가 양성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녹색 건축물에 대한 설계분야와 엔지니어링 분야로 양분화 되어 통합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인증제도 및 녹색건축기술이 보급되고 있으나 전문인력 및 인증기관이 부족한 상태임

- 경상북도에서 건립되어지는 다양한 건축물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생애관리까지 고려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및 인력확보가 필요
- 지역 학교 및 건축 관련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을 제공하고 지역민의 기후변화대응 체험 및 정보교류의 장을 형성
- 장수명 주택 만들기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경상북도 각 시·군 지역민의 인식 전환 및 녹색건축물 저변확대에 기여
- 경상북도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녹색건축물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학교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에 거점으로 활용
-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색건축물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각종 세금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② 건축물 에너지소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건축물 에너지성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 개별 건축물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
- * 개별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조사
- * 경상북도 건축물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인력 조사
- * 건축물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 * 경상북도 각 시·군의 지역 현황에 적합한 건축물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발생량 지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 건축물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2)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및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①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구축

- 건축물에 대한 기획단계에서 철거에 이르기 까지 생애주기비용의 구성비율을 볼 때 시공과정이 16%를 차지하는데 비해 건축물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율은 83%를 차지하므로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로 점차 확대해 가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녹색성장 선도적인 이미지를 확립
- 건축물 생애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확립

- * 경상북도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 * 경상북도 공공건축물, 임대주택 및 유지관리 현황 분석
- * 건축물 생애관리 정보시스템 사례조사
- * 관련 법규, 규정, 조례 등 검토
- * 경상북도 각 시·군의 지역 현황에 적합한 건축물 생애관리 지침 개발
- *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 및 법규, 규정, 조례 정비

- 건축물 관련 기관 및 부서별로 개별 운영 중인 관리 정보시스템 연계와 각 단계별 정보 공유 및 건축물 생애주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 건축물의 효율적인 생애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및 제도 개편
- 건축물 생애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 신설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된 법령 아래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종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전문인력 점검 및 관리

②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

- * 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법규, 규정, 조례 등 현황 조사
- * 국내외 그린리모델링 사례 분석
- * 경상북도 내 노후건축물 관리 현황 분석
- *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각 시·군의 지역 현황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데이터가 정책수립 및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건축산업 활성화 기대효과 분석

- 경상북도 내 노후 공공건축물 및 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대상 선정, 그린리모델링 시행 후 평가
- 지속가능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과 저탄소화 실현
-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을 통해 지자체의 친환경 이미지 고조 및 녹색성장의 선도적 위치 확립
- 경상북도는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을 통하여 침체된 건축경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건

축산업 활성화, 온실가스 저감의 계기 마련

-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은 기존의 국가녹색건축사업센터를 확대,개편한 그린리모델링 창조 센터를 통해 경상북도 내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로 확대
- '사업기획 지원사업'과 '시공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유치를 통해 녹색건축물 저변 확대 및 지역민의 인식 전환 유도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기술 지원, BEMS 보급 등 이행 및 운영기반 강화

☞ '13년에 52개 업체(5,004개 대형 건물) 대상으로 목표관리 적용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시행

▶ 5백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3천㎡ 이상 업무시설 **매매,임대거래시 소비증명서 첨부 의무**

☞ '13년에 서울시 대상 매매 거래시에만 적용하며, 단계적 대상 확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외벽, 지붕, 바닥, 창호 등 **단열기준을 약 30% 강화하고, 허가 기준 강화(60점 → 65점)**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을 바닥면적 **500㎡ 이상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 (종전)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 → ('13) 주거용 및 주거이외의 모든 용도

▶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신축 주거이외 용도 공공건축물의 1등급 취득 의무화**

자료: 에너지관리공단(2013), 에너지기후변화 종합설명회

[그림 5.2]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2013), 에너지기후변화 종합설명회

[그림 5.3]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리모델링 사례-영주문수면사무소

3) U-CITY 미래성장형 융복합 건축산업

① 지속가능한 건축·도시환경 구현

- U-CITY 건축산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나 계획·건설·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
- 개인정보보호 및 U-CITY 기반시설 보호 방안 마련
- U-CITY 기술기준 및 표준모델의 정립 필요
- U-CITY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성공적인 U-CITY 모델 사례 조사 및 분석
-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적정 시범지구 선정하여 U-CITY 기술 적용
- U-CITY 기술 센터 건립을 통해 전문 인력 교육, 양성 및 관리, 정보교류 거점 활용
- U-CITY 산업 해외 수출 및 홍보

② U-CITY를 통한 건축·도시환경 통합관리

- U-CITY 통합관리센터 지원 및 운영

- * 건축·도시환경 정보수집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 경상북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U-CITY 모델 도출과 표준화 모델 개발
- * U-CITY를 통한 건축·도시환경의 문제점 개선

- 도시의 과다, 과밀화로 나타나는 환경, 교통, 범죄, 재난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운영 필요
- 경상북도 U-CITY통합관리센터를 통한 효율적 건축·도시환경 관리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의 사회비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이면서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건축·도시환경을 위해 U-CITY통합관리센터를 운영
 - U-CITY통합관리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건축·도시환경을 관리
 - U-CITY를 통한 경상북도 내 방재 및 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안 연구
 - U-CITY통합관리센터의 구축에 따른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창출
 - 경상북도 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기대
 - 건축·도시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거편의 증진 및 안전성, 효율성, 쾌적성 증대 등 삶의 질 향상



자료 : 국토교통부

[그림 5.4] U-CITY 도시통합관리

4.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추진일정	구분	내용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사업	장기	연구	-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 - 건축물 에너지소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및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중·장기	연구 사업	-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구축 -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U-CITY 미래성장형 융복합 건축산업	장기	연구 사업	- 지속가능한 건축·도시환경 구현 - U-CITY를 통한 건축·도시환경 통합관리

전략

2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업 개발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건축의 사회문화적 역할 증대

- 문화시대에 부합하여 세계화 속의 국가경쟁력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건축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주5일 근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도시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및 공공공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생활권 커뮤니티 시설의 수요가 증가함
- 생활공간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축 디자인의 역할이 강조됨
- 2013년 4월 30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축문화 향상과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함
 - 건축서비스는 건축 및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함.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사법 제19조에 명시된 건축사의 업무를 포함한 포괄적 건축지식산업을 위한 진흥법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건축사업무 진흥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건축사들을 위한 법임. 즉, 건축서비스업을 첨단 지식산업으로 보고 산업적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2) 기존 건축사업의 한계

-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높은 비율(경상북도 66%)과 가장 많은 건축허가 빈도를 나타내므로, 건축산업에 있어서 주거건축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경상북도의 주택보급률은 2011년 기준 109.5%, 도 내 10시 13군 모두 100%를 초과하여 투기성향의 민간주도형 개발 사업이 더 이상 활성화될 수 없음
 - 경상북도 내 10시 13군의 주택보급률(2011년 기준): 포항시 108.4%, 경주시 110.1%, 김천시 107.6%, 안동시 108.0%, 구미시 110.3%, 영주시 102.9%, 영천시 109.7%, 상주시 109.6%, 문경시 108.0%, 경산시 108.2%, 군위군 114.3%, 의성군 111.4%, 청송군 111.3%, 영양군 109.3%, 영덕군 110.8%, 청도군 116.3%, 고령군 111.4%, 성주군

110.6%, 칠곡군 115.7%, 예천군 111.4%, 봉화군 109.1%, 울진군 113.0%, 울릉군 107.4%

-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또한 인센티브 제도에 의한 양적 공급위주의 정책이기에, 이미 포화상태의 주택보급률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올 전망이다
- 경상북도 내 1985년 이전에 건축된 단독주택군의 노후주택 재고율이 58.6%로 서울 등 수도권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며, 구도심 쇠퇴의 장기화가 도시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전략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함

3) 건축수요의 변화

-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주택가격의 하락세 지속에 의한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대체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노후생활, 전원생활 공간으로서의 농어촌 지역에 관심이 증가함
- 귀농귀촌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농촌주민들의 이농, 고령화로 인한 자연사 등으로 농어촌 지역에 빈집이 증가함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원도심 재정비, 신도시 조성, 농어촌 개발 담당부서 등
- 건설도시방재국, 농축산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일자리투자본부, 기획조정실

2) 대상

-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순차적 개발체계 구축
- 민·관협력형 건축사업 실행방안 연구
- 지역의 여건 및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개발

3.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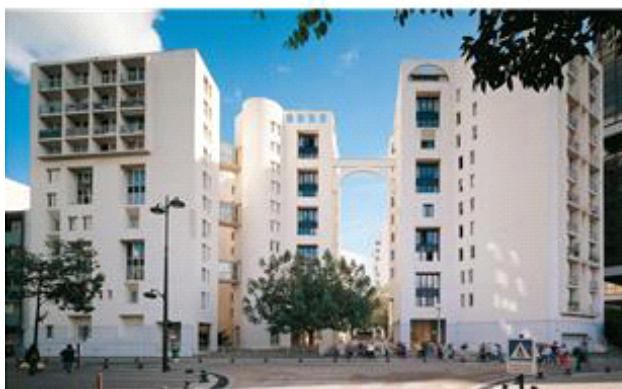
1)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한 순차적 개발체계 구축

① 총괄책임건축가(MA)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운영

- 양질의 도시관리를 위해 토지이용에 대한 2차원적 상세계획 뿐만 아니라 3차원의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관계획을 포함한 본질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총괄책임건축가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개별건축들이 순차적으로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식을 추진함
- 총괄책임건축가는 다양한 사업주체들 간의 협의 및 조정뿐만 아니라 도시와 건축, 경관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므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전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체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진 총괄책임건축가는 단지의 전체적 차원에서 블록별 또는 건물별의 설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축가들을 조정할 수 있음
- 이때에 총괄책임건축가는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직접적으로 건축설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획일적 단지형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주거유형 연구

- 총괄책임건축가의 마스터플랜 하에 다양한 건축가들이 초청되거나 설계공모전을 통해 각 블록 또는 건축물 마다 각기 다른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1971년 프랑스 정부는 주거건축을 대상으로 '새로운 건축프로그램'이란 의미를 지닌 설계 경기 PAN을 개최하여 보다 창의적인 작업을 고취시키고, 1988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전체를 대상으로 EUROPAN으로 확대함



[그림 5.5] 제1회 PAN 설계경기 당선을 계기로 건축된
프랑스 건축가 Christian de Porzamparc의 Hautes Formes 주거단지 (1975-80)

[표 5.2] 프랑스 '새로운 건축프로그램' PAN 설계경기

차수	개최시기	주제
PAN 1	1972년 3월	주제없음
PAN 2	1972년 10월	주제없음
PAN 3	1973년 2월	주제없음
PAN 4	1973년 6월	주제없음
PAN 5	1974년 2월	서민지역의 거주성
PAN 6	1974년 5월	사회적 관광지의 거주성
PAN 7	1975년	주제없음
PAN 8	1976년	주제없음
PAN 9	1977년	대규모 단지의 개선
PAN 10	1978년	주제없음
PAN 11	1980년	변두리 지역
PAN 12	1982년	주거건물에서 지역 복리시설까지
PAN 13	1984년	외각지역을 건설하라
PAN 14	1987년	주거의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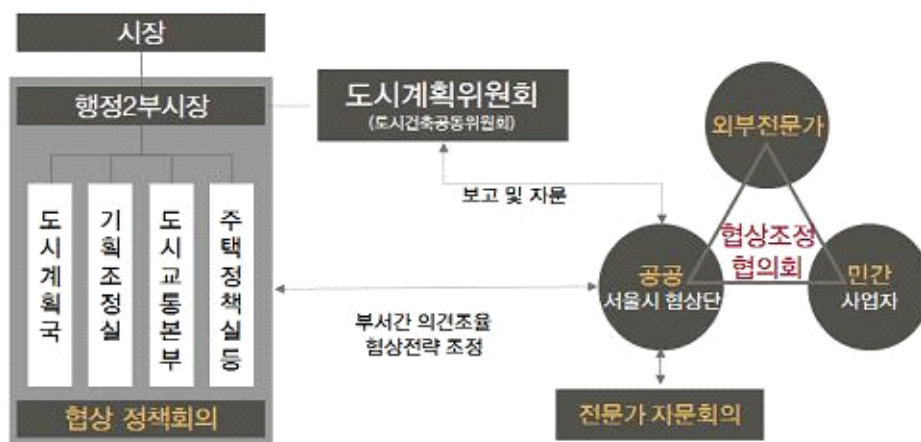
③ 전면철거형이 아닌 도시맥락적 수복형 정비방식 연구

- 기존 도시의 공간조직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정비하는 소단위의 주거지 정비방식임
-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이 결합된 총체적인 접근방식의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지정비를 도모함

2) 기존의 민간주도형 한계를 넘어선 민·관협력형 건축사업 실행방안 연구

① 민관협의 하의 토지수용 등 합리적인 개발방식 연구

- 프랑스의 협의개발지구(ZAC), 영국의 파트너십(EP), 미국의 커뮤니티개발회사(CDC) 등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부동산투기가 조장되지 않도록 민간과의 협정, 매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토지를 수용함



[그림 5.6]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구상도

- 서울시가 공공은 물론 민간개발까지 아울러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도시계획국 내에 '공공개발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연구원 내에 연구조직인 '공공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함
- 공공개발센터는 토지자원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및 유형별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관리체계 정립, 사회 공감대 형성 및 확인을 위한 시민 소통, 계획품질의 향상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협업, 개발가능 가용지 대상 실행력을 담보하는 개발계획 수립, 개발 실현을 위한 민관소통 등을 수행함
- 아울러 분야별로 검증된 전문가들에게 MP(Master Planner), MA(Master Architect)로서 책임을 부여하고 이들을 '협업 전문가 풀(pool)'로 구성해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시킴
- 그동안 단순검토와 심의 등 인허가 절차운영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민간 가용지 개발에 대해서도 센터를 통해 공공의 선도적·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여 1만㎡ 이상 대규모 민간 가용지를 대상으로 운영해 왔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1만㎡ 미만의 땅이라도 사전에 센터와 개발을 함께 구상·검토하는 방향으로 보완함

② 인센티브가 아닌 보조금 제도 연구

- 기존의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주거환경을 저하시킬 수 있는 민간투기성 개발을 지양하고, 공공기금 또는 보조금 지원에 의한 재생방식을 추진함
- 사업단위는 실제 주택개선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필지단위에서 블록단위의 다양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으며, 주택관련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장소단위로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③ 거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 일본의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와 같은 맥락을 가지는 것으로 개발업자 및 가수요자의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인 거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함
- 일명 '커뮤니티형'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방식은 지역주민, 전문가, 공공 등의 다양한 주체의 상호협력 연계가 필요함

구 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개 념	저층주거지 보존·정비·개량	기존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정비	기성시가지 활성화	마을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방 법	공공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건축기준 완화 및 사업절차 단순화하여 활성화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부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공공에서 행·재정적 지원
이미지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자료 :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과 홈페이지

[그림 5.7]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관련 주요사업

3) 지역의 여건 및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개발

① 경상북도 소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 지자체의 주거지 환경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소단위 정비사업의 점진적 추진을 위한 정비체계 개선
- 점진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의 코디네이터 기능 마련 및 지원
-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관리구역 지정 제안 제도 도입
- 건축법, 도시계획 관련법 특례적용 방안 마련
- 소규모 기반시설사업 소단위 정비사업의 점진적 사업추진체계 실현방안 검토

[표 5.3]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비교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소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철거 후 재개발 - 거대단위 개발 - 조합체제에 의한 단위 사업화 - 폐쇄적 단지화 - 고층 아파트 중심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을 고려한 유지·정비 - 소규모 개발 - 공공지원 + 개인자율체제 - 주변과 연계된 기존공간조직 유지·정비 - 필지별 다양한 주거유형

② 농어촌형 해피하우스 사업 운영

- 해피하우스 사업 개념을 농촌지역에 도입하고 기존 농촌주택 개량사업들과 연계방안 모색
- 도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피하우스와 같이 자치단체의 일정 권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서비스센터 설치
- 농어촌 해피하우스 현장 전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③ 미래형 농어촌 주거모델 개발 및 보급

- 귀농 귀촌인을 위한 농업교육뿐만 아니라 필요한 주거문제를 위해 기존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축 자금지원, 생활유형에 적합한 농어촌 주거모델 개발이 필요함
-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수리하여 귀농 귀촌인을 위한 주거, 마을사랑방, 관광숙소 등으로 활용함
- 미래형 농어촌 주거모델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주거모델 표준설계도 활용 및 지원방안 마련

4.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추진일정	구분	내용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한 순차적 개발체계 구축	단기	사업	- 총괄책임건축가(MA)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운영 - 획일적 단지형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주거유형 연구 - 전면철거형이 아닌 도시맥락적 수복형 정비방식 연구
민·관협력형 건축사업 실행방안 연구	중기	연구	- 민관협의 하의 토지수용 등 합리적인 개발방식 연구 - 인센티브가 아닌 보조금 제도 연구 - 거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지역의 여건 및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개발	장기	연구	- 경상북도 소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 미래형 농어촌 주거모델 개발
농어촌형 해피하우스 사업 운영	중기	사업	- 핵심전략사업2 알뜰 지역재생사업과의 연계
미래형 농어촌 주거모델 보급	장기	사업	- 핵심전략사업1 서민친화적 생활건축사업과의 연계

전략

3 경쟁력 있는 지역 건축산업의 특성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장소성을 중시하는 건축산업 요구

- 기존의 획일적인 건축산업이 아닌 장소성을 중시하는 건축산업이 요구되어짐
-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창의적인 건축·도시환경이 빈약한 실정이며 경쟁력 있는 지역 건축산업이 요구됨
- 경쟁력 있는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도시 관련 정보의 취합 및 공유, 기록물 관리, 교육지원 등의 역할을 할 조직 및 공간 부족
- 지금의 현황은 지역의 특성이나 맥락이 반영되지 못하여 독창성 결여된 사업의 반복으로 지역의 장소성 결여
- 지역 인문·자연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건축산업 선정을 통하여 활성화 도모
-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선도적 역할 필요
- 지역의 특수성과 독창성 향상을 위한 건축·도시 관련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

2)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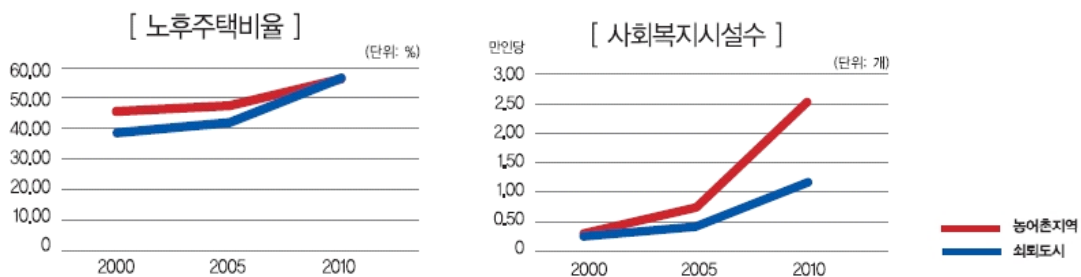
- 삶의 질적 향상에 따라 지역 건축·도시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 건축·도시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건축가 위상강화 및 동기부여가 절실하며 지역의 건축·도시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에 지역의 건축·도시 전문가의 참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타 분야의 디자인 전문가 영역보다 건축물과 도시를 아우르는 건축·도시 전문가의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건축·도시환경을 구성하는 가로시설물, 도시기반시설 등의 공공 디자인에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하며,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됨
- 지역 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친환경 등의 새로운 건축·도시환경에 관한 지역 기반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방안 필요
- 지역 특성화를 위해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들의 건축·도시환경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소통을 통하여 역할 확대 필요

3) 정체성 있는 지역 건축도시환경의 필요성

- 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정체성 있는 지역 건축·도시환경의 필요성 대두
- 정체성이 결여된 채로 선행사업, 타 지역 벤치마킹, 사업주체의 반복 등으로 인해 전국 각 지역의 건축·도시환경이 획일화되어감
- 지역 상징물이나 조형물에 지역의 특성이나 개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독창성 결여된 사업의 반복으로 지역의 정체성 상실
- 지역 고유의 건축·도시환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12) 시행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환경 조성의 기틀 마련

4)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 도시의 주거,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은 국가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
- 2000년대 진입하면서 인구감소,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지연, 지역산업의 쇠퇴, 빈부 격차로 인한 공동체 약화는 유·무형 지역자산의 방치로 이어지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과 도시 성장 동력이 쇠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재정기반이 약한 경상북도의 중소도시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음
- 전면 철거 이후 재건축, 재개발로 이루어지던 정비 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중소도시에서 추진하기란 한계가 있으며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치중하다보니 경제적 약자인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여 오히려 주민과 개발 주체 간 극심한 마찰을 빚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옴
- 도시 세 곳 중 두 곳이 쇠퇴하고 있으며 쇠퇴도시의 생활여건은 농어촌보다 열악하고 자립적인 재생추진이 어려움
-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적·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정신적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도심과 도시내 쇠퇴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도시재생기반을 마련 필요
-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본격화



자료 : 국토교통부

[그림 5.8] 쇠퇴도시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 * 도시재생 :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 * 쇠퇴도시 : 도시쇠퇴 징후지표 중 2개 이상이 포함되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이하인 도시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건설도시방재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국, 환경산림국, 창조경제산업실, 동해안발전추진단, 기획조정실

2) 대상

-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
- 지역 건축·도시전문가의 역할 강화
- 지역 특성화의 중장기 전략 마련

3. 정책과제

1)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 방안

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산업 개발

-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한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축·도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분석
- * 중앙정부의 건축·도시 관련 시행사업과 연계한 지역 건축산업 발굴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를 기반으로 한 건축산업과 근린을 기반으로 한 건축산업으로 나누어 지역에 적합한 방안 분석
- * 국가의 건축·도시 관련 연구 중점분야와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건축산업 활성화 도모
- *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 건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기반 사업 발굴 및 실행
-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축·도시 분야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지역기반 건축산업 실행방안 마련을 통하여 건축산업 영역 확대 및 활성화 추진
- 경쟁력 있는 건축산업의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 구체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산학연 협동 체계 구축

② 지역 건축산업 관련 제도 정비

- 지역의 특수성과 독창성 향상을 위한 건축·도시 관련 제도 마련
- 지속가능한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각 시·군의 지역 현황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 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조사 분석
- * 건축·도시 관련 기존 산업 현황 및 전문인력 분석
- * 건축·도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국내외 사례 및 현황 분석
- * 성공적인 선진사례에 대한 현황조사, 연계사업 및 지원체계, 지역여건 등에 대한 통합조사
- * 정비된 제도의 시행 모니터링 방법 구체화

- 중앙정부의 건축·도시 관련 연구 중점분야와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제도 및 조례 검토

2)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 강화

①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 역할 강화

- 경상북도 건축·도시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강화를 통하여 문화시대에 부응하는 건축·도시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나아감
-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 육성 및 지원제도 연구

- * 경상북도 건축·도시 전문가 현황 및 수요 조사
- * 기존 건축·도시 전문가들의 교육 현황 및 교육기관 분석
- *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여건에 맞는 교육 및 육성 지침 개발
- *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 역량 강화 및 디자인 참여 지원 제도 마련

- 기존의 건축사 교육 및 건축·도시환경에 관련된 도시재생, 친환경 등의 새로운 주제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 강화
- 건축·도시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의 시행에서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주도적 역할 확대
-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로공간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실무 능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
-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전문가와 연계된 지역 협력 강화
- 기존의 건축문화행사 등을 확대하여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와 시민의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지역 정착을 유도
-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민원상담, 재능기부, 사회봉사 등의 지역 밀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상북도와의 협력을 통해 역할 강화프로그램 구성
- 건축·도시 전문가의 사회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등을 개정

②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경쟁력 있는 디자인 참여

- 지역기반의 건축·도시 전문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우수 건축·도시 전문가의 발굴 및 육성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
- 턴키제도, P/F사업, BTL사업 등의 확대에 의하여 디자인과 창의력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대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디자인 참여가 제한적임
- 지역 우수 건축·도시 전문가, 건축물, 도시공간 발굴 및 지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축·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함
- 지역 건축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사의 위상강화와 동기부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 건축·도시 전문가의 발굴 및 육성과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건축문화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
- 도시구성의 기본 단위인 소규모 건축물 디자인 품질향상과 건축·도시환경을 개선을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수건축·도시 전문가의 확보
- 지역 우수 건축·도시 전문가의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기회의 확대와 같은 실질적 제도와 기반 마련
- 공공시설물 관련 공공디자인에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 참여제도 마련

3) 지역 특성화의 중장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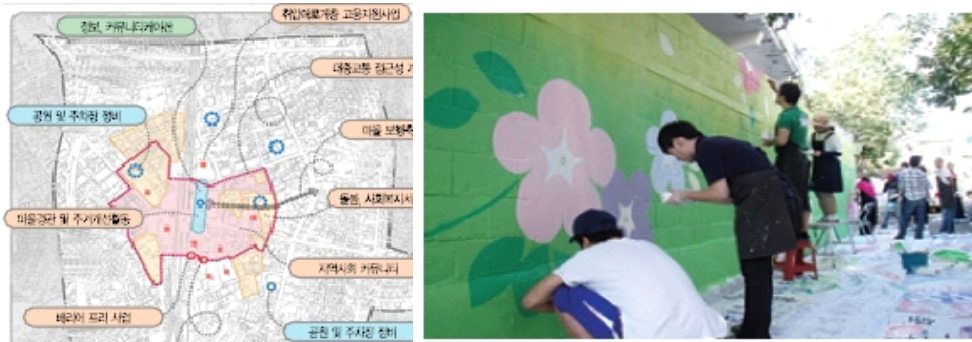
① 지역별 건축·도시 정체성 연구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환경 조사 및 DB구축

- *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조사 및 지역 특성 분석
- * 도시의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의 자료조사 및 분석
- *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통해 도시쇠퇴 현황 파악
(평균인구성장률, 총사업체수변화율, 노후건축물 비율, 1인당 주거면적, 사회공공서비스 시설 등)
- *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DB구축
- * 지역에 적합한 건축·도시 정체성 연구
- * 창조적 건축·도시환경 활성화 방안 연구

②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저성장, 노령화, 금융자본의 한계 등은 오늘날 도시의 성장을 제한하는 주요 변수이며, 이 변수들은 도시 외곽 신도시 개발, 도심 내 고층 주거지 개발, 자본투입 중심의 고밀도 상업개발 등 성장시대의 개발 패러다임과 정책을 더는 유효하지 않게 만들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지위 확보와 체계적인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지방 도시재생 위원회와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도모
-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 기반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뉨)
- 도시재생사업은 경제, 문화, 역사 등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각 부서간의 협력이 중요한 사업 성공요소임
-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 및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림 5.9] 근린기반형 활성화계획, 수원마을만들기



[그림 5.10]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함부르크하펜시티

4.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추진일정	구분	내용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 방안	단기 중기	연구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산업 개발 - 지역 건축산업 관련제도 정비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 강화	단기	연구	-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 역할 강화 -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경쟁력 있는 디자인 참여
지역 특성화의 중장기 전략	단기	연구 사업	- 지역별 건축·도시 정체성 연구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전략

4 한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경상북도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

- 경상북도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대표적 역할을 함
-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국난극복의 보루였으며,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
- 도민들은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의리와 독심, 정의감을 중시하는 굳건한 기상과 아울러 산업근대화의 주역으로서 드높은 미래개척 정신을 가짐. 세계적인 철강 섬유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
-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이 소재하여 풍부한 연구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함
- 풍부한 문화자원(전국 문화재의 17%)과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중심지로 발돋움

2)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문화재는 총 1,871개가 있으나 문화기반시설은 전국의 8.4%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가지정문화재 620개, 지방지정문화재 664개, 문화재자료 561개, 등록문화재 2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군별로는 경주시가 315개, 안동시가 294개, 영주시가 126개, 봉화군 94개, 예천군 83개, 청도군 73개를 보유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 및 건축문화재의 지정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
- 시 군별 특화사업 및 일반사업으로 연계하여 건축물과 특화거리, 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공간화境的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 대두

3) 지역 문화 유산의 발굴과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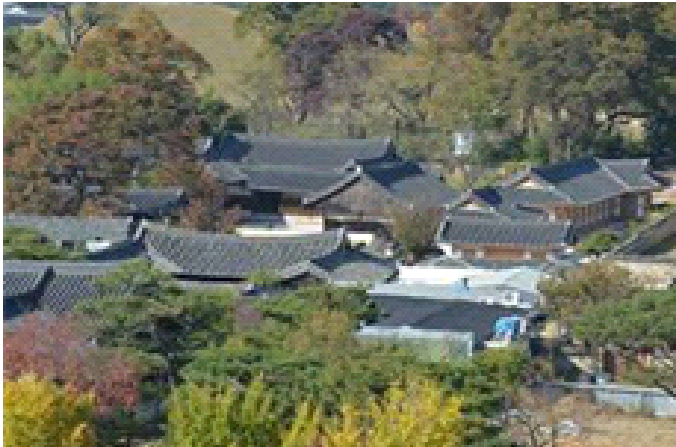
- 시 군별 다양한 축제의 발굴과 개최로 지역 문화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
- 경주시의 신라문화제, 영주시의 부석사 화엄축제, 안동시의 석빙고장방 행사, 고령군의 대

가야체험축제, 군위군의 삼국유사문화제 등 지역의 문화 산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체험하도록 하고자 함

- 유교문화, 교육도시, 산업도시 근간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됨
- 지역 상업 및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공간 환경의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 대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버려진 간이역이나 유휴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2013년 문화디자인프로젝트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는데 우리 도의 봉화 분천역이 선정되어 디자인 리모델링을 지원받음

4)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근대 건축물과 한옥을 보존 활용하여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함
- 한옥, 근대건축물 및 훌륭한 인재와 풍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자원의 콘텐츠화로 지역문화유산의 기반 구축
-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은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정비지원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화지역으로 설정함



[그림 5.11] 경주교촌한옥마을(좌), 경북봉화분천역 문화디자인프로젝트(우)

5) 차별화된 전통한옥체험과 활용

-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농암종택(15실, 수용인원 60명)"은 퇴계 선생이 걸던 예던길 자락에 위치하고 농암 이현보선생의 영정이 모셔져있는 안동영천이씨 종택으로 숙박객이 급증함
- 경상북도의 "전통한옥 체험숙박지원사업"은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2004년부터 경주시, 안동시 등 12개 시군 80개소에 75억 6천만원 투자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한 수세식화장실, 샤워실 등을 개·보수함

- 2006년부터는 운영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52개소에 10억 8천만원 투자 고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택음악회, 전통혼례, 공예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
- 사례로서 고령군 개실마을 2,194명, 경주 수오재 1,767명, 안동시 하회마을 4,501명, 오천군자리 2,463명, 수애당 1,631명, 치암고택 1,455명, 임청각 482명, 옥연정사 478명, 북촌택 414명, 영주시 선비촌 2,874명, 청송군 송소고택 1,322명 등이 2010년 상반기 한옥숙박체험 진행함
- 현재 경상북도에는 “전통한옥체험업소”로 86개소(480실)가 지정되어 관광객들에게 숙박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전통한옥은 문화재로 지정된 296개 고택과 23개 한옥집 단마루에 2,000호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지원사업”을 지속 확대 “한옥 숙박체험”을 경북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가능



[그림 5.12] 농암종택 전경 및 관광지도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건설도시방재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보건복지국

2) 대상

- 경상북도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계획
-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유지 관리 계획

-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① 건축 차원 사업

- 구 도시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 브랜드화 된 한옥 특화 사업
- 근대건축물 공공화 사업

② 도시 차원 사업

- 근대건축 문화유산 거리사업
-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사업
- 유교정신문화 교육체험지구 시범사업
- 근대건축 경관지구 조성사업

3. 정책과제

1) 경상북도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계획

① 시 군별 문화재 현황 및 지역 건축 유산 지정 사업

- 경상북도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경상북도 각 시 군별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
- 건축문화재의 지정 및 보존 제도의 마련
- 지역 건축 유산 지정 및 활용

② 비지정 근대 건축문화유산 유형별 보존 방안 연구

- 비지정 근대 건축문화유산 선정기준 및 유형화 체계 마련
- 비지정 근대 건축문화유산 유형별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
- 비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기능과 용도를 강화할 수 있는 모델개발 및 선행 사례확보
- 관련법이나 관련 사업 간의 관계성 검토

③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실태 조사 연구

- 한옥 및 근대 건축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 확충
- 경상북도 건축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한 로드 맵 구성
-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기반시설의 증대
- 한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문화기반시설 화 범주 및 가능성 연구

2)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유지 관리 계획

①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연구

- 전통마을의 차별화된 보존가치 설정과 범주 지정
- 전통 마을의 근대 건축물과 한옥, 사찰 등 건축 유산 유지 관리 계획
-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에 대한 문화자원의 실용적 콘텐츠 화
- 문화재 관련 전문가집단과 전통마을 주민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

② 건축문화유산의 유지 관리 및 리모델링 방안 연구

- 건축문화유산 유지 관리를 통한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간 환경을 조성 및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
- 사업 추진 단계와 지역 여건 등을 기준으로 건축문화유산의 유지 관리 프로세스 형태를 모델화
- 지역 건축문화유산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방식의 내용과 절차, 문화재 관련 법령 유형화
- 지역 건축문화유산 별 구체적 가치 설정 및 리모델링 방안 연구

3)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① 동해안 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한옥 및 근대건축물 관광자원 활용 연구

- 시·군별 다양한 축제 및 지역 문화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
-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 마을에 대한 활용 및 사업화
- 근대건축 문화유산 거리사업
-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사업
- 관련법이나 관련 사업 간의 관계성 검토

②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활용 시범 사업

- 유교문화, 교육도시, 산업도시 근간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군에 제안할 수 있는 시범사업 모델 제안
-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경쟁력 강화
- 유교정신문화 교육체험지구 시범사업

③ 근대 건축 경관지구 조성사업

- 경상북도 근대건축물 특성 제안 및 경관지구 설정
- 기초자료 분석 후 세분화하여 전면보존, 일부보존, 전면개축 등의 유형과 지침을 마련

- 전면보존 : 기존의 건축형태를 유지, 전시 또는 생활환경 자체 보존
- 일부보존 : 기존 건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거나 일부를 개축
- 전면개축 :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되 건축물 원래의 흔적을 유지함
- 근대건축물 자체의 보존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의 한계를 가지므로 도 차원에서 시군에 제안할 수 있는 근대건축문화유산 시범사업 등의 모델 제안
- 근대 건축물 공공화 사업
- 구 도시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④ 브랜드화 된 한옥 특화 사업

- 경상북도만의 차별화된 한옥 브랜드 특화 발굴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계획 연계 사업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계획 : 2000~2010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 중 선정된 한옥 관련 사업 예로서 안동시, 영주시 등 4개 시, 의성군, 청송군 등 7개 군으로 구성
- 생활공간의 문화적 개선사업으로서 브랜드화 된 한옥 적용 특화 사업
- 한 스타일 공공건축물 브랜드 특화 사업

4.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추진일정	구분	내용
경상북도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계획	단기	연구	- 시 군별 문화재 현황 및 지역 건축 유산 지정 사업 - 비지정 근대 건축문화유산 유형별 보존 방안 연구 -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실태 조사 연구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유지관리 계획	중기	연구	-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연구 - 건축문화유산의 유지 관리 및 리모델링 방안 연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중기	사업	- 동해안 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한옥 및 근대건축물 관광자원 활용 연구 -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활용 시범 사업 - 근대 건축 경관지구 조성사업 - 브랜드화 된 한옥 특화 사업
근대건축 문화유산 거리 사업	장기	사업	- 핵심전략사업3 건축유산거리조성 사업과의 연계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사업	장기	사업	- 핵심전략사업3 건축유산거리조성 사업과의 연계

12전략별 정책과제

2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

- 5. 건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 6. 민간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방안 마련
- 7. 건축문화 관련 자료구축 및 보관
- 8.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

전략

5 건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가의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필요

- 좋은 건축·도시공간의 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 건축가의 지속적인 발굴 및 육성,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축가의 전문적인 지식 함양과 설계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건축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함

2) 신진건축가 및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발굴 및 육성 필요

- 건축문화는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건축물 또한 건축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므로 이런 다양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계층의 우수 건축가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함
 - 도시경관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80%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 차지하며, 경상북도의 경우도 신고대상 건축물이 허가대상 건축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허가대상 건축물 중에도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매우 적음
- 특히, 경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소규모 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향상과 이를 통한 경관 개선과 건축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축물을 주로 담당하는 신진건축가 및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발굴 및 육성, 정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
 - 경상북도 지역 건축사사무소의 행정구역별 분포 현황에 따르면, 개인사무소의 경우 1인 건축사사무소 422개, 2인 건축사사무소 4개, 3인 이상 1개, 법인사무소의 경우 1인 건축사사무소 39개, 2인 건축사사무소 4개, 3인 이상 1개 등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음

자료: 경상북도 건축사회

3) 신진건축가 및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토양 척박

- 건축가 개인의 창의력 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대형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우수 신진건축가 및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발굴 및 육성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나타남

- 대부분의 공공건축 또는 도시사업이 실적위주의 설계입찰(턴키제도, PF사업, BTL 사업 등) 참가자격 제한을 통해 신진건축가나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참여기회를 제한함
 -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건축설계산업을 세계 탑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공공 건축설계 발주 방식의 경우 2억3000만원 이상의 설계는 공모방식을 의무화하고, 제안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등 방식을 다양화해 발주 기관과 공모 참여자 부담을 줄이고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따라서 우수 건축가 양성을 통한 건축설계 경쟁력 향상과 우수 설계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대형 건축사사무소 위주의 기성 설계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신진건축가 및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설계기회 제공 등 제도적 지원정책이 필요함

[표 5.4] 경북 건축사회 등록현황 : 454명/ 443개소 (개인409 법인45) / 2013년 기준

지 역 회	회원수	사무소
계	454	443
포 항	105	100
경 주	59	59
구 미	77	76
김 천	22	20
안 동	29	29
영 주	17	16
문 경	9	9
상 주	9	9
경 산	45	45
영 천	11	11
칠 곡	14	14
군위·의성	8	8
청 도	7	7
고령·성주	17	16
예 천	9	8
울진·영덕	10	10
영양·청송	6	6

4) 지역 내 건축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

- 서울 및 수도권의 경제·문화적 집중에 따른 지역 내 건축가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경상북도 지역의 건축·도시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대부분 서울 업체

들이 주관하고 지역 건축전문가의 참여가 어렵거나 참여 시 사소한 업무만 담당함

- 정부의 건축정책,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문제, 에너지 등과 관련된 환경 분야, IT산업과 관련된 시대적 변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생 등 건축·도시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경향들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 내 건축 전문 인력의 관심과 기술 습득이 부족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건축·도시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전문단체나 기관 등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초청 강연이나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전문가와 공무원의 단기성 및 일회성 교육에 머무르고 있음
- 따라서 건축·도시환경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건축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역 내 민간 건축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 함양과 설계 역량 강화가 필요함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건설도시방재국, 문화관광체육국, 일자리투자본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2) 대상

- 경상북도의 건축·도시 관련 신진 건축 인력
- 경상북도 각 시·군 지자체의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 경상북도 내 건축전문가

3. 정책과제

1)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①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연구

-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제도 모델 개발
- 우수 신진건축가의 대상, 선정 기준 및 자격 기준
-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정책

- 실행 계획

- 실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등

②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설계경기 참여·당선·계약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진건축가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목적
- 신진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현상설계공모, 연령제한 설계공모, 우수 신진건축가와의 수의계약 등 신진건축가의 공공발주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지명현상설계공모 : 소규모 건축물 또는 긴급을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 지역의 공공건축가나 신진건축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상공모 진행
- 지역 내 우수 신진건축가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설계기반 마련을 위해 최초 개업 후 일정기간 작업 공간을 무상임대하거나 저렴한 임대료 지원, 저리 금융융자 등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실시
- 현상공모 및 건축상 수상 등 탁월한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 신진건축가는 경상북도 공공건축가로 우선 위촉
- 공공건축가 중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45세 이하의 신진건축가로 선정함으로써 젊은 건축가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신진건축가를 대상으로 제한하는 설계 및 아이디어 공모 시범사업
 - 목적 :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발주 프로젝트 또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한 지역 현안이나 관심 사업에 대해 대상을 신진건축가로 제한하는 공모전을 시행해 신진건축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
 - 대상 : 45세(또는 40세) 이하 신진건축가
 - 혜택 : 선정된 신진건축가에게 실질적인 설계기회를 제공하거나 선정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획 총괄 위임

※ 신진건축가를 대상으로 제한하는 설계 및 아이디어 공모 국내외 사례

- 유로판(EUROPAN) : 40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범(凡) 유럽의 건축설계경기로 당선작으로 선정되면 실제 설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 무국이 이를 지원함.
-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및 아이디어공모 시범사업 :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육성 및 공공건축물의 창의성 증대를 목표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45세 이하 신진건축사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설계공모와 아이디어공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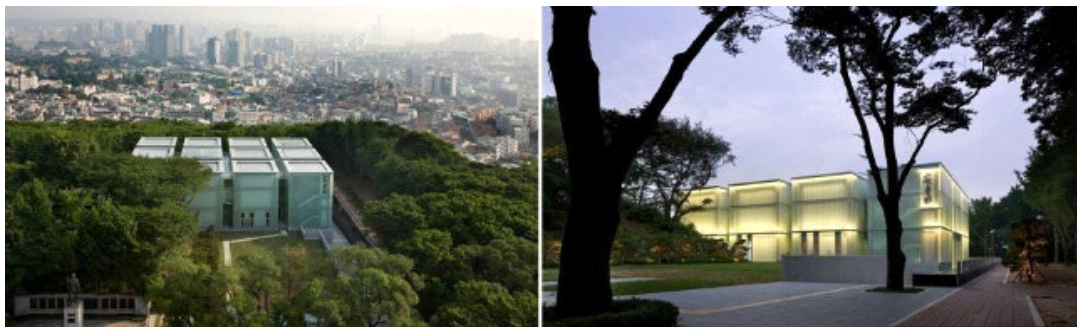
- 건축사 이외의 청년건축가(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예비건축가) 및 대학 재학생을 포함하는 시범사업
 - 목적 : 건축·도시 관련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건축이론 연구 및 디자인 연구, 국내외 건축 이벤트 및 전시회 등에 대해 청년건축가 및 재학생들의 연구 활성화를 지원
 - 대상 : 경상북도 소재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 공모전을 통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계획안의 확보 및 실시설계의 적용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및 교육적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 예상



[그림 5.13] 국토부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당선작

- 디자인 아키텍트(DA) 제도를 활용하여 기획 및 계획설계 단계에 청년건축가 및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실시설계 참여를 통해 산·관·학 프로젝트 진행
- (가칭)경상북도 젊은 건축가상 신설
 -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 활동을 한 우수 신진건축가를 위한 시상제도
 - 목적 : 현행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을 비롯한 각 기초 지자체의 지역 건축상 및 건축문화제 등을 활용하여 우수건축가를 실질적으로 발굴 및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혜택 : 건축상을 수상한 신진건축가에게 경상북도 자치단체 발주 공공건축물 기획단계나 지명설계경기 참여기회 제공 및 일정경비 지원, 수의계약에 의해 수주할 수 있는 혜택 부여,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운영참여 등 각종 건축 및 공공디자인 관련 프로젝트 참여 보장

- ※ 건축문화 선진국의 경우, 신진건축가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신진건축가에 대한 시상제도를 강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진작시킴
- 프랑스는 그랑 프로제(Grands Projets)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건축사를 적극 발굴
 - 네덜란드는 매 2년 단위로 AM NAI Prize(40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함)를 수여하고 이들 건축물을 건축기록관에 헌액 받아 국가의 건축적 문화자산으로 보존
 - 젊은 건축가상 : 2008년부터 새건축사협의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선정해오고 있는 상으로 45세 이하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뛰어난 신진건축가들을 해마다 3-5명씩 선정해 이들의 작품집을 내고 전시회를 개최
 - 신진건축가 대상 :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잠재력 있는 신인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고 건축설계업계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그림 5.14] 2010 젊은 건축가상 수상작, 안중근 의사 기념관

- 경상북도 지역 내 우수 신진건축가 홍보사업
 - 45세 미만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작품신청을 받고 우수작품 선정하여 포트폴리오 제작 및 배포 등 홍보 및 지원
 - 전시회 및 풀판, 웹페이지 전시 등을 통한 홍보와 프로모션, 해외 홍보를 위한 국·영문 작품집 제작 등 세계적인 건축 관련 단체와 인사들,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 및 추천
 - 건축지원센터, 건축디자인 아카데미 등을 추진기구로 활용

2)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①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방안 연구

-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지역 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현황조사

-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제도 모델 개발
-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대상, 선정 기준 및 자격 기준
-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정책
- 실행 계획
 - 실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계획 등

②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공공발주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발주 시 응모자격 제한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약식 현상설계공모 방식, 지역할당제 등의 제도를 도입
 - 약식 현상설계공모 방식 :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경우, 제출물(기본도면, 설계설명서, 매스모델 등) 간소화를 통하여 신진건축가나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 제안서 방식 : 가격입찰방식을 지양하고 설계자의 창의성, 기술력, 경험 등의 경력심사를 통한 우수 설계자 선정하는 방식
-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동기부여를 위해 당선작 이외의 2, 3등에게도 실질적인 보상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참여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지침과 심사방법 개선
 - 실시설계 비율제 : 당선작 및 우수작의 건축가에게 실시 설계권을 비율제로 공동 부여하는 방식
 - 실비 정산제 : 당선작 이외 2, 3위 입상자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디자인 아키텍트(Design Architect, DA) 제도 도입
 - 디자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회사의 규모가 작고 실적이 적은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우수한 건축가를 디자인 아키텍트(DA)로 참여시켜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 건축사 자격이 없는 신진건축가나 학생이 현상에 당선된 경우 건축사 자격을 갖춘 우수 건축가나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프로젝트 아키텍트(Project Architect, PA)로서 참여

③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건축현황과 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 도출 및 유형화, 산업체 현황 조사
- 지역별 건축·도시 관련 주요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도시 관련 전문가 인력명단(POOL) 및 관련 (중)소규모

산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중)소규모 산업체, 학계, 지자체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지역의 (중)소규모 산업체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활용

3)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역량 강화

① '건축산업역량강화를 위한 산.관.학 TF' 구축

- 목적 : 건축·도시 관련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내 건축전문가들의 역량을 높여 경상북도의 건축·도시 디자인의 품질 향상 도모구성
-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을 중심으로 지역 건축전문가 단체(건축학회,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등), 지역 소재 대학 등으로 구성
-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한 지역협의체 구성
- 역할 : 건축·도시 관련 새로운 아젠다(agenda)와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연구

②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산.관.학 TF'를 활용해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종류와 내용, 사업 단계별 방식, 교육의 대상과 참여 유도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 도출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 중앙정부의 관련사업 조사와 연계방안 도출
- 행정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업무지침 작성
- 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지원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 제시

③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 교육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실시
- 현행 건축사 보수교육 등과 연계해 교육시스템을 보완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적, 노하우 지원을 통해 성공 가능성 제고
 - 건축 관련단체 또는 기관이 단편적으로 운영해오던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지역특성과 환경에 기초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강화
 - 특히, 건축의 국가 정책과 관련된 거시적 변화에 대한 건축과 도시의 이해와 미래에 관한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전문가의 지속적 재교육 강화
- 시범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행정, 전문 인력, 재정,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마련

- 시범사업의 성공사례 도출과 홍보, 이를 통한 인식 확대,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
- 시범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후속 사업의 방향 설정

4. 세부과제 계획

실행사업	추진일정	사업구분	사업내용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연구	단기	연구	지역 내 우수한 신진건축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중기	제도	상기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수한 신진건축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현상설계공모 방식 등의 제도 개선
지역 내 우수 신진건축가 지원 시범사업	단기	사업	지역 내 우수 신진건축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신진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 및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신진건축가 건축상 시상, 우수 신진건축가 홍보 등)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방안 연구	단기	연구	지역 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육성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중기	제도	상기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육성하기 위한 현상설계공모 방식 등의 제도 개선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단기	사업	지역 내 (중)소규모 산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활용해 지원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역량 강화	단기	사업	건축·도시 관련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건축가들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전략

6 민간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방안 마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에 따른 건축의 가치 부각

-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문화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과 도시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짐
- 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을 통해 건축·도시 디자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마련됨

2) 기획업무를 중시하지 않는 현행 공공건축 조성체계의 한계

- 적합한 시설 프로그램 및 설계방향 등에 대한 초기 기획업무는 공공건축의 비용절감, 시설물 사용성 향상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현재는 건축·도시 관련 행정조직의 전문성 부족, 행정업무의 과다, 전담부서 부재 등으로 인한 부실한 기획내용으로 인해 지역여건이나 수요에 맞지 않는 과대과다 시설이 계획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 및 디자인의 질적 저하를 조래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건축의 기획을 수행하는 행정담당자들은 공공건축 기획단계에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시간부족,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기획업무 수행의 한계를 느낌
 - 공공건축 관련 업무들 수행하는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기획업무가 사업의 최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80.8%가 '높음'으로 응답하여 다수가 기획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업무로 국한되어 있는 기획업무의 영역을 정상화하고 디자인 가치 중심의 디자인 관리와 조정역할을 정착·운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자료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1차년도)

3) 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주도-행정지원' 프로세스 정착 필요

- 현행 공공건축 조성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도시 관련 행정업무의 전문성 확보, 공공프로젝트의 가치 제고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간전문가를 공공조직으로 포함하거나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9년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기준' 및 2010년 건설기술관리법의 기본구성 조항의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 기본구상 업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기획업무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변화가 시도됨
 - 2012년 국토교통부 국정업무 보고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지자체 공공건축가 지원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시범 적용을 통해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 기획행정 및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디자인 관리를 위한 공공건축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에서도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이 제시되었고, 영주시, 포항시 등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함



[그림 5.15] 영주시 공공건축가의 건축 수상작

4)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건축전문가의 역할 필요

-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려는 지자체의 경우, 건축·도시환경의 지역특성 반영 및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프로세스와 공공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
- 현재는 건축·도시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업에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역할 및 참여 기회가 제한되거나 소극적이어서 정체성이 결여된 채로 선행사업, 타 지역 벤치마킹, 사업 주체의 반복 등으로 인해 각 지자체의 건축·도시환경이 그 독창성을 상실함
- 따라서 지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건축·도시 디자인에 대한 주민 이해증진과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민간전문가들의 시민들을 위한 재능기부, 사회봉사, 건축·도시환경의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진 등 사회참여활동과 이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건설도시방재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2) 대상

-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제도 :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행정절차 및 조직, 지역 내 민간 건축전문가
-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 : 경상북도청, 권역별 4개 지자체(1개 지자체 시범운영)
- 지역 민간 건축전문가의 역할과 영역 확대 :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민간전문가의 활동 관련 행정조직

3. 정책과제

1)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활용체계 구축

①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 목적 :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 공공건축가로 참여시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도시디자인과 공간 환경의 공공성을 확보
- 역할 : 행정조직을 보완해 디자인의 전 과정을 계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발주능력 향상,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 예산낭비 방지
- 주요 업무
 - 경상북도 각 시·군의 공공건축물 조성 시 기획 및 계획, 현상설계,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디자인 관리 및 조정 업무
 - 경상북도 각 시·군의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사업 등 도시 관련사업의 수립·자문
 - 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한 디자인 파트너 역할
 - 지역재생, 마을 만들기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주도과 자문

②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연구

- 공공건축가 국내외 사례 조사
- 공공건축가의 모집분야, 선정 기준 및 자격 기준
- 공공건축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촉, 업무 및 역할 그리고 절차

- 업무의 수행방식
- 책임과 권한
- 업무 및 보수기준
- 실행계획
 - 실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등

[표 5.5]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구 분	총괄형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		
	영주시	포항시	프랑스리용	서울시	중앙정부	영국 Enabling
명칭	도시디자인 관리단장	디자인 전문위원	공공건축가	서울형 공공건축가	사업별 상이	Enabler
위치	시장직속, 외부민간 전문가	시장직속, 외부민간 전문가	도시개발부	외부민간전문가	외부민간전문가	외부자문위원
선정 기준	건축·도시·조경 설계 전문가로 국내외 건축사 자격 소지	건축·도시·조경 설계 전문가로 국내외 건축사 자격 소지	국가 공인 건축사, 경력 8년 이상	건축, 도시, 조경 설계 전문가	건축, 도시, 조경 설계 전문가	-
역할	기획, 자문	자문, 설계	사업총괄관리, 심의, 설계	자문, 설계	관리, 자문	자문
업무 범위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설계자문/중앙부처 사업 기획 지원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 총괄 검토/개별 프로젝트 설계디자인 자문	시립시설의 신축 사업 총괄 관리, 일부사업 직접설계, 설계안 심사	기본구상 참여/3억 미만 사업 설계참여/대규모 사업 총괄·조정/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건축디자인기준 설정	사업 역할별 상이, 총괄관리, 사업수행, 모니터링 등	디자인지침 적성, 현상설계 공모운영, 설계자 선정, 사업관리지원
보수 기준	위촉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위공무원 기준 급여	자문비 지급	자문비 지급	-
근무 기준	주2회 상근	상근	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③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인력풀 및 자문단 구성
 - 건축·도시·조경 등 전문분야별, 프로젝트 경력별, 지역별 우수 민간전문가
 - 경상북도 건축상 수상작가 및 수상경력이 있는 건축가
 - 경상북도 건축 관련 시니어 그룹
 - 경상북도 우수 신진건축가
-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범운영
 - 다양한 유형의 공공건축가를 지자체 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운영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의 디자인 전략을 세우고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담당하는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개별 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로 역할 구분

- 다양한 유형의 공공건축가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
- 이미 수행되고 있는 디자인 자문과 유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건축 조성사업 및 민간건축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

※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유형(예시)

① 총괄형 공공건축가(지자체 내의 행정조직 유형)

- 행정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자체의 건축 및 도시개발의 총책임자로서 공공이 발주하는 공공건축사업, 시범사업 및 도시개발 전체가 일관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수립,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개별사업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
- 지자체 내에 분산되어 있던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통합, 일반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기관장 직속의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여 민간전문가를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서울시), 디자인관리단장(영주시)이나 시정건축가(포항시)로 발령하여 디자인 행정업무 수행

②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지자체 내의 비행정조직 유형)

- 행정조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추진 부서가 주관하는 개별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디자인을 조정,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지자체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 혹은 복수 주체가 참여하는 대단위 건축·도시 프로젝트에서 각 주체들의 설계내용을 조정, 관리하여 도시공간 구조의 건축물들이 일관된 설계방향 하에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역할(MP/MA)
- 지자체 내 행정조직과 별도로 프로젝트팀(2-3인의 공공건축가)을 구성, 지자체가 발주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디자인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민간전문가를 프로젝트별로 위촉
- LH공사의 주거지 및 신도시개발사업,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에서 활용

③ 커미셔너(민간 전문가에게 사업의 전반적 기획을 위임)

- 설계입찰 등을 이용하여 개별 건축가를 선정하는 경우 생기는 디자인의 질 저하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커미셔너로 위촉하여 사업 전반의 기획과 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건축가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전체를 총괄하는 방식
- 설계자 선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위원회 방식과 현상공모방식에 의한 건축가 선정방식의 한계에 대한 실천적 대안
-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AP)

④ 건축지원센터+자문건축가(독립기관 위탁 유형)

- 지자체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건축·도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건축지원센터)에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수의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소규모 프로젝트 단위에 필요한 전문성 보완을 위한 자문, 직접설계참여 등을 요청
- 마을 만들기, 주민협정사업과 같은 주민주도형 또는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주로 참여
-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식이지만 지자체 조직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기관이라는 점에서 건축·도시 관련업무의 총괄적 관리기능 수행은 곤란
- 건축지원센터, 서울형 공공건축가

-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지침 마련
 - 공공건축가의 선정기준 및 자격기준 등의 근거 마련
 -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
 - 공공건축가의 구성 및 운영 내용 마련
 - 공공건축가의 업무 및 보수기준 마련
 - 공공건축가의 책임 및 권한 규정
- 경상북도 공공건축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정책 마련
 - 경상북도 공공건축가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명설계경기공모 또는 수의계약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설계발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전 부여
 -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홍보물, 작품집, 전시, 출판, 강연 등 연계사업 추진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교육 프로그램 등 참여 기회 보장

2)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설립

①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 목적 : 경상북도 내 건축·도시 민간전문가와 공공기관의 연대와 제휴를 통해 건축·도시 관련 정책의 실행업무와 지역 밀착형 건축·도시 환경 관련 서비스를 지원역할
- 기획업무 및 설계수행 과정에서 공공건축가와 행정담당 사이에 협의를 중재하는 역할
-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지원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역할
- 건축 민원 및 디자인에 대한 상담과 지원
-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상시적인 건축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만들기, 지역 가꾸기 등 지원 : 건축·도시환경 조성사업의 최종 사용 주체가 되는 지역 주민과 시행 주체가 되는 공공 및 시공자가 건축·도시환경 조성 목표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주민들의 자발적 건축·도시 환경 개선 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에서부터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별 전문가 연계까지 지원함으로써 협력적 행정지원 기구로 활용

②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설립 및 운용방안 연구

- 건축지원센터 관련 국내외 운영사례 조사
- 건축·도시 관련사업 주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연구

- 건축지원센터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 건축지원센터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수요조사
 - 건축지원센터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의견조사
 - 기초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센터의 성격 유형화
- 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화 방안
 - 건축지원센터 법제화 방안
 - 건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 근거 마련
- 지역별로 상이한 건축·도시환경에 따른 지역별 민간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방안
 - 지역별 교육, 전문 인력 지원, 컨설팅, 행정지원 등 프로그램 연구

[표 5.6] 해외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체계 비교

구분	영국 CABE	프랑스 MIQCP	미국 PBS
설립위치	총리산하 독립적 정부기관	독립적 정부기관	연방정부 조달청 국가서비스국 소속
개요	공공건축물 및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인식되는 사업에 대한 독립적 자문기구	공공건축물 발주과정 및 절차개선 장려기관	공공건축물 조성, 임대 및 유지관리 업무
조직유형	외부자문형	외부자문형	중앙부처 내부자문/사업관리 복합형
공공건축가 및 행정전문가 운영	- Enablers. 디자인리뷰 패널 및 지역대표 약 400인 - 민간 전문가 활용 - 행정기관 내 디자인 고문 선정	- 총 49인의 민간 건축 컨설턴트 관리운영 - 프로젝트 참여 전문인, 총괄기획자, 대표 선정 - 발주기관은 법적대리인 선정	- Design Excellence 제도를 통해 국가건축가 임명 - 전문가 평가단 운영 - 건축직, 행정직 모두 포함 - 지역프로젝트 매니저 선정
필요 운영인력	- CABE 설립 초기 총 행정인력은 5인 Enabler는 약 10인 - 2010년 조사 총 행정인력 125인	- 설립 초기 총 12인 - 현재조직과 유사	- 본부 및 지역사무국 총 7,005인 근무
총 운영비용	약 2천9백만 파운드(약 320억원)	약 30만 유로(약 4억 7천만 원)	약 9천1백만 달러(약 1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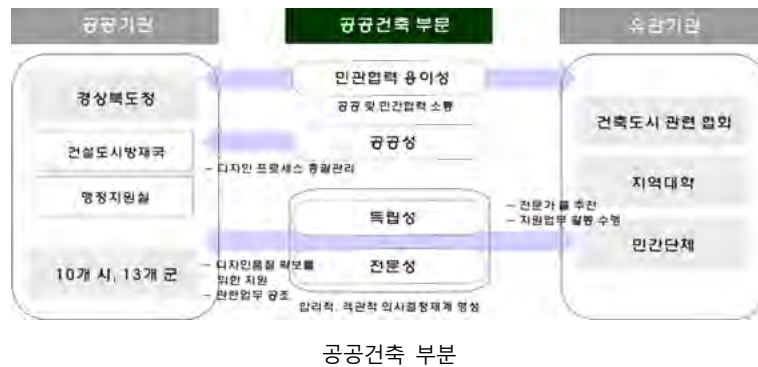
③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 조직구성
 - 최소 상근인력과 다수참여인력(자문건축가) 체계로 운영
 - 지자체 내의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외에 공공건축가, 전문적인 건축·도시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담당할 지역 건축가, 최소한의 연구인력, 문화콘텐츠 전문가, 지역복지 전문가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
 - 자료수집과 기본적인 업무 내용은 해당지역 자원봉사자, 건축전공 학생 등을 활용
- 운영방안
 -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의 담당업무를 공공건축 부문과 민간건축 부문으로 이원화 하여 단계적 설치 및 운영

※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설치(예시)

1단계 : 공공건축 부문 - 공공건축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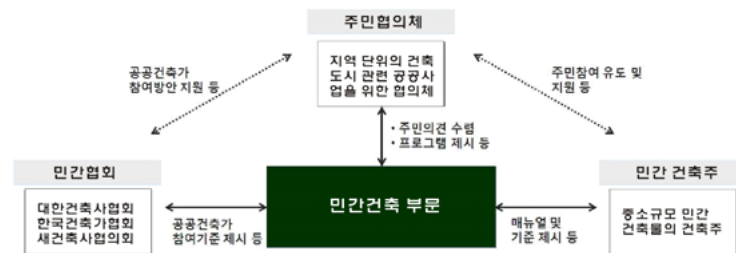
- 공공건축 조성 관련 행정업무의 통합과 전문성을 보완한 공공건축 총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
- 공공건축가 운영조직으로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며, 단계별로 분리·독립된 공공건축의 조성·정를 통합하고 총괄하여 전담
-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및 조성
-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체계적 유지·관리 지원
- 전문가 및 행정 등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지침 및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역할 수행
-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와 협력하고, 각 시·군에 구성된 TFT 업무의 지원 및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수행



공공건축 부문

2단계 : 민간건축 부문

-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안목과 인식을 향상시켜 공급자 위주의 사업방식 개선
 - 지역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축 관련 민원업무의 대행, 행정서비스의 일괄지원 및 기술지원 : 건축·도시 관련 민원사항 수집/검토 및 각종 관련제도 개선, 민원상담
 - 건축심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규모 민간 건축물의 디자인 및 구조 수준을 제고하고 양질의 건축·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디자인 및 구조 검토 지원, 디자인 및 구조개선 지원
 -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시설관리·주민갈등·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실시
 - 건축·도시 프로젝트 지원제도(안) 도입
- : 건축, 도시설계, 조경 등의 수준 높은 환경과 보다 잘 디자인된 공간을 계획하기 위하여 민간 건축주에게 디자인이나 기획 단계의 초기에서부터 자문을 실시하는 제도



민간건축 부문

- 지역의 성격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구성하고, 기존에 시행중인 지원센터(녹색건축지원센터 등)와 연계
 - 지자체의 공공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풀을 공유하고, 업무 노하우에 대한 교류 등을 통해 협력하며, 프로젝트별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내에서 지원
-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 경상북도 내 4개 권역별로 1개 지자체에 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1개 지자체 시범운영
 - 경상북도 차원 또는 수요가 높은 시·군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 : 건축지원센터 시범사업 지역 공모, 지역별 시범사업 대상 선정
 - 경상북도 차원의 시범사업 및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효과를 부각시키는 계기 마련
 -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사례 및 모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확대 적용 검토
 - 시범사업 운영결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용역 발주 및 시행

3)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영역확대 지원

① 경상북도 지역 민간전문가의 역할 확대 방안 마련

- 건축·도시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의 시행에서 경상북도 지역 민간전문가의 참여기회 확대
-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공공건축가 제도 참여기회 확대
-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참여제고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의 건축·도시 관련 현안에 관한 지역 내 민간전문가들의 연구발표 지원책 마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 확대
- 경상북도 지역 대형 사업의 설계를 경상북도 이외 지역의 업체가 주관할 경우 지역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자문 제도화
- 지역별로 상이한 건축·도시환경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역별 민간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마련

② 지역 내 건축·도시 관련 전문 인력의 산·관·학 협동체계 구축

- 목적 : 지역 내 건축·도시 관련 민간전문가, 학계, 공무원 사이의 산·관·학 협동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의 건축·도시 분야의 활성화 추진
- 역할 : 디자인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건축주에게 디자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주선하

여 도움을 주고, 다양한 방면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디자인을 통한 혜택과 건축 문화 발전 도모

- 조직구성 : 건축·도시 관련 민간전문가, 공무원, 학계를 대상으로 전문가 인력풀 구성
- 운영방안 : 지역 내 건축·도시 관련 전문 인력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교류를 위한 온·오프라인의 장(場) 마련

③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사회활동 참여 강화

- 경상북도 지역 건축·도시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 및 전문가 등의 재능기부, 사회봉사, 대민지원을 위한 체계구축
- 소규모 건축물, 신고건축물 등에 대한 디자인 개선, 공사 등 자문 역할 확대
- 민간 건축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지원센터(안)를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인력 활용 방안 마련

4. 세부과제 계획

실행사업	추진일정	사업구분	사업내용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연구	단기	연구	민간의 우수한 건축전문가를 공공의 건축·도시 관련 분야에 참여토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도시 디자인을 향상시키려는 제도에 대한 연구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중기	사업	상기의 연구를 바탕으로 건축전문가의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건축·도시디자인의 품격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시행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단기	연구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각 권역별·지역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 진행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설립 및 시범운영	중기	사업	상기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건축·도시 관련 전문 인력의 산·관·학 협동체계 구축	중기	사업	지역 내 건축·도시 관련 민간전문가, 학계, 공무원 사이의 산·관·학 협동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지역의 건축·도시 분야의 활성화 추진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사회활동 참여 강화	단기	사업	지역 건축전문가와 시민의 소통을 통해 지역 건축전문가의 재능기부, 사회봉사, 대민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전략

7 건축문화 관련 자료구축 및 보관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인식 향상 필요

- 건축·도시 분야의 사회적인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수행 주체가 다변화되고 관련 분야에서 요구되는 디자인 품질 자체가 현저히 높아짐
-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뒷받침하고, 다양한 정책주체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기록관리 체계가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

2) 현행 건축도시 관련 기록 및 정보의 관리 시스템 미흡

- 건축기본법의 취지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건축디자인을 통하여 다루는 것이므로 이에 활용되는 건축자료의 종합적인 DB의 구축이 필요함
- 현재 건축도시 분야에 대해서 전문연구문헌 자료 DB(AURIC)는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정보(공공사업, 건축물, 설계공모, 전문가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현재 아카이브 관련 사업은 대부분 관련법을 통해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건축분야의 아카이브 역시 관련 법령에 대한 재.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 자료에 대한 혜택과 특정한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강제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역사문화자료와 근현대 건축자산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며,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서 제외된 건축자산에 대한 기록 확보가 필요함

3) 건축자산의 유형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과 활용 수준 향상 필요

- 건축자산을 조성시기, 분류체계, 지정유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함
- 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문화자산은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반면 비지정 문화재인 건축문화자산은 전통건축, 근대건축, 현대건축의 형태로 산재하여 현재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근현대 건축자산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여 건축유산의 자산가치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근대건축물이 멸실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함.

- 따라서 기존의 문화재에 한정된 관심을 벗어나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건축문화자산을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법을 통하여 복원 및 관람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4) 경상북도의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필요

- 경상북도 내에는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있는 건축자산 이외에도 역사의 흔적이자 지역 역사 환경의 구성요소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옥, 근대건축물, 기념비적 건축물 등이 산재하고 있음
 - 안동 한옥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역사유적지구, 포항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 따라서 경상북도의 역사적·지리적 특색을 파악하고 건축·역사·문화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미래에도 계속하여 축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틀을 구축함으로써 경상북도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지역 내의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근대건축물의 경우 자치단체의 관광자원으로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이들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전략과 정책을 추진 중임
- 이를 위해 건축문화자산의 가치 증대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됨
- 특히, 건축문화자산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건축자산과 도시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을 통한 기록사업을 실시하여 건축·도시환경이 경상북도의 지역성을 표출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04년 경상북도는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보고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를 발간하였으나, 건축적 정보는 미흡하고, 2004년 조사 이후 별도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조사하지 않아 한계가 있고, 현재 멸실된 유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조사가 불가피함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문화체육관광국, 건설도시방재국

- 원도심 재정비, 신도시 조성, 농어촌 개발 담당부서 등

2)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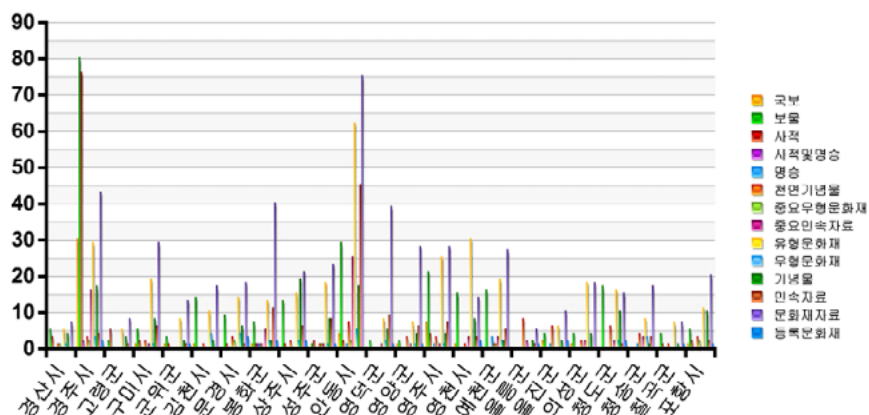
-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근현대 건축자산과 도시환경을 비롯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유한 지역

3. 정책과제

1)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①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방안 연구

-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건축역사문화자산의 조사 및 발굴, 선정기준, 보전방식과 활용범위 마련
-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경상북도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사업의 연차별 계획과 달성목표, 구체적 과업 설정
 - DB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DB 구축 기준, 주제, 분류방식 수립
 - DB 구축과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시군의 공감대 형성 및 협조유도를 위한 교육과 홍보방안 마련
- 건축역사문화자산의 통합적 연계 관리 방안 마련
- 실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그림 5.16] 경상북도 문화유산 현황

②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 전통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건축역사문화자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
 - 경상북도 지역의 역사적·지리적 특색이 담긴 건축역사문화자산의 체계적 DB 구축
 - 건축역사문화자산의 기본정보에서부터 관리체계까지의 전반적 내용을 DB로 구축하여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경상북도 건축역사문화유산 관리 시스템 구축
- 소수의 문화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건축문화 관점에서 의미 있는 건축역사문화자산 전수 관리
- 건축역사문화자산을 다양한 디지털 기법을 통하여 복원 및 관람의 편의성 확보
- 효과적인 관리와 기록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 전통건축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DB 구축 시범사업
 -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조사된 건축역사문화자산 기록을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
 - 역사·문화·관광·교육과 연계한 종합적 자료 DB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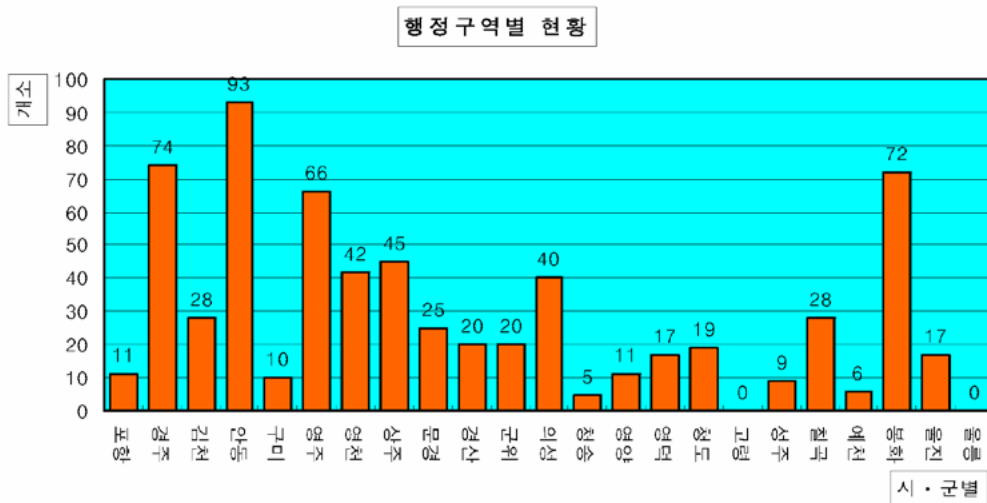
[표 5.7]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유형별, 행정구역별 분포 현황

분류별 지정·비지정 통계																									
구분	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건축물																									
교육시설	7	1	1	1				1					1							1			1		
종교시설	36			2	4	2	1	1	4	3	2	2	5	1		1	1		1	3		1	2		
업무시설	53	2	9	7	3		1	3	2	2	1	2	5			3	4			2	1	6			
집회시설	3				3																				
의료시설	6				1				2								1			1	1				
산업시설	56	1	2		10	1	2	3	3	3	4	1	4	2	3	3	2		1	2	2	3	4		
숙박시설	7		1		2		2		1						1										
주거시설	145	2	21	1	35		24	16	3	1	5	4	6		1	1	5		2	5	1	9	3		
기타	5	1					1	1	1														1		
소계	318	7	34	11	58	3	31	25	16	9	12	9	21	3	5	8	13	0	4	14	5	19	11		
산업구조물																									
철도·급수탑	6		1		1		1	1				1					1								
교량	172	1	27	10	10	4	12	10	20	11	7	10	13			4	1			6	1	24	1		
터널	65	1	4	4	7	1	9	3		1			4				2			3		26			
댐	0																								
기타	4		4																						
소계	247	2	36	14	18	5	22	14	20	12	7	11	17	0	0	4	4	0	0	9	1	50	1		
생활문화유산																									
건축물	37		2	2	11		13		7	1			1												
염전	0																								
기타	0																								
소계	37	0	2	2	11	0	13	0	7	1	0	0	1	0	0	0	0	0	0	0	0	0	0		
역사유적																									
소계	16	2	1					2	1	1	1				1		1			3			3		
인물유적																									
생가	20		1		4	2				1			1		3	2	1		3			2			
거주지	2									1						1									
활동근거지	6				1									1	1	1			1			1			
기타	12			1	1			1	1					1	1	1			1	2			2		
소계	40	0	1	1	6	2	0	1	1	2	0	0	1	2	5	5	1	0	5	2	0	3	2		
합계	658	11	74	28	93	10	66	42	45	25	20	20	40	5	11	17	19	0	9	28	6	72	17		

2) 근현대 건축물 자료의 종합적 DB 구축

① 근현대 건축물 및 산업시설물의 자료 DB 구축 방안 연구

- 근현대 건축물 및 산업시설물의 자료구축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근현대 건축문화자산의 조사, 발굴 및 보존방식과 활용범위, 선정기준 및 분류방식 마련
- 근현대 건축물 및 산업시설물의 자료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경상북도 근현대 건축물 자료의 DB 구축 사업의 연차별 계획과 달성목표, 구체적인 과업 설정
 - DB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DB 구축 기준, 주제, 분류방식 수립
 - DB 구축과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시군의 공감대 형성 및 협조유도를 위한 교육과 홍보방안 마련
- 실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경상북도 도내 많은 시.군의 구도심부에는 근대기에 건축된 서양식 또는 일본식 건축물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음



[그림 5.17] 행정구역별 근대문화유산 조사 수량(658건)

② 근현대 건축물 및 산업시설물의 자료의 DB 구축

- 경상북도의 근현대 시기를 아우르고 건축 및 도시적 관점을 포함하는 공간환경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조사·발굴을 통해 통합적인 기록체계 구축
- 건축문화유산의 범위를 마을, 가로, 도시조형물 등으로 확대하여 우수 공간환경에 대한 별도조사 실시

-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포함하는 건축문화 자료의 발굴과 축적
- 관련된 자료, 신문기사, 도면 등 역사 기록과 증언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기록 자료를 조사에 포함
- 결과물로서의 건축물만이 아닌 지어지는 과정 등 유무형의 건축기술도 포함한 종합적 디지털화를 통해 교육과 기술의 전수까지를 종합적으로 접근
- 자료구축의 범위는 일제 시대의 건축문화자산을 포함하는 근대시기의 개념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현대시기의 시대적 구분을 하여 그 특성에 따라서 구축 및 관리
 - 경상북도의 건축산업과 건축가, 명소 등에 대한 발굴과 보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04년에 작성된 기존자료는 1960년대 이후까지 정리하고 있으나 1960년대 이후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기록 자료가 미비하므로 추가조사를 통한 보완 필요
 - 현대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상 수상작 및 공모전 수상작 등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미래에도 지역의 건축문화자산이 새롭게 창출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DB 구축
- 도시와 농촌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대한 건축자료 DB의 종합적 구축
 - 도시 및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경상북도의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건축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축
 - 도내 시.군을 아우르는 도시.농촌 연계형 건축문화자산의 발굴과 축적
 - 건축물 토지이용, 용도, 공공시설, 역사적 변천 등을 담은 건축도시환경 관련 정보들을 구축하여 도시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사업 추진과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
-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산업화.현대화 시기의 연관 건축문화 기록축적
 - 경상북도 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사실을 충분히 활용하여 산업화 및 현대화의 기초가 된 새마을 관련 건축문화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구축 및 관리

[표 5.8] 경상북도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연대별·행정구역별 분포현황

구분	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총계	658	11	74	28	93	10	66	42	45	25	20	20	40	5	11	17	19	0	9	28	6	72	17	0
개화기~ 1899	25		1		5					1			1	1	5	3	1		4			3		
1900년대	11	1				3		1									2			3			1	
1910년대	7	1	1		1				1					1			1						1	
1920년대	26	1		3	3			4	4	1		1	4		1				1	3				
1930년대	284	3	60	13	39	5	24	21	23	6	14	13	18	1	4	5	10		4	12	4	1	4	
1940년대	128	2	9	7	19	1	27	13	6	4	5	4	10			4	3			3		7	4	
1950년대	164	3	3	5	22	1	14	3	10	10	1	2	6	2	1	4	2			5	2	61	7	
1960년대 이후	13				4		1		1	3			1			1				2				

③ '경상북도 근현대 건축가 아카이브' 기획 및 시범사업

- 경상북도의 건축문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 경상북도 출신의 주요한 건축가들이나 공모전 수상작의 원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 건축가와 수상작 자료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자료의 확보방안 마련
 - 건축가 자료 기증 및 공모사업을 통해 자료 수집
 - 건축·도시분야 공공사업, 현상공모 수상작, 건축상 등 수상작 자료 수집
- '근현대 건축가 아카이브' 기획 및 시범사업 실시

3)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방안 수립

①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

-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활용모델 개발
 - 건축역사문화자산 DB 자료 활용계획 수립
 - 근현대 건축물 및 산업시설물 DB 자료 활용계획 수립
- 건축물 자료의 DB를 통한 역사·문화·관광·교육의 연계방안 수립
- 후세대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전문가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 홈페이지, 포털 및 앱 활용 등을 통한 정보이용 극대화 방안 마련
 - 첨단기술을 응용한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활용방안 마련
 - 경상북도문화재 사이트(<http://www.chis.go.kr/>) 활용
- 신규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와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활용모델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②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경상북도의 정체성과 지역성 도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경상북도 23개 시·군별 정책, 지침, 조례 등의 현황조사를 통해 건축물과 역사문화적 자산의 활용에 필요한 규정 및 지침 정비
 - 경상북도 내 문화 관광산업과 연계가 되도록 건축문화자산 활용 규정 정비
 - 건축물 및 역사문화관광과 연계되는 건축문화 자료의 종합적 운영지침 수립
 - 건축기본계획 관련 시범사업의 경우 건축문화자산 DB 자료의 구축과 활용 의무화
 -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재정비 사업 진행시 자산가치 및 본래의 형태뿐만 아니라 건물이 가지고 있던 상징적 가치의 보존과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료구축 의무화
 - 건축문화유산 소유자, 거주자, 이용자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자료구축을 통해 건축문화자

- 산 밀집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발생할 경우 기존 DB자료를 활용하도록 의무화
- 마을 아카이브의 사례로는 광고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발간한 '저감보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종로구 창신정비구역(피맛골)의 재개발 이전 모습을 공간 아카이브로 시범적으로 구축한 사례,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는 마포구 아현동의 민속학보고서 등이 있음
- 건축문화자산 DB 자료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운영지침 수립
 - 자료의 수집, 정리, DB 구축, 활용을 위한 구축 및 유지관리의 지침
- 보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 문화재 등록 추진
- 지역성을 대변하거나 지역 발전 축을 형성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 시범사업 실시
 - 문화유산의 성격을 갖지 않더라도 지역의 상징성, 심미성 등을 지니는 우수공간을 발굴하여 기록자료를 구축하고 보존
 - 건축문화자산 주변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향후 지역 발전 축을 형성하거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 주변의 현황 및 기록자료 구축
- 전문가나 시민들이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자료의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Archive)로 구축

③ 통합 건축문화정보 지도 제작

- 건축문화자산 조사 및 자료구축과 연계해 경상북도의 통합 건축문화정보 지도 제작 및 홍보
- GIS 정보를 통한 지도기반의 건축문화자산 DB 구축, 관리 및 활용
- 경상북도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건축자산과 함께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종택, 고택 등 향토 역사의 종합적 건축문화자산의 발굴 및 보존 가능
- 무형의 문화자산과 상호연계를 통한 실용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간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 DB자료를 사용자 관점에서 접근하여 건축, 역사, 문화,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DB구축 및 활용을 통해 관광부터 학술적 접근까지 계층적으로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 경상북도 내 건축문화자산과 지역별 유무형의 관광명소를 연계한 통합적 정보망 구축
 - 상대적으로 덜 홍보된 마을을 발굴하여 건물별, 마을별 지도 만들기 등 DB를 통한 홍보 및 관광수익 창출 그리고 건축기본계획을 통한 지역마을 활성화 및 지역재생과 연계
 - 기존의 경상북도 관광자원과 인접 또는 연접한 콘텐츠 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을 통해 연계 가능한 모든 건축자산과 통합 정보망 구축
- 건축문화자산 정보구축에 따라 건축지도 제작을 위한 콘텐츠 구성 및 제작

- 건물 유형별, 테마별, 지역별, 역사적 사건별, 관련 인물별, 타 장르와 연관, 교통수단별 등 다양한 주제로 기획 및 제작
- 스마트폰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온라인상에서 경상북도 건축문화자산 활용과 홍보 강화

※ 건축정보 지도 제작 국내사례

- 경기도 건축지도 작성(출처: www.g-archimap.kr)
 - 2011년 수립된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핵심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개인, 건축사, 법인 등이 건축물 또는 건축명소인지 자유로이 판단하여 웹사이트에 공개추천하고 경기도청의 심사를 통해 우수건축물 및 건축명소 선정
 - 31개 시·군에 산재한 우수건축물 및 건축명소의 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경기도 건축지도 책자 발간, 인터넷, 스마트폰 앱 개발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도민에게 제공
 - 공개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완공된 근현대 건축물(단일 건축물) 및 공간환경(건축물의 집합, 또는 장소 등) 중에서 건축적 또는 그 장소적 가치의 품격과 품질이 우수하여 지역건축자산으로서 홍보, 기록, 보존, 교육, 활용 등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 건축물 및 건축명소
- 전라북도 건축이야기 지도 공모 사례
 - 전라북도에서는 시민건축학교 주관으로 건축이야기 지도 공모를 2013년 시작
 - 집으로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담긴 이야기를 공모하는 취지는 건축기본법의 취지대로 공간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며, 건축이야기 지도는 교육자료, 답사자료, 기록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
 - 사회구성원들이 건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도시 건축디자인의 전반적인 품격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생활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을 계획하기 위하여 민간 건축주에게 디자인이나 기획 단계의 초기에서부터 자문을 실시하는 제도



[그림 5.18] 국내 건축 정보지도 제작 공모사례

- 서울건축 가이드북 / 서울건축 문화지도
- 서울시는 시내에 소재한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대 건축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하는 '서울건축 가이드북'(사진)과 '서울건축 문화지도'를 발간
- 가이드북과 문화지도는 서울의 건축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미 있는 건축물들을 선정해 소개하는 안내서와 투어 지도
- 서울건축 가이드북'은 전통과 근대 그리고 현대 등 서울을 대표하는 총 380여개의 건축물을 선정해 수록했으며, 함께 발간된 '서울건축 문화지도'에는 서울시의 의미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건축과 도시가 어떻게 어우러지며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며 체험할 수 있도록 10개의 투어 코스를 개발해 수록
- '서울건축 가이드북'과 '서울건축 문화지도'를 통해 서울시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미래의 건축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그림 5.19] 서울 건축정보 사례

4.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추진일정	사업구분	사업내용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방안 연구	단기	연구	-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을 위한 기초 계획 수립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중기	사업	- 전통건축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 DB 구축 - 역사문화 관광 교육과 연계한 종합적 자료 DB 의 구축과 활용 - 건축역사문화 자산의 통합적 연계 관리 방안 수립 -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범 사업 및 모니터링
근현대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DB 구축방안 연구	단기	연구	- 근현대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DB 구축을 위한 기초 계획 수립
근현대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DB 구축	중기	사업	- 시군을 아우르는 도시농촌연계형 건축문화자산의 발굴과 축적 -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포함하는 건축문화 자료의 발굴과 축적 - '경상북도 근현대 건축가 아카이브' 기획 및 시범사업 - 건축문화자산 조사 및 자료구축과 연계해 경상북도의 통합 건축문화정보 지도 제작 및 홍보 -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범 사업 및 모니터링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 방안 연구	단기	연구	- 건축물과 역사 문화적 자산의 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단기	제도	- 건축문화자산 DB의 구축 활용 규정 정비 - 실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시범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전략

8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국민의식 성장에 따른 건축·도시의 질적 향상 요구 증대

- 현재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뒷받침할 정책적 부재로 인해 건축과 도시디자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거나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으로써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건축·도시계획 및 설계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건축·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상식과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건축문화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함

2) 건축·도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 건축·도시의 공공성 측면과 공간적·문화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양상이 오랫동안 고착화 되면서 건축·도시에 대한 인식 전환에 많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건축·도시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경제적 대상' 혹은 '기능적 대상'에서 '일상의 문화'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건축문화의 직·간접적인 체험과 교육 등을 통해 좋은 건축, 좋은 도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참여가 필요함
- 따라서 건축·도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물리적, 내용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일반인이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해 건축문화 체험 교육의 장을 일반 시민으로 확산 필요
 - 현재 건축·도시 교육프로그램이 건축 관련 학회, 건축사회, 건축가회 등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전문가와 공무원의 단기성 및 일회성 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교육프로그램 또한 초청강연, 특강 등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의 성과를 통한 정책개발, 사회의 필요성, 전문가의 실력 향상,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도가 낮음

3) 지역적 특성과 맥락이 반영된 건축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건축·도시디자인 분야의 저변을 확대해 경상북도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사용자로서 도민 스스로 생활환경을 가꾸고, 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대상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함
- 경상북도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우수 건축·도시 관련 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의 건축·도시 관련 기록물 관리, 정보공유, 교육지원 등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추역할을 할 기반 구축이 필요함

4)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전담기관 및 조직 필요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서 기록, 전시, 연구, 교육, 교류 등 다양한 건축문화 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개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각종 건축문화 관련 사업을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전담조직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민간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은 대체로 자율적·일시적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자체적으로도 건축문화 진흥 활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나 조직이 필요함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건설도시방재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경상북도 교육청

2) 대상

-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문화자산이 존재하는 경상북도 시·군 지역
- 경상북도 건축·도시사업 관련 부서 및 지역의 관련 교육기관

3. 정책과제

1) 복합적인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①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리모델링) 필요성

- 목적 : 문화·관광·교육 기능이 복합된 건축디자인 전시관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경상북도의 건축문화 확산 추진
- 역할
 - 경상북도민, 건축·도시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에게 지역의 건축·도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류,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센터
 - 건축·도시 사업과 건축문화에 관한 도민의 관심 및 이해증진, 참여 유도
 - 도민을 위한 건축·역사·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
 - 건축 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위한 지속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자료의 제공(아카이브) : 현재 생산되는 건축디자인 기록 자료의 미래 활용성 증대
 - 도내 도시와 농촌지역의 다양한 분포를 감안하고 문화적 수준 및 지원의 격차를 감안하여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역할
- 주요 업무
 - 경상북도의 건축·도시 관련 기록물 정보의 축적 및 관리, 활용, 홍보
 - 세미나 및 건축·도시 관련 전문 강좌 개최, 정보수집 및 분석과 제공 등의 콘텐츠 제공
 - 지역의 건축·도시 및 역사관련 전시물 전시
 - 건축·도시 관련 기술·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관련정책의 실행업무를 지원
 - 경상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건축문화 관련 행사 및 사업 등의 차별화 및 통합적 운영을 위한 지원

②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 건축 및 도시 관련 전시관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타 지자체의 건축박물관 건립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별 장단점 분석
-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수요조사
 - 건축디자인 전시관의 기능과 역할 설정을 위한 의견조사
 - 건축디자인 전시관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의견조사
 - 건축디자인 전시관 설립 유형에 따른 적정성 조사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관련 아이디어 발굴
 - 건축물 및 공간환경적인 건축디자인 전시관의 기능에 더하여 지역적 특색을 추가한 문

화, 관광, 교육의 복합적 기능 추구

- 도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발굴
-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
 - 건축디자인 전시관 법제화 방안
 - 건축디자인 전시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방안 기본계획 수립

③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색이 담긴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 건축디자인 전시관의 기능을 건축적 관점에 국한시키지 않고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조직구성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경상북도 내의 담당부서 지정 또는 신설
 - 경상북도 주도하에 각 지역별 건축문화자산을 통합·관리하는 조직 구성
 - 조직구성 방식은 우선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방식 검토 및 추진
- 운영방안
 - 건축박물관 등의 단순하고 단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각종 정보와 통계자료 등의 취합 및 정보제공, 지역 건축·도시 정보의 통합관리와 건축·도시정책 홍보 등을 목표로 프로그램 구성
 - 건축·역사·문화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학문적·전문적 접근과 함께 도민의 지역 재생 및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제고를 함께 고려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운영
 -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근현대 건축물 및 산업시설, 현대건축 관련 자료 등 종합적 건축자료 활용
 - 도민 중심의 방문객 및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재방문을 하고 관련 지자체의 발전과 공생할 수 있도록 관광과 교육을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 : 도민을 위한 문화, 관광, 교육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운영으로 체험 극대화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을 위한 설계공모전 실시
 -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새로운 시설의 건립보다는 기존 산업시설 등의 리모델링을 통한 전용 전시관 마련을 위한 설계공모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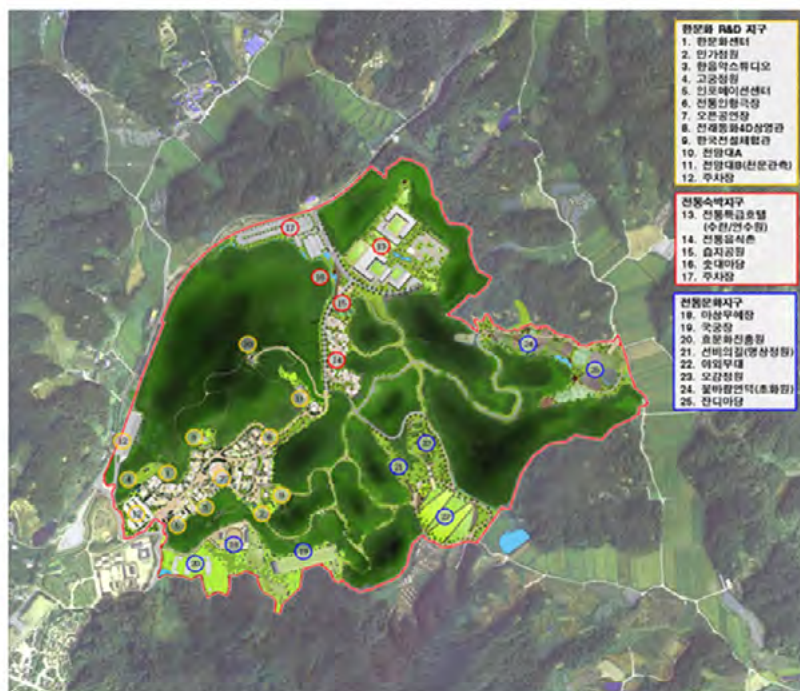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운영 및 모니터링
 - 경상북도 전역의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업데이트 및 지속적인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5.2.3.의 '건축문화 관련 자료구축 및 보관'과 연계
 -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유교, 신라, 가야 관련 3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

2) 콘텐츠 중심의 지역건축문화 체계화 및 전파

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건축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확산

-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역사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체계화
 - 역사 문화적 콘텐츠(옛날이야기) 중심의 지역별 건축문화 스토리 발굴
 - 전통문화의 고장으로서 새로운 마을별 건축물 스토리의 체계적인 발굴
 - 건축물 중심의 건축 관련 역사적 기술을 보다 확대하여 건축물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계화
 - 지역별 전통문화와 연계한 역사문화 스토리와 건축물의 연계 및 체계화
 - 지역의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이 살던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바탕으로 체계화
 - 지역별 건축문화적 명소의 발굴
- 전통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건축역사문화의 홍보
 - 문화재, 고택, 종택을 연계하는 마을이야기와 건축문화의 연계 홍보
 - 발굴된 지역·마을별 이야기와 연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증진
- 경상북도의 다양한 역사문화사업과 연계 전략 추진
-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
 -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의 30대 선도프로젝트
 - 유교, 가야, 신라문화권과 자연행태권의 융합사업으로 추진 중
 -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안동, 영주) : 한국문화의 의식주를 테마로 설정한 한국형 테마파크
 -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 : 3대 공간 구성 - 세계화 산업화, 생활화 공간조성사업, 세계 유교문화박물관 건립
 - 서라벌 문화예술단지(연희테마단지) 조성
 - 화랑설화 테마(영천), 신화랑 복원 재현(경산), 화랑정신 발상지 (청도)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

- 고령 대가야 문화권 사업 : 고령 회천변 일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 경주문화엑스포 사업과 연계
 - 실�크로드 사업과 연계
 - 이스탄불-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 영주 효(孝)문화 진흥원, 선비문화축제 등과 연계
-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 등 대형 사업과 전략적 연계
- 포항 동빈내항 운하사업, 청도반시 브랜드화와 같은 경상북도 지역의 건축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화 전략
- 전통한옥 개보수 등 체험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바탕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 건축역사문화 지역별 스토리의 통합적 관리방안 수립
 - 통합 지역별 스토리 건축문화지도 제작
-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그림 5.20] 한국문화 테마 파크

② 콘텐츠 중심의 국제적이고 대표적인 건축문화 행사 개최

- 현재 경상북도 내에서 건축문화 관련 행사는 '경상북도 건축문화제'가 열리고 있으나, 아직은 출범 초기(2009년 시작)여서 행사의 내실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여 건축문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 유발 필요

- 기존 '경상북도 건축문화제'를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건축·도시 행사로 활성화 추진
- 경상북도의 경우 풍부한 건축문화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건축문화 행사를 개최해 다른 국가나 지역의 건축문화 행사와의 차별화 시도
- 기존 건축·도시 관련 행사에 축제와 이벤트를 가미하고, 테마와 프로그램 등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통해 경직된 이미지가 아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제 모색
- 건축문화 강국으로 불리는 세계의 주요 나라들은 국제적인 건축행사를 통해 선도적인 건축실험·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도시이미지 제고 및 건축디자인의 브랜드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의 많은 지역에서도 지역 건축 산업 홍보 및 도시 이미지 제고, 건축디자인 경연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건축문화 행사 개최하고 있음.
-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장소 등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 지원방안 검토
 -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운영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예산 확보
 - 기존에 활성화된 각 시·군의 지역 축제와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을 연계하여 콘텐츠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경상북도 차원에서 총괄하여 시·군의 지역축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계 마련
 - 타 시도 건축 관련 행사와의 연계·교류를 통해 경상북도 내 뿐만 아닌 전국에 경북의 건축문화를 알리는 건축 전문행사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이러한 지역기반의 건축문화 행사와 교육·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건축·도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상북도 건축문화의 가치를 일깨우며, 장래의 건축·도시 분야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
 - 건축문화제가 건축인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일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의 기회로 활용
 - 경상북도 건축문화제를 통해 대학교 건축 관련 학과 및 기성 건축가, 신진건축가 등 지역 건축인의 정보교류 및 축제의 장으로 활용
 - 경상북도 건축·도시 환경의 특성을 발굴하고 이를 건축문화제의 중심 테마로 활용하여 경상북도 지역성 형성

3)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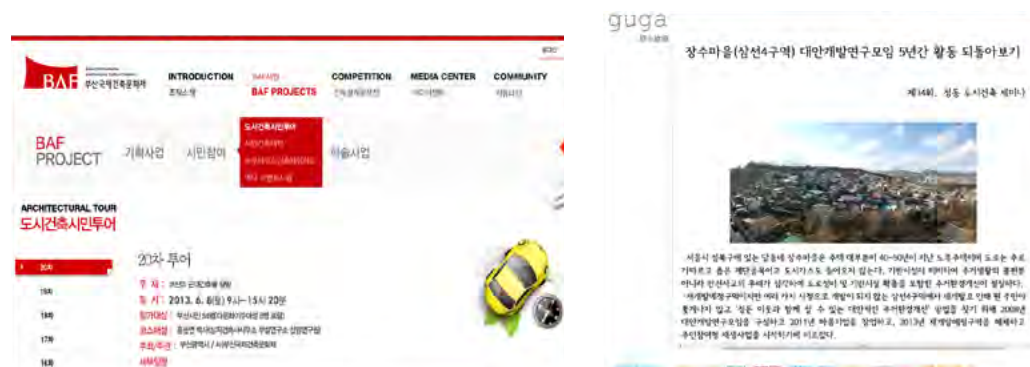
①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 해외 및 타 지자체의 시민 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정책
 - 문화진흥 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 수립 및 규정의 정비
- 건축문화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실행계획
 - 실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진흥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계획
 - 산학 협력형태로 교육과정 운영 신청을 받고, 도가 선별하여 도민건축대학으로 공인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

※ 타 지역의 시민대상 프로그램 사례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관련 시민참여 사업 사례 : 도시건축시민투어
 - 부산시는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주관으로 시민 60명을 모집해 전문가 해설과 함께 부산의 도시, 건축을 탐방하는 '제22차 부산도시건축 시민 투어' 실시
 - '2013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작 탐방'을 주제로 부산의 아름답고 우수한 건축물 견학
 - 시민건축대학 프로그램 운영사례
 - 바우하우스 체험 건축학교
 - 마을만들기 대회
- 2005 나도 건축가 / 2006 푸른집 푸른 마을만들기 / 2007 바다가 보이는 마을만들기 / 2008 기억을 담은 마을만들기
- 건축UCC 영상 공모전



[그림 5.21] 국내 시민대상 프로그램 사례

- 정동 도시 건축 세미나
- 2009년 5월 1일 <자하문 길 주변지역의 도시건축 적응유형연구> 를 시작으로 매월 세미나를 개최
- 주로 서울 그리고 우리 도시에 누적된 역사 문화 생활 환경에 대한 실천적 연구와 작업을 선별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 발표할 연구와 작업의 선택은 한국 예술종합학교 우동선 교수와 구가 건축의 조정구 소장이 맡고 있음

②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도민대상의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경상북도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발전 도모
- 일반도민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건축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상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
- 건축문화의 세분화된 현대, 근대, 전통, 문화재의 분류별 교육 콘텐츠의 개발
 - 경상북도의 건축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 교육 및 지원
- 시·군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도민을 위한 건축도시 인문교양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등학교 대상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현장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초·중·고등학교주말 특별활동에 건축도시 관련 기초 교육프로그램 및 건축교육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유도
 - 지역의 건축 관련 행사, 지역 건축지원센터, 건축디자인 전시관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청소년 대상 건축디자인캠프 등 기초 건축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민 건축대학운영 및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관련 교재개발·보급 등을 통한 저변확대
 - 건축 관련단체 또는 기관이 단편적으로 운영해오던 건축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도민건축대학으로 종합화
 - 건축디자인 전시관, 건축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 공간 및 프로그램의 운영
 - 기존의 지역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시·군민회관, 주민 센터, 마을회관 등의 프로그램과도 연계 운영방안 검토
 - 지역 내 전문단체 또는 지역 소재 건축 관련 대학과 협력하여 산·학·관 협력 방식으로 시민건축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건축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건축 실무 전문가의 수준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병행
 -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추진

4.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추진일정	사업구분	사업내용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건축 및 운영방안 연구	단기	연구	- 도민들에게 경상북도 건축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문 화·관광·교육 기능이 복합된 건축디자인 전시관의 건축 및 운 영을 위한 연구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건축 및 운영	중기	사업	- 건축디자인 전시관 운영 - 건축디자인 전시관 모니터링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건축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확산	장기	사업	-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역사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체계화 - 전통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건축역사문화의 홍보 - 건축역사문화 지역별 스토리의 통합적 관리방안 수립 - 경상북도의 다양한 역사문화사업과 연계 전략 추진 - 전통한옥 개보수 등 체험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바탕으로 체 험 프로그램과 연계
콘텐츠 중심의 국제적이고 대표적인 건축문화 행사 개최	장기	사업	-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행사의 내실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여 건축문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 유발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단기	연구	- 건축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 인 도민대상의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기	사업	- 건축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 인 도민대상의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범 사업 추진, 모니터링

12전략별 정책과제

3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

- 9. 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디자인 관리방안
- 10. 민관협력 사업의 관리 및 지원방안
- 11. 주민참여 기구의 설립 및 운영 지원방안
- 12.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전략

9 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디자인 관리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디자인 가치 중심의 통합된 계획·관리체계의 필요성

- 건축·도시환경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조성되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됨
-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단순행정 중심으로의 업무진행, 디자인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발생
- 건축·도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도시환경 조성 전 과정(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서 디자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중심의 계획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 바람직한 도시공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 도시, 조경,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토목, 전기, 기계 등 관련 엔지니어링과 시공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자료 : 이광영(2007),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세미나 자료집

[그림 5.22] 소관기관과 부서가 각기 다른 가로시설물 현황

2) 건축·도시 관련 사업은 장소단위의 총괄적 사업 관리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도시관련 공공사업은 지역의 특성 및 경관 등에 적합한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능성, 경제성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

-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에서 도시계획과 건축설계가 분리되어 진행됨으로써 건축물과 도시 환경이 통합된 장소 지향적 설계가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
 - 2차원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이후에 블록별·필지별 건축설계업무가 수행됨으로써 건축과 도시가 일체화된 도시공간의 조성이 어려운 실정
 - 3차원적인 마스터플랜과 공공공간에 대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 되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설계'로서의 기능이 부족
- 지자체 행정조직 내부의 수직적 업무체제로 인한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업무간 연계시스템의 미비
- 건축물과 도시지역을 포함한 지역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분야의 총괄적 관리가 요구됨



자료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 정책보고서

[그림 5.23] 부처별 개별적 사업추진에 따른 시너지효과 미흡 사례

3)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행정조직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

- 생활환경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경관법, 건축기본법 등이 제정되면서 건축·도시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한 행정 수요가 늘어남
- 실무자들의 단순행정 중심 업무로 인해 관리의 효율성 및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순환보직에 따른 지식축적 미흡으로 인한 한계 발생

- 경상북도 내 지자체중 포항시와 영주시는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대응 조직이 미비 되어 있음
- 경상북도와 일부 지자체에서 디자인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직 공무원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역량과 전문영역에 따른 편차, 실행절차 등의 문제점과 한계 발생
- 경상북도 차원에서 조직과 인력 등을 구비하여 이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초지자체들이 조직을 갖추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함

※ 포항시의 시정건축가와 테라노바팀

- 포항시는 2007년부터 포항시의 명품 도시와 선언이자 도시의 얼굴바꾸기 사업으로 '포항=철강=산업화=공해' 공식의 포항 이미지 탈피를 시도하고, 50만 인구에 근접한 절박한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운영
- 테라노바의 어원은 라틴어의 땅과 대지를 의미하는 Terra와 새로운, 새로운 별을 의미하는 Nova의 합성어로 테라노바 프로젝트는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주된 요소인 건축물, 교량, 공원 그리고 가로들과 같은 가로시설물에 문화예술적인 면과 지역적인 정체성을 부여하여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같은 배경으로부터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테라노바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시정건축가로 위촉해 포항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에 대한 총괄적 검토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테라노바팀의 테라노바 담당관은 행정집행력의 확보를 위해 부시장 직속으로 선임함



자료 : 포항시청 홈페이지

[그림 5.24] 포항시 행정조직도와 테라노바담당관의 위계

※ 영주시의 공공건축가와 디자인관리단

- 영주시는 2009년부터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근거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시 2010년부터는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디자인 관리단을 운영함으로써 건축·도시관련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와 도심재생 용역과 관련한 총괄 조정을 담당토록 하고 있음
- 지자체 내의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여 운영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지자체에 적합
- 업무수행을 위해 많은 수의 행정공무원을 참여시킬 수는 없으나 업무의 독립성, 효율성, 주민의 참여도 면에서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건축·도시 환경의 전반적 수준향상에 따른 디자인 가치 구현 수단으로서의 지침 필요

-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진행절차 개선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
-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경상북도 전역의 일관성, 통일성 유지와 경상북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의 통합관리 및 단계별 기준과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필요

5)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실행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

- 건축기본계획의 충실한 실행을 위한 조직체계로서 경상북도와 하부지자체 간의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사업들은 여러 부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으로 실국사이의 의견 조율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
- 경상북도 산하의 시·군 중 건축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 전담 부서가 설치된 시·군 부재
- 현재 경상북도 시·군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물 대장관리, 건축 인·허가, 용도 변경과 같은 건축 행정업무가 주요 업무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의 사업을 담당
-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행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시·군의 건축문화행정은 조직체계의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군의 행정체계기반 구축에 대한 방안이 필요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관련부서간 기능 통합을 위한 관련부처 및 기존 디자인 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건설도시방재국

2) 대상

-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및 활용
-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조례 개정 및 제정

3. 정책과제

1)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① 경상북도 전역에 걸친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경상북도 시·군의 지역적 특성 및 주민요구 등을 고려한 종합적 건축·도시디자인 관리체계 수립방안 연구
- 경상북도 건축·도시환경의 통합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건축·도시관련 총괄관리 조직정비방안 구상
- 기초지자체의 건축·도시관련 행정조직의 현황에 따른 조직정비방안구상
- 건축·도시 관련사업 총괄관리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 관련 전문가 참여를 위한 전문가구성 및 운영방안 구상
- 건축·도시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통합 관리업무 전담 팀의 시범운영

② 건축·도시 디자인 업무통합화 방안 마련

- 도청 및 시·군 관련 부서들의 인식 조사, 민원 내용 분석을 통한 필요성 검토, 업무 통합화에 적합한 직제개편(안) 제시, 직제개편 이후의 상황 시뮬레이션 시행
- 각 시·군의 다양한 행정조직 체계를 고려한 여러 유형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리 프로세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시·군의 지역적 특성 주민요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건축물과 도시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건축·도시 디자인 관리시스템을 도입·시행

③ 건축기본계획의 실행조직으로서의 근거 마련

- 정비된 행정조직을 통한 건축기본계획의 실행조직으로서의 근거부여
- 건축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한 경상북도와 기초지자체간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

2)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 수립 및 활용

①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 수립

-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 마련
- 광역차원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으로 경상북도 직할사업이 준수해야할 지침의 수립
- 시·군의 건축디자인 관련사업 수행시 준수해야할 주요 내용을 규정
-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방향 제시

②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 적용한 시범사업 실행

- 경상북도/시·군/민간건축물 등 서로 다른 주체유형의 시범사업의 실행을 통해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③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 적용 평가 및 모니터링

- 건축·도시 관련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된 건축디자인기준을 적용,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의 실시
 - 국가 건축디자인기준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의 관계 및 성격의 설정
 - 건축기본법 제21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 건축디자인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지역 건축디자인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광역건축디자인기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은 국가 건축디자인기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 법률과 지방정부조례가 갖는 관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국가 건축디자인기준은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으로 공식화된 상태이므로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은 이 범위 안에서의 적합성이 고려되어야 함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의 성격은 경상북도에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디자인(기획, 설계, 개선)할 때 준수해야 할 업무체계와 수행절차, 그리고 디자인의 목표를 규정한 기준으로서 경상북도내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경상북도, 공공

기관, 민간에게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함

- 또한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은 통상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설계지침처럼 특정건축물이나 공간환경에 대해 형태·재료·색상 등의 물리적 디자인 내용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는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디자인 범위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 계획·설계를 발주하는 방식을 정하는 기획 업무 단계에서부터 이후 계획·설계·시공·사용 및 유지관리단계에 걸쳐 각 업무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각 업무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의사결정 및 업무진행절차를 규정하는 기준이어야 함

3)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조례 개정 및 제정

①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조례 개정 연구

- 경상북도 내 건축·도시 관련사업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위원회 등의 현황조사
- “건축법”, “국계법”의 이원적 관리체계에서 “경관법”, “건축기본법”의 추가제정을 계기로 일관된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실행방법 등에서 명확한 관계의 설정
- 상기 법률에 의한 경상북도 조례나 위원회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복관계 개선

[표 5.9] 기존 도시 내 공공공간 관련 계획 업무 및 제도와 심의위원회간의 관계

업무내용				관련 설계용역	디자인 리뷰	공간환경의 결정			
						공간 구조	공적 공간	시설물	경관
도시전반의 공간환경 기획 및 관리	도시 전체 계획 및 관리	도시기본 계획수립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보전, 공원녹지, 경관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위원회	●	●		●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역지구 지정, 기반시설계획, 도 시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위원회	●	●		●
		도시경관 계획수립	도시전체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경 관형성계획	경관계획	경관위원 회	●	●		●
		각종 기반시설 정비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하청정비기본계 획, 보행환경개선계획 등	(해당계획)		●	●		●
	국지 적 환경 정비 · 개선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 공원, 하천, 광장, 공공공지,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 위원회	●	●		●
		지구단위 계획수립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건축선, 경관 등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위원회	●	●		●
		도시계획 시설 설치 및 정비	도로, 공원, 하천, 광장, 공공공지,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	●		●
			고가차도, 육교, 방음벽 등 도로(부 속)시설물	시설물 설계·제작	(디자인 위원회)	●	●		●
		각종 특정환경 개선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계획·설계	(자문회 의)	●	●	●	●
		가로시설물 종합관리	시설물디자인 종합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자문회 의)		●	●	●
		도시·건축 관련 법제운영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도시디자인 조례, 경관조례 및 각종 지침 제 개정 및 운영			●	●	●	●
개별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주택사업 및 건축물 건축	공동주택 사업승인, 개별건축물 건축허가	건축설계	건축위원 회		●	●		●
	가로시설물 설치·정비	지자체 소관 시설물(벤치, 휴지통, 가로등, 가로수 등)	가로시설물 설계·제작	(디자인 위원회)			●	●	●
		기관별 독자설치 시설물(경찰청, 한전, 지하철공사 등)	(표준설계)	(디자인 위원회)			●	●	●
	옥외광고물 관리	간판 등	광고물 디자인·제작	광고물 위원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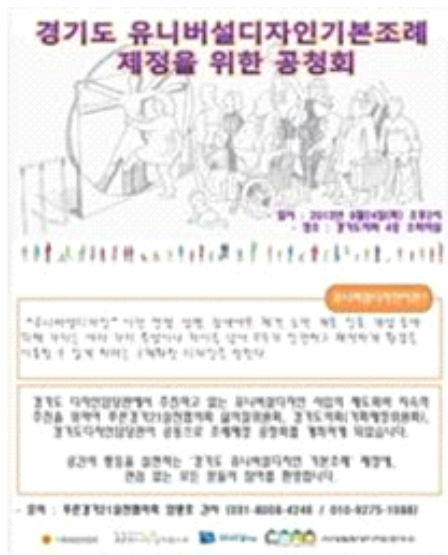
자료 : 박인석(2008), 지속가능한 공간환경디자인 토론회 자료집 참조 재작성

[표 5.10]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지침 현황 (2013년 6월 기준)

지역	기본 계획	조례	가이드 라인	업무 지침	합계	지역	기본 계획	조례	가이드 라인	업무 지침	합계
본청	3	12	1	0	16	김천	1	1	1	0	3
포항	1	2	1	0	4	영주	0	3	2	0	5
구미	5	1	3	0	9	상주	0	0	0	0	0
경주	3	3	1	1	8	영천	0	0	0	0	0
경산	1	1	0	0	2	문경	4	1	0	0	5
안동	3	2	3	0	8						

②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조례 제정(안) 연구

- 경상북도 건축·도시관련 조례의 신규제정 및 기존 지침들과의 연계방안 연구
 - 공공디자인 조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등 보다 나은 건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내에 신설되어야 할 조례에 대한 검토
 - 또 다른 규제로서의 제도적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경상북도 내 기존 자치법규 및 지침들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



[그림 5.25] 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 공공디자인 조례사례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과 운영조직의 제도적 위상 확보방안 연구
 - 행정조직의 정비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의 지속성 및 실행력의 담보를 위한 일정수준의 강제력을 갖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
 - 조례나 규칙과 같은 자치법규 제정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정비된 행정조직 및 건축디자인기준의 실효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

4.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추진일정	과제구분	과제내용
경상북도 내 건축·도시관련 총괄관리 조직정비방안 구상	단기	연구	- 경상북도 내의 건축·도시 관련부서의 현황에 적합한 총괄관리 조직의 제안
기초지자체의 건축·도시관련 행정조직의 현황에 따른 조직정비방안구상	단기	연구	- 시·군 내의 건축·도시 관련부서의 현황에 적합한 관리조직 정비방안의 제안
경상북도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단기	연구	- 경상북도와 시·군 조직의 연계체제 구상을 통한 경상북도 전역의 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건축·도시 디자인 업무통합화 방안 마련	중기	연구	- 정비된 경상북도 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하에서 시·군의 다양한 행정조직 체계를 고려한 여러 유형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리 프로세스 모델 개발 및 보급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수립	중기	연구	- 광역차원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으로 경상북도 직할사업이 준수해야할 지침의 수립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중기	사업	- 경상북도/시·군/민간건축물 등 서로 다른 주체유형의 시범사업의 실행 효과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의 실시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조례 개정 연구	중기	연구	- 경상북도 내 건축·도시 관련사업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위원회 등의 현황조사를 통해 조례의 내용이나 위원회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복관계 개선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조례 제정(안) 연구	중기	연구	- 경상북도내 건축·도시관련 지침들의 연계방안 연구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과 운영조직의 제도적 위상 확보방안 연구

전략

10 민·관협력사업의 관리 및 지원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정비사업 방식의 한계

-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등 장기적 경제 불황상황의 지속
- 단발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들의 실효성 문제 대두
- 원주민이나 기존 세입자와의 의도와는 무관한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부터 초래된 사회적 마찰 등 기존에 드러난 사업방식의 문제점
- 경상북도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업성 결여로부터 기인하는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방안의 부재
-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



[그림 5.26]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방식의 한계상황의 대두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방식의 필요성 대두

- 단일주체의 개발보다는 다자간 협의에 의한 민관협력 개발방식 활용에 대한 필요성
- 공공의 측면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의 활용이 가능, 민간의 측면에서는 양질의 토지 및 사업물량의 확보가 가능
- 주민 측면에서는 생활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기성시기까지 재정비에 있어서 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민관협력 사업의 형태로 진화되는 추세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민관협력 사업의 성격으로 공공이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총괄사업관리자제도 등을 들 수 있었으나 2013년 도시재생법의 시행과 더불어 다양해지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민관협력형 방식의 확립이 필요함

- 효과적인 기성시가지의 정비 및 재생을 위해서는 민·관·주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기구를 설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적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지만 사업의 위험도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를 꺼리는 사업이나 수익성을 낮추어서라도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공적기구의 직접 개입이 사회적 의의가 명확하고 효과적임
- 공적기구는 도시재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3) 공익형 민관협력 사업방식의 확립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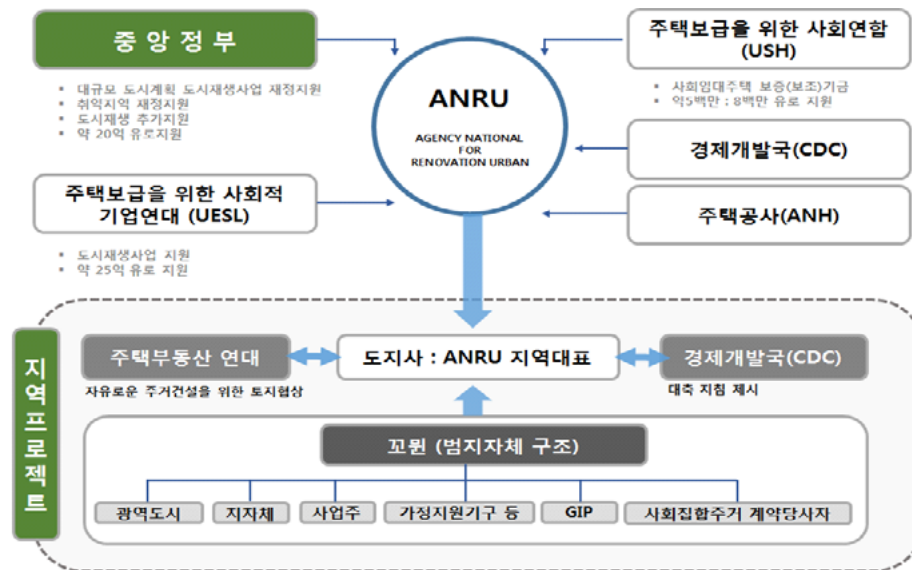
- 전세계적으로 공공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민간부문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을 도입하고 있음
- 영국의 재무부 산하 민관협력 전담부서 PUK(Partnerships UK), EP(English Partnerships), 프랑스의 민관협력 기구 ANRU(Agence Nat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 스페인의 NDL(Neighbourhood Development Law) 등 서구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개발사업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림 5.27] 영국 PUK의 홈페이지



[그림 5.28] 프랑스 ANRU의 홈페이지



자료 : 이영은(2013), '도시재생특별법과 도시발전' 세미나 발표집 참조 재작성
[그림 5.29] 프랑스 민관협력 전문기구 ANRU의 업무연계도

- 일본의 경우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부의 보조금과 무이자 차입을 자본으로 하는 MINTO는 공공시설정비 비용의 일부에 대한 무이자대출과 사업시행자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을 지원함
- 국내에서는 수익추구형 민간 PF사업은 물론 공공 공모형 PF사업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
-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에 따라 과거 수익 추구형 민관협력 방식은 퇴조하고 개발 이익 환수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익과 사익의 절충을 고려하는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사업방식의 확대

※ 일본의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MINTO

- 1987년 '민간도시개발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협력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공공단체를 위한 지원책 : 지역만들기 과제의 정리 및 검토, 마을만들기의 구상 등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코디네이트, 공평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참가 유도(설계 등), 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에 의한 협의회 등의 설립 및 운영, 국유지와 공유지의 활



[그림 5.30] 일본 MINTO의 홈페이지

용과 처분방법의 검토, 민간용지를 구입한 방재공원의 정비, 밀집 시가지개선의 검토와 사업 협력, 역 앞 광장의 정비와 도로 확폭 등 공공시설 정비의 검토, 상점가 및 중심 시가지 활성화의 검토, 국가 보조금과 출자금의 도입 검토

- 민간사업자를 위한 지원책 : 다양한 토지활용의 상담, 마을만들기나 구상만들기 등 초기 단계에서의 코디네이트, 공공단체와의 조정 및 협의, 도로 등 공공시설정비의 검토, 도시재생기구가 시행하는 재개발에 민간사업자로서의 참가, 도시재생기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검토, 도시재생기구의 토지 임대를 통한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국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출자금의 도입 검토, 민간사업자가 건물정비를 시행하는 지구의 기반정비,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에서의 전체사업 코디네이트

[표 5.11] 국가별 민관협력 사례 특성 비교

구분	사업목적	민관협력 도입목적	토지 소유권	주요실행 주체성격	사업관리 주체	이익 배분
독일 림	공항 이전적지재생	사업비용 절감, 공익 확보	조건부민간매각 + 공공용지 소유	시, 주정부은행 등 공공	시정부, 대행 업체 MGR	일정부분 정부환원 조건부
프랑스 라 바슈느와르	쇠퇴지역 도시재생	협업 체제구축, 공익 확보	부분 민간 매각+공공용지 소유	중앙 전담기구 ANRU	ANRU	ANRU 주도하 재배분
영국 GMV	오염된 산업용지의 재생	사업 기간단축, 공익 확보	유상장기임대 +매각	중앙 전담기구 EP	EP	공공임대수입
일본 미나미 아오야마	노후 공공주택의 복합개발	사업비용절감, 민간 자금 활용	민간장기임대	SPC	도쿄도	MINTO , 공공임대 수입

자료 : 이영은외 1 (2011), 해외 공공주도형 민관협력개발 사업구조 분석, 참조 재작성



일본의 MINTO를 통한
미나미 아오야마 잇초메 지구



영국의 민관협력 개발사업 중간협의체
EP가 시행한 그리니티 밀레니엄 빌리지

[그림 5.31] 해외 민관협력 개발사업 사례 - 1



독일의 MGR이 시행한 림



프랑스 ANRU가 주도한 라 바슈 느와르 지구

[그림 5.32] 해외 민관협력 개발사업 사례 - 2

4)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사업방식의 지원책 확립 필요성

-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등 장기적 경제 불황상황의 지속에 따른 민간의 위축된 사업의지의 회복을 위한 공공의 지원책 수립 필요
- 경상북도의 여러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민관협력 모델개발과 연계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을 배경으로 주민참여형 지역재생 방식과의 제도적 연계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핵심전략 1. “서민친화적 생활건축사업”과 연계, 성공적 실천 및 지원전략으로서의 사업방식 및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투자유치본부, 건설도시방재국

2) 대상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민관협력 사업 모델 개발 및 적용

3. 정책과제

1)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① 민관협력 총괄조직 신설 혹은 정비

- 총괄관리조직은 신규 주거지 형성에 따른 구시가지 및 상권에 대한 영향, 신주거지 자립성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의 총량 관리, 사업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등 총괄 관리 기능을 수행
- 총괄조직의 신설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최소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의 집중지원을 통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로 할 수 있음
- 2013년 6월 제정, 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괄조직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민관협력 기금의 신설

- 원활한 민관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공공성 확보 및 불안정성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방안을 검토
-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현실로부터 2013년 6월 제정, 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산과 연계하여 검토

③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사업을 위한 가이드스 마련

- 기존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개발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방관하는 구조로 추진되어 왔음으로 인하여 경기 불황과 함께 바로 사업이 좌초되는 현실을 맞고 있음
- 또한 지방의 경우에는 사업성을 이유로 민간의 자본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음
- 지방정부가 민관협력개발 사업방식의 도입여부 결정부터 적절 공급 규모 검토, 기관간 책임성 있는 협의 등 사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스를 마련하여 민관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2)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민관협력 사업 모델 개발 및 적용

① 경상북도형 민관협력 사업모델 개발

- 공모형 PF사업은 그동안 민관협력 개발사업의 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보다 다양한 민관협력 개발사업 방식을 선도적으로 검토

[표 5.12] 국내 기존 민관협력 사업방식별 구분

	공공총괄형	토지임대형	부분 매각형	토지완전 매각형	
토지사용방식	임대/매각	임대	일부 매각	매각	매각
별도회사에 공공지분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없음
주요사례	-	동부산관광단지, 동남권 물류 단지 등	송의 운동장 U-City홍보관 등	광교, 성남, 판교, 아산 배방, 은평 뉴타운 등	경제자유구역, 해운대관광리조트, DMC 등

- 민관협력 방식의 적용 여부 판단기준은 공공 단독시행과 비교하여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모델 수립 필요
- 공공의 비용절감 뿐 아니라 도시쇠퇴나 사회적 배제 등의 사회 및 경제적 문제 해결을 기하며 민관협력 방식을 도입
- 경상북도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통해 지역이 재활성화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간과 일자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검토

② 경상북도형 민관협력 사업모델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구축된 경상북도형 민관협력 사업모델과 개선된 제도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
- 경상북도의 지역적, 건축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

4.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추진일정	과제구분	과제내용
민관협력 총괄조직 및 민관협력 기금 신설에 관한 구상	단기	연구	- 경상북도내의 모든 시/군에서 일어나는 전체 민관협력 사업들을 총괄적인 조정과 관리 - 경상북도내의 민관협력 사업들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지원기금의 설치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사업을 위한 가이드선 마련	단기	연구	- 민관협력개발 사업방식의 도입 여부 결정부터 적절한 공급 규모 검토, 사업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가이드선의 마련
경상북도형 민관협력 사업모델 개발	단기	연구	- 경상북도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보다 새로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구조의 개발
경상북도형 민관협력 사업모델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중장기	사업	-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사업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 개선된 제도와 개발된 사업모델의 적용

전략

11 주민참여기구의 설립 및 운영 지원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정주지의 자율적인 관리체계 필요성 증대

- 민간주도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 의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서 지속적으로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주도의 지역 재생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 주도 재생 사업의 필요성 인식
- 사업 제안에서부터 주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사업 후 유지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사업 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 고취 및 지역성 발굴

2) 도시 및 농촌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인식 증대

- 지속적인 주거지 관리와 행복한 정주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및 농촌에서의 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한 필요성 인식
- 건축 및 도시 환경 개선사업에서 이용자 및 주민들이 계획 수립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 도시 및 농어촌에서 쇠퇴가 심한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에 시행되어 온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필요



[그림 5.33] 포항 살고싶은 농촌마을만들기사업



[그림 5.34] 영주 주민생활문화 복지지원센터

3) 경상북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21C형 새마을운동과 연계 방안 필요

-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상북도는 현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뉴새마을운동은 주민 자율로 지역실정에 맞는 마을(그린, 해피, 스마트 새마을 중 선택)을 선택하고, 마을대표자를 중심으로 마을가꾸기 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운동 성격을 가지므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필요
- 경상북도에서는 마을단위의 '뉴새마을가꾸기' 사업을 뉴새마을운동의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새마을회에서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993개 마을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21C 새마을 운동 "뉴새마을 프로젝트"

뉴새마을 프로젝트는 살고 싶은 새마을 만들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마을지도자 양성, 대학생 새마을 해외 봉사단 운영, 인터넷 새마을운동 인프라 구축, 새마을운동 국제화, 통일에 대비한 북한 새마을운동 지원, 새마을 명장 지도자 육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4) 경상북도 내 각 지자체는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도시만들기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중

- 김천시
 - 남산동 시범마을사업' 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았음(2008년), '남산동 시범마을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남산동 시범마을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가 정비 및 거리 정비 사업을 2년 동안 시행하였음
- 포항시
 - 살고싶고 찾고싶은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을 시행하였음(2011)
- 영양군
 - 자조적 마을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경제, 경관, 문화, 환경 분야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6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77억 5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대학을 운영하고, 마을리더교육,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으로 주민 의식 개선



[그림 5.35] 김천 남산동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그림 5.36] 영양 마을만들기사업

• 영주시

- 경상북도 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시행 중 대상인 두산마을은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일원에 위치하며 60,093㎡면적, 42가구로 유지 보전형의 사업으로 마을기반 정비, 주택개량 및 신축, 마을경관 정비, 신재생에너지, 공동생활 홈 신축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 초기부터 주민 스스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를 기획하여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홍보 및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림축산부에서는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 순창, 경북 영주(두산마을), 충남 서천, 전남 진도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기존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주로 기초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위주로 지원하였지만 '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은 주민 스스로 주택을 신축, 개보수하고 정부는 공공시설, 기초인프라를 통합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마을 통합 개발방식을 적용 함.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시행되며, 농림축산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주민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시행

5) 주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 필요

- 유사한 형태의 주민참여 프로세스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시행 중이므로 도 차원의 균형적 추진전략 마련이 요구됨
-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여전히 기획단계에서 기본 방향이 결정된 후 주민공청회나 공람에 의한 형식적 논의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절차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실제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 발생
- 건축 도시 환경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간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시범사업의 성공 사례를 홍보 및 교육하여 주민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 필요



[그림 5.37]영주 참사랑주민복지센터



[그림 5.38]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의 소통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국, 건설도시방재국

2) 대상

- 마을만들기 통합시스템 구축 : 경상북도 산하 23개 시·군의 개별적인 마을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주민참여 방식과 주민 교육 사업기준 주민조직체 효과적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확대

3. 정책과제

1)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①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연구

-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에서 주민주도형 사업 혹은 주민참여사업의 현황 및 지역별 계획을 조사 및 분석하여 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주민참여 모델 개발
- 선진사례의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현황조사, 연계사업과 지원체계, 참여 방식, 지역 여건 등을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건축 도시 관련 전문가집단과 주민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식

②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실행

- 주민참여를 지원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들 간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에 대한 제도적 정비 마련
- 행정지원방식의 내용과 절차, 관련 법령 유형화
- 주민참여형 지역 재생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장려

③ 주민참여 프로세스의 유형화 및 모델 개발

- 사업 추진 단계와 지역 여건 등을 기준으로 주민참여 프로세스 형태를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특징적인 몇 가지 참여 형태를 모델화 하여 제시
- 조직체계 및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④ 공공건축물 설계와 유지관리에서의 주민참여 가능한 제도적 정비 방안 모색

- 공공건축물의 기획, 계획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주인의식 고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모색
- 특히 마을 단위사업 실행시 커뮤니티 건축물 신축 혹은 리모델링 계획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계획과정에 참여를 유도

2)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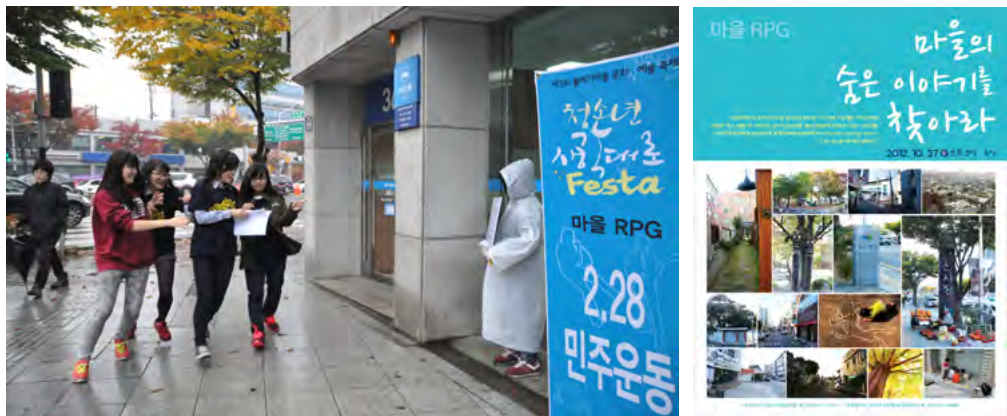
①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 및 주민교육 확대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만들기 리더 양성
- 생활의 터전으로서 건축 도시 환경의 중요성과 생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주민 역량 강화
- 건축 및 공간 환경 조성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마을 만들기 관련 및 건축 문화 교육을 제공하여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

- 농촌지역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주민 교육 확대
- 기존 농촌 마을사업, 어촌 마을 사업, 새마을 운동과 연계하여 기존 조직과 리더를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교육을 통해 통합 마을리더 양성
- 마을만들기 전문지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지역 내 관련 사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개발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모범사례까지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
- 전문가, 시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교육 커리큘럼 제작
- 주민참여 사업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그림 5.39] 청소년 대상 마을RPG 프로그램

3) 주민 참여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① 도 차원에서 주민참여사업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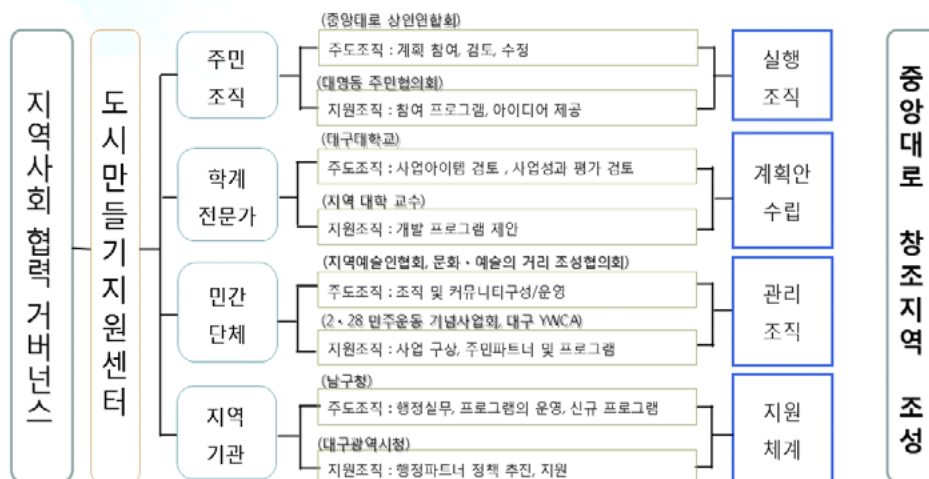
- 도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간 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델화하여 적용 확대 유도
- 협의회 운영 및 정기적인 간담회를 의무화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시공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 모색
- 주민주도 조직이 사업주체가 되면 우선 지원을 하거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들과 전문가 집단 등 관련 사업주체간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하에 사업

을 추진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계획 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전 과정 지원
- 중앙부서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실시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연계
-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 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주민주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음.

행정기관과 주민들 간의 소통 및 중재 역할을 하는 도시닥터와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전문가와 함께 '앞산 맛돌레길 사업'과 '문화 예술생각대로'사업을 통해 주민주도형 지역재생사업을 진행하여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3 도시대상시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음



[그림 5.40] 도시만들기지원센터 거버넌스 사례(대구 남구)

② 뉴새마을 운동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 지원

- 뉴새마을운동은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운동 성격을 가지므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농어촌 마을에서는 뉴새마을 운동 협의체와 함께 주민 스스로 마을을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 자율로 지역실정에 맞는 마을(그린, 해피, 스마트 새마을 중 선택)을 선택하고, 마을 대표자를 중심으로 마을가꾸기 위원회 구성하여 사업 시행

4. 세부과제 계획

실행 과제	추진일정	과제구분	과제내용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연구	단기	연구	주민주도형 지역 재생을 위해서 지역에 적합한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실행	단기	제도	연구를 통해 나온 제도적 정비 방안의 실행
주민참여 프로세스의 유형화 및 모델 개발	중기	연구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참여 프로세스 형태를 구분하여 모델 개발 연구
공공건축물 설계와 유지관리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모색	단기	연구	공공건축물의 기획, 계획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연구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 및 주민교육 확대	장기	사업	다양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 사업 실행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제공	장기	사업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
도 차원에서 주민참여사업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단기	제도	주민참여 사업을 지원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뉴새마을 운동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 지원	장기	사업	뉴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전략

12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도시·건축 관련 심의 제도의 투명성 확보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2012.10.9)으로서 도시·건축 관련 심의 및 자문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각 심의 위원회의 중복 심의 및 심의 기준의 모호성이 나타남
- 각종 심의 위원회의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의 필요
- 도시·건축 관련 행정의 건전성 확보와 각종 심의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불공정 사항 차단

2) 공공건축 발주시 제도 및 기준 확보

-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 발주제도의 개선 필요
- 공공건축과 디자인을 이해하는 전문직이 부족하여 기획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관리측면에 서 한계 발생
- 가격 입찰 방식으로 인한 우수 설계자의 참여 기회 부족
- 설계 및 입찰 조건으로 인해 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설계공모 참여 부족
- 우수한 설계를 갖기에 부족한 공모기간과 과도한 결과물의 제출에 의한 비용 부담 가중
- 공공건축의 공익성과 디자인을 담보할 수 있는 발주제도와 관련 기준의 필요성과 대안이 요구됨
- 다양한 발주방식과 공정성을 통한 설계경기 및 건축 산업의 활성화 마련
- 심사위원의 자격 문제 및 심사 불신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 공공건축 발주방식을 통한 건축 산업의 투명성 확보 필요

3) 공공건축 디자인의 질적 향상이 필요

- 2008년부터 국가에서는 공공건축 및 건축디자인 사업을 위한 건축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도 건축의 공공성 실현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수립하도록 권장함
-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환경 조성 및 건축디자인의 수준 제고

- 현재 공공건축 조성의 문제점은 비전문가의 기획, 관련 부서의 협력체계 미비, 행정지원 예산 및 제도적 기준의 미비 등으로 인해 디자인 품질의 저하 초래
- 지역에서 공공건축물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는 공공적 가치와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디자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
- 공공건축물의 품질 확보와 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행정지원체계 마련

2. 과제대상

1) 관련부서

- 발주업무 관련부서 등
-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정책기획관, 건설도시방재국

2) 대상

- 지역의 여건 에 맞는 발주제도 및 디자인 기준 개선
- 공공건축물디자인 향상 사업
- 공공건축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PDAT) 구축

3. 정책과제

1) 도시·건축관련 심의제도 개선 및 투명심사제

① 도시·건축 관련 투명심의 모니터링제 운영 방안 연구

-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건축·도시 관련 심의 등 현황 파악
-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사항에 따른 상시적 모니터링
-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한 모니터링 방안 검토
- 심의 관련 자료, 심의위원, 회의록 등에 대한 단계적 공개 확대 검토

② 건축도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심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총괄 관리하는 전담부서 시범 운영

[표 5.13] 전담부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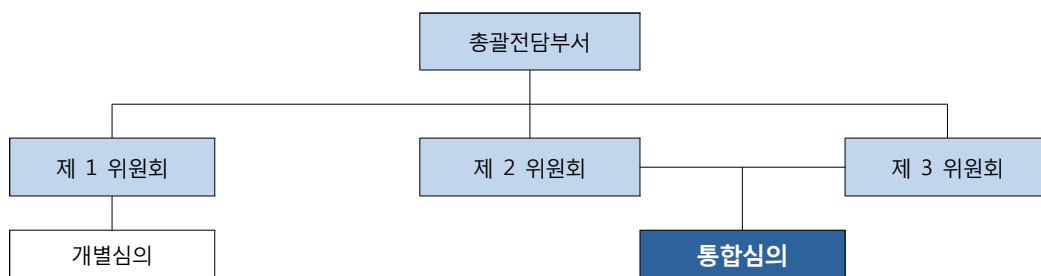
전담부서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재검토 - 위원회의 심의 지침 개정 - 위원회의 심의 가이드라인 설정
----------	---

- 융통성 있게 각종 심의 위원회를 운영

[표 5.14] 경상북도 건축관련 심의위원회

경상북도 건축관련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위원회 - 경관위원회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교통영향심의위원회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

- 각종위원회의 통합 운영 : 건축 도시 디자인 및 교통 분야 통합 심의 검토



[그림 5.41] 통합심의위원회 구상도

2) 공공건축 발주제도 개선

① 경상북도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발주 방식과 융통성있는 발주제도 방안 연구

- 지명현상설계공모, 연령제한 설계공모, 지역제한 설계공모 등 다양한 설계발주 방식의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가격 입찰방식 대신 여러 프로젝트를 묶어서 발주하는 설계경기 시범사업 시행

② 디자인을 위한 각 발주기관별, 유형별로 적합한 설계 발주 지침 마련

- 발주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발주 지침 마련
- 공간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우수 건축가들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발주방식 적용

③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설계심사의 투명성과 공정함을 위해 심사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 심사 결과 및 참여 작품

의 공개전시, 설계변경의 최소화로 설계자의 의견 존중 등을 통한 운영과정 개선

④ 발주처 및 설계자 업무의 경감을 통한 설계공모의 활성화

- 설계용역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제출물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저가의 소규모 건축설계용역 발주시 제출물의 간소화를 통하여 신진건축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약식설계공모 방안 마련
- 지역의 우수한 설계자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공모방식 적용 검토

*일본의 프로포절 공모방식

- 일본의 경우 프로포절 공모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간단한 제안서를 통해서 설계 개념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격 입찰을 지양하고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임
- 설계자의 창의성 및 실현성, 설계사무소의 기술력 및 실적, 총괄 및 담당 책임자의 업무 실적 및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를 통하여 평가하는 방식임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⑤ 경상북도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역 제한 입찰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설계 공모 운영요령'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지역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지역의 기술 수준 검토와 함께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대한 가점 차등화 방안 마련
- 공공 시설물이나 경관계획에 프로젝트의 경우 경상북도내의 대학과 지역의 건축사무소의 컨소시엄으로 산·관·학 협의체가 프로젝트 참여 방안 마련

3) 공공건축 관리체계 개선

①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방안 연구

-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총괄관리조직 구성시 공공건축의 디자인 행정을 전문적으로 통합하는 업무 시스템 구축
-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조성계획 수립과 통합된 총괄관리체계 마련
-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참여 주체의 결정 및 이들의 통합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즉, 공공건축 기획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행정담당자, 건축설계자, 민간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포함되는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상호 협의하는 체계 마련

※ 선진사례

- 미국의 PBS(Public Building Service)
 - 연방정부조달청 소속의 정부기관으로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젝트 개발에 서부터 전제적인 관리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서 건축설계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Design Excellence & Construction Excellence 프로그램을 운영함
 - 디자인 엑셀런스 프로그램은 1단계에서 회사별로 우수한 책임건축가를 확보토록 유도하고, 2단계에서는 최단 시간내에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설계 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일본의 관청영선부
 - 국토교통성 산하의 이 기관은 공공건축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건축물의 조성 전 과정을 지원 관리함
 - 본 부서는 매년 영선계획서를 제출 하여 공공건축물의 수급 및 관리하는 참고함
- 프랑스의 DAPA(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 건축문화유산국은 공공건축위원회(MIQCP)를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함
 - 공공건축위원회는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몇 단계로 나누어 개입하는데,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공간의 초기 기획시부터 여러 전문가집단이 참여하여 자문을 시행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발주처에 도움주는 역할과 설계경기의 건축가 선발과정에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함
- 네덜란드의 공공건축 총괄관리기구(The Dutch Government Building Agency)
 - 이 기구는 VROM(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에 해당)소속의 정부기관으로 주거와 공공건축물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 국가건축가 사무소(The Office of the Chief Government Architect)는 공공건축 계획이 결정되면 건축가를 선정하고 나머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정보를 모두에게 제공함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9),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②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PDAT) 적용 검토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개발하는 설계과정 평가지표(DQI : Design Quality Indicator)의 Web 개발 및 공공건축물의 설계과정에 시범 운용 실시
-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의 운영과 제도적 연계방안 마련
- 이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
- 경상북도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와 디자인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디자인의 질적 수준 마련

- 공공건축이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공공건축 건축 디자인 기준을 확립

-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PDAT)이란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공건축의 조성 방식을 탈피하여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각 조성단계에서 설계 의도대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및 검토하는 과정에 적합하게 개발된 도구이다. 이것은 합의안 구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디자인 목표설정, 설계나 건물을 평가하는 설계안 평가로 이루어진다. 디자인 품질 지표는 공공건축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계획방향으로써 공익성, 디자인, 사용성의 3 부문과 9개의 항목, 72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시범적용 및 제도화 연구



[그림 5.42] 경상북도 신청사 계획안



[그림 5.43] 영국 DQI 홈페이지

1차 시범적용 중요도 설정 질문지				수정후 중요도 및 기대치 설정 질문지			
구분	구분	중요도 2 3 4 5		구분	구분	중요도 2 3 4 5	
[가칭] 신청사	1.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1.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2.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2.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3.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3.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4.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4.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5.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5.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6.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6.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7.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7.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8.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8.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9.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9.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10.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10.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가칭] 신청사	1.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1.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2.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2.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3.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3.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4.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4.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5.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5.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6.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6.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7.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7.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8.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8.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9.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9.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10.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10.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가칭] 신청사	1.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1.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2.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2.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3.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3.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4.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4.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5.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5.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6.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6.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7.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7.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8.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8.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9.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9.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10.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10.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가칭] 신청사	1.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1.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2.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2.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3.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3.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4.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4.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5.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5.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6.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6.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7.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7.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8.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8.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9.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9.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10. 신청사 건축의 '가' 기능에 대한 필요성 (중요도 2~5)			10. 계획의 타당성	공익성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시범적용 및 제도화 연구

[그림 5.44] PDAT 시범적용 중요도 설정 질문지

※ PDAT 시범 적용 사례

- 상기 그림의 사례는 중소규모 공공건축물중 문화적 비중이 큰 공공도서관 두 곳 (수원 호매실도서관, 용인모현도서관)을 대상으로 건립 단계 전에 PDAT를 시범적용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수원 호매실 도서관을 대상으로 1차 시범적용을 실시하였고, 웹기반의 디자인품질관리 시스템을 활용함
- ② 용인시 모현도서관을 2차 시범 적용하였고, 설문지와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함
- ③ 이후 그 결과를 근거로 워크숍 참여자들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PDAT의 개선방향을 제안함

4.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추진일정	사업구분	사업내용
심의제도 투명성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운영	단기	제도	- 민관 공동위원회 운영
통합심의 위원회 운영	단기	제도	- 건축 도시 교통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
통합심의위원회를 관리하는 전문부서 시범운영	단기	제도	- 통합관리를 위한 전문부서 운영
공공건축 발주제도 방안 연구	단기	연구	- 각종 발주 제도 및 공모 방식 방안 연구 - 지역에 적합한 소규모 제안공모방식 및 아이디어 공모 방식의 연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단기	연구	-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방식 연구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방안 연구	단기	연구	- 공공건축 통합관리 방안 마련
공공건축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연구	단기	연구	- DQI(Design Quality Indicator) Web 개발 - PDAT의 연구 및 활용방안 연구

VI.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핵심전략사업

- ① 도민친화적 생활건축사업
 - ②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 ③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 ④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마련
 - ⑤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 ⑥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
조직운영
-

핵심전략

1 도민 친화적 생활건축사업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도민공감의 경북다운 생활건축 활성화 필요

-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경상북도의 사회현상에 대응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생활건축의 활성화 필요
- 전국 도시화율 평균에 비해 낮은 도시화율을 보이는 지역실정에 맞춰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축서비스 정책 필요

2) 주거공급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다양화 필요

-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공급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다양화 필요
- 다양화·다변화하는 주거수요를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급증하는 요구에 대한 대응 필요

3) 사업자 주도형 정비방식에서 거주자 중심의 정비방식으로 정책 전환

- 2011년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수단의 제도화
- 주거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비수단 적용이 제도화

2. 사례분석

1) 국외

① 일본의 민관협력형 혼합개발방식의 공공임대주택

- 공유지를 활용하여 민관협력방식으로 공공(민간)시설과 민간(공공)주택을 결합한 혼합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
- 1999년 7월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체로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공공용지 개발
- 2000년 3월에 기본방침 수립, 민간자금 활용사업 추진위원회(PFI 추진위원회) 발족
- PFI의 기본사업구조는 민간사업자가 공유지를 대여 받아 주택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지

방공공단체는 건물 완성 후 공공시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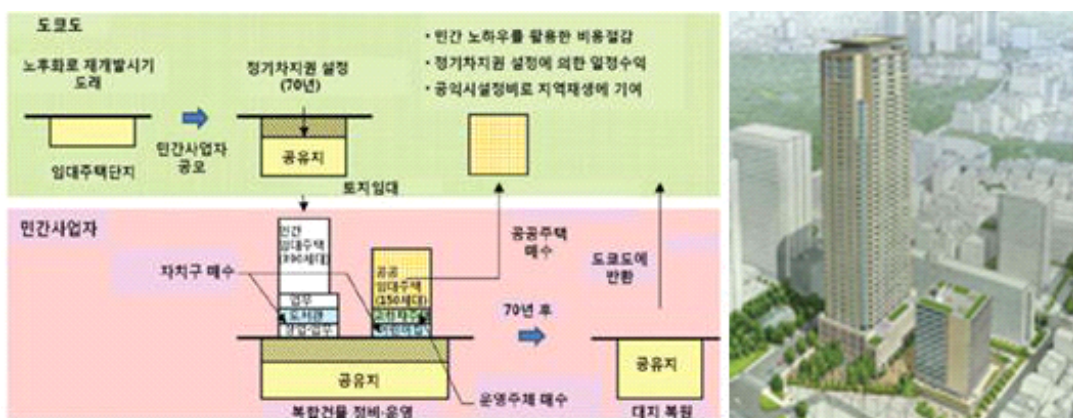
- 지방공공단체는 관리주체로 입주자 모집, 선정 등 민간에게 위임되지 않는 업무만 수행하고, 건물의 완공 후 건물의 유지 및 관리 위탁

[표 6.1] 일본의 PFI 사업의 공공·민간의 역할분담

사업단계	매입방식	임차방식	사업단계	매입방식	임차방식
사업발의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자금조달	민간	민간
용지의 소유	공공	공공	공영주택 관리주체	공공	공공
설계	민간	민간	공영주택 입주자 관리	공공	공공
건설	민간	민간	공영주택 유지관리	민간	민간
공영주택 부분소유	공공	민간(일정기간 후 공공귀속)	공영주택 대규모 수선	민간	민간

[표 6.2] PFI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개발형태

공급방식		개발형태
매수	단독개발	공영주택
	복합개발	공영주택 + 민간임대주택
임차	단독개발	공영주택
	복합개발	공영주택 + 민간임대주택
		공영주택 + 민간임대오피스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http://www.mlit.go.jp>

[그림 6.1] 미나마야오야마 단지 재건축

② 영국의 파트너십 EP(English Partnership, 1994-)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 또는 협의 하에 토지를 매수하기도 하고, 민간부분과의 Joint Venture 방식 사용
- 1960년대 후반 도시계획법의 개정 및 종합적 개량지구 수법의 시행을 통하여 도시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도시설계의 방향 및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일반화되고, 1990년대부터는 주거지 정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결합된 민관협력형 정비방식 출현
- 또한, 실수요자가 25% 정도의 지분을 취득한 후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돈을 모아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제도인 지분공유제(Shared Ownership) 시행
- 런던의 Greenwich Millennium Village(1997-)는 통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유기적 통합,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주거타입의 혼합 등이 잘 이루어진 사례



[그림 6.2] Greenwich Millennium Village (1997-)

③ 프랑스의 협의개발지구 ZAC (Zone d'Aménagement Concerté, 1967-)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전면철거형 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967년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수용하는 협의개발지구 ZAC를 실행
- 건축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치단체는 도시구역, 도시화 예정구역, 개발유예지구 등 선매권을 갖지만, 불하 또는 협정에 의한 경우는 개발업자도 취득 가능
- 또한 1971년부터 집합주거건물의 디자인 쇄신을 위하여 PAN(Programme d'Architecture Nouvelle, 새로운 건축 프로그램)이라는 설계경기를 진행하여 다양한 집합주택이 건축되

있으며, 오늘날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EUROPAN으로 확대

- 파리의 마세나 단지(ZAC Massena, 1999-)는 체계적인 계획과 실현의 협의개발지구(ZAC)의 사례로서 첫 번째 협의개발지구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시의원, 각 전문부서, 시민 간의 협의를 통해 공통된 합의를 도출하여 지구개발계획(PAZ: Plan d'Aménagement de Zone) 수립. 두 번째 '도시프로젝트의 사전연구와 아이디어 검토 단계'에서는 파리 도시계획연구소(APUR)가 국토이용과 도시정체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의 구체적 방향을 연구하고, 외부 건축도시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공모전 실시. 세 번째 '도시 및 건축 설계지침 작성과 협의·조정단계'에서는 개발사업을 이끌어갈 주체를 선정하면서 계획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데 마세나의 경우는 파리 도시개발공사(SEMAPA)가 그 역할 담당. 네 번째는 '개별 건축디자인과 건설단계'로 각 건축물을 설계할 건축가를 지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진행하는데 공고 후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3-4팀을 지명, 지원하여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최종안 결정.



[그림 6.3] ZAC Massena (1999-)

2) 국내

① 행복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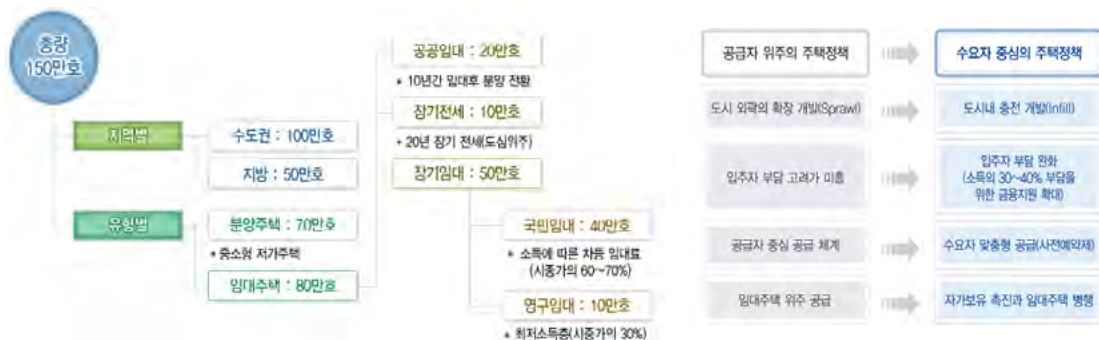
- “(공공택지) 행복주택, 지속가능한 도시의 창조공간을 만든다: 지역경제, 일자리, 주민 소통 공간의 거점으로 조성” 국토교통부 2013년 4월 23일
- 민간제안형 방식으로 민간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 및 대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예산으로 행복주택 건설
- 토지는 있지만 건설비용 부담으로 사원주택 등을 짓지 못하는 기업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재단이 주요 대상
- 2013년 8월 28일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1,500채)과 서대문구 남가좌동(650채)을 지정했으며, 2014년 11월에 지방광역시를 포함하여 2만 채의 2차 사업후보지를 선정할 예정



[그림 6.4] 행복주택의 개요 및 1차 사업 선정지구

② 보금자리 주택

-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것으로 공공이 재정 또는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 국민임대단지=저소득층 주거'라는 인식으로 인한 지자체, 주민 등의 거부감에 대해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공급을 통해 사회적 통합(Social Mix) 유도
-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외에 전세형 및 지분형을 추가하고, 영구임대 공급도 재개
- 주거 외에 산업, 교육, 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지구로 건설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는 복합도시로 개발



[그림 6.5] 보금자리 주택의 계획 및 특성



[그림 6.6] 우면동(좌)과 강남 세곡 2지구(우) 보금자리 주택

③ 지분형 주택

- LH 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의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제도
- 시행자와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지분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LH와 지방공사 등 시행자가 정하여 운영
- 주택의 소유권을 일정기간에 나눠서 구입하는 10년 공공임대에 적용
- 한 채의 주택을 갖고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의 지분투자자에게 분리하여 분양하는 방식
- 실수요자가 51%의 지분을 바탕으로 사용권, 임차권, 처분권을 가지며, 투자자는 실수요자의 10년 전매금지기간 이후 지분청산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
- 특히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51%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일부를 기금에서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25%의 자금을 갖고도 지분 취득과 거주가 가능



[그림 6.7] 지분형 주택의 개념 및 특성

3. 사업대상(안)

1) (사업추진) 경상북도 내 관련부서

- 건설도시방재국, 농축산국, 보건복지국, 기획조정실

2)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유희지, 유희 철도 및 공장지구 등 공공용지로 전환이 용이한 지역
- 2011년 10월 '일몰제(지구지정취소)'를 골자로 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미시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지구
- 주택재개발사업 미시행구역 중 주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가컨설팅에 의해 해당지역의 개선방향에 대한 계획이 합의된 지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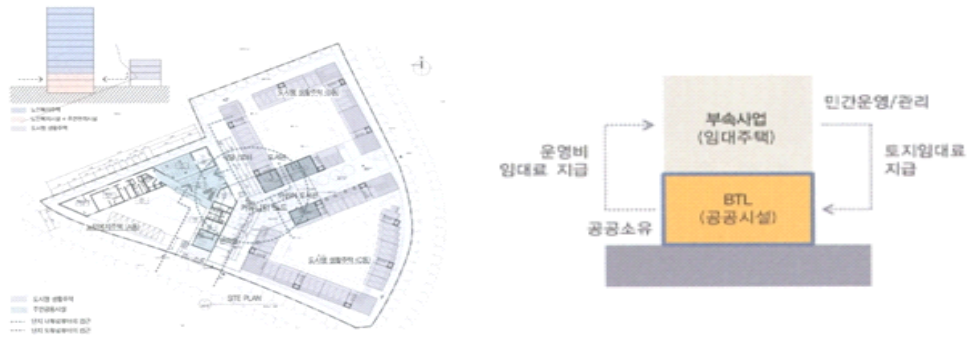
4. 사업내용

1) 복지복합형 실버세대 주택 (농어촌지역 대상)

- 경상북도의 당면과제인 초고령화가 특히 심각한 농어촌지역에 복지중심의 복합개발형 고령화주택 추진
- 노인복지시설과 복합화한 노인복지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 내에 복합적으로 개발
- 노인복지주택에는 저층부에 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단지 거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단지형 생활주택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하나의 단지 내에서 생활이 가능한 다세대 공생형 거주 실현

2) 생활밀착형 행복주택 (도시지역 대상)

- 공공용지에 동사무소, 복지관, 도서관 등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공공시설과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복합 개발
- BTL 방식을 통해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모두 민간사업자가 운영 및 관리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주무관청을 통해 지급받는 형태
- 복지복합형 고령자주택이 비어가는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모델이라면, 생활밀착형 행복주택은 신도시, 역세권 및 구도심과 같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에 적합한 모델



자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3),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주택관련제도 유연화방안 연구
[그림 6.8]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통한 복지 및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

5. 실행사업계획

- Step1. 경상북도 민관협력형 생활주거 마스터플랜 수립
- Step2. 마스터플랜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
- Step3. 각 사업별 설계공모전 실시
- Step4. 전문가자문단 및 추진협의회 운영
- Step5. 임대주택 관련 행정조직 및 운영체계 마련

6. 사업추진체계

2015년	2016-2018년
실행계획	시범사업
행정조직·체계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공모전 실시
	전문가자문단 및 추진협의회 운영

- ① 경상북도 민관협력형 생활주거 마스터플랜 수립(2014)
- ② 마스터플랜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2015-2017)
- ③ 각 사업별 설계공모전 실시(2015-2018):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신진건축가 대상 설계공모전 시범사업' 활용방안 모색
- ④ 전문가자문단 및 추진협의회 운영(2015-중장기): 사업추진 및 사업 모니터링
- ⑤ 임대주택 관련 행정조직 및 운영체계 마련(2014-2015)

7.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안)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14	'15	'16	'17	'18
생활건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200	200	-	-	-	-
민관협력형 생활주거 시범사업 추진	6,000	-	2,000	2,000	1,000	1,000
설계공모전 실시	2,000	-	1,000	1,000		
전문가자문단 및 추진협의회 운영	600	-	200	200	100	100
시범사업 모니터링	100	-	50	50	-	-
계	100	-	-	-	-	100

8. 사업의 근거

1) 국토환경(건축)디자인 시범사업

- 법적근거 : 「건축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해, 중점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의 세부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 중
- 사업목적 : 건축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환경 디자인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 지원내용 : 사업비의 50% 국비지원
- 2009~2013년 동안 총 28개 사업에 1,62.1억원 지원
- 관련부처 및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사업목적 : 도시 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사업비의 50% 국비지원
- 2013년도 사업(안) : 57개 지자체 120개 사업, 1,086억 원 예산
- 관련부처 및 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3) 행복주택 사업

- 법적근거 : 「임대주택법」(시행 2013.06.19., 법률 제11587호, 2012.12.18. 일부개정),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 2014.01.17., 법률 제11926호)됨에 따라,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입절차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업목적 :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
- 2014년도 사업(안) : 4만6000가구, 9,530억 원 예산
- 9,350억 원 중 3,147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6,383억 원은 주택기금에서 지원
- 관련부처 및 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4) 도시재생 시범사업

-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12.05., 법률 제11868호)
- 사업목적 :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 2014년도 사업(안) : 8개 사업, 243억 원 예산 및 다양한 금융지원 기법 도입
-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공공기관의 자본출자, 국민주택기금의 용자·출자·보증이나 메자닌(출자와 용자의 중간형태) 금융 지원
- 민간 투자자의 참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도입, 사업이 용이하도록 지역 맞춤형 형태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는 도시계획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추진
-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해 사업을 주도해 나가도록 지원 계획
- 관련 부처 및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핵심전략

2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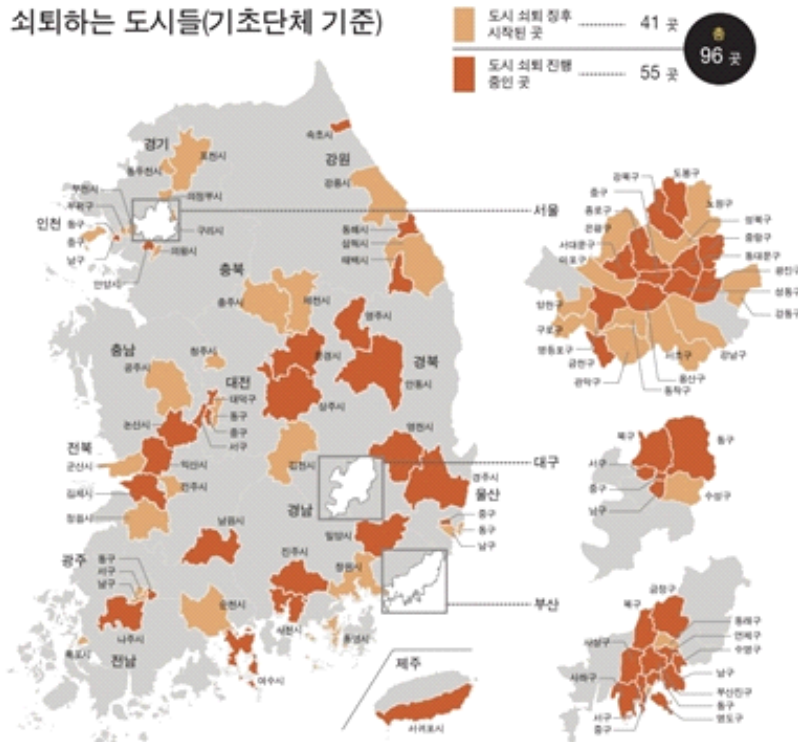
1) 도시 및 농어촌 공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생관리 필요

- 1980년대 이후 시가지 외곽에 형성된 대규모 신시가지 및 택지개발로 인해 구도심 인구 감소 및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구도심 쇠퇴 심각
-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였지만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 방식으로 인해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힘들며 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문제들을 유발
- 국토연구원에서 전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쇠퇴정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55곳 중 경상북도는 영주, 안동, 문경, 상주, 영천, 경우 등 6개 지역이 해당되며, 도시쇠퇴 징후가 시작된 전국 41개 지역에는 김천 포함
-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의 복합적인 재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재생 계획 필요

2)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기존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지역 주민, 지역 전문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되어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지역 거점공간인 읍·면 소재지에 있는 기존 커뮤니티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주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지역 재생 필요
-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 인식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종합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추어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 유도

-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쇠퇴도시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세부 사업실행계획 수립 유도



출처:국토연구원

[그림 6.9] 쇠퇴하는 도시들

* 「도시재생기본방침」

-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등 5대 목표로 진행되며, 노후 산업단지와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에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해 도시경제 회복의 촉매로 활용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어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곳당 250억 원, 근린재생형 사업 1곳당 100억 원을 4년간 지원하며, 2014년도에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 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 원을 지원하며 20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이 도입되고 규제완화도 추진되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 도시재생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

- 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하는 것을 허용
-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해 주택개량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3) 주민주도의 지역재생을 위한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및 주민 역량 강화 필요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 구상, 실행 계획 등의 수립 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필요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주민주도의 재생계획 수립 시 지원하고, 주민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와 연계, 마을기업 창업 컨설팅 등 지원 필요
- 주민주도의 지역재생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역 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필요

2. 사례분석

1) 국외

① 나가사키시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 나가사키시는 시가지의 약 70%가 경사지역이며, 고도의 경제 성장기에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경사지가 주거지로 개발되었지만 경사지가 가진 불편함과 경제 침체로 인해 1980년대부터 빈집이 늘고, 인구 유출 지속
- 주민 주도의 경사지 시가지 재생사업 시행
- 1990년에 「나가사키시 주거환경 정비 방침」을 정하고, 1991년 기타오오우라 지구, 쥬젠지 지구, 에비라 지구로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계획 작성
- 계획초기부터 주민과 하나가 되어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조직하여 현장 조사와 구상 만들기 시행
- 사면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경사지가 가진 통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 빈집대책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소방 활동이 어려운 지역 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나가사키시에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건축물을 철거 후 공원, 광장, 공공 공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② 영국 셰필드(Sheffield)의 도시재생

- 셰필드는 정밀공업과 숙련기술로 유명한 산업도시였으나 철강 및 금속산업의 쇠퇴, 도시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도심부의 인구 감소 등으로 도심부의 정주환경이 열악해지고, 구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나 시설의 1/3이 유헴시설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도심부 쇠퇴현상 발생
- 1988년 시는 문화와 미디어를 기반으로 신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도심부 공업지역을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도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시행
- 2001년 '도심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셰필드원(독립 민간법인)을 결성하고, 셰필드시 도심재생기본계획 수립
-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산업도시 기반조성, 소매상점가 육성, 역사·문화기능 강화, 복합용도개발의 활성화, 수변공간 재개발, 역세권정비, 공공공간 확충 등의 프로젝트 추진



[그림 6.10] 나가사키 경사지(좌), 영국 셰필드 구도심(우)

2) 국내

① 전주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 전주시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한옥마을에 적용한 사례로 노후 불량 주거지를 주택 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고유자산을 보존하여 활용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식 회복
-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보존 자산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경관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환경적 재생, 문화시설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적 재생, 한옥마을 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재생을 실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그림 6.11] 전주 한옥마을

3. 사업대상(안)

1) (사업추진) 경상북도 내 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건설도시방재국, 농축산국, 문화체육관광국

2)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쇠퇴지수가 높은 지역
- 농촌리모델링사업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생관련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곳들을 먼저 지원하고, 사업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점차적으로 재생 사업 확대

4. 사업내용

1) 주민 주도형 소도시 지역재생사업

① 경상북도 소도시 지역재생 기본계획 수립

- 경상북도 농어촌의 읍·면단위 지역재생 계획 수립
- 지역 쇠퇴지수 등 쇠퇴 현황 분석을 통해 쇠퇴 지역에 대한 자료 구축 및 쇠퇴관리 방안 마련

② 경상북도 소도시 지역재생 시범사업 시행

- 소도시 지역재생기본계획에 따라 쇠퇴지수가 높은 지역부터 소도시 지역재생사업 시행
-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 발굴,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활기찬 소도시 지역재생 유도

- 주민 스스로 지역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로 사업을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 소도시의 중심지 재생을 위해 공적 영역 재생과 민간 영역 재생을 함께 유도
- 소도시 중심지의 시장 혹은 중심거리 등을 포함하여 지역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살린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 때 계획 수립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
- 재생 마스터플랜을 통해 중점 사업은 국가 단위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적 부문부터 시작하여 점차 사적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

③ 주민주도형 지역재생 위한 운영체계 마련

- 부처별 각각 시행하고 있는 지역재생 관련 사업들을 통합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재생 추진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 구성
- 21C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 건설업체, 전문가 등 연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경상북도 지역재생 프로젝트 사업 시 추진 구심체로 육성
-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주민리더를 양성하는 “마을 재생 아카데미” 운영
-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사업

- 고령화로 쇠퇴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을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체意識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경상북도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농어촌 마을은 자연취락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의 개별 마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시행
 - ※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마을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은 농어촌마을로서 세대주 3분의 2 이상 동의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주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며, 마을 중심반경 200m 이내 주택이 30호 이상인 집단 마을을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음
- 자연취락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접근로, 상하수도 등 마을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불량 주택 등은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슬레이트 지붕 등은 철거하여 전반적인 주거환경 정비 유도
- 주거환경 정비 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화 개선 유도
-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현재 마을리모델링 시

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진행 중인 영주 두산 마을의 사업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농어촌 마을리모델링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체계 마련

-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뉴새마을운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마을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마을리더 양성, 주민교육훈련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 유도

□ 사업비 : 3,768백만원 (국고 1,657, 지방비 740, 용자 1,300, 자부담 71)

구 분	사업비	비율(%)	비고
소 계	3,768	100.0	
○ 마을기반정비	1,460	38.8	
○ 주택개량	1,301	34.5	빈집(15동), 에너지효율화(28동), 지붕개량(28동), 주택개보수(28동)
○ 주택신축	600	15.9	12세대
○ 마을경관정비	290	7.7	담장조성, 경관계획수립
○ 신재생에너지	117	3.1	10동

□ 사업추진 전후 비교



[그림 6.12] 영주 두산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5. 실행사업계획

- Step1. 경상북도 지역재생기본계획 수립
- Step2. 소도시 지역재생사업, 농어촌마을리모델링사업 실시
- Step3. 주민주도 지역재생 위한 운영체계 마련
- Step4. 주민주도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사업추진체계

2015년		2016-2018년	
실행계획		시범사업	
경상북도 지역재생기본계획 수립	행정조직·체계 정비		
	소도시 지역재생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 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 실시		
	주민주도 재생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① 경상북도 지역재생기본계획 수립(2014)
- ② 지역재생 관련 행정조직 및 운영 체계 마련(2015-2016)
- ③ 소도시 지역재생사업 실시 (2015-2018)
 -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과 도시재생 시범사업 활용 방안 모색
- ④ 농어촌 마을리모델링사업 실시 (2015-2018)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리모델링사업과 뉴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사업 실시
- ⑤ 주민주도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015-2018)

7.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안)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14	'15	'16	'17	'18
경상북도 지역재생기본계획 수립	200	200	-	-	-	-
지역재생 관련 행정 및 운영체계 마련	100	50	50	-	-	-
소도시 지역재생 시범사업 추진	4,000	-	1,000	1,000	1,000	1,000
농어촌 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4,000	-	1,000	1,000	1,000	1,000
전문가자문단 및 추진협의회 운영	600	-	200	200	100	100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00	-	100	100	100	100
계	9,300	250	2,350	2,300	2,200	2,200

8. 사업의 근거

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사업목적 : 도시 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사업비의 50% 국비지원
- 2013년도 사업(안) : 57개 지자체 120개 사업, 1,086억 원 예산
- 관련 부처 및 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2) 도시재생 시범사업

-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12.05., 법률 제11868호)
- 사업목적 :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 2014년도 사업 : 8개 사업, 243억 원 예산 및 다양한 금융지원 기법 도입
-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공공기관의 자본출자, 국민주택기금의 용자·출자·보증이나 메자닌(출자와 용자의 중간형태) 금융 지원
- 민간 투자자의 참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도입, 사업이 용이하도록 지역 맞춤형 형태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는 도시계획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함
-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해 사업을 주도해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임
- 관련 부처 및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핵심전략

3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고유한 주거문화 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 추진

- 국토교통부에서는 한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주거문화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한옥 건축의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의 실현을 목표로 정부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다짐한 액션 플랜인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을 2010년 5월 추진
- 한옥을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한옥에 신기술을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한옥을 관광자원 또는 공공 건축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

2) 서울의 북촌, 전주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성공은 관광자원으로서의 한옥의 가치 재인식과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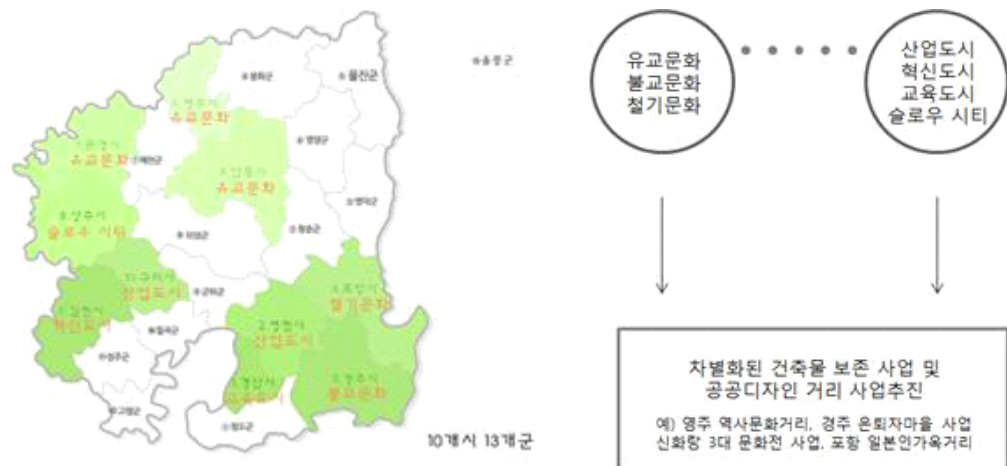
- 지역 자산으로서의 근대건축물과 한옥의 건축유산으로서의 가치 증대와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 필요
-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옥 관련 사업들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한옥 신축에 집중되면서 주거용 한옥의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 전통한옥과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화된 한옥 문화의 발전 계기 마련



[그림 6.13]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3) 차별화된 역사적 문화적 산업적 배경을 가진 경상북도만의 주력 문화사업의 특성화 요구

- 신라 천 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선비정신의 유교문화를 가진 경상북도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의 집산지
- 경상북도에 산재한 문화재가 전국 17%의 최대 규모 차지
- 고택의 40%, 서원 및 향교 등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체계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사업 방안 마련 시급
-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 세계적인 철강·섬유산업의 중심지로 과거부터 훌륭한 인재와 풍부한 기술력 보유
-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지역문화유산 기반구축을 위한 문화사업의 특성화 필요



[그림 6.14] 시군별 대표적 문화와 도시기반 특성

4) 경상북도의 전통 있는 건축 자산의 복원과 장소성을 살리는 특화 거리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및 실무 전담 부서 설치의 필요

- 휴먼 스케일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계획을 설정하고 경상북도라는 장소성이 가진 특수성을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연계
- 지역의 정신문화 보존 및 구체적 실행사업으로의 연결 필요성 대두
- 근대건축물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보수와 복원, 신축과 경관 정비를 통한 장소성과 역사성이 함축된 거리 조성 및 특화거리 조성의 자원 발굴 필요
-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근대건축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자원으로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도시 재생 및 지역 활성화, 특화거리의 조성 필요

- 한옥 마을 지원 정책을 통한 역사문화가로 경관 조성방안에 대한 필요성의 대두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특화 거리 및 공간환경의 조성

2. 사례분석

1) 국외

① 이치반가이 전통문화거리

- 일본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시 이치반가이 전통거리는 일본 에도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작은 에도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조선통신사 행렬이 방문한 곳임
- 카와고에는 옛 가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민속촌 같은 곳으로 새롭게 만든 곳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잘 보존하여 활용한 건축유산거리의 대표적 사례
- 에도시대 건축양식으로 벽에 흙을 칠한 구라츠쿠리 양식의 건축물이 35채 정도 남아 전통거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구라츠쿠리 양식의 건축물이 대부분이 그대로 보존되어 상점과 식당으로 재활용되어 관광자원화
- 전통 수공예품을 파는 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고구마 요리를 파는 거리, 형형색색의 유리가 박힌 돌 포장길, 막대 과자와 일본 화과자 가게가 늘어선 거리 등 조성
- 카와고에 이치반가이의 전통 경관 보존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



자료 :한국역사지리학회지(2005), 전통건축물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그림 6.15] 이치반가이 전통문화거리 전경

② 가나자와 전통지구

- 가나자와 도심부를 전통 환경 보존 구역과 근대경관 창출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마다 경관형성 기준 마련
- 지정구역마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규모, 위치, 색채, 형태, 토지의 형질, 목축의 모양 등에 대한 디자인 형성 기준 설정
- 지역의 전통산업을 가나자와만의 독특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처마, 지붕의 검은 기와와 창·문의 격자 문양, 외벽의 널빤지, 돌로 이루어진 장두리 벽판 등을 전통적 기준으로 조화 유도



[그림 6.16] 가나자와 전통지구 경관

2) 국내

①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 포항시는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복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가옥 입면보수, 도로 보수, 진입로 개설 및 역사관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길이 457m, 일본가옥 30동을 복원하는 일본인 거리 조성
-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일본인들이 이주해 형성했던 거주지로 일본 가옥이 남아 있는 곳
- 일본풍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리로 약 470여 미터에 이르는 골목에는 80여 채의 당시 건물들이 남아 있으며, 현재 28채 가옥의 외벽을 보수하고 거리의 도로도 디딤돌로 포장하여 일본식 거리 모습 재현
-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의 가옥 중에는 창살에 일본 후지산의 모양을 표현하여 일본식 가옥의 유풍을 잘 간직하고 있어 각각의 가옥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모습들, 특히 창살의 문양 등 일본식 가옥의 전체 외형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음



[그림 6.17]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경관

② 군산 근대산업문화거리

- 군산 근대산업문화거리는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 총 105억 원이 투자되는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사업'으로 군산의 내항에 위치한 조선은행, 일본제18은행 등 근대건축물 5개 동을 보수해 새로운 근대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 역사경관지구와 문화벨트지구를 지정하여 거리를 조성함
- 군산시가 정비한 구)조선은행, 구)일본제18은행, 미즈카페, 장미 공연장, 장미 갤러리 주변에 있는 진포 해양테마 공원(2010년 8월 개원), 근대역사박물관(2011년 9월 개관)과 연계해 내항 일원을 하나의 근대 문화벨트지구로 구축
- 월명동, 영화동 일대의 해망로, 중앙로, 월명로, 대학로 등의 거리와 주변의 오래된 가옥, 구)식량영단 군산지소, 행망굴, 구)남성전기회사 군산지점, 윤여삼 가옥, 동국사, 월명동 신흥동 일대의 일본식 가옥 등의 근대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역사경관지구 구축
- 역사탐방로를 조성하여 과거의 풍경과 주요 거점 가옥을 보수, 복원하여 역사적 풍경을 재현함으로써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직접적으로 유도
- 가로 건축물의 입면 개선과 역사풍광형 가로시설물 계획을 통해 보행자 도로 확보와 담장 허물기 및 지역 공공시설물과 종교시설의 공간 개방 유도



[그림 6.18] 군산 근대산업문화거리

③ 경주관광특구 한옥거리사업

- 경상북도는 경주관광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9억 원 등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경주관광특구 리모델링
- 경주관광특구는 신라시대 요석공주가 살던 왕궁에 자리 잡은 요석궁과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백성을 없게 하라' 등의 가훈으로 유명한 10대 300년 만석꾼 경주 최씨 가문의 생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촌 전통한옥 마을체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
- 인터넷과 연계하여 관광지에 대한 모든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를 8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보문호수 주변 저탄소 녹색 탐방로 조성
- 역사문화 관광도시 경주의 관광산업이 정체하지 않고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문화 관광과 더불어 가족단위의 체험 및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로 활용



[그림 6.19] 경주 교촌한옥마을

3. 사업대상(안)

1) (사업추진) 경상북도 내 관련부서

- 건설도시방재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농축산국, 보건복지국

2)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의 차별화된 건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
- 한옥 및 근대건축물을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의 역사적, 문화적, 산업적 특성을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 전통한옥과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브랜드화 된 한옥 체험마을 및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 근대건축물을 보존, 문화유산 거리화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4. 사업내용

1) 근대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 경상북도에 산재한 근대건축자산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를 통해 특화된 가로 경관을 활성화하여 관광자원화하고 관련법이나 관련 사업 간의 관계 검토
-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유산으로서의 근대건축물과 내·외부 공간환경 계획을 포함한 역사적 거리를 콘텐츠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되, 기존 건축물의 원형은 보존하면서 내부공간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
- 근대와 일제강점기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충분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특화된 거리 및 교육적 효과를 동반한 건축유산거리의 조성을 초점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와 가로경관을 갖춘 특화 거리 마련
- 한옥보조금 지원사업과 같이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신축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하여 역사 경관으로 특화되는 거리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마련
- 근대건축물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보수와 복원, 신축과 경관정비를 통한 장소성과 역사성이 함축된 거리 조성, 특화거리 조성의 자원 발굴
-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근대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한 도시 재생 및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의 적극적 반영
- 백두대간문화역사길 사업, 문경의 탄광,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거리의 흔적이 있는 상주 등 비지정 건축문화재의 적극적 발굴과 활용을 통한 근대건축 문화유산 거리사업의 적극적 추진 및 경상북도의 우수한 건축·도시 문화자산의 보존과 활용

2) 전통한옥 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 한옥 밀집 지역, 한옥 군이 형성되어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유교, 화랑도 등의 종합적인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숙박이 동시에 가능한 한옥마을, 한옥 전통거리를 육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최근 수명 연장과 함께 실버타운에 대한 시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정착을 위한 실버타운 조성을 한옥 전통 문화거리와 연계하여 고급형 한옥 주거 형성
- 한(韓) 스타일로서의 한옥 건축 공간의 브랜드화를 실현하며 실제적인 생활과 문화가 함께하는 경상북도만의 차별화된 한옥 브랜드 공간환경 조성사업의 실시
- 고급형 실버타운과 유교, 화랑도 등 전통 교육프로그램의 복합적 특화 시범사업을 전통한

옥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콘텐츠와 추진 전략으로 진행하여 생활형 전통한옥거리 및 마을 추진

- 고택, 종택, 향교 등을 중심으로 주변 한옥의 개·보수 및 신축을 통해 전통한옥 체험과 전통 한옥거리를 활성화하고 관련법이나 관련 사업 간의 관계를 검토
- 고유주거 문화로서 한옥 주택건립을 활성화하여 한옥 건축을 양산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유산으로서의 한옥주택에 대해서는 사·군과 공동으로 소요 경비 및 인센티브 적용
- 지역적으로 군집되어 있으며 실제적인 거주와 생활 문화를 함께 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한옥 체험 마을 조성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은 관광 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고택·종택 등 전통 한옥을 활용하여 전통숙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촌을 찾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
- 경상북도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하여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

5. 실행사업계획

Step1. 경상북도 건축유산거리 구성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Step2. 문화재전문가 자문을 통한 관련 행정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Step3. 근대건축유산거리 및 전통한옥 마을조성을 위한 지역 발굴

Step4. 교육 및 문화 체험 콘텐츠의 수립과 연계

Step5.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 실시

6. 사업추진체계

2015년		2016-2018년	
실행계획		시범사업	
문화재전문가 자문을 통한 관련 행정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실시	
		건축물 리모델링 및 공공디자인	
경상북도 건축유산거리 구성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근대건축유산거리 및 전통한옥 마을조성을 위한 지역 발굴	
		마스터플랜에 따른 교육 체험 콘텐츠의 수립과 연계	

- ① 경상북도 건축유산거리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2014년-2015년)
- ② 문화재전문가 자문을 통한 관련 행정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2014년-2015년)
- ③ 근대건축유산 및 전통한옥거리 조성을 위한 지역 발굴 (2015-2018년)
- ④ 마스터플랜에 따른 교육 체험 콘텐츠의 수립과 연계 (2015-2018년)
- ⑤ 사업구역선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 실시 (2016년-2018년)

7.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안)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14	'15	'16	'17	'18
마스터플랜 수립	300	200	100	-	-	-
행정조직 및 운영체계 마련	400	200	200	-	-	-
근대건축유산 및 전통한옥거리 조성을 위한 지역 발굴	400	-	100	100	100	100
교육 체험 콘텐츠의 수립과 연계	400	-	100	100	100	100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실시	2000	-	-	-	200	1,800
계	3,500	400	500	200	400	2,000

8. 사업의 근거

1) 문화체육관광부 한옥관련 사업

-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사업목적 : 한옥체험 숙박시설 제공 및 한옥의 활용도 증대
- 지원내용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 (2004~2011) 약 116억 원
공공문화시설 내 한옥 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2009-2010 : 1회) 약 8억 원 등
- 관련 부처 및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의 분야/부문 및 사업코드 : 관광 진흥 개발기금을 활용한 사업

2) 한옥마을지원정책 현황

- 주거환경개선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지방자치단체
- 국토지역발전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전통문화보존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관광지역개발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핵심전략

4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마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건축·도시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건축·도시 관련 사업 및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도민과 민간전문가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인식을 전환시켜 건축문화를 건설산업과 부동산 관점에서 파악하는 왜곡된 상황을 극복하고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바람직한 공간의 구현과 건축문화 강국을 위한 토대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 경상북도 역시 건축·도시환경과 건축문화 확산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경상북도 내 도시와 농촌지역의 다양한 분포와 문화적 수준 및 지원의 격차를 감안하여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2)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기록자료 구축의 중요성 부각

- 건축기록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건축·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보다 수준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도심재개발 시 장소의 역사성을 살리고자 해도 개발 이전의 역사적인 공간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적절한 계획이나 설계가 어려움
- 따라서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이러한 공간기록정보의 사회적 생산과 유통체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

3) 경상북도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경상북도 내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등 많은 시·군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산, 근현대 건축문화자산, 가치 있는 건축작품 및 건축상 수상 작품들이 다수 분포
- 전통건축 및 근현대 건축물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건축문화자산은 경상북도의 차별화된 지역성을 나타내는 가치 있는 문화자산이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중요
- 현재는 통합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건축·도시 정책과 건축문화자산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경상북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시급

- 최근 건축문화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계승함으로써 건축·도시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경상북도 건축문화자산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필요
- 따라서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과 전시관 마련 등 경상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물리적·내용적 기반 구축 필요

2. 사례분석

1) 국외 사례

① 네덜란드 NAI

- NAI는 네덜란드의 국가건축정책과 연계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기구들인 네덜란드 건축문화 센터(NDB), 건축박물관재단(SAM), 주택재단(Stichting Wonen)을 통합
- 설립목적은 건축분야의 자료보존, 전시 및 도서발간 작업과 건축 및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복합건축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수집된 건축자료는 정리 및 담론화 과정을 통해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건축 설계산업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반역할을 하고 있으며, NAI에서 수집된 건축 관련 자료는 영구 보존가치를 지님



[그림 6.21] 수장 및 전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네덜란드 건축진흥원(NAI)

②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Centre d'Archives d'Architecture du Xx eme siecle)

-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는 국가기록보관소, 건설교통부 도시·건축부, 프랑스건축협회의 3개 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1986년 설립되어 운영되었고, 2006년 IFA와 MMF, CEDHEC가 건축문화유적박물관(Cite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으로 통합

- 통합사유는 IFA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자료에 대하여 전시, 교육 등의 활용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MMF나 CEDHEC의 경우, 전시, 교육기관의 건축 관련 콘텐츠의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에 대한 요구가 상호 겹치게 되면서 각 기관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건축문화유적박물관으로 통합하여 운영
-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는 국가기록보관소와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각 설계사무소, 건축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중간가치 평가와 일시적 활용은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에서 진행하고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는 국가기록물보관소에 보관



[그림 6.20]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 내부 전경

③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건축아카이브

- 근대시기의 거장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루이스 칸 등의 자료는 그들이 교수로 재직하였던 곳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일반적인 기증방식 보다는 학교가 자료 수집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관련 주정부와 기관 등을 설득하여 작품을 구매하고 학교에 영구 임대하는 형식으로 진행
- 이 같은 진행방식은 지역이나 소속의 대학에서 유명 건축가를 지역의 문화자산이자 지역 건축문화자산으로 인식하여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임. 이러한 자료는 다시 교육이나 학교 자체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공개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고 학교 졸업생이나 교수들의 자료로까지 수집 대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대학의 건축아카이브로 성장

3. 사업대상(안)

1) (사업추진) 경상북도 내 관련부서

- 건설도시방재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2)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문화자산이 존재하는 경상북도 시·군 지역
- 경상북도 건축·도시사업 관련 부서 및 지역의 관련 교육기관

4. 사업내용

1) 건축디자인 DB(아카이브) 구축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DB 구축방안 연구
 - 건축디자인 DB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경상북도의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건축문화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 활용 방안 마련
 - 건축기록물 자료 DB의 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기준 마련
- 경상북도의 건축문화적 특색을 반영하는 건축자료의 DB 구축
 - 전통건축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DB 구축
 - 근현대 건축문화자산 자료 및 근현대 건축디자인 자료의 DB 구축
 - 공공 프로젝트 설계공모전 자료 등 공공건축의 현대건축 기록자료 DB 구축
 - 신진건축가상 등 경상북도 내 건축 관련 시상기록 자료 DB 구축
- 현재 생산되는 건축디자인 기록자료를 포함, 미래 건축문화 자료의 체계적인 활용성 증대
-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활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건축산업 지원
- 역사, 문화, 관광, 교육과 연계한 기본 자료체계 구축

2)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색이 담긴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 타 지자체의 건축박물관 건립 추진과는 차별화된 전략 수립
 - 근현대 건축물 및 공간환경적인 건축디자인 전시관의 기능에 더하여 지역적 특색을 추구한 문화, 관광, 교육의 복합적 기능 추구

- 도내 지역사회와 밀착한 도민의 지원을 위한 복합적인 시설 추구
- 역할
 - 문화, 관광, 교육 기능이 복합된 건축디자인 전시관을 통한 건축문화의 확산
 -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구심점
 - 전시관을 중심으로 한 자료의 보존, 활용, 교육 및 지원 활성화
 - 건축 실무자 및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재방문하고 실질적인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주요업무
 - 경상북도 내 전통건축, 근현대 건축물 및 산업시설, 건축디자인 관련 자료 등 종합적인 건축자료의 수집, 전시, 교육 및 지원
 - 도내 공모전 및 수상작 자료의 보관 및 전시
 - 근현대 건축물 관련 자료의 종합적인 관리, 보존, 활용, 교육
 - 도내 주요 근현대 건축가의 도면 등 실물자료의 지속적인 수집과 관리
 - 도민을 위해 건축디자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인문교양프로그램 운영
 - 경상북도 건축 관련 문화행사의 다각화를 위한 지원
- 운영방안
 - 건축적 관점에 국한시키지 않고 도민의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운영방안 마련
 - 새로운 시설의 건립을 통한 시설 중심의 건축박물관이 아닌 실질적인 자료(DB)의 구축과 운영 및 활용 중심으로 구축
 - 경상북도의 특색을 담은 기존 산업시설 등의 리모델링을 통한 전시관 마련
 - 경상북도의 신축 역사문화전시시설 내의 전시 프로그램 추가를 통한 연계 확대
 - 전통문화의 중심인 지역적 강점과 유교, 신라, 가야 관련 3대 문화권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와 함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전략적 접근 필요

5. 실행사업계획

- Step 1.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및 DB 구축방안 연구
- Step 2. 건축디자인 DB 구축(건축디자인 자료 체계화를 통한 활용성 강화)
- Step 3. 건축디자인 전시관 아이디어 및 설계공모전 실시
- Step 4.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기존시설 리모델링 전략 강구)

Step 5. 건축디자인 전시관 운영 및 모니터링

Step 6. 경상북도 건축문화행사 운영 다각화 및 운영주체 법인화

6. 사업추진체계

2015년	2016년	2018년
실행계획	시범사업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및 DB 구축방안 연구	건축디자인 DB 구축	
	건축디자인 전시관 아이디어 및 설계공모전	경북건축행사 운영 다각화 및 법인화
		모니터링

- ①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및 DB 구축방안 연구 (2014)
- ② 건축디자인 DB 구축 (2015-2018)
- ③ 건축디자인 전시관 아이디어 및 설계공모전 (2015-2016)
- ④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리모델링) 및 시범운영 (2015-2018)
- ⑤ 경북건축행사 운영 다각화 (2015-2018)
- ⑥ 시범사업 모니터링

7.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안)

사 업 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14	'15	'16	'17	'18
구축방안 연구	100	100	-	-	-	-
건축디자인 DB구축	500	-	200	100	100	100
전시관 설계공모전	1,000	-	500	500	-	-
전시관 구축 (리모델링) 사업	1,000	-	500	500	-	-
건축디자인 전시관 운영	800	-	200	200	200	200
경북건축행사 운영 다각화	200	-	50	50	50	50
시범사업 모니터링	100	-	-	-	-	100

8. 사업의 근거

1)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 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함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 건축·도시공간에 관한 기록물 중 상당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록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기록물 관리기구의 설치, 기록물 생산의 의무, 시청각기록 물의 생산 등
- 중앙기록물관리기관(법 제9조, 영 제6조)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이 설립 및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의 기록관(법 제13조, 영 제10조,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 및 운영
- 또한,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법 제17조 제1항, 영 제17조)
-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법 제17조 제13항, 영 제19조)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이 정리되어 있고,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시행 전, 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해야 하며, 또한, 최근 정보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대상 (법 제17조 제13항, 영 제19조)

- 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공사
- ⑥ 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
- ⑦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⑨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당해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핵심전략

5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 경제성장과 함께 건축·도시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경상북도의 지역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우수한 건축 및 도시계획을 통해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건축문화의 발전 도모
-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교류를 주선하여 건축·도시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다양한 방면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디자인을 통한 혜택과 디자인 문화 발전 도모

2)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 요구에 대응하는 행정체계의 한계

- 공공건축·도시 관련 조성사업은 건축·도시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이지만 공공건축 발주와 관리업무가 건축 전문직종이 부재한 행정담당부서에서 예산배정을 위한 행정행위로 수행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상북도 시·군의 경우 다양한 요구를 행정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체계적인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만한 재정적·인적 자원 부족
- 현재 공공건축물 조성 업무는 부서 간 협력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개별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인접한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사업 간에도 통합된 기획 및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품격 있는 공간환경 조성을 어렵게 함

[표 6.3] 경상북도 주요 시의 건축 관련 주요사업 현황

시/군	사업	담당부서	기간	사업비
김천	경북드림밸리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기획담당	2007-2018	8,646억
	자연사박물관 건립	기획실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정보통신과	2010-2014	342억
	그린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아포읍 일원)	친환경 농업과	2010-2013	100억
	삼애원 이전 신시가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지원과		
	직지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건설과	2008-2012	70억
상주	경북대 상주캠퍼스 주변개발	경북개발공사	2009-2013	108억
	상주시 종합행정지원 센터 건립	총무과 교육후생계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	새마을 관광과	2009-2011	20억
	경상감영 역사공원 조성	새마을 관광과	2013-2017	221억
	친환경 자연웰빙단지 조성(오봉산 권역)	농업정책과	2011-2015	78억

	도시주거환경개선(계산, 오동, 낙양지구)		도시과	2006-2012	47억
				2006-2012	45억
				2008-2014	82억
영주	한국인삼박물관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2009~2012	110억
	생태관찰원		녹색환경과	2012~2013	40억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산림녹지과	2010~2014	1,380억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		재난관리과	2010~2020	1조1,215억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		문화예술과	2012~2015	223억
문경	종합체육관 리모델링 (종합체육관)		새마을체육과	2012~2015	30억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		문화관광과	2011~2013	13억
	도심지 재 창조 (구 시가지 정비)	주차장	기획예산실 및 각 관련과	계획중	26억
		공용주차장		2013	7.4억
		전주지중화		2013~2015	220억
		간판디자인		2013~2016	45억
	안동	경북 바이오벤처 플라자 건립		일자리경제과	2008~2012
선비유교길 조성 (하회 솔로시티 조성 완료)		체육관광과	2011~2013	10억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도시디자인과	2013~2022	4,000억	
도심 실개천 생태복원		재난방재과	2011~2013	101.5억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 공원		삼성현 문화박물관	2004~2013	443억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화관광과	미확정	미확정
	블루그린 스포레저파크 조성		산림녹지과	미확정	미확정
	영남대 역세권 개발 옥동권역		도시과	미확정	미확정
	임당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도시과	미확정	미확정
	경산 삼살개 테마공원		문화관광과	2012~2014	70억
	사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건설방재과	2009~2013	70억
	자인면, 와촌면, 남천면 등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건설방재과	2002~2016	270억
영천	영천 경마공원 조성		말사업육성단	미확정	미확정
	포은 정몽주 생가복원		문화공보관광과	미확정	미확정
	최무선 과학관 건립			2008~2012	103억
	최무선 역사테마파크 조성			2014~	미확정
	노계 가사문화관 건립(박인로 문학공원 조성)			2014~	미확정
	경제 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과	2006~2013	2,016억
	화랑설화 마을, 한의마을 조성		기업유치단	2010~2015	572억
				2011~2015	371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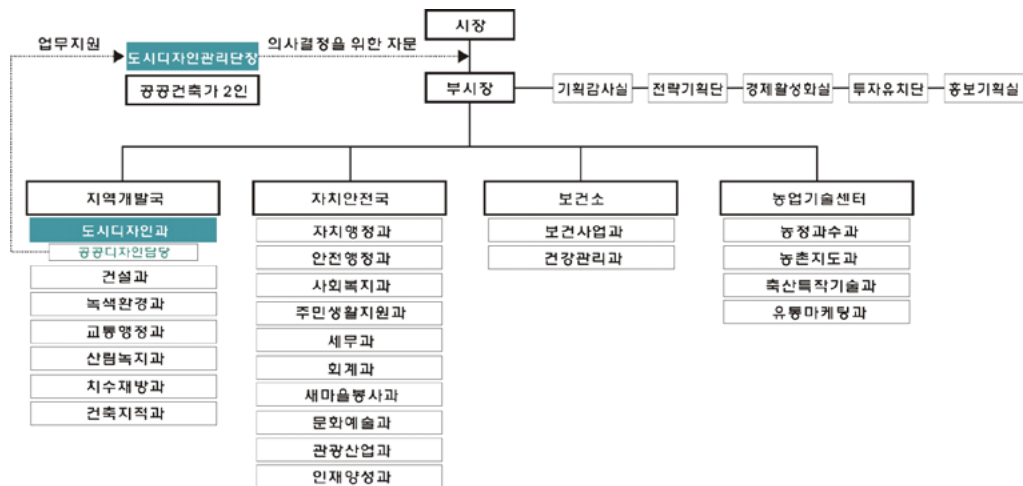
3) 행정체계의 한계 극복 및 지역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역할 필요

-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 요구에 대한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건축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켜 경상북도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 인력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현재는 제계적인 조직이나 인력,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자문이나 일부 사업에 제한공모자격으로만 참여시키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건축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조직과 지역주민들의 능력을 보완하고 선도하는 역할 담당 필요

4) 현행 행정체계에서 민간전문가 및 공공건축 관련 디자인 전담부서의 한계

- 「건축기본법」 제 21조에 의해 설정된 「국가건축디자인기준」(2009)에서 지방자치단체 디자인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였고, 프로젝트에 따라 디자인 총괄계획가 의무화
- 하지만, 2007년 이후 확산된 지자체 내의 디자인 전담조직은 '도시디자인과'나 '경관과'와 같이 공공디자인사업을 비롯하여 경관계획,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이나 일회적 디자인 개선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지자체 내 수평적 독립부서로 존재
- 기존 행정조직체계와 전담조직 간의 위계와 역할 분담, 민간전문가의 위상과 권한, 책임 소재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담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디자인이라는 틀로 담당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한계

※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장의 강력한 통제 하에 공공건축이나 디자인 관련 기획단계와 설계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전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전담조직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이나 일부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의 업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시설의 기획단계에서는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거나 전문가 참여에 따라 행정절차상의 지연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 발생



[그림 6.22]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영주시 조직운영

-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개별적이며, 지율적인 형태로 민간전문가의 활용, 주민참여 행정의 적극화 추진, 디자인 검토와 평가 등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제도 및 조직의 보완 필요

5) 경상북도의 건축도시환경의 조성 목표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 필요

- 경상북도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최적의 건축·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실무자, 민간전문가 및 학계, 사용자로서의 지역주민 등 다양한 관련 주체 사이에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효율적 협력체계 필요
-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비해 현재는 참여주체 간 협의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의 조성과정으로 건축·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아이디어의 도출과 관련주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시행을 위해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필요

2. 사례분석

1) 국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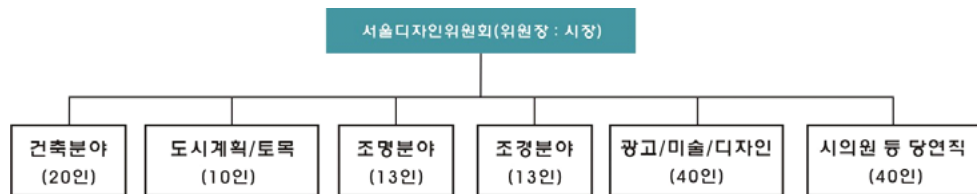
① 영국 건축·건조환경위원회의 프로젝트 지원제도(CABE's Enabling Programme)

- 건축·건조환경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1999년에 창설된 법적기구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과 도시계획, 공공공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기구
- 초기에 12명 커미셔너와 38명의 스텝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16명의 커미셔너와 위원회 산하에 40여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디자인 리뷰 패널과 100 여명의 업무지원팀으로 구성
- 디자인 리뷰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건축물과 공공공간 프로젝트의 발주자, 개발업자 건축가 등에 대한 조언 실시
- 건축가, 계획가, 디자이너, 개발사, 건축주와 직접 협력하면서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에 대한 길잡이의 역할 수행
- 프로젝트 지원제도(Enabling Programme)
 - 공공부문의 건축주에게 공공건축물과 마스터플랜, 도시계획, 공공공간 전략과 다른 공공영역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제도
 - 도시설계, 조경, 건축 등의 수준 높은 환경과 보다 잘 디자인된 공간을 계획하기 위하여 디자인이나 기획 단계의 초기에서부터 자문 실시
 - 보건, 교육, 주거, 재생과 같은 공공적인 부문에 중점을 둔 정부, 지자체, 공공기구들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부서와 협력기구들에 대한 전략적 자문 수행

2) 국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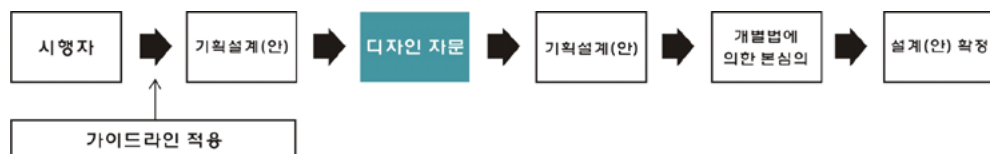
① 서울시 디자인 서울 - 시민디자인위원회

-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 제고를 위해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에 서부터 그 구체적 반영인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디자인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을 위한 심의와 자문 수행
- 분야별 인원배분, 경험 축적도 및 언론,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 전문가 총 100인 이내로 구성(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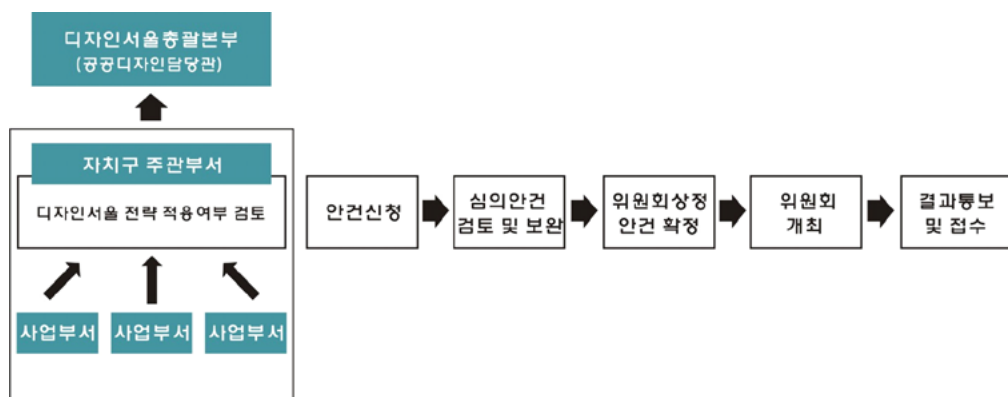
[그림 6.23] 위원회 조직구성도

- 개최시기
 - 기본계획(설계) 완료 전(심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함)



[그림 6.24] 공공건축물 외관디자인 자문

- 도시건축물 외관디자인의 사전자문은 계획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자문을 거쳐 계획설계 완료 후 본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그림 6.25] 디자인위원회 운영절차

② 디자인서울포럼

-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 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자문을 위한 학계, 전문가단체, 연구기관, 언론, 문화, 예술분야 및 디자인 행정 공무원으로 총 41인 구성
- 운영부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내용
 - 도시·경관·건축·디자인·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 POOL(총41명) 구성
 - 공공디자인 시책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디자인서울포럼개최(분기별)
 - 디자인시정 발전을 위한 포럼 자료 발간

③ 서울시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 지역 주민, 지역 건축가, 공무원 및 구의원 등 총 60여명의 다양한 주체들을 교육대상자로 구성
- 각 주차별 강의와 실습 실시
- 시민, 지역 전문가, 행정가 등 이해관계자간의 토론을 통해 지역 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
- 지역주민·행정가·전문가가 함께 논의하여 마을의 미래상을 구상
- 도시아카데미를 통해 마련된 교육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검토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
- 도시아카데미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의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
- 도시아카데미는 '지역 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



[그림 6.26]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3. 사업대상(안)

1) (사업추진) 경상북도 내 관련부서

- 건설도시방재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획조정실, 행정지원실

2)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1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 산·관·학 협의체 시행에 대한 계획이 합의된 지역 우선선정
- 경상북도 지역 내 우수 민간건축가 및 산업체
- 경상북도 지역 소재 대학 건축·도시 관련 학과

4. 사업내용

1)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산관학 협의체’ (안) 설치 및 운영

- 공공건축 조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 기준으로서 공공건축·도시 조성 전 과정에 대해 디자인 관리 및 조정에 관한 협의를 수행하는 상설 기구
- 지역사회의 건축·도시 관련 인력, 자원, 경험들을 서로 연계·공유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 목적 : 공공건축 관련 디자인 의사결정에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료의 축적을 통해 지역건축의 공공성 증진과 환경 디자인의 질적 개선 도모
- 역할
 - 공공건축물 조성 및 디자인 관리 업무 : 경상북도 및 각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에 이르는 디자인의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제공
 - 공공건축물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검토·예산확보 및 입지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한 자문, 디자인 리뷰 등 전문적 지원
- 조직구성
 - 지자체에 따라 개별적이며 지율적인 조직 형태로 구성
 - 관련부서의 실무자, 사업시행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학계,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 운영방안
 - 공공건축의 성과 및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활용, 협력설계, 주민참여, 코디네이터 조직에 의한 다분야 주체의 협의시스템 등을 적용

-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각 부처 간 분기별 사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보교환 및 사업조정, 상호지원
- 공공건축물 조성 시 주관 부서가 반드시 산·관·학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의무화

2) ‘건축디자인 아카데미’ (안) 설치 및 운영

- 목적 : 건축디자인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좋은 디자인을 통한 주민 혜택과 디자인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건축·도시 관련 사업영역 확대 및 활성화 추진
- 역할
 - 산·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시범사업, 지방정부나 각종 재단 등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예산지원사업, 자발적 환경개선 사업 등 (마을가꾸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각종 공공사업 아이디어 공모 등)과 연계한 과제 발굴 및 지원
 - 산·관·학 협동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상북도의 각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 분야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지역기반 R&D 실행계획 마련
 - 전문가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정책개발, 전문가의 실력 양성, 지역경쟁력 강화 지원
 - 전문가, 교육자, 공무원, 정책입안자, 결정자 등 교육 대상에 적합한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
 - 지역주민의 건축·도시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및 건축에 대한 인식 확대와 건축문화의식의 고취
- 조직구성 : 건축 관련 전문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등), 지역 소재 건축대학, 지자체 등이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 운영방안
 -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디자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주선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민간건축까지 확대 적용
 - 지역 소재 대학과 협력하여 건축 관련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교류, 전문가 건축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무종사자들을 위한 정기교육, 건축전문교육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등 다양한 커리큘럼 운영
 - 포럼, 워크숍, 전시회 등을 통한 지역 간 건축문화 교류 및 지역단위의 다양한 건축이벤트 지원, 어린이 건축학교, 일반인을 위한 건축답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5. 실행사업계획

- Step 1. 건축 관련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Step 2. 산.관.학 협의체 구성 및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원방안 마련
 Step 3. 산.관.학 협의체 시범운영 대상지역 선정
 Step 4. 산.관.학 협의체 참여전문가 인력풀 구성
 Step 5. 시범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6. 사업추진체계

2015년		2018년	
실행계획		시범사업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산·관·학 협의체'(안) 설치 및 운영	모니터링	
	'건축디자인 아카데미'(안) 설치 및 운영		

- ① 건축 관련 산.관.학 협의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 제도적.재정적 지원 정책 마련(2014)
 ②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산.관.학 협의체'(안)와 '건축디자인 아카데미'(안) 시범운영 실시(2015-2018)
 ③ 시범사업 모니터링

7.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안)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축 관련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100	100	-	-	-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산.관.학 협의체'(안) 설치 및 운영	300	-	100	100	100	-
'건축디자인 아카데미'(안) 설치 및 운영	800	200	200	200	200	-
시범사업 모니터링	100	-	-	-	-	100
계	1,300	300	300	300	300	100

8. 사업의 근거

1) 「건축기본법」 제 23조

① 민간전문가의 참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음
-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① 민간전문가의 참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3) 「건축디자인기준」의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990-325호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 21조에 근거
-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구성하도록 제시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 21조를 따르되 세부적인 시행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

핵심전략

6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조직 운영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건축·도시 관련 업무의 행정조직별 분할에 따른 총괄관리 방안 부재

- 건축·도시·조경 관련 업무의 행정조직별 분할에 따른 관련 부서 간 수평적 연계부족으로 건축·도시디자인 업무의 통합적 관리에 한계
- 대부분의 사업이 종합적인 검토 없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며, 매년 책정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시행
- 업무효율을 중시하는 분업화와 불분명한 부서 간 업무경계로 인하여 사업추진 절차상의 효율성 저하 초래

2)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기획업무의 한계 극복 필요

-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행정공무원의 단순 기획업무성 수립,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순환보직에 따른 지식축적의 미비 등으로 인한 한계 발생
- 사업의 추진 또한 시설 담당 주무부서가 사업을 각각 달리 추진하여 해당 시설별로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부터 운영 및 관리 단계까지의 조성과정의 통합화가 필요

3) 현재 경상북도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의 한계 극복 필요

- 현재 경상북도에서 건축·도시 관련 업무는 주로 건설도시방재국 산하의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건축·도시 뿐만 아니라 조경, 경관 관련 업무들이 행정조직별로 분할되어 별도로 진행되어 건축·도시디자인의 통합적 관리에 한계
- 또한, 통합적 관리와 협력적 운영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행정조직 내에서의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도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건축·도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별도로 조직하여 운영
 - ※ 서울시는 한때 디자인 서울총괄본부를 운영하였고, 경기도의 경우는 기획조정실 내의 디자인 총괄추진단, 대구시는 지자체장 직속 디자인 총괄본부를 운영

4) 기초지자체의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인원 부족

-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할 전문인력이 전반적 부족현상을 보이며 이 현상은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심화
- 인력의 부족현상으로부터 기초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와 민원처리 등의 단순 행정업무에 머물러 있는 상황

[표 6.4] 경상북도와 산하 지자체의 건축직 전문인력 구성현황

구분	관련부서	인원수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 건축디자인과, 문화재과, 회계과, 신도시조성과, 안전정책과, 경매장건설지원단, 감사관실, 회계계약심사과, 안전정책과, 관광진흥과, 경제자유구역청, 산림자원개발원, 문화예술과, 산림산업과, 농업기술원, 경주엑스포, 경북도립대	51
포항시	건축과, 감사담당관실, 재정관리과, 테라노바팀, 문화예술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저출산고령화과, 도시계획과, 수산진흥과, 신재생에너지팀, 경제노동과, 업무시설과, 체육지원과, 시설공단	36
경주시	건축과, (재)문화엑스포, 의회사무국, 역사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회계과	45
김천시	도시주택과,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28
안동시	건축과, 문화예술과, 신도청미래사업단, 재난방재과,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29
구미시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시민만족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문화예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 투자통상과,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과, 과학경제과	44
영주시	건축지적과, 회계과, 도시디자인과,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25
영천시	건축지적과, 도시계획과, 기업유치단,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난치수과	25
상주시	도시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새마을관광과, 공보감사담당관, 민원봉사팀	22
문경시	건축디자인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담당관실, 회계과, 농촌개발과, 도시과	27
경산시	건축과, 종합민원과, 일자리경제과, 새마을문화과, 체육진흥과, 재난관리과, 회계과	31
군위군	도시새마을과, 상하수도환경사업소, 문화관광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11
의성군	민원과, 조문국박물관, 새마을문화과, 노인여성복지과	17
청송군	도시경관과, 문화관광과, 건설재난관리과	8
영양군	건설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9
영덕군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해양수산과	18
청도군	농정과, 도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기획실, 문화관광과, 재무과	18
고령군	민원과, 기획감사실, 관광진흥과, 기업도시과, 관광진흥과,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시설관리사업소	15
성주군	도시건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15
칠곡군	민원봉사과, 건축디자인과, 전략기획과, 회계과, 새마을문화과, 도시계획과	25
예천군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9
봉화군	건설방재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8
울진군	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산림복지과	17
울릉군	지역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6

2. 사례분석

1) 해 외

① 포틀랜드 MOU(해외, 부서 간 수평협력체계 구축형)

- 기능별 부서조직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부서 간 협의체계를 운영하는 방식 중 단기적 형태가 아닌 지속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형태
- 2006년 9월 도시의 물리적 계획을 주도하는 도시계획국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비물리적 측면에서 계획을 보조하는 개발국 사이에 상호협약 체결
- 도시계획국과 도시개발국은 점차 증가하는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약을 통해 장기계획 수립, 개발과 관련된 목표 성취, 도시기본계획 실행, 다양한 사업추진 시 원활한 협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추진 시 계획과 실행부서의 역할과 책임, 계획 및 결정 시기 등을 상호동의 하에 정의함으로써 사업 실행 과정에 투명성을 제공하고 중복된 역할 수행이나 사업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통상적 부서 간 협의체인 TFT 등의 형태가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되었다 해체되는 시스템의 성격을 가지는데 비해 관련 부서간 보다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가 가능

② 시애틀 도시디자인팀(해외, 도시디자인 부서 중심 협력체계 구축형)

-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시애틀시 도시계획 및 개발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내에 도시디자인팀 설치
- 도시디자인팀은 심의를 담당하는 팀과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 그룹으로 나뉘는데, 실제로 도시설계를 하는 디자인 그룹은 조경설계가, 도시설계가, 건축가로 구성
- 도시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전략적 계획 및 설계를 담당하며, 광역적 도시설계, 주요 공공영역 설계와 도시설계 보조, 도시디자인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역할 수행
- 시의 목표와 정책에 맞는 도시설계를 구현하며, 공공과 민간 개발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
- 시애틀시 관련 부서들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광역적인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적 계획(The Waterfront Plan, The Blue Ring and Green Streets) 수립 주도
- 기존의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2차원적인 규제 중심의 계획을 수립했던 것과 달리 도시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함

- 우리나라에도 최근 대다수의 지자체에 도시디자인 관련부서가 다수 신설되고 있으나 부서의 인적 구성이나 다른 부서와의 협업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어 조직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 아직 그 역할이 미미한 상황

③ 리옹 공공공간 전담부서(해외, 전담부서 설치형)

-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한 경우로서 협의체계와 구별되는 점은 공공공간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가 지자체 행정조직 내에 설립되어 자체적 계획수립과 사업 발주
- 리옹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 주체를 일원화하고, 공공공간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선별하며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이라는 목표 아래 리옹 공공공간 전담부서(Service Espaces Publics)를 설치
- 리옹 공공공간 전담부서는 공공공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사업 추진에 이르는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 그룹, 공공공간 관련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과 예산 작성, 사업 추진 일정 계획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작성 그룹, 도시설계전문가가 주도하여 계획 및 사업안을 발전시키는 공공공간 아틀리에의 세 그룹으로 구성
- 공공공간 전담부서는 행정부서, 전문가, 사용자 등 공공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 과정을 주도하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통상적 도시디자인 부서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는 점에 비해 전담부서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획 수립에서 사업 시행까지 하나의 부서가 책임 권한을 가짐으로써 공공공간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 가능

2) 국내

① 대구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위원회+포럼)

-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 총괄본부는 대구 도시디자인의 실행조직이자 관리조직으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디자인 업무를 통합하고,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시혁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2008년 발족
 - 구성 : 기술직 공무원+행정직 공무원+심의위원+자문위원
 - 분야 : 건축, 경관관리,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색채, 조경, 조명, 전기, 도시계획, 토목, 광고, 미술, 문화, 역사, 사회
 - 위치 : 사업조정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 직속
 - 역할 : 다양한 디자인 관련업무의 총괄, 정책수립과 적용 및 시행



자료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그림 6.27] 대구광역시 행정조직도

3. 사업대상(안)

1) (사업추진) 경상북도 내 관련부서

- 기획조정실, 건설도시방재국

2)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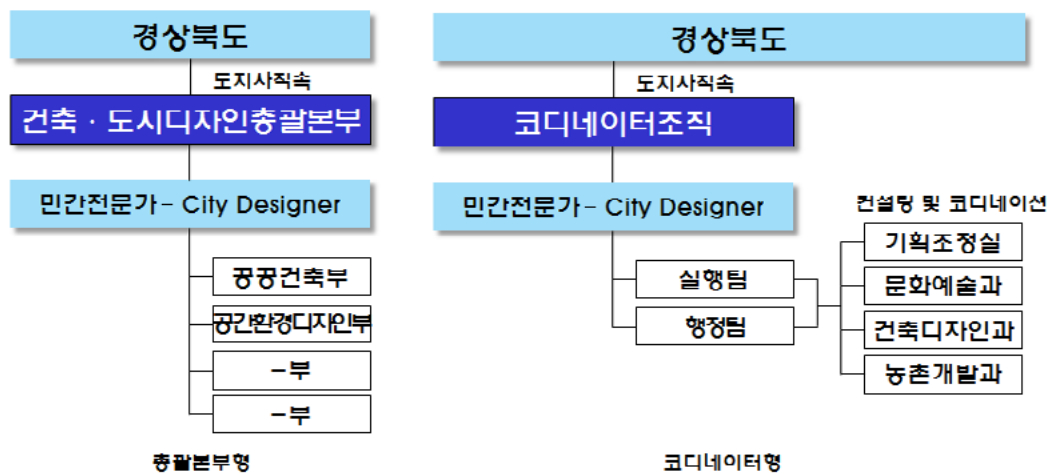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4. 사업내용

1)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행정조직 신설

-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및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전담 조직 신설
- 건축·도시 관련사업 총괄관리 행정조직의 유형별 직제개편 구상

- 민간전문가의 채용으로 조직의 건축·도시 관련 전문성 제고
 - ※ 전문가가 참여하여 건축·도시 관련 디자인 업무를 모두 하나로 통합하는 전담조직, 건축·도시 관련 업무 중 기획 및 계획단계만 컨설팅 해주는 코디네이터 조직 등으로 구분 가능
- 건축·도시 관련 다양한 사업특성을 검토할 수 있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축적을 통한 관련 구성원들의 전문능력 강화



자료 : 국토교통부(2009), 건축정책기본계획연구 참조 제작성

[그림 6.28]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행정조직 예시도

2) 경상북도와 기초지자체의 건축·도시 협의체계 구축

- 23개 시·군의 행정조직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관된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 관련 행정전문 조직의 성격을 두루 포괄하는 방식으로는 국토교통부가 2009년 12월에 고시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전제로 할 때 크게 3가지의 조직 유형의 설정 가능

① 유형 1(기존조직활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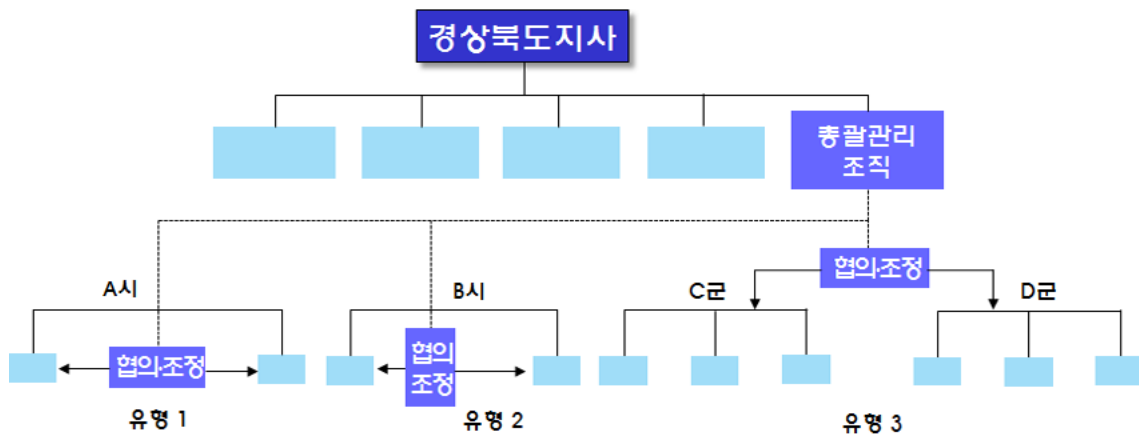
- 기존 조직 내의 디자인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중심으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건축·도시 디자인 관리
- 도시계획, 교통, 공원, 녹지 등 기존의 기능별 부서 조직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부서 간 협의체계를 운영하는 방식

② 유형 2(전담조직신설형)

- 독립된 부서가 지자체행정조직 내에 설립되어 자체적인 계획수립 등의 실행력을 가지고 운영
- 도시디자인 부서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 내에 설치되며, 도시디자인에 있어 공적 부문에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공공공간 네트워크 계획이나 도시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등의 역할 수행

③ 유형 3(외부지원조직 구축형) :

- 시·군의 행정 조직과 별도로 독립적인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관리체계 수립
- 경상북도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건축·도시 관련 업무 지원 조직을 운영하여 인적자원이 취약한 시·군의 건축·도시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이르는 과정 지원



[그림 6.29]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도~지자체간 협의체계 조직구성 예시도

[표 6.5] 유형간 특성비교

구분	기존조직 활용여부	업무독립성	업무효율성	업무조정성
유형 1	○	×	△	△
유형 2	×	○	○	○
유형 3	△	△	×	×

- 23개 시·군의 행정조직 체계를 고려하여 건축·도시디자인 분야 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체계를 연계·조정·통합할 수 있는 통합 프로세스 구축
- 경상북도와 각 지자체의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의 역할 및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디자인 관리 프로세스의 합리화

- 경상북도와 산하 지자체 내에 정비된 통합관리 체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 신설 정비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전문직원들의 기본적인 인식개선 및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5. 실행사업계획

Step1.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사업 총괄관리조직 정비방안 연구

Step2.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조직 신설

Step3. 건축·도시디자인 전문가 구성 및 운영

Step4. 지자체별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체계 및 경상북도와의 유관분야 협의 체계 구축

Step5. 건축·도시 통합관리 조직 구성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Step6. 지속적인 모니터링

6. 사업추진체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실행계획	시범사업			
조직정비방안 연구	경상북도 관련조직신설	지자체 체계구축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구성 및 운영			

①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사업 총괄관리조직 정비방안 연구(2014~2015)

- 경상북도 및 지자체 행정조직의 현황, 도청 및 시·군 관련 부서들의 인식 등의 사전조사
-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담당 행정부서 직제개편안 구상
- 경상북도와 시·군의 건축·도시 관련 부서의 역할 및 관련 업무 관리체계 방안 개발
- 행정조직 신설 후의 상황 시뮬레이션 시행

②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행정조직 신설(2015~2016)

- 경상북도 도청 내 건축·도시디자인 통합 관리업무 전담팀의 신설

③ 건축·도시디자인 전문가 구성 및 운영(2015~)

- 총괄관리 행정조직 운영 관련 전문가 구성 및 운영방안 구상

- 구체 사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통합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TFT 시범 운영
- ④ **지자체별 통합관리체계 및 경상북도와 의 유관분야 협의 체계구축(2016~)**
 - 23개 지자체에 적합한 체계 구축
 - 경상북도 총괄관리 조직 내에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체계 동시 확보
- ⑤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 조직 구성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017~)**
 - 경상북도와 산하 지자체 내에 정비된 통합관리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스템 구축

7.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안)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14	'15	'16	'17	'18
총괄관리조직 정비방안 연구	100	100		-	-	-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행정조직 신설	400	-	100	100	100	100
지자체별 통합관리체계 및 경상북도와 의 유관분야 협의 체계구축	비예산	-	-	-	-	-
건축·도시 통합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00	-	100	100	100	100
시범사업 모니터링	100	-	-	-	-	100
계	1,000	100	200	200	200	300

- 국토교통부,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경관, 건축디자인 설정방안 연구(2007)' 150백만원 참고
- 건축·도시 디자인 전문가 운영을 위한 비용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2010)총괄계획가 운영비용 30백만원/년·인(월 250만원기준)
- 경상북도 산하 지자체내 조직신설을 가정

8. 사업의 근거(국가사업)

1) 「건축기본법」 제23조

① 민간전문가의 참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음
-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① 민간전문가의 참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음
-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3) 「건축디자인기준」의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990-325호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 21조에 근거
-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구성하도록 제시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 21조를 따르되 세부적인 시행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

VII.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추진방안

- ① 건축기본계획 추진방향
 - ②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과제 총괄
 - ③ 사업별 특성 및 소요예산
-

1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운용

1) 건축기본계획 정책과제와 실천과제의 수립·실행

- 정책과제는 도청 건설도시방재국 주도로 연차적으로 수립
- 현재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디자인과는 경상북도청 건설도시방재국 소속
- 실천과제는 도청의 건설도시방재국 및 관련 부서, 시·군의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가 정책환경의 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관련 계획의 정합성, 통합성 확보와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건설도시방재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립
- 건축기본계획의 모든 사업들은 여러 부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종합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으로 단일 부서에서 계획 실행이 어려우므로 관련 부서 사이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운영 필요

2) 기초지자체와 연계 및 관리

- 건축기본계획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의 건축정책과 시·군의 건축정책 사이의 유기적 연계가 담보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행정이 참여하여 경상북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사업추진 등에 대해 협의 할 수 있는 건축정책 관련 협의회 개최
- 핵심전략사업 또는 실천과제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의 세부구성부터 모니터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협의회 개최
- 건축기본계획은 시·군별 획일적인 적용이 아닌 시·군별 지역 특성이 고려된 적용 필요
- 핵심전략사업, 실천과제의 시·군 적용 시 지역 특성 반영
- 시·군 사이의 인접지역은 통일성, 체계성 등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연계하여 계획 수립 및 체계적 관리

3) 시·군 단위의 건축기본계획 수립

- 법적으로 시·군 기초지자체의 건축기본계획 수립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립여부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결정
- 시·군 차원에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틀을 준용하여 수립

4) 건축기본계획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

-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실천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행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수의 역량 있는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기구이자 건축기본계획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한 실행위원회(TFT) 성격으로 운영
- 건축기본계획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적 확산을 위해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와 실천과제에 대한 부분적 수정·보완과 함께, 시·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과제 개발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및 자문

5) 건축기본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

- 건축기본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계획의 성과측정, 평가, 2차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한 데이터베이스 작성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산하에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각 전략별 실천과제에 대하여 매년 말 성과측정
- 계획추진 현황, 추진실적 등 평가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성과환류 및 도민 홍보
- 매 2년마다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의회 보고

6)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 유지 및 상호 유기적 연계

- 건축기본계획은 경상북도의 건축·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중심에서 비전과 의제, 전략과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건축·도시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관리하는 종합계획 지향
- 예를 들어 경상북도 경관관리기본계획, 경상북도 색채경관기본계획, 경상북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경관 관련 계획과 혁신도시 관련 서업이나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사업과 같은 일반 사업계획 등과 공간계획의 체계와 내용 간의 사전·사후 조정 필요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등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 :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주택정책의 전환과 관련해 상시 유기적으로 대응

7) 23개 시·군의 설문조사를 통한 각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의사 타진

-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현지 여건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추진 가

능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4년 1월 중 실시

- 23개 시·군 지자체의 참여의사 수는 각 항목 하부의 세부사업을 선택한 지자체의 수를 합산한 누계횟수를 의미하므로 종합적인 선호도로 간주할 수 있음
- 각 사업별 참여의사를 권역별로 다시 분류하면 동부와 남부권역이 사업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핵심전략의 실행사업의 경우,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설문결과를 활용함

[표 7.1] 3대 목표의 12개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

3대목표	12개 전략	동부	중서부	남부	북부	합계	총계
①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육성	1.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형 건축산업 발굴	13	5	11	3	32	157
	2. 시대적 요구에 합하는 건축사업 개발	15	12	15	6	48	
	3. 경쟁력 있는 지역건축산업의 특성화	12	4	12	4	32	
	4. 한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	16	5	19	5	45	
② 우수한 건축 인력양성 및 사회참여	5. 건축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9	5	11	10	35	116
	6.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방안 검토 및 보완	10	2	8	7	27	
	7. 건축문화자산 관련 자료구축 및 보관	7	3	6	3	19	
	8.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	14	4	14	3	35	
③ 효율적인 건축 제도 마련	9. 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디자인 관리방안	11	11	13	14	49	121
	10. 민·관협력 사업의 관리 및 지원방안	2	0	1	0	3	
	11. 주민참여 기구의 설립 및 운영 지원방안	12	11	6	8	37	
	12.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9	5	11	7	32	
4대 권역별 누계		130	67	127	70	394	-

<주> 각 권역별 시군 기준은 동부권(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중서부권(김천 구미 상주 문경 의성 군위), 남부권(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북부권(안동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예천)으로 구분함

2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활용

-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 경상북도 및 23개 시·군에서 각각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 및 반영
 - 향후 경상북도의 모든 건축·도시 관련 사업은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과 유기적 연계
 - 시책 및 사업 수립 시 건축기본계획의 반영

1) 목표 1 :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

전략	정책과제	주거복지	지역활성화	건축문화	DB구축	민관협력체계	제도 및 조직정비
1.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형 건축산업 발굴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사업		●		●		●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및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		●		●
	U-CITY 미래성장형 융복합 건축산업		●				●
2.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업 개발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순차적 개발체계 구축			●			●
	민·관협력형 건축사업 실행방안 연구			●		●	●
	지역의 여건 및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개발	●	●	●		●	●
3. 경쟁력 있는 지역 건축산업의 특성화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 방안		●	●			●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 강화		●	●		●	●
	지역 특성화의 중장기 전략		●	●	●		●
4. 한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경상북도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계획		●	●	●		●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유지 관리 계획			●		●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	●		●	●

2) 목표 2 : 우수한 건축인력 양성 및 사회참여

전략	정책과제	주거복지	지역활성화	건축문화	DB구축	민관협력체계	제도 및 조직정비
5. 건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		●		●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		●		●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역량 강화		●				●
6. 민간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방안 마련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활용체계 구축		●	●	●		●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설립		●	●	●		●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영역확대 지원			●	●		●
7. 건축문화 관련 자료구축 및 보관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	●	●	●	●
	근현대 건축물 자료의 종합적 DB 구축			●	●	●	●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방안 수립			●			●
8.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	복합적인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	●			●
	콘텐츠 중심의 지역건축문화 체계화 및 전파		●	●	●	●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3) 목표 3 :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

전략	정책과제	주거복지	지역활성화	건축문화	DB구축	민관협력 체계	제도 및 조직정비
9. 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디자인 관리방안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		●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및 활용			●			●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조례 개정 및 제정			●			●
10. 민관협력사업의 관리 및 지원방안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안) 연구	●				●	●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민관협력 사업 모델 개발 및 적용	●				●	●
11. 주민참여기구의 설립 및 운영 지원방안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	●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		●	
	주민참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
12.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도시·건축 관련 심의제도 개선 및 투명심사제			●	●		●
	공공건축 발주제도 개선				●		●
	공공건축 관리체계 개선				●		●

4) 핵심전략사업

핵심전략사업	실행사업	주거복지	지역활성화	건축문화	DB구축	민관협력체계	제도 및 조직정비
1. 도민 친화적 생활건축사업	1.1 복지복합형 실버세대 주택	●				●	●
	1.2 생활밀착형 행복주택	●				●	●
2.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2.1 주민 주도형 소도시 지역재생사업		●			●	●
	2.2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사업	●	●			●	
3.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3.1 근대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	●		●	●
	3.2 전통한옥 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	●		●	●
4.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마련	4.1 건축디자인 DB(아카이브) 구축			●	●	●	●
	4.2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	●		●	●
5.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5.1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산·관·학 협의체'(안) 설치 및 운영		●	●		●	●
	5.2 '건축디자인 아카데미'(안) 설치 및 운영			●		●	●
6.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조직 운영	6.1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사업 행정조직 신설			●		●	●
	6.2 경상북도와 기초지자체의 건축·도시 협의체계 구축			●			●

3 사업별 특성 및 소요예산

1) 목표 1 :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

전략	정책과제	세부과제
1.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형 건축산업 발굴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사업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마련 건축물 에너지소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및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구축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U-CITY 미래성장형 융복합 건축산업	지속가능한 건축·도시환경 구현 U-CITY를 통한 건축·도시환경 통합관리
2.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업 개발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순차적 개발체계 구축	총괄책임건축가(MA)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운영 획일적 단지형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주거유형 연구 전면철거형이 아닌 도시맥락적 수복형 정비방식 연구
	민·관협력형 건축사업 실행방안 연구	민관협의 하의 토지수용 등 합리적인 개발방식 연구 인센티브가 아닌 보조금 제도 연구
		거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지역의 여건 및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개발	경상북도 소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농어촌형 해피하우스 사업 운영
		미래형 농어촌 주거모델 보급
3. 경쟁력 있는 지역 건축산업의 특성화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 방안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산업 개발 지역 건축산업 관련제도 정비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 강화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 역할 강화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경쟁력 있는 디자인 참여
		지역별 건축·도시 정체성 연구
	지역 특성화의 중장기 전략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4. 한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경상북도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계획	시 군별 문화재 현황 및 지역 건축 유산 지정 사업 비지정 근대 건축문화유산 유형별 보존 방안 연구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실태 조사 연구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유지 관리 계획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 마을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연구 건축문화유산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 방안 연구
		동해안 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한옥 및 근대건축물 관광자원 활용 연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경제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활용 시범 사업 근대 건축 경관지구 조성 사업
		브랜드화 된 한옥 특화 사업

추진 기간	과제 구분	핵심 연계	시범 사업	소요-예산150						시.군 참여의사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장기	연구			200	-	-	100	100	-	경주, 울진, 울릉, 경산
장기	연구			200	-	50	50	50	50	영덕, 울진, 구미, 상주, 영천, 경산, 칠곡, 안동
중장기	연구			200	100	100	-	-	-	울진, 경산
중장기	사업		●	200	-	100	100		-	울릉,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칠곡, 영양
장기	연구			300	-	-	100	100	100	경주, 울진, 울릉, 칠곡, 안동
장기	사업		●	300	-	-	100	100	100	경주, 울진, 울릉, 김천
장기	사업	●	●	500	100	100	100	100	100	울진
단기	연구	●		200	100	100	-	-	-	영덕, 울진, 경산, 청도
단기	연구	●		200	-	100	100	-	-	김천, 상주
중기	연구	●		200	-	-	100	100	-	울진, 김천
단기	연구	●	●	100	100	-	-	-	-	울진, 김천, 경산
중기	사업	●	●	200	100	100	-	-	-	경주, 영덕, 울진, 김천, 상주, 문경, 군위, 경산, 청도, 칠곡, 영양, 예천
단기	연구	●		100	100	-	-	-	-	울진, 울릉, 김천, 영천, 성주
중기	사업	●	●	300	100	100	100	-	-	영덕, 울진, 김천, 성주, 칠곡, 청송
장기	사업	●		500	100	100	100	100	100	영덕, 울진, 울릉, 김천, 상주,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영양, 청송, 예천
단기	연구			200	-	100	100	-	-	울진, 영천, 경산, 칠곡
중기	연구			150	50	50	50	-	-	영덕, 울진, 울릉, 상주, 경산, 칠곡, 영양
단기	연구	●		200	-	100	100	-	-	울진, 영천, 성주, 안동
단기	연구	●		200	-	100	100	-	-	경주, 영덕, 울진, 상주, 청도, 성주, 영주
단기	연구			300	-	100	100	100	-	울진
단기	사업	●	●	300	-	100	100	100	-	영덕, 울진, 울릉,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칠곡, 영주
단기	연구	●		200	100	100	-	-	-	울진, 영천, 경산, 청송
단기	연구	●		200	-	100	100	-	-	울진, 울릉, 상주, 경산
단기	연구	●		100	-	100	-	-	-	경주, 영덕, 울진, 영천, 경산, 청도, 성주, 칠곡
중기	연구	●		300	-	100	100	100	-	울진, 경산, 안동, 예천
단기	연구	●		200	100	100	-	-	-	울진, 상주, 경산, 안동
단기	연구	●		200	100	100	-	-	-	울진, 청도, 칠곡
중기	사업	●	●	400	-	100	100	100	100	울진, 경산
중기	사업	●	●	400	-	100	100	100	100	영덕, 울진, 울릉
중기	사업	●-	●	400	-	100	100	100	100	울진, 경산, 예천

2) 목표 2 :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

전략	정책과제	세부과제
5. 건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연구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방안 연구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민간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방안 마련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역량 강화	'건축산업역량강화를 위한 산·관·학 TF' 구축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활용체계 구축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연구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제도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7. 건축문화 관련 자료구축 및 보관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영역 확대 지원	경상북도 지역 민간전문가의 역할 확대 방안 마련
		지역 내 건축·도시 관련 전문 인력의 산·관·학 협동체계 구축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방안 연구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근현대 건축물 자료의 종합적 DB 구축	근현대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DB 구축방안 연구
		근현대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DB 구축
8.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방안 수립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 방안 연구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복합적인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콘텐츠 중심의 지역건축문화 체계화 및 전파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건축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확산
		콘텐츠 중심의 국제적이고 대표적인 건축문화 행사 개최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기간	사업 구분	핵심 연계	시범 사업	소요예산-						시.군 참여의사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단기	연구			100	100	-	-	-	-	영천, 경산, 칠곡, 안동
중기	제도			200	-	50	50	50	50	경산, 칠곡
단기	사업		●	400	-	100	100	100	100	경주, 상주, 경산
단기	연구			100	100	-	-	-	-	울진, 영천, 안동, 영양, 예천
장기	연구			200	-	50	50	50	50	영덕, 울진, 구미, 경산, 청도, 영양, 청송
단기	제도	●	●	100	-	50	50	-	-	경주, 울진, 상주, 영천, 영양
중기	사업	●	●	100	20	20	20	20	20	울진, 상주, 영양
단기	사업	●		100	100	-	-	-	-	영덕, 울진, 김천, 청도, 영주, 영양
단기	연구			100	100	-	-	-	-	경주, 울진, 김천, 영천, 칠곡, 영주
중기	사업	●	●	300	-	100	100	100	-	울진, 칠곡, 영주
단기	연구			100	100	-	-	-	-	영덕, 울진, 청도, 청송
중기	사업	●	●	400	-	100	100	100	100	울진
단기	연구			100	100	-	-	-	-	울진, 경산, 영주
중기	사업	●	●	250	50	50	50	50	50	경주, 울진, 상주, 영천, 경산, 영주
단기	사업		●	150	50	50	50	-	-	울진, 청도, 안동, 영주
단기	연구	●		100	100	-	-	-	-	경주, 울진, 영천
중기	사업	●	●	250	50	50	50	50	50	울진, 울릉, 상주, 경산
단기	연구	●		100	100	-	-	-	-	칠곡, 안동
중기	사업	●	●	200	-	100	100	-	-	상주, 경산, 예천
단기	연구	●		100	-	100	-	-	-	울진, 안동
단기	제도	●	●	100	-	-	100	-	-	울진, 울릉, 상주, 청도, 칠곡
단기	연구	●	●	100	100	-	-	-	-	경주, 울진, 영천, 청도, 청송
중기	사업	●		400	-	100	100	100	100	영덕, 울진
장기	사업			200	-	50	50	50	50	울진, 성주, 칠곡, 안동
장기	사업			400	-	100	100	100	100	경주, 울진, 경산, 청도, 성주, 칠곡
단기	연구	●		100	100	-	-	-	-	구미, 경산, 안동
장기	사업	●	●	200	-	50	50	50	50	김천, 칠곡

3) 목표 3 :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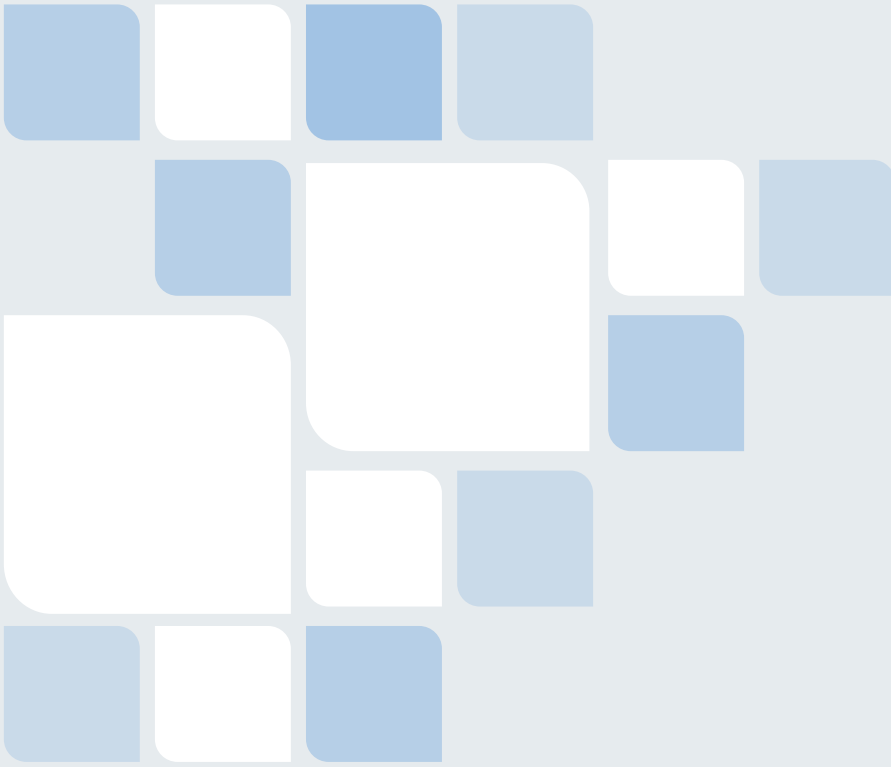
전략	정책과제	세부과제
9 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디자인 관리방안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경상북도청 내 건축·도시관련 총괄관리 조직정비방안 구상
		기초지자체의 건축·도시관련 행정조직의 현황에 따른 조직정비방안구상
		경상북도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건축·도시 디자인 업무통합화 방안 마련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 수립 및 활용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 수립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기준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조례 개정 및 제정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조례 개정 연구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조례 제정(안) 연구
10 민관협력사업의 관리 및 지원방안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민관협력 총괄조직 및 민관협력 기금 신설에 관한 구상
		공공주도형 민관협력 사업을 위한 가이드스 마련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민관협력 사업 모델 개발 및 적용	경상북도형 민관협력 사업모델 개발
		경상북도형 민관협력 사업모델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11 주민참여기구의 설립 및 운영 지원방안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연구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실행
		주민참여 프로세스의 유형화 및 모델 개발
		공공건축물 설계와 유지관리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모색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 및 주민교육 확대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제공
	주민 참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도 차원에서 주민참여사업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뉴세마을 운동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 지원
12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도시·건축관련 심의제도 개선 및 투명심사제	심의제도 투명성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운영
		통합심의 위원회 운영
		통합심의위원회를 관리하는 전문부서 시범운영
	공공건축 발주제도 개선	공공건축 발주제도 방안 연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공공건축 관리체계 개선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방안 연구 공공건축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연구

추진 기간	사업 구분	핵심 연계	시범 사업	소요예산						시·군 참여의사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단기	연구	●		100	100	-	-	-	-	울진, 군위, 영천, 칠곡, 영양
단기	연구			100	100	-	-	-	-	울진, 상주, 문경, 군위, 경산, 청도, 칠곡, 영양, 청송, 예천
단기	연구	●		400	-	100	100	100	-	울진, 울릉, 군위, 영천, 영양, 청송
중기	연구	●		100	100	-	-	-	-	울진, 구미, 군위, 경산, 영양
중기	연구			200	200	-	-	-	-	영덕, 울진, 영천, 칠곡, 영양
중기	사업	●		200	-	-	100	-	100	울진, 김천, 상주, 영천, 청도, 칠곡, 영양, 청송
중기	연구			100	-	100	-	-	-	울진, 군위, 영양, 청송
중기	연구			100	-	100	-	-	-	영덕, 울진, 군위, 청도, 영양, 청송
단기	연구	●		100	50	50	-	-	-	청도
단기	연구	●		100	100	-	-	-	-	-
단기	연구	●		100	-	100	-	-	-	울진
중장기	사업	●		600	-	200	200	200	-	울진
단기	연구			100	100	-	-	-	-	울릉, 김천, 영천, 안동, 영양
단기	제도			100	-	100	-	-	-	울릉, 김천, 영천, 안동, 영양
중기	연구			100	50	50	-	-	-	김천, 영양
단기	연구	●		200	-	100	-	100	-	울진, 울릉, 김천, 구미, 영천, 청도, 칠곡, 영양
장기	사업	●	●	500	100	100	100	100	100	경주, 울진, 울릉, 김천, 군위, 청도, 영양
장기	사업	●	●	250	50	50	50	50	50	영덕, 울릉, 김천, 상주, 군위
단기	제도	●		100	-	100	-	-	-	경주, 울진, 김천, 청송
중기	사업			200	-	50	50	50	50	울진, 청도, 청송
단기	제도			200	-	50	50	50	50	경주, 경산
단기	제도			200	-	50	50	50	50	울진, 경산
단기	제도	●		100	100	-	-	-	-	울진, 구미, 청도
단기	연구			100	100	-	-	-	-	경주, 울진, 영천, 칠곡, 영양
단기	연구			100	100	-	-	-	-	영덕, 울진,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청도, 영양, 청송
단기	연구	●		100	100	-	-	-	-	울진, 김천, 상주, 칠곡, 영주, 영양, 청송
단기	연구			200	100	100	-	-	-	울진, 청도, 칠곡, 영양

4) 핵심전략

전략	실행사업	사업내용
1. 도민 친화적 생활 건축사업	1.1 복지복합형 실버세대 주택	생활건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형 생활주거 시범사업 추진
		설계공모전 실시
	1.2 생활밀착형 행복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추진협의회 운영
		임대주택 관련행정 및 운영체계 마련
		시범사업 모니터링
2.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2.1 주민 주도형 소도시 지역재생 사업	소도시 지역재생기본계획 수립
		지역재생 관련 행정 및 운영체계 마련
		소도시 지역재생 시범사업 추진
	2.2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사업	농어촌 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범사업 모니터링
3.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3.1 근대 건축문화유산거리 조성사업	건축유산거리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전 실시
		행정조직 및 운영체계 마련
	3.2 전통한옥 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건축유산거리 조성사업
		교육 체험 콘텐츠의 수립과 연계
		사업구역선정 및 가이드라인
4.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마련	4.1 건축디자인 DB(아카이브) 구축	시범사업 모니터링
		구축방안 연구
		건축디자인 DB구축
	4.2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전시관 설계공모전
		전시관 구축 (리모델링) 사업
		건축디자인 전시관 운영
5.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5.1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산·관·학 협의체(안) 설치 및 운영	경북건축행사 운영 다각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5.2 '건축디자인 아카데미(안) 설치 및 운영	건축 관련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산·관·학 협의체(안) 설치 및 운영
		'건축디자인 아카데미(안) 설치 및 운영
6.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조직 운영	6.1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사업 행정조직 신설	시범사업 모니터링
		총괄관리조직 정비방안 연구
		경상북도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행정조직 신설
	6.2 경상북도와 기초지자체의 건축·도시 협의체계 구축	지자체별 통합관리체계 및 경상북도와의 유관분야 협의 체계구축
		건축·도시 통합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범사업 모니터링

추진 기간	사업 구분	시범 사업	소요예산						시·군 참여의사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단기	연구		200	200	-	-	-	-	울진, 상주, 성주,
중기	사업	●	6,000	-	2,000	2,000	1,000	1,000	
장기	사업	●	2,000	-	1,000	1,000	-	-	
중기	사업	●	600	-	200	200	100	100	영덕, 울진, 김천, 청도, 성주, 청송, 예천
단기	제도		100	50	50	-	-	-	
단기	연구		100	-	-	-	-	100	
단기	연구		200	200	-	-	-	-	울진, 문경, 군위,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안동, 영양, 청송,
단기	제도		100	50	50	-	-	-	
중기	사업	●	4,000	-	1,000	1,000	1,000	1,000	
중기	사업	●	4,000	-	1,000	1,000	1,000	1,000	영덕, 울진, 울릉, 김천, 군위, 영천, 경산, 고령, 성주, 칠곡, 영양, 청송, 예천
단기	사업	●	600	-	200	200	100	100	
단기	연구		400	-	100	100	100	100	
단기	연구		200	200	-	-	-	-	상주, 경산,
장기	사업	●	2,000	-	1,000	1,000	-	-	
단기	제도		200	-	100	100	-	-	
중기	사업	●	6,000	-	2,000	2,000	1,000	1,000	경주, 영덕, 경산, 청도, 칠곡,
중기	사업	●	300	-	100	100	100	-	
중기	연구		200	100	100	-	-	-	
단기	연구		100	-	-	-	-	100	울진, 칠곡,
단기	연구		100	100	-	-	-	-	
중기	사업	●	500	-	200	100	100	100	
단기	사업	●	1,000	-	500	500	-	-	울진, 청도,
중기	사업	●	1,000	-	500	500	-	-	
중기	사업	●	800	-	200	200	200	200	
중기	연구		200		50	50	50	50	영덕, 구미, 문경, 영천, 성주,
단기	연구		100	-	-	-	-	100	
단기	연구		200	200	-	-	-	-	
장기	사업	●	300	-	150	50	50	50	울진, 영천, 청도, 성주, 칠곡,
장기	사업	●	500	-	200	100	100	100	
단기	사업		100	-	-	-	-	100	
단기	연구		100	100	-	-	-	-	영덕, 울진, 의성, 군위, 영천, 경산, 청도, 성주, 칠곡, 안동, 영양, 예천
중기	제도		400	-	100	100	100	100	
중기	제도		-	-	-	-	-	-	
중기	사업	●	400	-	100	100	100	100	경주, 울진, 김천, 의성, 군위, 영천, 경산, 성주, 영양,
단기	연구		100	-	-	-	-	100	



경상북도
GYEONGSANGBUK-DO